

통계로 본
우리
사회



통계로 본 우리 사회

인쇄 2021년 12월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허성관
발행처 경기연구원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1
ISBN 979-11-6853-034-8 93310

CONTENTS

제1장 행복·공정성 001

1-1 주관적 웰빙 002

1-1-1 행복감 003

1-1-2 삶의 만족도 004

1-1-3 자살률 006

1-2 공정성 008

1-2-1 사회공정성 인식 009

1-2-2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010

1-2-3 부패인식지수 011

1-2-4 정부신뢰도 013

제2장 경제 017

2-1 저성장·성장잠재력 018

2-1-1 경제성장률 019

2-1-2 잠재성장률 021

2-1-3 1인당 GDP 022

2-1-4 1인당 GDP 증가율 024

2-1-5 노동생산성(시간당) 증가율 025

2-1-6 총고정투자액 증가율 027

2-1-7 R&D 비율(GDP 대비) 028

2-1-8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030

2-1-9 경기도 산업별 생산비중(GRDP 대비) 031

2-2 최근 경기상황 032

2-2-1 신용카드 매출액 033

2-2-2 설비가동률 034

2-2-3 제조업 생산지수 035

2-2-4 도매·소매업 생산지수 036

2-2-5 물가 상승률 037

2-3 수출입구조	039
2-3-1 수출 증가율	040
2-3-2 수출대상국(5대)의 수출비율	042
2-3-3 국제무역비율(GDP 대비)	043
2-3-4 경상수지비율(GDP 대비)	044
2-4 국가부채·재정적자	045
2-4-1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046
2-4-2 정부지출비율(GDP 대비)	048
2-4-3 정부재정수지	049
2-4-4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051
2-4-5 단기채무비율(외환보유액 대비)	052
2-5 가계·기업부채	053
2-5-1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054
2-5-2 가계부채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	056
2-5-3 고위험가구비율	058
2-5-4 기업부채비율(GDP 대비)	059
2-6 실물·자산시장	061
2-6-1 경제성장률-주가상승률 격차	062
2-6-2 경제성장률-주택가격상승률 격차	063
2-7 리/오프쇼어링(GVC 변화)	064
2-7-1 중간재 수출증감률	065
2-7-2 해외부가가치액	067
2-7-3 해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069
2-7-4 외국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071
2-7-5 리쇼어링 기업수	073

3-1 지역 간 산업 불균형	078
3-1-1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079
3-1-2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080
3-1-3 지역별 대기업수(300인 이상)	081
3-1-4 지역별 산업단지	082
3-1-5 지역별 개별입지 공장 비중	083
3-1-6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084
3-2 언택트(Untact)산업	085
3-2-1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증감률	086
3-2-2 인터넷 बैं킹 등록고객수	087
3-2-3 원격회의 솔루션 기업(Zoom) 매출	088
3-2-4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고용	089
3-3 플랫폼경제	090
3-3-1 온라인 쇼핑물 거래액	091
3-3-2 배달대행 서비스업 사용자수	092
3-3-3 글로벌 플랫폼기업 시장가치	093
3-4 창업생태계	094
3-4-1 창업기업 신생률·소멸률	095
3-4-2 창업기업 생존율	097
3-5 기술·혁신 경쟁력	099
3-5-1 IMD 국가경쟁력	100
3-5-2 세계혁신지수(GII)	102
3-6 규제혁신	103
3-6-1 세계경제자유지수(규제수준)	104
3-6-2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105
3-6-3 상품시장규제지수	106

3-6-4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107
3-6-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108
3-6-6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09

제4장 가계 111

4-1 가계소득	112
4-1-1 가구평균소득 증가율	113
4-1-2 가구중위소득 증가율	114
4-1-3 소득5분위배율	115
4-1-4 소득10분위배율	116
4-1-5 가구 소득원천 구성비	117
4-1-6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118
※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증가율	119
4-2 농가소득	120
4-2-1 농가소득 현황	121
4-2-2 농가소득 원천별 구성	122
4-2-3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	123
4-2-4 농가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124
4-2-5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125
4-3 서민금융	126
4-3-1 개인신용등급	127
4-3-2 소득분위별 이용 대출기관	128
4-3-3 대부업 현황	129
4-3-4 법정 최고금리	130
4-3-5 정책서민금융 대출금리	131
※ 한국은행 기준금리	132

제5장 고용·노동 135

5-1 고용 현황	136
5-1-1 경제활동참가율.....	137
5-1-2 실업률.....	139
※ 고용보조지표.....	141
5-1-3 고용률.....	142
5-2 일자리	144
5-2-1 취업자수 증가율.....	145
5-2-2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147
5-2-3 고용탄력성.....	149
5-2-4 제조업-서비스업 고용 비율.....	151
5-2-5 자영업자 고용 비율.....	152
5-3 고용 불균형	153
5-3-1 연령대별 고용률.....	154
5-3-2 장애인 경제활동.....	156
5-4 노동시장 이중구조	157
5-4-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58
5-4-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160
5-4-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161
5-5 여성고용 불평등	162
5-5-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63
5-5-2 여성 관리자 비율.....	165
5-5-3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비율.....	167
5-6 노동환경	169
5-6-1 산업재해율.....	170
5-6-2 평균 근로시간.....	171
5-6-3 근로감독관수.....	173
5-6-4 임금체불건수.....	174

5-7 플랫폼 노동	175
5-7-1 플랫폼 노동자 비율	176
5-7-2 연령별 플랫폼 노동자 비율.....	177
5-7-3 플랫폼 노동 직종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178

제6장 인구·가족 181

6-1 저출산·고령화	182
6-1-1 총인구.....	183
6-1-2 인구성장률.....	184
6-1-3 고령화율.....	186
6-1-4 부양인구비.....	188
6-1-5 합계출산율.....	190
6-1-6 조혼인율.....	192
6-2 수도권·경기도 인구	194
6-2-1 수도권 인구.....	195
6-2-2 수도권 순유입인구.....	196
6-2-3 경기도 인구 변화.....	197
6-2-4 경기도 북부·남부 인구.....	198
6-2-5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	199
6-3 성평등	200
6-3-1 가사분담 견해.....	201
6-3-2 가사분담 실태.....	202
6-3-3 성불평등지수(GII).....	203
6-3-4 성개발지수(GDI).....	205
6-3-5 성격차지수(GGI).....	207
6-4 일가정 양립	209
6-4-1 맞벌이 가구 비율.....	210
6-4-2 가사노동시간.....	211

6-4-3 어린이집 이용률	212
6-4-4 출산·육아휴직	213
6-5 다문화 포용	214
6-5-1 외국인 주민수	215
6-5-2 국제결혼	216
6-5-3 불법체류자	217
6-5-4 난민 신청자·인정자	218
6-5-5 다문화 수용성	219

제7장 사회복지 221

7-1 소득분배	222
7-1-1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223
7-1-2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225
7-1-3 지니계수 격차	227
7-1-4 소득 5분위배율 및 소득 10분위배율	229
7-2 빈곤	230
7-2-1 상대빈곤율	231
7-2-2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33
7-2-3 노인빈곤율	234
7-2-4 노인빈곤갭	236
7-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238
7-2-6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239
7-3 사회안전망	241
7-3-1 건강보험 적용인구	242
7-3-2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	243
7-3-3 고용보험 가입률	244
7-3-4 국민연금 가입자수	245
7-3-5 임금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	246

7-3-6 노령연금 수급자수	247
7-3-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48
7-4 건강수준	249
7-4-1 기대여명	250
7-4-2 사망률	252
7-5 보건의료	254
7-5-1 병상수(인구 천 명당)	255
7-5-2 의사수(인구 천 명당)	257
7-6 장애인 포용	259
7-6-1 장애인 고용률	260
7-6-2 장애인 실업률	262
7-6-3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공적 지출(GDP 대비)	264
7-7 사회적 유대	265
7-7-1 대인신뢰도	266
7-7-2 사회적 고립도	267
7-7-3 소수자 포용성	269

제8장 교육·문화여가 271

8-1 교육의 질	272
8-1-1 교원 1인당 학생수	273
8-1-2 학급당 학생수	275
8-1-3 유아교육 규모	277
8-2 교육 기회	279
8-2-1 평생학습 참여율	280
8-2-2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81
8-2-3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82

8-3 취약계층 문화기본권	283
8-3-1 열린 관광지	284
8-3-2 문화기반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	285
8-3-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286
8-3-4 문화바우처사업 수혜인원	287
8-4 문화·여가서비스 공급	288
8-4-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비율	289
8-4-2 문화기반시설수	290
8-4-3 체육시설업	291
8-4-4 1인당 체육시설 면적	292
8-5 생활문화시대	293
8-5-1 가계문화여가지출률	294
8-5-2 문화예술관람률	295
8-5-3 여가생활만족도	296
8-5-4 여가시간	297

제9장 교통·안전 299

9-1 이동서비스 및 교통복지	300
9-1-1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301
9-1-2 버스노선수	302
9-1-3 통근소요시간별 인구비율	303
9-1-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304
9-1-5 저상버스 보급률	305
9-2 안전한 도로교통	306
9-2-1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 10만 명당)	307
9-2-2 교통안전지수	308
9-2-3 보행자 교통사고	309

9-2-4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310
9-2-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	311
9-3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312
9-3-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13
9-3-2 보행 및 자전거 분담률	314
9-3-3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315
9-3-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16
9-4 사회재난.....	317
9-4-1 산업재해 사망률	318
9-4-2 화재사고건수	319
9-4-3 5대 강력범죄건수	320
9-4-4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	321
9-5 안전취약계층.....	322
9-5-1 안전취약계층 비율	323
9-5-2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324
9-5-3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	325

제10장 도시·주택·균형발전..... 327

10-1 주택 현황.....	328
10-1-1 주택보급률	329
10-1-2 주택수(인구 천 명당)	330
10-1-3 미분양 주택수	331
10-1-4 주거점유형태	332
10-1-5 주택소유 가구수(주택소유물건수별).....	333
10-2 주택시장.....	334
10-2-1 주택매매가격	335
10-2-2 전월세통합가격지수	336

10-2-3	지가변동률	337
10-2-4	토지거래량	338
10-2-5	주택매매 실거래량	339
10-2-6	주택 전월세 실거래량	340
10-3	주거복지	341
10-3-1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42
10-3-2	임대주택 재고	343
10-3-3	공공임대주택 재고	344
10-3-4	1인당 주거면적	345
10-3-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46
10-3-6	노후주택 비율	347
10-4	주택소유현황	348
10-4-1	주택소유 가구 비율(주택소유물건수별)	349
10-4-2	주택 자산가액(10분위별)	350
10-4-3	소유 주택수(10분위별)	351
10-5	균형발전지수	352
10-5-1	인구증감률 및 재정자립도(시도별)	353
10-5-2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지역발전지수)	354
10-5-3	경기도 지역발전지표(시군)	355
10-5-4	경기 남부·북부 간 격차(1)	356
10-5-5	경기 남부·북부 간 격차(2)	357
10-5-6	경기도 인구소멸지수(시군)	358
10-6	수도권규제	359
10-6-1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360
10-6-2	군사시설보호구역	361
10-6-3	개발제한보호구역	362

제11장 환경·에너지..... 365

11-1 탄소중립 동향	366
11-1-1 온실가스 배출량	367
11-1-2 재생에너지 비중	368
11-2 에너지 소비	369
11-2-1 에너지원단위	370
11-2-2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371
11-2-3 전기요금	373
11-3 유해물질	374
11-3-1 미세먼지 농도	375
11-3-2 수도권 미세먼지 취약지역	377
11-3-3 화학물질 배출량	378
11-4 폐기물 및 녹색구매	379
11-4-1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380
11-4-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381
11-4-3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382
11-4-4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	383
11-4-5 녹색제품 구매비율	384
11-5 녹지서비스	385
11-5-1 산림면적.....	386
11-5-2 1인당 도시공원면적	387
11-5-3 녹지 접근성.....	388
11-6 하천 관리	389
11-6-1 하천 수질	390
11-6-2 보 현황.....	391
11-7 그린 모빌리티	392
11-7-1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393
11-7-2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395

11-8 친환경 경쟁력	396
11-8-1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397
11-8-2 RE100 이니셔티브와 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	398

제12장 행정·재정·정치·외교 **401**

12-1 재정부담 및 세율	402
12-1-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403
12-1-2 직·간접세 비중	405
※ 2020년 세수구조	406
12-1-3 법인세·소득세 명목최고세율	407
12-1-4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409
※ 주요국의 법인세 과표구간수 비교	410
12-1-5 소득세율	411
12-1-6 근로소득세	412
12-1-7 종합소득세	413
12-1-8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414
12-2 세출 구조	415
12-2-1 분야별 자원배분	416
12-2-2 재정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417
12-2-3 재정지출 유형별 비율	418
12-3 정치외교 위상과 국력	419
12-3-1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420
12-3-2 한국의 인권과 자유 수준	421
12-3-3 한국의 종합국력	422
12-3-4 북한경제	423

[부록] A. 청년 현황 425

A-1 청년 고용 426

- A-1-1 청년 취업자수 증감률 427
- A-1-2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428
- A-1-3 청년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429
- A-1-4 청년 비정규직 비율 430
- A-1-5 대졸자 초임 상승률 431

A-2 청년 주거 432

- A-2-1 청년 주거 점유형태 433
- A-2-2 청년 주거지원 434
- A-2-3 서울 주택가격 PIR(Price to Income Ratio) 435

A-3 청년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 436

- A-3-1 청년 삶의 만족도 437
- A-3-2 영역별 청년 삶의 만족도 438
- A-3-3 성별 청년 자살률 439

A-4 청년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 440

- A-4-1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441
- A-4-2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이 어려운 이유 442
- A-4-3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 비율 443

A-5 청년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 444

- A-5-1 청년 계층의식 445
 - A-5-2 청년 계층 이동성 인식 변화 446
 - A-5-3 연령별·학력별 계층 이동성 평가 447
-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우리는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1장

•

행복·공정성

1-1 주관적 웰빙

1-2 공정성

○ 2019년 들어 경기침체, 사회분열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행복감은 소폭 하락

- 행복감은 긍정적 정서 경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사시점 기준 ‘어제 행복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0~10점 척도로 측정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행복감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2019년은 전년에 비해 0.1점 하락한 6.5점
- 반면 2019년 국민의 걱정과 우울은 전년 대비 0.5점 상승
- 2019년은 사회 분열 심화,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국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국민의 삶의 만족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 6년 만에 하락

- 삶의 만족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
- 삶의 만족도는 행복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승하였으나 2019년 들어 소폭 하락
- OECD(2020)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18년 6.1점으로 OECD 평균(7.4점)보다 1.3점 정도 낮은 편

○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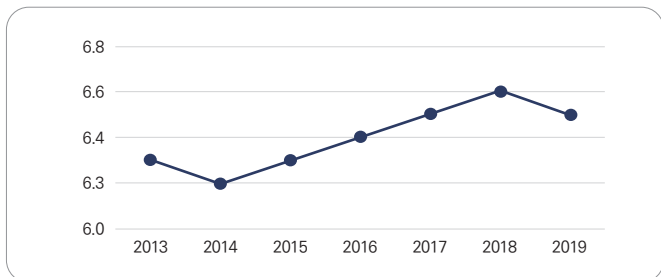
- 그동안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
※ OECD 평균(20.1%), 한국(11.1%), 프랑스(31.2%), 미국(18.7%)
-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와 문화, 안전, 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
- 특히 고연령 집단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일자리 증대,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추진 시급

1-1-1 행복감

○ 정의

- 조사 시점에서 '어제 행복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전국 행복감(단위 : 점)



주 : 행복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행복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0~10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행복감 (점)	전체	6.3	6.2	6.3	6.4	6.5	6.6	6.5
	20대	6.5	6.3	6.4	6.5	6.6	6.7	6.6
	30대	6.4	6.4	6.4	6.5	6.7	6.7	6.7
	40대	6.2	6.2	6.2	6.3	6.5	6.7	6.5
	50대	6.1	6.1	6.2	6.3	6.4	6.6	6.6
	60대	6.1	6.1	6.2	6.3	6.3	6.5	6.2
걱정(점)		4.5	4.5	4.1	4.1	3.9	3.7	4.2
우울(점)		3.4	3.6	3.3	3.3	3.2	2.9	3.4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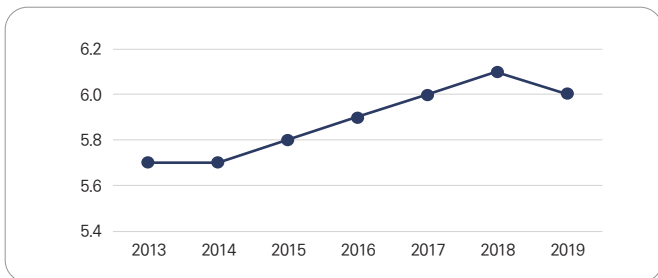
- 행복감은 2014년(6.2점)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8년 6.6점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은 6.5점으로 2018년보다 0.1점 하락
- 전반적으로 고연령 집단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2019년 기준 '걱정'과 '우울'은 전년 대비 0.5점 상승

1-1-2 삶의 만족도

○ 정의

-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 전국 삶의 만족도(단위 : 점)



주 :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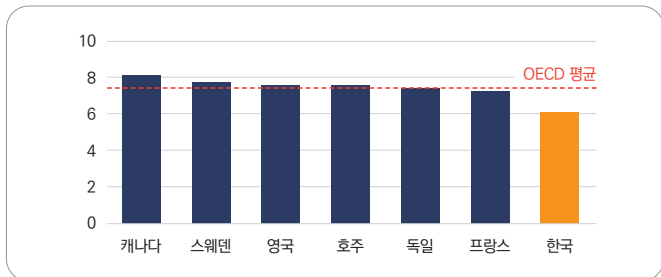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삶의 만족도 (점)	전체	5.7	5.7	5.8	5.9	6.0	6.1	6.0
	19~29세	5.7	5.9	5.8	6.1	6.1	6.1	6.0
	30~39세	5.8	5.8	5.8	5.9	6.2	6.2	6.1
	40~49세	5.7	5.7	5.8	5.8	6.0	6.2	5.9
	50~59세	5.5	5.6	5.8	5.8	5.9	6.1	6.1
	60~69세	5.6	5.5	5.9	5.9	5.9	5.9	5.8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4년(5.7점)부터 2018년(6.1점)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0.1점 하락한 6.0점으로 나타나 행복도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19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가장 낮은 편

○ 주요국의 삶의 만족도(2018년 기준, 단위 : 점)



주 :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구분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한국	OECD 평균
삶의 만족도	8.1	7.8	7.6	7.6	7.4	7.3	6.1	7.4

자료 : OECD(2020). *How's Life 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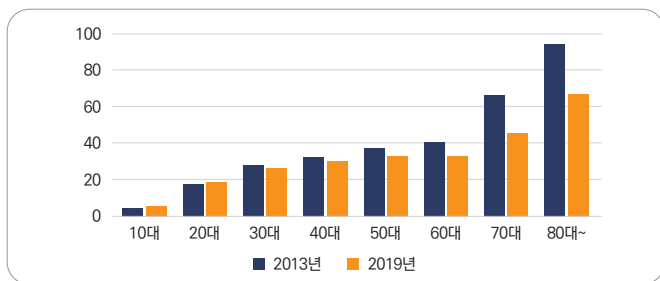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1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4점에 비해 1.3점 낮으며,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권
- OECD 회원국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8.3점), 핀란드(8.1점), 캐나다, 아이슬란드(8.1점) 순임
- 주요국 중에서는 캐나다(8.1점), 스웨덴(7.8점), 영국(7.6점)이 높은 편임

1-1-3 자살률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 전국 연령대별 자살률(단위 : 명)



주 : 0~9세, 연령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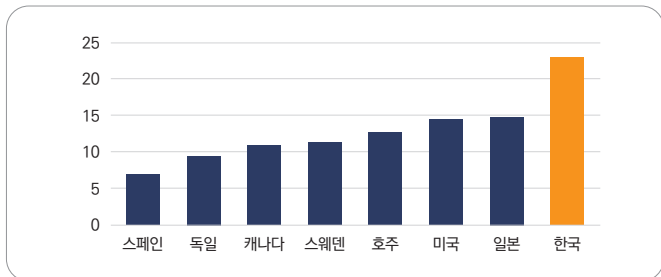
구분	시점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자살자 수	2013	14,427	308	1,184	2,275	2,867	2,963	1,768	2,004	1,057
	2019	13,799	298	1,306	1,914	2,588	2,837	2,035	1,620	1,193
자살률	2013	28.5	4.9	18.0	28.4	32.7	38.1	40.7	66.9	94.7
	2019	26.9	5.9	19.2	26.9	31.0	33.3	33.7	46.2	67.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3년 28.5명에서 2019년 26.9명으로 감소
- 2019년 기준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67.4명), 70대(46.2명), 50대(33.3명)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
- 2013년 대비 2019년 자살률은 30대 이상에서 감소했으나, 10대, 20대 자살률은 각각 1.0명, 1.2명 증가

○ 주요국의 자살률(201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스페인	독일	캐나다	스웨덴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자살률	7.0	9.5	11.0	11.4	12.8	14.5	14.9	23.0

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0명으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2017년 기준으로 OECD 25개 회원국 중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리투아니아(24.4명)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이스라엘 5.5명, 콜롬비아/코스타리카 5.7명임

○ 우리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분배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

-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 공정성은 교육기회, 복지혜택·성별대우, 취업 기회·지역균형발전·법집행 순으로 높으며, 경제/사회적인 분배는 가장 낮음
- 교육기회에 대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대우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수준임
-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은 취업기회에 대한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은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
- 사회계층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2011년 이후 하락세이며, 2019년 기준 세대간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9.4%,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3.1%에 불과

○ 2020년 세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 순위를 갱신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56점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0년 61점으로 상위 18%에 속함
-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으로 부패인식수준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직사회의 관행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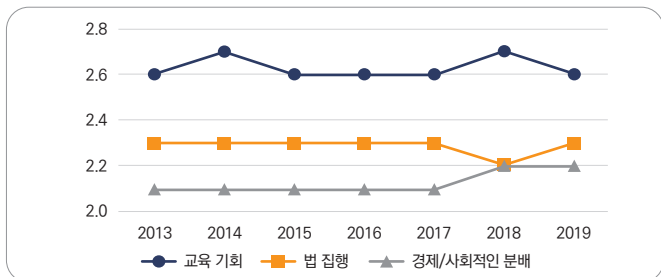
- 한국은 2019년 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역대 최고 성적)를 기록
-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보다 높은 수준
- 우리 정부는 정부-민간 협력 확대,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등이 순위 상승 요인

1-2-1 사회공정성 인식

○ 정의

-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복지혜택 기회, 지역균형발전, 법 집행, 성별에 따른 대우 등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

○ 전국 사회공정성 인식(단위: 점)



주: 각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1점) ~ '매우 공정하다'(4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과 1~4점 척도의 평균값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 기회	2.6	2.7	2.6	2.6	2.6	2.7	2.6
복지 혜택	2.4	2.3	2.4	2.4	2.4	2.4	2.4
성별 대우	2.5	2.4	2.4	2.4	2.4	2.4	2.4
취업 기회	2.3	2.3	2.3	2.2	2.2	2.3	2.3
지역균형발전	2.3	2.3	2.3	2.3	2.3	2.3	2.3
법 집행	2.3	2.3	2.3	2.3	2.3	2.2	2.3
경제/사회적인분배	2.1	2.1	2.1	2.1	2.1	2.2	2.2

자료: 한국행정연구원(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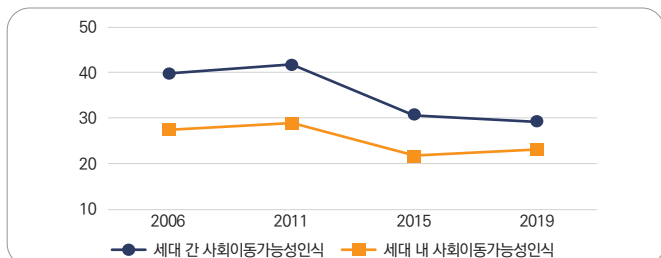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사회 공정성 인식은 교육기회(2.6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복지혜택·성별대우(2.4점), 취업기회·지역균형발전·법집행(2.3점) 순으로 높음
- 사회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사회적인 분배인 것으로 나타남

1-2-2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 정의

-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현재보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를 통해 측정

○ 전국 사회이동가능성 인식(단위 : %)



주 :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과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 각각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구분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6	2011	2015	2019	2006	2011	2015	2019
전체		39.9	41.7	31.0	29.4	27.5	28.8	21.8	23.1
성별	남자	41.1	43.0	32.3	30.2	28.5	29.6	22.8	23.8
	여자	35.0	37.5	27.2	27.1	23.8	26.1	19.1	21.3
학력	초졸 이하	35.3	39.2	26.5	29.0	23.4	25.3	18.7	19.8
	중졸	36.9	39.8	30.7	30.1	22.7	25.6	20.4	21.3
	고졸	38.6	39.9	31.6	27.6	24.3	25.6	20.4	20.1
	대졸이상	45.4	45.3	32.6	30.9	36.2	34.6	25.2	27.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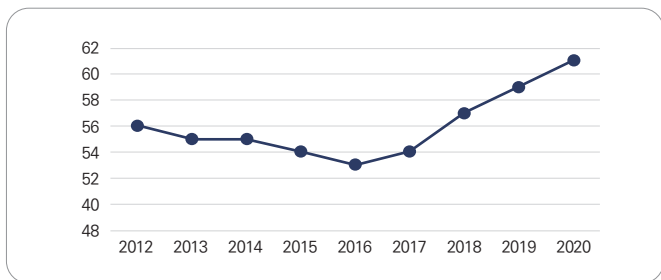
- 2019년 현재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9.4%,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3.1%에 그침
-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 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가장 인식이 낮은 편임

1-2-3 부패인식지수

○ 정의

-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공공 및 정부 부문의 부패를 인지하는 정도

○ 한국 부패인식지수(단위 : 점)



주 : 부패인식지수는 0~10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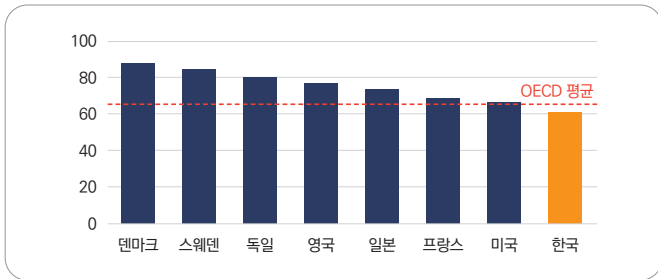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부패인식지수(점)	56	55	55	54	53	54	57	59	61
한국 순위	45	46	44	43	52	51	45	39	33
순위 백분율(%)	25.6	26.0	25.1	25.6	29.5	28.3	25.0	21.7	18.3
조사대상국	176	177	175	168	176	180	180	180	180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 53점에서 점차 높아져 2020년 61점으로 개선
- 부패인식지수는 해마다 조사대상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세계 순위의 백분율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12년 176개국 중 45위를 차지해 상위 25.6%로 나타났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20년 현재 상위 18.3%에 위치

○ 주요국의 부패인식지수(2020년 기준, 단위 : 점)



주 : 부패인식지수는 0~10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을 나타냄

구분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	OECD 평균
부패인식지수	88	85	80	77	74	69	67	61	66.9
국가 순위	1	3	9	11	19	23	25	33	30.6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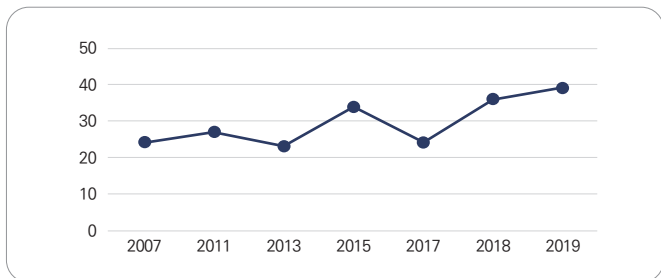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중 61점으로 OECD 평균(66.9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37개 가입국 중 23위를 차지
-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로 88점을 기록했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그 뒤를 이음

1-2-4 정부신뢰도

○ 정의

- 조사 시점에서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신뢰도가 높다는 의미

○ 한국 정부신뢰도(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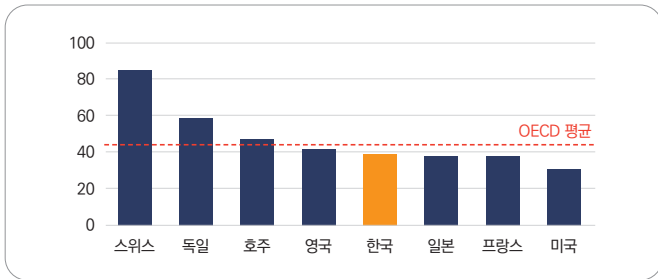
구분	2007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정부신뢰도	24	27	23	34	24	36	39
국가 순위	31	31	29	26	32	25	22

자료 : OECD(2018).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 주요 특징 및 해설

- OECD 정부신뢰도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조사
-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로 증가
- 2019년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
- 정부신뢰도 순위는 2015년 26위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32위로 하락하였으나 2018년 25위로 반등하고, 2019년 22위 달성

○ 주요국의 정부신뢰도(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스위스	독일	호주	영국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OECD 평균
정부신뢰도	85	59	47	42	39	38	38	31	45
국가 순위	1	9	15	20	22	24	25	30	-

자료 : OECD(2018).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OECD 평균이 45%에 비해 6%p 낮고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
-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OECD 평균인 45%에 비해서도 6%p 낮은 수준
- OECD 주요국 중 정부신뢰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85%), 독일(59%), 호주(47%) 등임
- 한국보다 정부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일본(38%), 프랑스(38%), 미국(31%)로 나타남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2장

경제

- 2-1 저성장·성장잠재력
- 2-2 최근 경기상황
- 2-3 수출입구조
- 2-4 국가부채·재정적자
- 2-5 가계·기업부채
- 2-6 실물-자산시장
- 2-7 리/오프쇼어링(GVC 변화)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대로 성장세 약화

- 정보기술(IT) 기반 생산성 개선이 한계에 직면하고,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2009년 이후 감소하는 등 성장 기반이 약화
- 총고정투자액은 2013~17년 동안 증가했으나, 2018~19년과 2020년 2/4~3/4 분기에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력 약화가 지속될 우려
- 특히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서 총고정투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을 약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

- 2022년에는 OECD 회원국의 1/3 이상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방역조치 효과성 등 외부상황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전망
- 한국은 총요소생산성 정체,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문제가 심화할 전망
-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와 경기악화 요인(반도체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건설경기 침체 등)에 대응할 필요

○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을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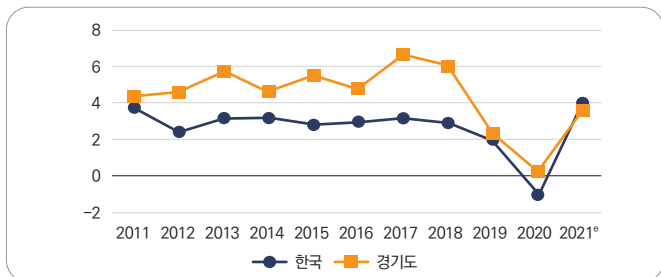
-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장기간의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기술 부분을 육성하여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질적 성과를 높일 필요
- 적극적인 신산업정책을 통해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의 혁신 투자를 유도하여 총고정투자를 제고
- 저출산 문제 해소,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대칭적인 인구구조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

2-1-1 경제성장률

○ 정의

- 당해년(혹은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 한국 및 경기도 경제성장률(2015년 불변가격 기준, 전년대비, 단위 : %)



주 : 한국의 2021년 값은 한국은행 예측치(2021년 5월 기준), 경기도의 2020~21년 값은 김태영·박원익(2020) 추정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3.7	2.4	3.2	3.2	2.8	2.9	3.2	2.9	2.0	-1.0	4.0
경기도	4.3	4.5	5.7	4.5	5.5	4.7	6.6	6.0	2.3	0.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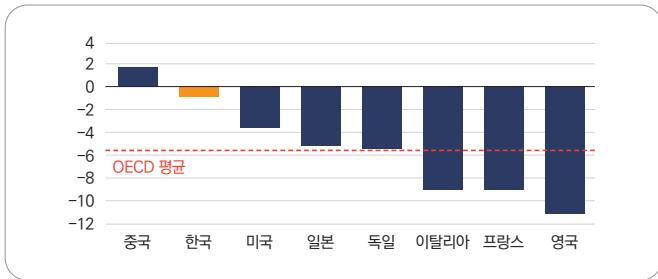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년도), “국민계정”; 통계청(각년도), “지역소득”; 한국은행(2021), 『경제전망보고서 2021.5』.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3.7%)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추세이고, 코로나19 경기충격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1.0%)
-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보다 0.3~3.4% 높은 수준이고, 202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한국과 경기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0%, 3.6%로 추정되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명목)는 1,933.2조 원이며, 2019년 기준 경기도의 GRDP(명목)는 477.4조 원임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2020년 기준, 불변가격 기준, 단위 : %)



주1 : 위 수치는 2020년의 국가별 실질 경제성장률 예측치이고, 실질 가격의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상이

주2 : 중국은 OECD 비회원국이나, G20 국가 중 2020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음

구분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2020년	1.8	-1.0	-3.7	-5.3	-5.5	-9.1	-9.1	-11.2	-5.5
'16~'20 연평균	5.7	2.0	1.1	-0.3	0.2	-1.0	-0.5	-1.0	0.6

자료 : OECD(2012.12). *Economic Outlook*.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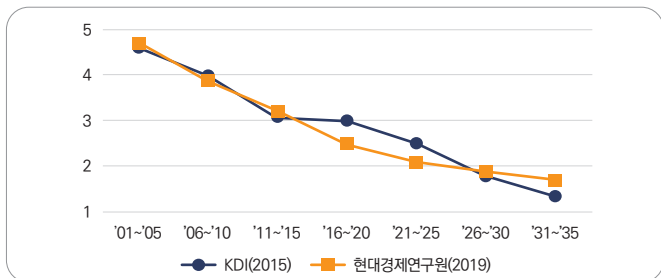
-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1.8%)에 이어 2위를 기록
- OECD 주요 회원국 중 영국(-11.2%), 이탈리아(-9.1%), 프랑스(-9.1%) 등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 -5.5%로 하락했으나, 2021년에는 3.3%로 예측되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최근 5년(2016~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중국(5.7%) 제외 시 주요국에서 2.0% 이하이고, 코로나19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영국(-1.0%), 이탈리아(-1.0%), 프랑스(-0.5%), 일본(-0.3%) 등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한국의 경우 최근 5년 경제성장률이 2.0% 수준에 그쳐 장기적으로 낮은 성장률의 고착화가 우려

2-1-2 잠재성장률

○ 정의

- 한 국가 내의 모든 생산요소(자본, 노동력, 자원 등)를 사용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

○ 한국 잠재성장률(단위 : %)



구분	'01~'05	'06~'10	'11~'15	'16~'20	'21~'25	'26~'30	'31~'35
KDI(2015)	4.6	4.0	3.1	3.0	2.5	1.8	1.4
현대경제연구원(2019)	4.7	3.9	3.2	2.5	2.1	1.9	1.7

자료 : KDI(2015).; 현대경제연구원(2019).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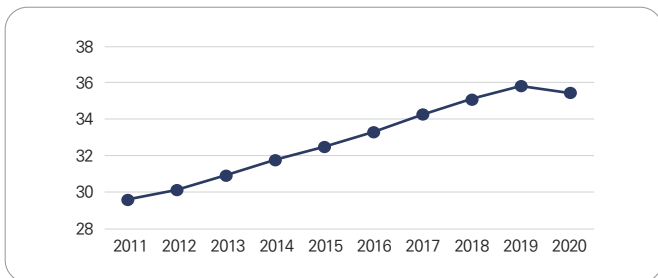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2031~35년 잠재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1.4%, 현대경제연구원 1.7%로 추정
-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 축적 저하,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둔화, 총요소생산성 약화 등임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인적자원 역량 강화, 소득분배 개선 통한 가계소비 확대, 사회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촉진 등이 필요

2-1-3 1인당 GDP

○ 정의

- 1인당 GDP는 실질 국내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한 국가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의미

○ 한국 1인당 실질 GDP(201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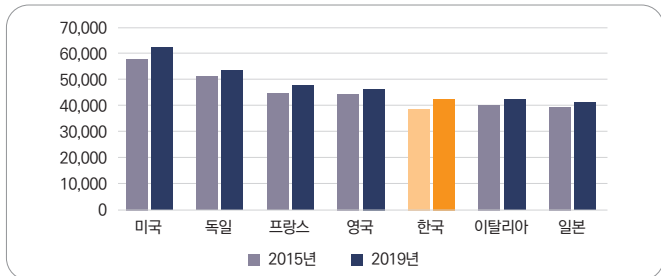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당 GDP	29.6	30.2	31.0	31.8	32.5	33.3	34.3	35.1	35.8	35.5

자료 : 통계청(각년도). "국민계정".

○ 주요 특징 및 해설

- 1인당 실질 GDP는 2011년(29.6백만 원)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3,580만 원 기록한 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약 3,550만 원으로 하락
- 2011~20년 동안 1인당 실질 GDP는 연평균 2.1% 증가
※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명목)는 3,733만 원임

○ 주요국의 1인당 실질 GDP(PPP 기준, 2017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달러)



주 : PPP(Purchasing Power Parity)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각 국가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일본
2015년	58,525	51,374	45,076	44,917	38,870	40,402	39,724
2019년	62,606	53,945	47,778	46,750	42,765	42,369	41,441

자료 :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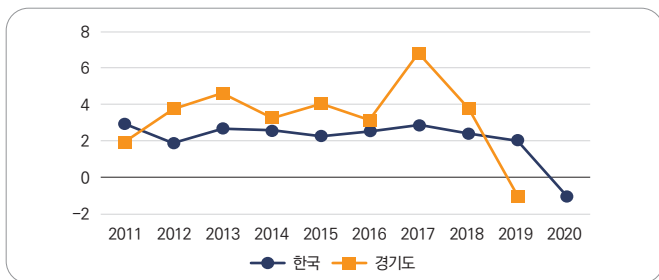
- 37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21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18위로 순위가 상승
- 한국의 1인당 GDP(PPP 기준)는 2015년 38,870달러에서 2019년 42,765달러로 3,894달러 증가(연평균 2.4%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인당 GDP(PPP 기준)는 룩셈부르크(115,601달러), 아일랜드(88,228달러), 스위스(69,086달러), 노르웨이(63,527달러), 미국(62,606달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2,614달러에서 2019년 16,031달러로 3,417달러 증가

2-1-4 1인당 GDP 증가율

○ 정의

- 1인당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 한국 및 경기도 1인당 GDP 증가율(불변가액 2015=100,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2.9	1.9	2.7	2.6	2.3	2.5	2.9	2.4	2.0	-1.0
경기도	2.0	3.7	4.6	3.2	4.1	3.1	6.8	3.8	-1.0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국민계정”.; 통계청(각년도). “지역소득”.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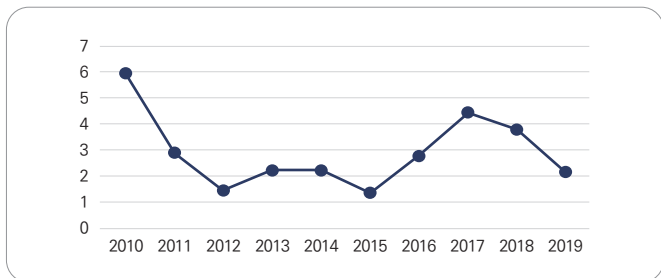
-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2011년(2.9%) 이후 2%대로 하락하고, 2.3%~2.9%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 2.0%로 하락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 감소율은 -1.0%로, 1998년 외환위기(-5.8%) 이후 22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
- 경기도의 1인당 실질 GRDP 증가율은 대부분의 시기에 한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2019년 -1.0%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명목)는 3,733만 원이며, 2019년 경기도의 1인당 GRDP(명목)는 3,606만 원임

2-1-5 노동생산성(시간당) 증가율

○ 정의

- GDP를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노동자들이 단위노동시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의 평균 시장가치를 의미

○ 전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전년대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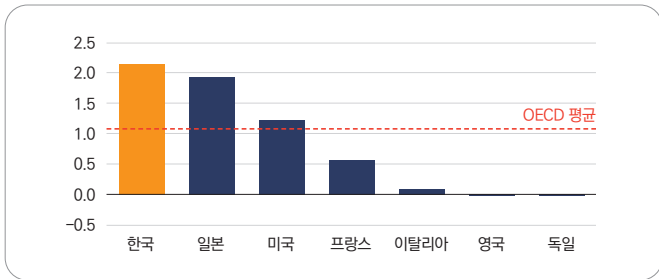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 생산성 증가율	6.0	2.9	1.4	2.2	2.3	1.4	2.8	4.5	3.8	2.2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6.0%에서 2019년 2.2%로 하락
-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금전적 가치는 2000년 1만 2,286원에서 2019년 3만 6,040원으로 1.9배 이상 증가
- 한국은 ICT 서비스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조

○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실질 GDP를 총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실질 가격의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상이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OECD 평균
2019년	2.2	1.9	1.2	0.6	0.1	0.0	0.0	1.1
'15~'19 연평균	2.9	1.0	0.9	0.8	0.1	0.4	0.7	1.0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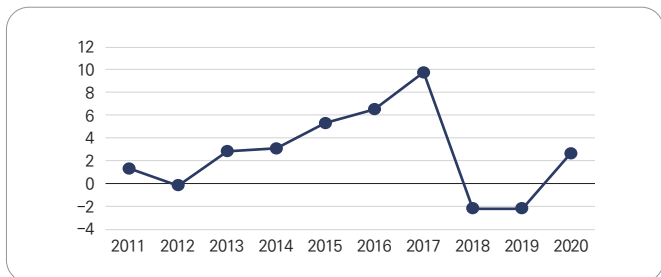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9년 1.1%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2.2%)이 2배 높은 수준
- 최근 5년(2015~19년) 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9%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0%보다 높은 수준
- 반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는 최근 5년(2015~19년) 평균 5위에서 2019년 11위로 하락

2-1-6 총고정투자액 증가율

○ 정의

- 총고정투자액은 유형고정자산투자(건설투자+설비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합계로서 미래 생산을 위해 투입된 가치를 의미

○ 전국 총고정투자액 증가율(2015년 불변가격 기준,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1.3	-0.1	2.8	3.1	5.4	6.6	9.8	-2.2	-2.1	2.6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총고정투자액 증가율은 2013~17년 증가했으나, 2018~19년에 감소하여 투자 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
- 2018~19년 총고정투자액 감소(-2.2~-2.1%)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기업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감소에 기인(지식재산생산물투자 소폭 증가)
- 2020년 건설투자는 -0.4% 감소했지만, 최근 주택 분양물량 확대, 비주거용 건물건설(생활 SOC 투자), 토목건설 확대 등의 요인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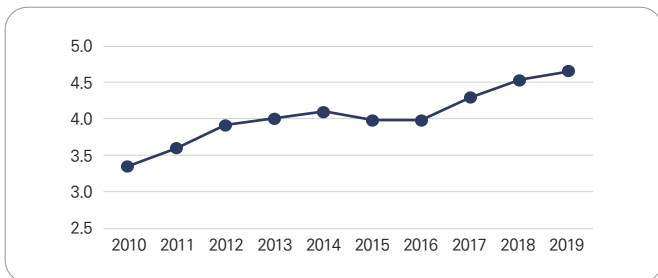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총고정투자액(명목)은 601.4조 원임

2-1-7 R&D 비율(GDP 대비)

○ 정의

-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당해 연도 GDP로 나누어 산출

○ 전국 GDP 대비 R&D 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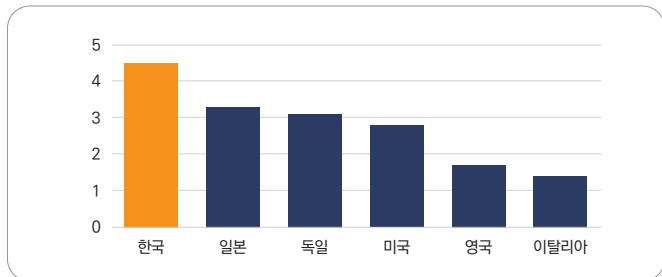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D 비율	3.3	3.6	3.9	4.0	4.1	4.0	4.0	4.3	4.5	4.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통계청(각년도). “국민계정”.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GDP 대비 R&D 집약도는 2000년 2.1%, 2010년 3.3%, 2019년 4.6%로 상승세를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을 유지
 - 전국의 총연구개발비 구성은 민간재원의 비중(75~79%)이 높고,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음
 - 총연구개발비 중 제조업 비중이 88%로 높지만, 서비스업은 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반면 R&D 투자가 단기 성과과제 중심이고, 기초과학기술 연구투자, 기업·국가 간 협력, R&D 지원제도 등 R&D 수행을 위한 질적 환경조성은 미흡
- ※ 2019년 기준 연구개발비 총액은 89조 470억 원임

○ 주요국의 GDP 대비 R&D 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2018년	4.5	3.3	3.1	2.8	1.7	1.4
'14~'18 연평균	4.2	3.3	3.0	2.8	1.6	1.4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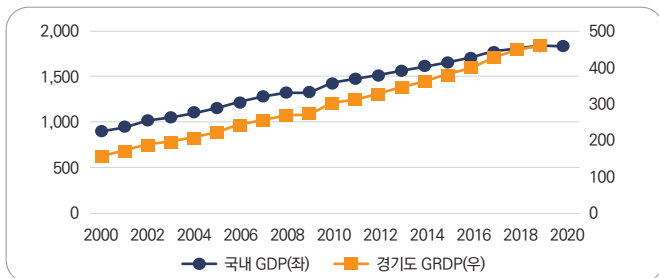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2018년 GDP 대비 R&D 비율은 1.4~3.3% 정도이고, 한국(4.5%)이 OECD 회원국 중 1위임
- 최근 5년간(2014~2018년) 평균은 한국이 4.2%로서, OECD 타 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평균 증가율이 정체한(최근 5년 평균 대비 2018년 평균값) 타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R&D 비중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89조 471억 원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미국은 5,816억 달러로 1위)

2-1-8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 정의

-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

○ 국내 GDP 및 경기도 GRDP 추이(201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조 원)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국내 GDP	904	1,155	1,427	1,658	1,853	1,837
경기도 GRDP	157	223	301	382	462	-
경기도 비중(%)	17.4	19.3	21.1	23.0	25.0	-

자료 : 국민은행(각년도). "국민계정"; 통계청(각년도). "지역소득".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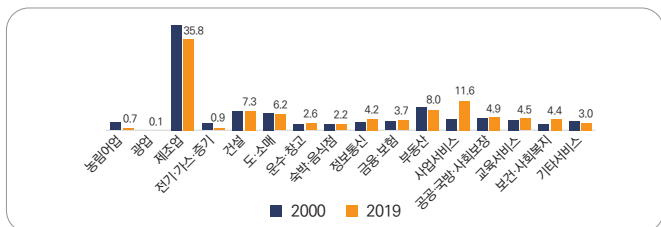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904조 원에서 2020년 1,837조 원으로 103.3% 증가하여 경제규모는 2.03배로 성장
- 실질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0년 157조 원에서 2019년 462조 원으로 193.7% 증가하여 경제규모는 2.94배로 성장
- 국내총생산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4%에서 2019년 25.0%로 7.6%p 상승하여 경기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2-1-9 경기도 산업별 생산비중(GRDP 대비)

○ 정의

- 산업별 생산비중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각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경기도 GRDP 대비 산업비중의 변화(2000~19년, 단위 : %)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전국	2000	4.4	0.3	29.1	2.3	6.0	9.5	4.4	2.8
	2019	1.8	0.1	27.6	1.4	6.0	7.7	3.3	2.6
경기도	2000	2.7	0.1	41.3	2.3	7.5	6.7	2.5	2.4
	2019	0.7	0.1	35.8	0.9	7.3	6.2	2.6	2.2
구분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국방·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국	2000	4.8	5.5	8.7	6.2	5.5	4.8	2.5	3.1
	2019	4.8	6.0	8.1	10.1	7.0	5.3	5.1	3.1
경기도	2000	3.1	3.4	9.3	4.4	4.8	4.0	2.3	3.3
	2019	4.2	3.7	8.0	11.6	4.9	4.5	4.4	3.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소득”.

○ 주요 특징 및 해석

- 2010~19년 동안 전국에서 생산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3.8%p),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5%p) 등이고, 감소한 산업은 농업(-2.6%p), 제조업(-1.5%p) 등임
- 경기도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한 산업과 크게 감소한 산업이 전국과 유사하며, 특히 사업서비스 성장세와 제조업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남(사업서비스업 7.2%p,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1%p, 제조업 -5.6%p, 농업 -2.0%p)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변화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

- 2020년 2월 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3월 전국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했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의 완화 및 악화에 따라 소비가 변동하는 패턴이 반복
- 2020년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5월 정부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가계소비가 일시적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 2021년에도 코로나19 변이 및 재확산 등의 여파로 인해 소비의 안정적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 소비수준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

○ 제조업은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생산지수도 회복세를 보임

- 2020년 제조업 가동률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으며, 따라서 생산부문은 내수보다는 대외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
- 광공업 생산지수 역시 3~5월 중 급격히 감소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등 ICT 품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
- 도·소매업 생산지수는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로 개척 여부가 회복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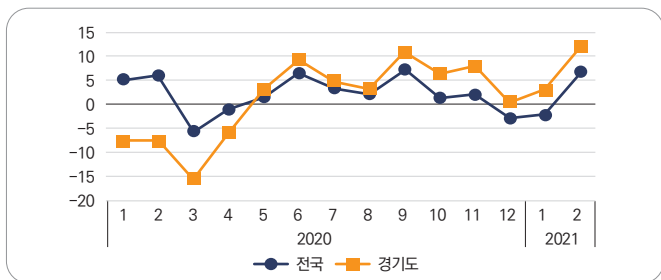
- 광공업 생산지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주로 ICT 산업 회복에 기인한 것이므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서비스업의 경우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업종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2-2-1 신용카드 매출액

○ 정의

-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지역별 신용카드 매출액

○ 전국 및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2020년 기준, 전년동월대비,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6.0	-5.8	-1.2	1.8	6.4	3.5	2.4	7.3	1.5	2.0	-3.2	-2.3	6.7	
경기	-7.5	-15.7	-6.3	3.2	9.2	4.9	3.4	10.8	6.4	7.9	0.4	2.8	12.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5.8%나 감소했으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회복과 악화를 반복
- 경기도는 2020년 3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15.7% 감소했으나,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 5월 이후 경기도 신용카드 실적이 전국보다 양호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역 및 해외 소비가 지역 내 소비로 대체되어 유출이 감소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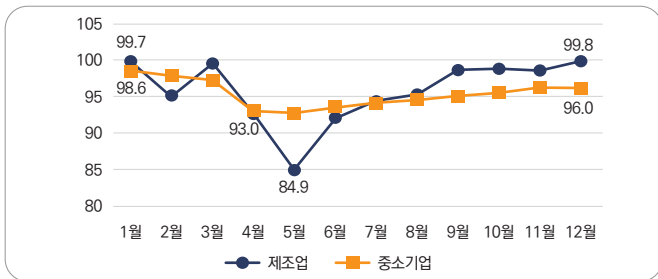
※ 2021년 2월 기준 개인신용카드 매출액은 전국 44조 234억 원, 경기도 8조 9,813억 원임

2-2-2 설비가동률

○ 정의

- 제조업체 보유 생산설비의 생산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량비율을 의미하며, 가동률지수는 월평균가동률의 2015년 평균치를 100으로 놓고 본 수치를 의미

○ 전국 가동률지수(2020년 기준, 계절조정, 기준연도 2015=1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100.0	99.0	98.4	98.8	98.4	95.6
중소기업	100.0	101.9	101.7	101.6	102.0	95.5

자료 : 통계청(각년도). "공업제조업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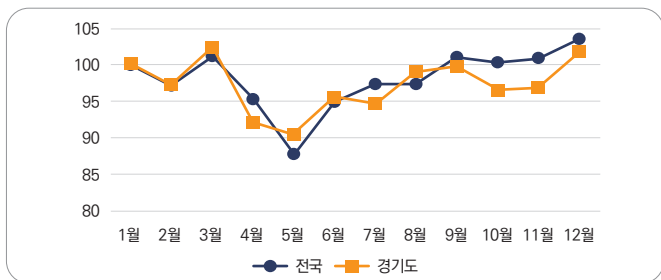
-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6년 이후 100을 하회하며 2015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신용카드 매출액과 달리 EU 및 미국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가동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가동률은 대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가동률 회복 속도가 전체 제조업에 비해 낮음

2-2-3 제조업 생산지수

○ 정의

- 제조업에 대한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 전국 및 경기도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 기준, 계절조정, 기준연도 2020.01=100)



구분	2020.1월	2020.2월	2020.3월	2020.4월	2020.5월	2020.6월
전국	100.0	97.1	101.4	95.2	87.7	95.0
경기도	100.0	97.2	102.4	92.1	90.4	95.3
구분	2020.7월	2020.8월	2020.9월	2020.10월	2020.11월	2020.12월
전국	97.2	97.5	100.9	100.3	100.7	103.6
경기도	94.7	98.9	99.7	96.5	96.8	101.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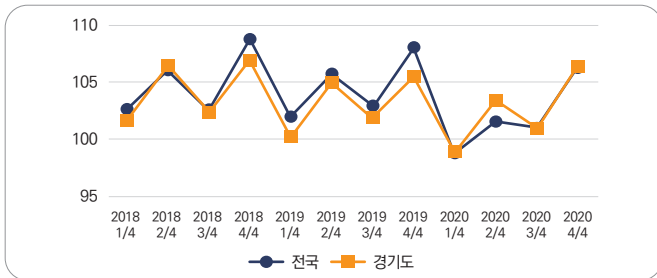
- 전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하락(-9.6p)한 후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2020년 1월 대비 12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상승(+3.6p)
- 경기도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으나, ICT산업 및 반도체 부문 성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

2-2-4 도매·소매업 생산지수

○ 정의

- 도매 및 소매 업종의 생산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한 지수

○ 전국 및 경기도 도매·소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기준연도 2015=1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00.0	102.2	103.1	104.4	103.2	102.4
경기도	100.0	102.5	103.2	105.0	104.6	102.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서비스업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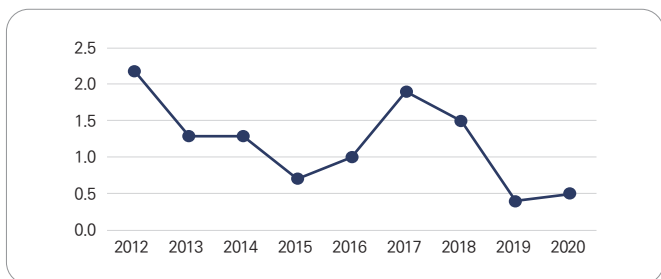
-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남에 따라 전국 및 경기도의 2019년 4/4분기 도매 및 소매업 생산지수가 회복양상을 나타냈으나, 2020년 1/4분기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급격히 위축
-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2020년 2/4분기 경기도 도매 및 소매업 생산지수 증가폭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후 3/4분기부터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2-2-5 물가 상승률

○ 정의

-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생활물가지수는 기본생활품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근원물가지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거하고 물가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임

○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기준연도 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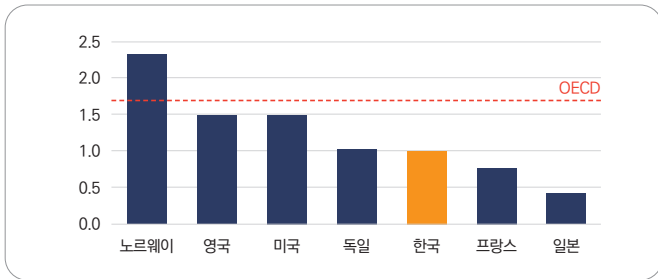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비자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1.9	1.5	0.4	0.5
생활물가상승률	1.7	0.7	0.8	-0.2	0.7	2.5	1.6	0.2	0.4
근원물가상승률	1.7	1.6	2.0	2.2	1.6	1.5	1.2	0.9	0.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소비자물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18년 동안 대부분 1%대였으나, 2019~20년 동안 0.5% 내외로 하락
- 전국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0년 생활물가 상승률은 0.4%에 불과
- 전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20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0.7%를 기록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015~20년 연평균, 기준연도 2015=100, 단위 : %)



품목별	노르웨이	영국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OECD
물가상승률	2.3	1.5	1.5	1.0	1.0	0.8	0.4	1.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소비자물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5~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6위임
- 2015~20년 동안 OECD 38개 회원국 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11.7%), 콜롬비아(4.4%), 멕시코(3.9%), 칠레(3.1%)이며, 3% 이상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OECD 회원국은 그리스(-0.3%), 스위스(-0.1%) 등임

○ 한국 수출은 2017~18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세 전환

- 2015~16년 감소세를 나타내던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017~18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 위축으로 감소세 전환
- 백신 공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 약화 및 경기회복을 위한 각국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2021년 수출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 동남아시아와의 무역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 주요국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기록
-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저·중위기술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축소 등으로 인해 해당 산업의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상당수 이전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과의 무역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
- 2019년 한·일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무역비중은 5.2%로 2018년에 비해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도 4.9%를 기록하여 한·일 무역분쟁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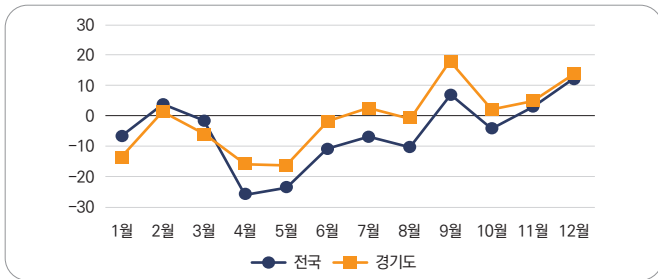
- 한국의 대외의존도(국제무역비율)는 OECD 주요국 중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충격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남
-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간재 무역형태에서 고기술·고부가가치 수출로의 구조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2-3-1 수출 증가율

정의

- 전년동월대비 수출금액(백만불, 명목) 증가율

전국 및 경기도 수출 증가율(2020년 기준, 전년동월대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8.0	-5.9	15.8	5.4	-10.4	-5.5
경기도	-5.1	-7.4	26.5	15.5	-18.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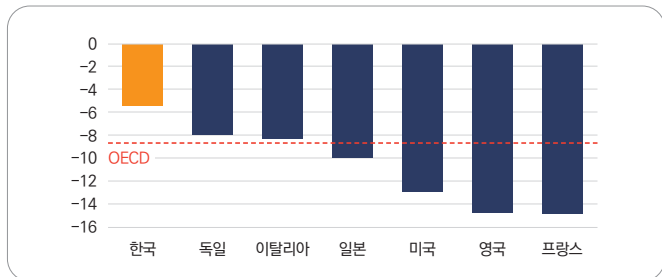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포털.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수출은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4월 급격히 감소(-25.6%) 했으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에 의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품목 대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전환
-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중심의 ICT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수출증가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증가

※ 2020년 기준 수출액은 전국 5,125억 달러, 경기도 1,152억 달러임

○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2020년 기준,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OECD
2020년	-5.4	-8.0	-8.3	-9.9	-12.9	-14.7	-14.8	-8.5
'16~'20 연평균	-0.1	1.0	1.9	0.6	-0.7	-2.1	-0.4	1.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포털;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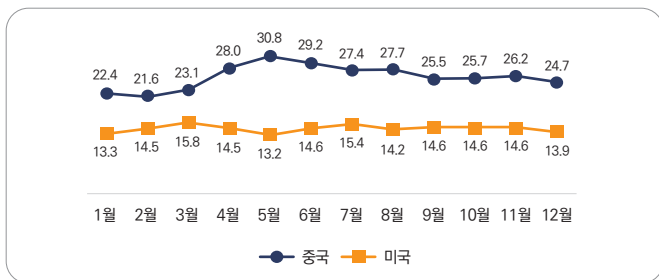
- 2020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5.4%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비대면 경제의 국내·외 확산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대내·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OECD 주요국 중 프랑스(-14.8%), 영국(-14.7%), 미국(-12.9%)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20년 한국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미·중 무역분쟁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0.1%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인 1.2%보다 낮음
- OECD 주요국 중 평균 수출증감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9%)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2.1%)으로 나타남

2-3-2 수출대상국(5대)의 수출비율

○ 정의

- 2020년 연간 수출금액 기준 상위 5개 수출국별 전체 수출금액 대비 수출비중

○ 한국의 대중국·대미국 수출비율(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26.0	25.1	24.8	26.8	25.1	25.8
미국	13.3	13.4	12.0	12.0	13.5	14.5
베트남	5.3	6.6	8.3	8.0	8.9	9.5
홍콩	5.8	6.6	6.8	7.6	5.9	6.0
일본	4.9	4.9	4.7	5.0	5.2	4.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포털.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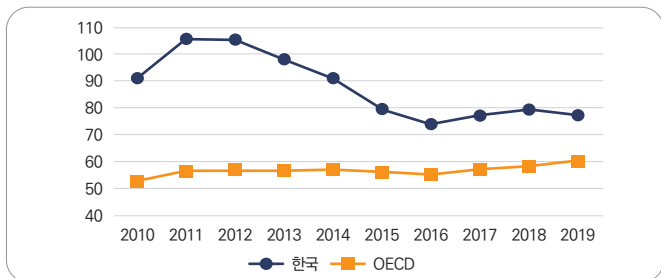
-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비율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2019년 1.7%p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소폭 회복세 기록
 - 2017년까지 감소하던 미국 수출비율은 2019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됨에 따라 2015년 이후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 2020년 기준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1,326억 달러, 미국 741억 달러, 베트남 485억 달러, 홍콩 307억 달러, 일본 251억 달러임

2-3-3 국제무역비율(GDP 대비)

○ 정의

-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무역의존도)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

○ 주요국의 GDP 대비 국제무역비율(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OECD
2019년	79.0	26.3	36.8	64.3	88.0	60.0	64.5	60.6
'16~'19 연평균	77.2	26.9	34.3	61.8	87.2	58.6	63.3	5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포털,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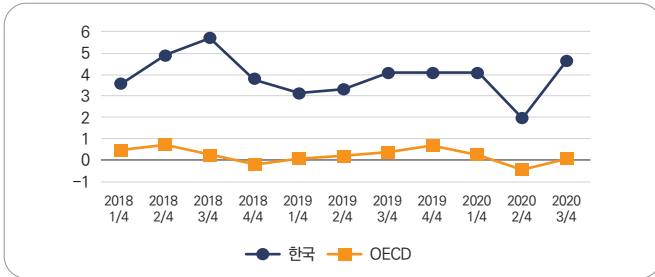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국제무역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6년 이후부터 70~80% 수준을 기록
 -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국제무역비율은 79%를 기록하여 OECD 주요국 중 독일(88%)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016~19년 한국의 국제무역비율 평균은 77.2%로 OECD 전체 평균 57.7% 대비 19.5%p 높았으며, OECD 주요국 중 독일(87.2%)에 이어 2위를 기록
- ※ 2020년 기준 한국의 수출입총액은 9,801억 달러임

2-3-4 경상수지비율(GDP 대비)

○ 정의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의 합계이며,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OECD
2019년	3.6	-2.2	3.6	-3.1	7.1	3.0	-0.7	0.3
'16~'19 연평균	4.8	-2.1	3.8	-4.0	7.7	2.7	-0.6	0.3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3.6%로 OECD 전체 평균 0.3%에 비해 3.3%p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OECD 주요국 중 독일(7.1%)에 이어 2위를 기록
- 2020년 분기별 경상수지비율을 살펴보면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경상수지비율 개선이 반드시 좋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20년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는 752.8억 달러임

○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독일을 제외한 다른 OECD 주요국의 절반 이하로 양호한 수준

-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폭이 커짐
- IMF 전망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일반정부채무비율(D2)은 2020년 48.41%에서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2016~19년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중앙+지방) 지출비율은 33.9%로 미국(38.1%), 일본(39.0%), 독일(45.2%), 프랑스(55.6%) 등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0.9%보다도 낮은 수준
- 최근 5년(2016~19년) 한국의 평균 정부지출비율은 31.4%로 OECD 평균인 40.6%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남
-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정부지출비율이 낮은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지출비율이 낮기 때문임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은 12.2%로 OECD 평균인 2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OECD 국가 중 가장 건조한 편이며, 대외채무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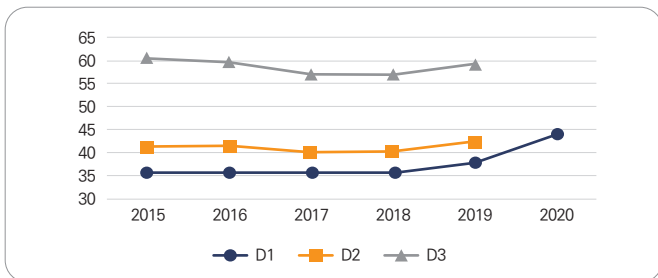
- 2016~19년 한국의 평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9% 흑자로 나타나 OECD 평균인 0.3% 적자와 대조를 보임
-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은 28.4%로 미국(95.3%), 일본(83.1%), 영국(310.4%), 독일(145.3%),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OECD 평균(172.9%)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비율은 최근 다소 상승했으나, 지난 5년간 28~33% 수준으로 안정세

2-4-1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정의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단위 : %)



주 :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채무, D3은 공공부문채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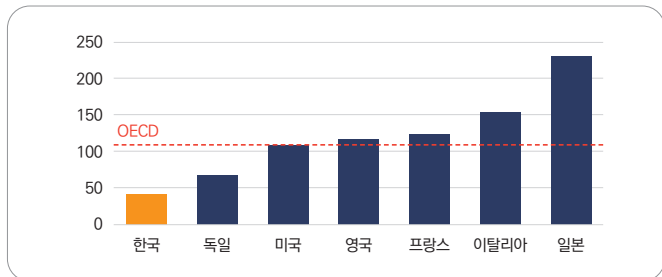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D1	35.7	36.0	36.0	35.9	37.7	43.9
D2	40.8	41.2	40.1	40.0	42.2	-
D3	60.5	59.5	56.9	56.9	59.0	-

자료 : 국가지표체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 특징 및 해설

- D1 기준으로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3.9%로 2019년에 비해 6.2%p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 및 세수감소의 영향으로 판단됨
- 현재 세입·세출구조에서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국가채무가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 2020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846.9조 원, 2019년 기준 일반정부채무(D2)는 810.7조 원, 공공부문채무(D3)는 1,132.6조 원임

○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OECD
2019년	42.2	68.2	108.1	117.3	124.0	154.6	230.1	109.6
'16~'19 연평균	41.6	72.0	106.7	117.0	123.0	152.0	225.5	109.5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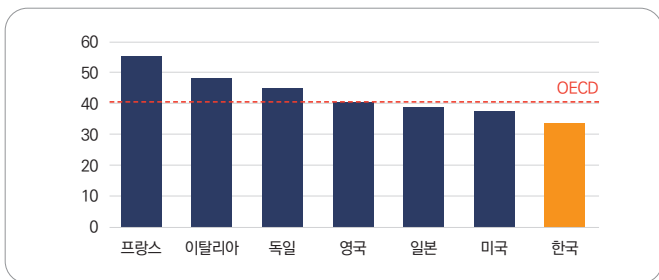
- D2 기준 2019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2.2%로 OECD 전체 평균 109.6%에 비해 67.4%p 낮은 수치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일본은 장기간 불황의 여파로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2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도 150%대의 높은 국가채무비율을 기록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대부분이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 미국 및 EU 국가들의 경우 섣달의달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및 코로나19 재확산 / 변이 등의 여파로 회복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4-2 정부지출비율(GDP 대비)

정의

- 일반정부(중앙+지방) 지출액의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한국	OECD
2019년	55.6	48.6	45.2	41.1	39.0	38.1	33.9	40.9
'16~'19 연평균	56.1	48.7	44.5	41.2	39.0	38.0	31.4	40.6

자료 : OECD Statistics.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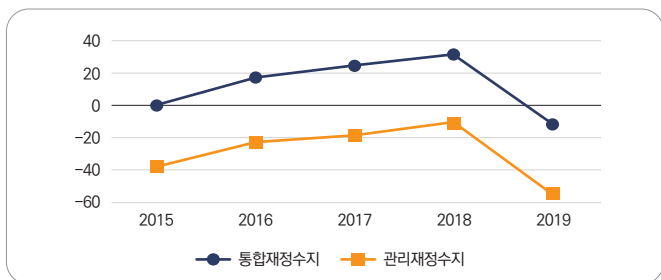
-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은 33.9%로 OECD 평균에 비해 7%p 낮으며,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OECD 주요국 중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55.6%)이며, 그다음으로는 이탈리아(48.6%), 독일(45.2%)로 나타나 EU지역 국가 중 대륙형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지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4-3 정부재정수지

○ 정의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 관리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 한국의 정부재정수지(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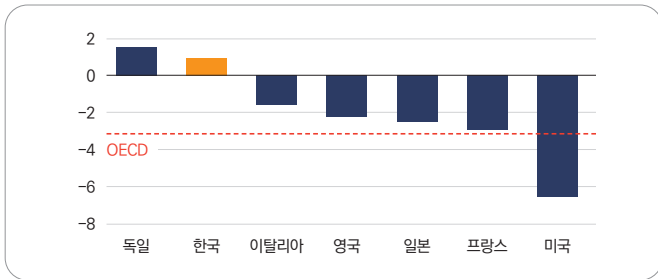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조 원)	-0.2	16.9	24.0	31.2	-12.0
(GDP대비, %)	0.0	1.0	1.3	1.6	-0.6
관리재정수지(조 원)	-38.0	-22.7	-18.5	-10.6	-54.4
(GDP대비, %)	-2.3	-1.3	-1.0	-0.6	-2.8

자료 : 국가지표체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일반적으로 정부재정수지는 경기가 악화되면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적자를 나타내고 경기가 좋으면 흑자를 보이는 경향
- 한국의 정부재정수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

○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재정수지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산정기준의 차이로 OECD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국내 통계기관의 제공하는 수치에 차이가 존재

구분	독일	한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OECD
2019년	1.5	0.9	-1.6	-2.3	-2.6	-3.0	-6.6	-3.2
'16~'19 연평균	1.5	2.2	-2.2	-2.6	-2.8	-3.0	-5.6	-2.8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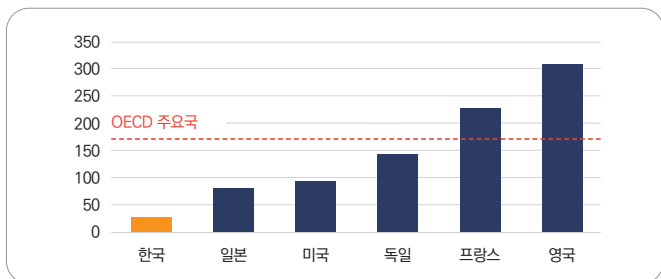
- OECD 데이터 기준으로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재정수지는 0.9%로 나타나 OECD 주요국 평균 -3.2%보다 4.1%p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OECD 주요국 중 독일(1.5%) 다음으로 2위를 기록
- OECD 주요국 대부분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경우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2-4-4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 정의

- 대외채무란 일정 시점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금융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확정 채무의 잔액을 말하며, 대외채무비율은 GDP 대비 대외채무의 비율을 의미

○ 주요국의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주요국
2019년	28.4	83.1	95.3	145.3	230.3	310.4	172.9
'16~'19 연평균	26.2	76.9	96.2	146.9	216.2	301.9	167.6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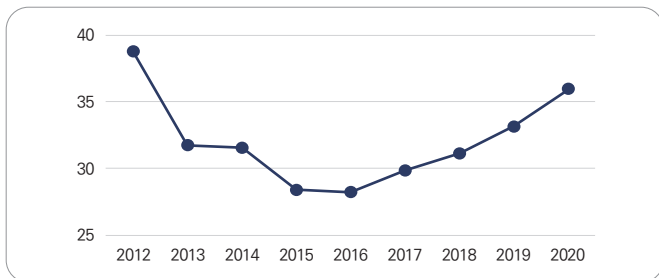
- 2019년 한국의 대외채무비율은 28.4%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72.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OECD 주요국 중 2019년 대외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310.4%를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프랑스(230.3%), 독일(145.3%) 순으로 EU 지역 국가들의 대외채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20년 기준 한국의 대외채무액은 5,449억 달러임

2-4-5 단기채무비율(외환보유액 대비)

○ 정의

- 대외채무 중 계약만기 1년 이하를 단기채무라고 하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 비율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비율이라 함

○ 한국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비율(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기채무비율	38.8	31.7	31.5	28.4	28.2	29.8	31.1	33.1	36.0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대외채권및대외채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각년도). "외환보유액".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비율은 36.0%를 기록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여 채무건전성이 소폭 악화
- 한국은행은 2019년 단기채무비율이 전년대비 2.0%p 높아졌으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
- 단기외채비율의 상승은 위험신호로 볼 수 있으나, 중앙은행 통화안정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 대외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2020년 기준 한국의 단기대외채무액은 1,593억 달러,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임

○ 코로나19 이후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대두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5~19년 연평균 8.6%를 기록
- 최근 전원세자금 대출 및 주택매입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2020년 12월에 전월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6조 3,000억 원 가량 증가
-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0년 139.2%에서 2019년 179.4%로 상승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OECD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

○ 한국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총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빠름

-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10년 153.9%에서 2019년 155.3%로 상승
- 한국의 기업부채비율 증가폭은 높은 수준이 아니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별로 이질적인 위험이 존재
- 비금융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 부진에 따라 기업부채비율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
-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액의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이하이나, 최근 총부채비율의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2위에 위치

○ 코로나19 이후 잠재적인 경제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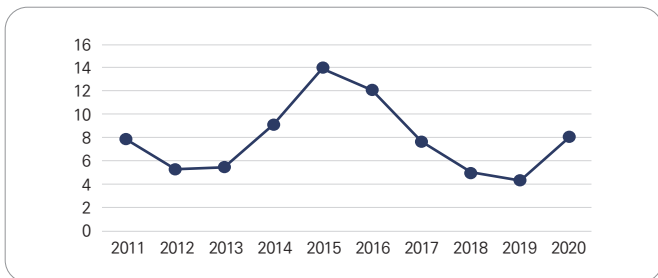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 및 무직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유동성 팽창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부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실물-금융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가계 채무상환능력 악화와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인 및 기업의 금융불안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2-5-1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 정의

-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 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대비, 단위 : %)



주 : 연도별 주택담보대출액(명목 가격)의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7.8	5.2	5.4	9.1	14.0	12.1	7.6	4.9	4.3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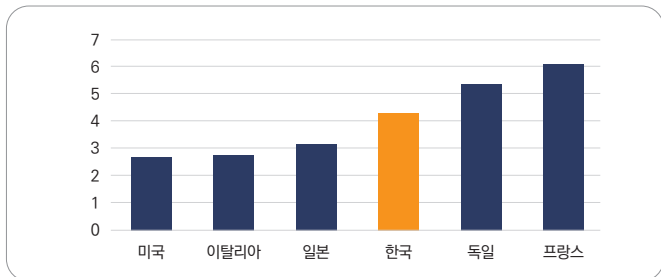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통화금융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1년 7.8%에서 2015년 14.0%까지 상승한 이후 2019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8.0%를 기록하여 2019년에 비해 3.7%p 상승
- 전월세자금을 대출하거나 30대 중심의 주택매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 관련한 대출이 증가하고, 2020년 가계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0조 5,000억 원 이상 증가

※ 2020년 기준 전국의 주택담보대출액은 910조 6,298억 원임

○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각국의 화폐로 측정한 당해 연도 주택담보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구분	미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2019년	2.7	2.8	3.2	4.3	5.4	6.1
'15~'19 연평균	2.3	2.8	2.4	8.6	4.3	5.2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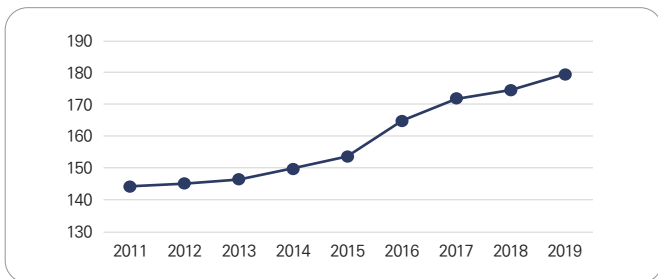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3%)은 최근 5년(2015~19년) 간 평균 증가율(8.6%)보다 둔화됨
- 주요국의 2019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프랑스(6.1%), 독일(5.4%), 일본(3.2%), 이탈리아(2.8%), 미국(2.7%)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5~19년) 대비 2019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높음

2-5-2 가계부채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

○ 정의

- 총처분가능소득(Gross Disposable Income)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의미
 ※ 총가처분소득은 국가 내에서 가구소득 중 세금, 사회 기여금 등 소득분배 항목을 제외하고 개인의 소비 및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값

○ 전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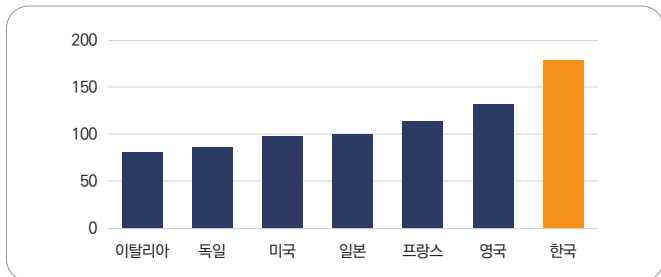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계부채비율	144.4	145.5	146.7	149.8	153.7	165.1	171.8	174.5	179.4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1년 144.4%에서 2019년 179.4%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하는 등 2020년에도 가계부채비율 증가는 지속
- 코로나19 이후 주택관련대출 및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위험이 존재

○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미국과 일본의 수치는 2018년 기준

구분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
2019년	81.3	87.8	98.6	100.1	114.73	133.2	179.4
'15~'19 연평균	80.8	86.9	101.0	99.1	111.3	135.2	168.9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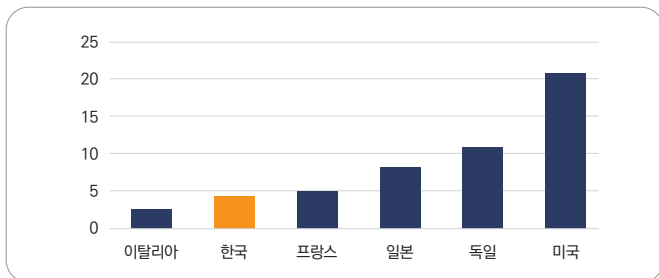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GDI 대비 가계부채비율(179.4%)은 OECD 회원국 중 6위를 기록
- 가계부채비율은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의 경우 다른 주요국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상회하는 주요 이유는 2030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주식 투자자금 수요 증가, 소비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및 저소득 가계의 부채비율 증가 등인 것으로 판단

2-5-3 고위험가구비율

○ 정의

- 고위험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5%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고, 고위험 가구비율은 총가구 중 고위험가구의 비율을 나타냄

○ 주요국의 고위험가구비율(각 년도 기준, 단위 : %)



주 : 한국 2015년, 미국 2016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2014년 기준

구분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최근 년도	2.7	4.5	5.0	8.4	11.0	20.9
'09~'16 연평균	2.6	4.6	5.6	8.4	10.7	22.4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5% 이상인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미국(20.9%), 독일(11.0%), 일본(8.4%), 프랑스(5.0%), 한국(4.5%), 이탈리아(2.7%) 순으로, 한국의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무직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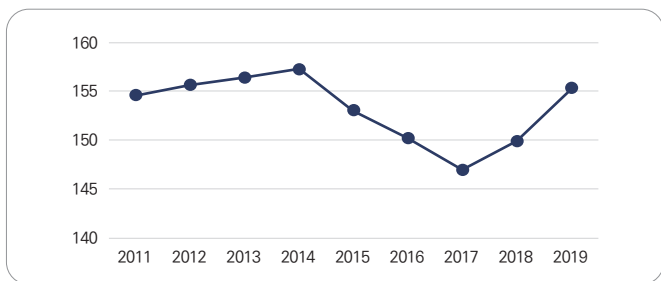
※ 2020년 12월 말 기준 고위험가구는 19.2만 가구임

2-5-4 기업부채비율(GDP 대비)

○ 정의

- 각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법인 부채액의 비율을 의미

○ 한국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부채비율	154.6	155.7	156.3	157.2	153.0	150.2	147.0	149.8	1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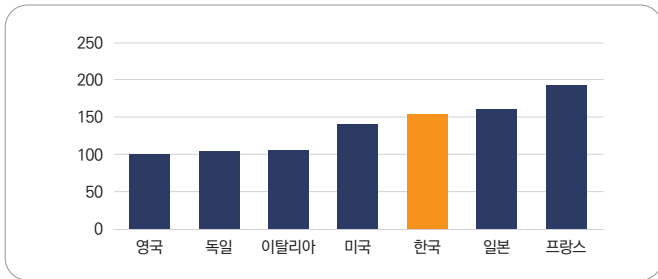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11년 154.6%에서 2019년 155.3%로 소폭 상승하여,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유지
-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매출충격이 상당하였으나, 기업부채 비율은 2020년 상반기에 전년 말 대비 2.6%가량 증가
- 한국의 기업부채비율 상승폭은 높은 수준이 아니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기업별로 이질적인 특징을 보임

※ 2020년말 기준 기업부채(잠정치)는 2,153.5조 원임

○ 주요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일본의 수치는 2018년 기준

구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2019년	101.2	105.0	107.6	142.0	155.3	161.5	192.6
'15~'19 연평균	115.8	99.8	112.9	136.6	151.1	158.2	186.7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한국이 155.3%로서 OECD 회원국 중 13위를 기록
-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는 프랑스(192.6%), 일본(161.5%), 미국(142.0%), 독일(105.0%), 영국(10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이하이나, 총부채비율의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
- 비금융기업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영업잉여 감소 등 경영실적 부진은 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타 경제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이후 실물-자산시장 괴리 심화

- 과거 IMF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실물부문과 자산시장이 같이 위축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실물부문과 자산시장 간 탈동조화 현상(Decoupling) 발생
- 코로나19 위기 이후 제로수준의 금리 및 확장재정정책 등의 여파로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산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소비위축 및 한계기업 퇴출 등의 영향으로 실물부문은 위축되고 있는 양상
- 광의의 통화(M2)는 2020년 10월 기준 3,15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했으나 통화승수는 14.6으로 감소하며 자산시장으로의 통화량 유입을 암시

○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 지속

- 코로나19 확산 직후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과거 위기 시 주식시장 패턴을 학습한 개인들의 주식투자 확대가 어우러져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
-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가상화폐 시장이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가며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는 등, 실물-주식/가상화폐 시장의 괴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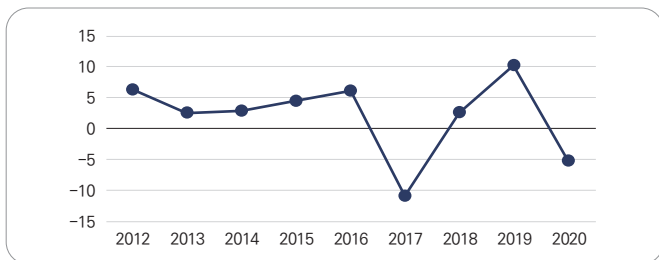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들의 공포심이 확대되며 패닉바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
-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로 2019년 2.0%보다 3.0%p 하락했으나,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2019년 0.0%에서 2020년 0.4%로 상승

2-6-1 경제성장률-주가상승률 격차

○ 정의

- 명목 경제성장률과 명목 주가상승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실물부문과 금융자산부문 간 괴리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임

○ 전국 경제성장률 - 코스피 상승률 격차(전년대비, 단위: %p)



주: 코스피 및 코스닥 상승률은 평균 지수 전년대비 상승률로 계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7	4.2	4.1	6.1	5.0	5.5	3.4	1.1	0.3
코스피지수 상승률	-2.7	1.6	1.1	1.5	-1.2	16.3	0.6	-9.4	5.4
코스닥지수 상승률	0.8	5.7	2.7	23.7	-0.7	-1.1	21.8	-15.4	10.4
경제성장률-코스피지수 상승률	6.4	2.7	3.0	4.6	6.2	-10.9	2.8	10.5	-5.1

자료: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한국거래소(각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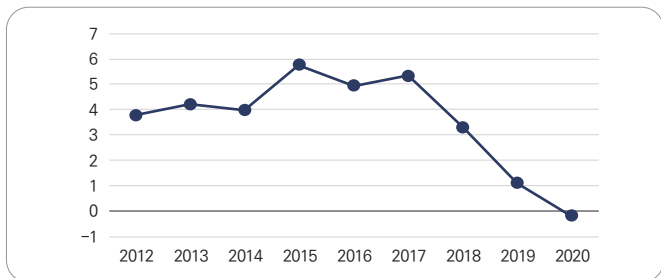
- 2012~20년 동안 명목 경제상승률과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각각 연평균 3.7%, 1.5% 상승
- 2017년을 제외하고 명목 경제성장률이 코스피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명목 경제상승률을 상회
- 최근 격차 역전 현상은 코로나19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 및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공급 증가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주식투자 과열양상이 주요 요인

2-6-2 경제성장률-주택가격상승률 격차

○ 정의

- 명목 경제성장률과 명목 주택가격상승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실물부문과 자산부문 간 괴리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임

○ 전국 경제성장률 - 주택가격상승률 격차(전년대비, 단위 : %p)



주 : 연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각 월별 상승률의 평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7	4.2	4.1	6.1	5.0	5.5	3.4	1.1	0.3
주택가격상승률	-0.1	0.0	0.1	0.3	0.1	0.1	0.1	0.0	0.4
경제성장률- 주택가격상승률	3.8	4.2	4.0	5.8	4.9	5.3	3.3	1.1	-0.2

자료 :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한국부동산원(각년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2~20년 동안 명목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연평균 3.7%, 0.1%
-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았으나, 2020년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
- 2020년 명목 경제성장률은 0.3%로 2019년 1.1%보다 0.8%p 하락했으나, 주택가격상승률은 2019년 0.0%에서 2020년 0.4%로 0.3%p 상승

○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에 따른 리쇼어링 이슈가 대두

- 리쇼어링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제기
- 한국·일본·독일·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는 최근 중간재 수출 및 해외부가가치분이 감소하는 등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이 약화하는 추세
- 하지만 한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의 저임금 및 내수시장의 성장, 제도적 지원 등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국내외적 요인
- 최근 국내 제조업은 각국간 무역장벽의 확대, 자국내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하여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

○ 한국의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은 미흡한 수준

- 한국은 원자재 및 ICT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히 해외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리쇼어링 실적이 저조한 상황
- 리쇼어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은 일시적 상황(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주변국의 투자유치경쟁에 민감하게 반응
- 미국과 일본은 각각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양 패키지(약 720억 원) 및 긴급재정자금(약 2,200억 엔)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
- 최근에는 해외의 저임금 시장에 대한 선호가 아닌, 첨단산업 시장을 선점할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리는 추세

○ 경기회복 및 고용 개선을 위해 리쇼어링 지원 방안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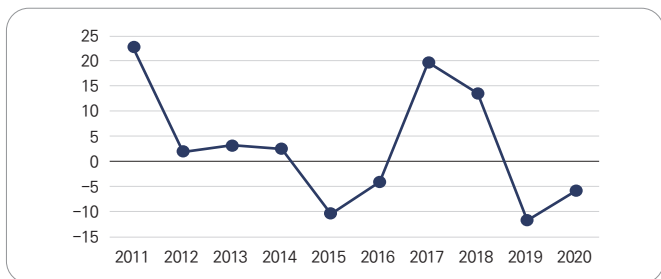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금융위기 이후 리쇼어링 기업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증대
- 유턴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산·학·연 합동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등 리쇼어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2-7-1 중간재 수출증감률

○ 정의

- 최종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 교역액(량)을 의미하고, 중간재 수출의 감소는 선진국이 신흥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수직적인 분업구조(오프쇼어링)의 약화로 해석함

○ 한국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대비, 단위 : %)



주 :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한 중간재 교역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간재 수출증감률	22.7	2.2	3.4	2.7	-10.2	-3.9	19.8	13.8	-11.3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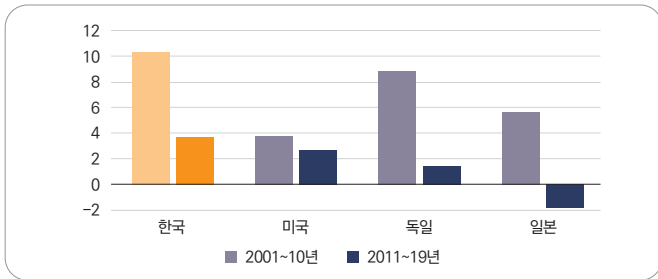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각년도). "가공단계 수출입".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중간재 수출액은 2015년(-10.2%) 이후 감소세를 보임
- 2020년 기준 한국의 수출액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5%이고, 상위 10개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품목이 다수 포함됨
-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으나, 2019~20년 동안 메모리반도체 등 중간재의 중국 수출이 부진하고 ICT 및 첨단산업 등 시장이 확대하는 분야에 경쟁력이 약화하는 추세

※ 2020년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액은 3,615억 달러임

○ 주요국의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대비,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2001~10년	10.3	3.9	8.9	5.7
2011~19년	3.7	2.7	1.5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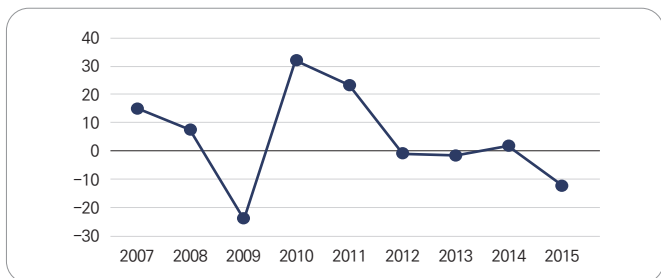
- 해외 생산기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수출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
- 2001~10년 구간 대비 2011~19년 구간에서의 중간재 수출증감률의 감소폭은 일본(-7.5%p), 독일(-7.4%p), 한국(-6.6%p), 미국(-1.2%p) 순
- 국가별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따라 자국 내에서도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구조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오프쇼어링하는 경우는 감소할 전망

2-7-2 해외부가가치액

○ 정의

- 특정국의 최종수요(소비+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전체 부가가치 중 해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액으로서,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감소할수록 오프쇼어링이 축소

○ 한국 해외부가가치액 증감률(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해외부가가치액 증감률	15.2	7.6	-23.4	31.8	23.2	-0.7	-1.7	1.9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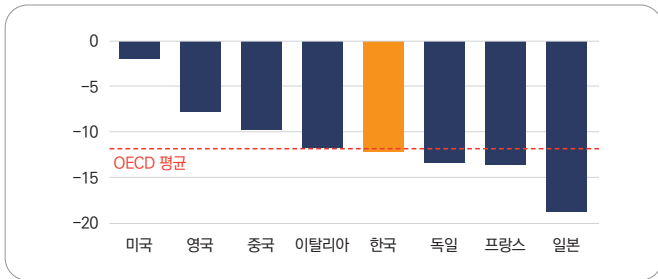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최종생산물의 가치 중 해외부가가치액의 증감률은 2010년(31.8%)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개발은행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종수요 생산에 사용한 해외부가가치액의 비중은 2011년 대비 2019년에 2.8% 하락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둔화될 전망

※ 2015년 기준 한국의 해외부가가치액은 3,159.9억 달러임

○ 주요국의 해외부가가치액 증감률(2015년 기준, 단위 : %)



주 : 중국은 OECD 비회원국이나 참고자료로 포함

구분	미국	영국	중국	이탈리아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평균
2015년	-1.9	-7.7	-9.8	-11.6	-12.2	-13.3	-13.5	-18.8	-11.9
'11~'15 연평균	3.4	2.5	9.6	-3.6	2.1	0.3	0.8	1.8	2.1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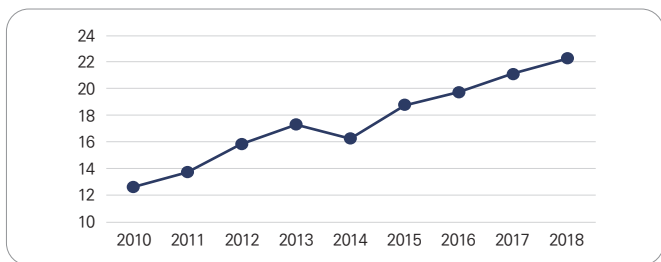
- 2011~15년 평균 해외부가가치액은 이탈리아(-3.6%)를 제외한 OECD 회원국에서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해외부가가치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오프쇼어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2015년 해외부가가치액 증감률이 높은 순서부터 19위이고, OECD 평균에 비해 해외부가가치액이 크게 감소
- 자국의 최종수요를 위해 필요한 해외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11년 대비 2019년에 미국(-0.3%), 일본(-0.1%), 한국(-2.8%) 등에서 하락 (한국무역협회)

2-7-3 해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 정의

- GDP 대비 국내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비율로, 국내기업 또는 국내투자자가 해외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혹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

○ 한국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해외직접투자비율	12.7	13.8	15.9	17.4	16.4	18.8	19.8	21.1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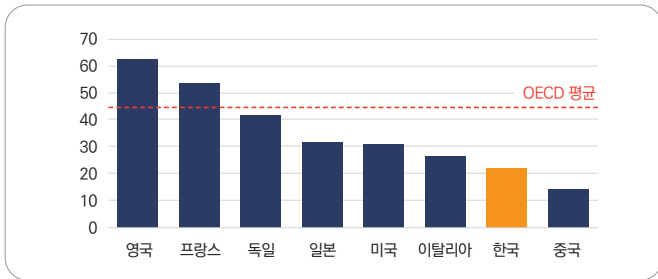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은 2010년(12.7%)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8년 22.3%에 달함
-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현지 시장진출 목적 중 해외직접투자가 2014년 56.1%에서 2019년 69.9%로 상승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기조가 심화하고 신흥국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신흥국시장 진출 필요성이 증대
-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업은 국내설비투자를 축소하고, 전자·통신장비, 화학제품, 전기장비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하는 추세

※ 2020년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신고금액기준)은 709.2억 달러임

○ 주요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주1 : 중국은 OECD 비회원국이나, 참고자료로 포함

주2 : OECD 평균치는 All Resident Units이 아닌 Resident Operating Units(Non-SPEs)임

구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한국	중국	OECD 평균
2018년	62.5	53.8	42.0	31.7	31.0	26.6	22.3	14.3	44.7
'14~'18 연평균	60.0	51.7	40.6	28.2	35.0	25.2	19.7	11.9	45.1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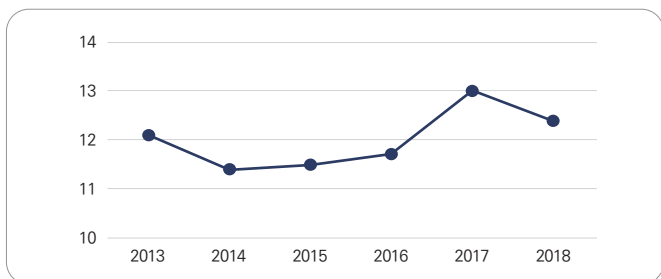
-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비중(22.3%)은 OECD 회원국 중 23위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44.7%)에 비해 절반 수준
-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11.9%이고, 최근 5년 (2014~18년) 대비 2.4%p 상승

2-7-4 외국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 정의

-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지분 획득을 통해 기존 기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율

○ 한국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외국인직접투자비율	12.1	11.4	11.5	11.7	13.0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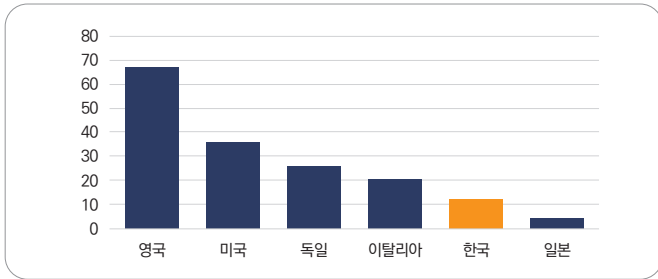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율은 2013~18년 동안 11.4~13.0% 사이에서 정체된 양상
- 한국은 2005년 이후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 M&A형 투자가 감소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정체된 상태
- 정책 변화(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국제정세 변화(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 등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금액기준)은 207.4억 달러임

○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
2018년	67.5	36.1	26.0	20.5	12.4	4.1
'14~'18 연평균	58.7	34.8	24.4	19.2	12.0	4.0

자료 : OECD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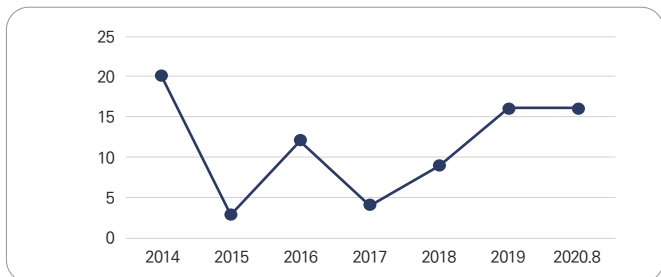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비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2018년 기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비율은 한국 12.4%, 일본 4.1%, 이탈리아 20.5%, 독일 26.0%, 미국 36.1%, 호주 46.9%, 영국 67.5%, 네덜란드 184.3% 등임
- 2020년 상반기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25위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한국경제연구원)

2-7-5 리쇼어링 기업수

○ 정의

- 해외의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 내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 한국 리쇼어링 기업수(단위: 개)



주: 리쇼어링 기업수는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바뀌는 경우, FDI 회수, 투자계획 변경 등의 경우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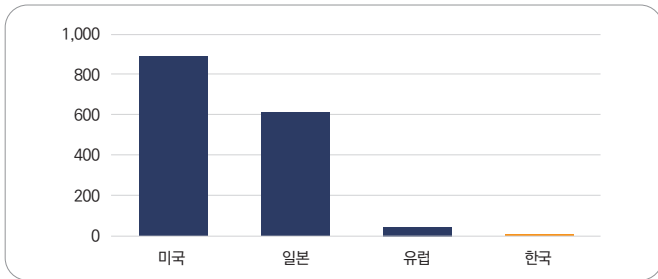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리쇼어링 기업수	20	3	12	4	9	16	16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Reshoring Initiative Report*.; *European Reshoring Monitor*.;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민혁기(2020).; 심혜정(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유턴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17년 4개로 감소한 이후 2019년 16개로 다소 부진한 상황
- 2014년 이후 전기전자(15건), 주얼리(13건), 자동차(11건) 업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업종에서는 건수가 10건 미만
- 또한 2014년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 중 57.1%만이 제조 공장을 가동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

○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수(2018년 기준, 단위 : 개)



주 : 리쇼어링 기업수는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바뀌는 경우, FDI 회수, 투자계획 변경 등의 경우를 포함

구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2018년	886	612	46	9
'14~'18 연평균	482.2	667.8	50.6	9.6

자료 : 한국무역협회(2021).: *Reshoring Initiative Report*.: *European Reshoring Monitor*.: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민혁기(2020).: 심혜정(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8년 기준 미국(886건)과 일본(612건)의 리쇼어링 건수는 한국(9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
- 최근 5년(2014~18년) 동안의 연평균 리쇼어링 건수도 미국과 일본은 482~667건 규모를 보여, 한국의 리쇼어링 건수는 중단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유지
-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급증하고,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중 약 720억 원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로 할당
-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연간 리쇼어링 기업의 수가 600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기업환경 개선, 국내 경제 활성화 정책, 중국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이 작용
- 일본은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예산 중 약 2조 3천억 원을 리쇼어링 기업의 지원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3장

산업

3-1 지역 간 산업 불균형

3-2 언택트(Untact)산업

3-3 플랫폼경제

3-4 창업생태계

3-5 기술·혁신 경쟁력

3-6 규제혁신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울산시가 대구시보다 2.7배

- 2019년 전국 시도 중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로 6,535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로 2,374만 원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3,613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이며, 전국 3,721만 원에 비해 108만 원 낮은 수준임
- 2018년 기준으로 경기북부지역 1인당 GRDP는 2,482만 원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이며, 경기남부와 격차는 1,688만 원으로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 수도권 내 대기업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경기북부는 전국 하위권

- 전국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 중 57.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의 63.6%가 수도권에 집중
- 경기북부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수가 88개(전국의 2.1%)로 경기남부(600개, 전국의 14.8%)에 비해 크게 적고,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도 경기북부(8억 2천 7백만 달러)는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속함

○ 경기도는 북부지역 기업유치 위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및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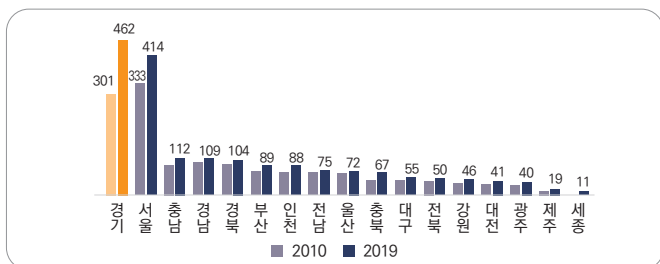
- 경기북부 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첨단업종 공장의 유치를 촉진
- 수도권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
- 수도권(경기도 내) 접경지역 또는 경기북부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경기도의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3-1-1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 정의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기간 동안 시도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

○ 시도별 GRDP(201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조 원)



구분	경기	서울	충남	경남	경북	부산	인천	전남
2000년	157	234	45	58	55	52	43	48
2010년	301	333	92	98	92	72	69	68
2019년	462	414	112	109	104	89	88	75
구분	울산	충북	대구	전북	강원	대전	광주	제주
2000년	49	28	33	30	26	23	20	9
2010년	66	44	44	42	35	33	30	12
2019년	72	67	55	50	46	41	40	19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소득".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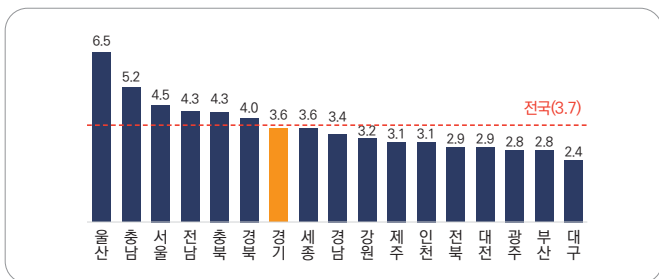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실질 GRDP는 경기도 462조 원에 이어 서울시 414조 원, 충남 112조 원, 경남 109조 원, 경북 104조 원 순으로 나타남(100조 원 이상 시도는 5개)
- 2000년 대비 2019년 실질 GRDP 증가율은 경기도가 193.7%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충남(152%)과 충북(141.6%)이 그 뒤를 따름(서울시는 76.6% 증가)
- 2000년에는 서울시의 실질 GRDP가 234조 원으로 경기도의 실질 GRDP 157조 원을 훨씬 앞섰으나, 2014년부터는 경기도가 서울시를 추월

3-1-2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정의

- 일정한 지역 안에서 특정 연도에 생산된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인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지역 내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

○ 시도별 1인당 GRDP(2019년 기준, 단위 : 천만 원)



구분	전국	울산	충남	서울	전남	충북	경북	경기	세종
1인당 GRDP (만 원)	3,727	6,511	5,187	4,512	4,340	4,270	4,008	3,606	3,580
	경남	강원	제주	인천	전북	대전	광주	부산	대구
	3,404	3,219	3,079	3,058	2,884	2,856	2,780	2,758	2,388

자료 : 통계청(2019). "지역소득".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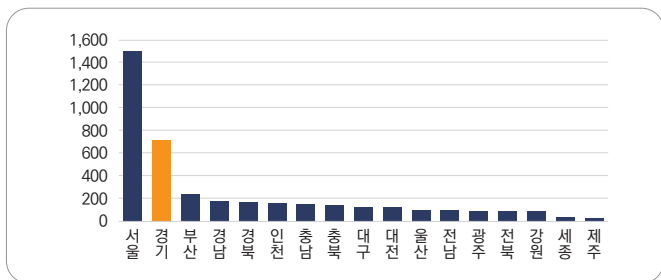
- 2019년 전국 시도 중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로 6,511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로 2,388만 원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격차가 2.7배 이상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3,60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이며, 전국 3,727만 원에 비해 121만 원 낮은 수준임
- 2018년 기준으로 경기북부지역 1인당 GRDP는 2,482만 원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이며, 경기남부와의 격차는 1,688만 원으로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3-1-3 지역별 대기업수(300인 이상)

○ 정의

-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수를 의미함

○ 시도별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수(2019년 기준, 단위 : 개사)



구분	전국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인천	충남	충북
300인 이상 사업체수	4,131	1,495	722	249	186	176	168	161	146
	대구	대전	울산	전남	광주	전북	강원	세종	제주
	132	130	102	101	95	94	93	47	34

자료 : 통계청(2019). “전국사업체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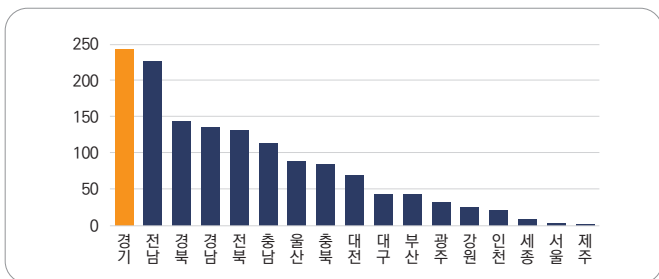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수는 전국에 총 4,131개이며, 경기도는 722개(전국의 17.5%)가 있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음
-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서울(1,495개), 경기(722개), 부산(249개), 경남(186개), 경북(176개) 순으로 많음
- 전국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 중 57.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3-1-4 지역별 산업단지

○ 정의

- 계획입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함

○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2020년 12월 기준, 단위 : 백만㎡)



구분	전국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전북	충남	울산	충북
산업단지 지정면적	1,428.3	244.0	226.2	143.8	136.7	132.1	114.7	90.2	85.6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인천	세종	서울	제주
	71.0	44.6	43.6	32.6	25.9	21.8	9.6	3.3	2.5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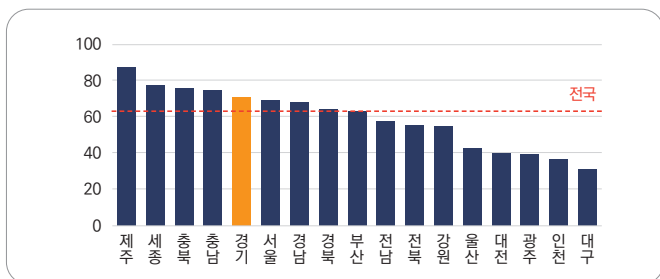
-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경기도가 244.0백만㎡으로 전국에서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구분해 보면, 경기남부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26.6백만㎡인데 반해 경기북부는 17.4백만㎡에 그치고 있음. 경기북부의 경우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세종, 서울,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3-1-5 지역별 개별입지 공장 비중

○ 정의

- 개별입지는 계획입지가 아닌 입지를 의미함

○ 시도별 개별입지 공장 비중(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주 : 시도별 전체 제조업 등록공장구분(개별, 계획) 중 개별입지 공장 업체 수 비중 산출

구분	전국	제주	세종	충북	충남	경기	서울	경남	경북
개별입지	63.7	87.8	77.9	76.2	75.2	71.1	69.5	68.5	64.5
공장 비중	63.1	58.1	55.9	55.1	43.2	40.3	39.7	36.6	31.4

자료 : 팩토리온, "2020.12월말 기준 전국등록공장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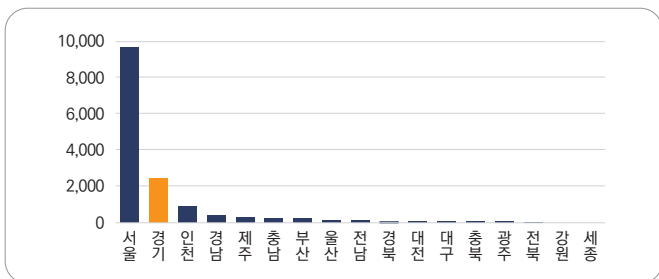
-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개별입지 비중은 71.1%로 전국 평균 63.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 시도별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은 경기북부에서 92.0%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음
- 경기남부 개별입지 비중은 65.4%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

3-1-6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 정의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임원파견·기술공여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2020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제주	충남	부산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20,747	9,726	2,509	970	459	363	305	301	175
	전남	경북	대전	대구	충북	광주	전북	강원	세종
	156	108	102	99	85	68	32	4	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총 207억 4천 7백만 달러이며, 경기도 신고액은 25억 9백만 달러(전국의 12.1%)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음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서울(9,726백만 달러), 경기(2,509백만 달러), 인천(970백만 달러) 순으로 많음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의 63.6%가 수도권에 집중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쇼핑, 인터넷 बैं킹 등 일상생활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

- 2020년 유통업체 전체 매출액이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3.6% 감소했음
-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 비중은 2019년 41.4%에서 2020년 46.5%로 확대
- 인터넷 बैं킹 등록고객수는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전년말대비 3.5% 증가했으며 모바일 बैं킹 등록고객수는 동기간 6.0% 증가했음

○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확대에 따른 원격회의 솔루션 기업(Zoom)의 매출 실적이 급증하였음

- 대표적인 원격회의 솔루션 기업인 Zoom의 2분기 매출액은 6.64억 달러로 전분기 매출액 3.3억 달러 대비 102.2% 증가했음
- B2B 거래고객수(10인이상기업)는 2020년 1분기 26만5천 명으로 전분기대비 224.1% 급증했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경제적으로 비대면(언택트)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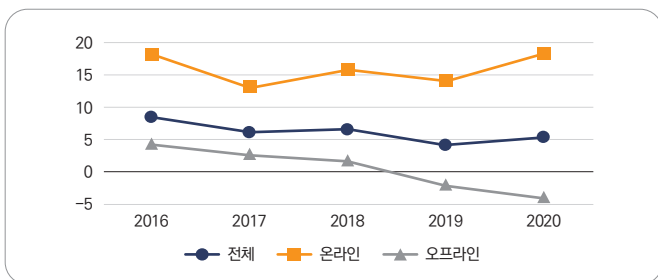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벤처투자금액은 1조6,495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대비 17.3% 감소했음
-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금액은 2019년 상반기 8,222억 원에서 2020년 상반기 7,691억 원으로 6.5% 감소했으나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서 46.6%로 5.4%p 증가했음
- 벤처기업 고용은 2019년 상반기부터 1년간 4.3% 증가했는데, 대면 분야 고용은 3.0% 증가했으며 비대면 분야 기업의 고용은 8.9%로 대면 분야 고용 대비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관련 디지털 기술 기반 비즈니스모델의 시장진입 기회가 창출되면서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있음

3-2-1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증감률

○ 정의

- 온라인 유통업체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마트몰, 신세계몰, 에이케이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마트, 롯데온, 위메프, 티몬 등 13개사를 대상으로 매월 경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산업통상자원부)

○ 전국 온라인 vs. 오프라인 매출증감률(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증감률	매출비중	매출증감률	매출비중
전체	8.5	6.2	6.8	4.3	100	5.5	100
온라인	18.1	13.2	15.9	14.2	41.4	18.4	46.5
오프라인	4.5	3.0	1.9	-1.8	58.6	-3.6	53.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2021.1.27.),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 결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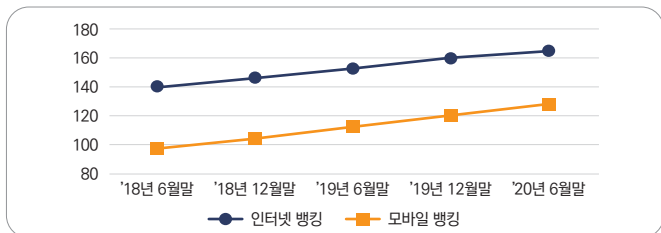
-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3.6%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 비중은 2019년 41.4%에서 2020년 46.5%로 5.1%p 증가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매출은 급상승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3-2-2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수

○ 정의

-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수는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예금 고객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하였음(한국은행)

○ 전국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수(단위 : 백만 명)



구분		2018		2019		2020
		6월말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수	140.7	146.6	152.6	159.2	164.8
	증감률(%)	4.2	4.2	4.1	4.3	3.5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수	97.8	104.7	112.9	120.9	128.3
	증감률(%)	9.0	7.1	7.8	7.1	6.0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 중 비중	69.5	71.5	74.0	76.0	77.8

자료 : “지급결제통계”,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9.28.).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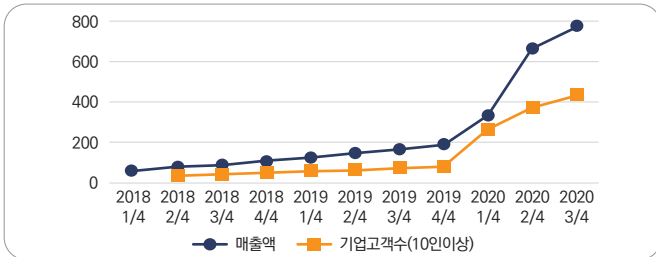
- 2020년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6,479만 명으로 전년말대비 3.5% 증가하였으며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2,825만 명으로 전년말대비 6.0% 증가하였음
-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 중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수 비중은 2018년 6월말 69.5%에서 2020년 6월말 77.8%로 증가하였음
- 온라인 금융거래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3-2-3 원격회의 솔루션 기업(Zoom) 매출

정의

- 대표 원격회의 솔루션 기업 Zoom Video Communications의 2020년 2분기 실적보고서의 매출액과 기업고객수(10인 이상) 자료를 인용

Zoom의 매출액 및 기업고객수(단위 : 백만 달러, 천 명)



구분	2018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백만달러)	60.0	74.5	90.1	105.8	122.0	145.8	166.6	188.3	328.2	663.5	777.2
증감률(%)	-	24.2	20.9	17.4	15.3	19.5	14.3	13.0	74.3	102.2	17.1
기업고객수(천명)	-	37.2	44.4	50.8	58.5	66.3	74.1	81.9	265.4	370.2	433.7
증감률(%)	-	-	19.4	14.4	15.2	13.3	11.8	10.5	224.1	39.5	17.2

자료 : ZOOM 2020년 2분기 실적보고서.; STATISTA.; Zoom's quarterly revenue worldwide.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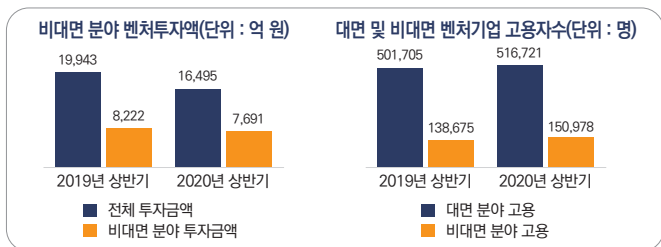
- 대표 원격회의 솔루션 기업인 Zoom의 2020년 2분기 매출액은 6.64억 달러로 전분기 매출액 3.3억 달러 대비 102.2% 급증하였으며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Zoom의 거래유형은 B2B 중심으로 2020년 1분기 거래고객수(10인 이상) 26만 5천 명으로 전분기 거래고객수 8만 1천 명 대비 224.1% 급증하였으며 3분기에는 43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원격근무 및 화상회의가 확대되었으며 Zoom 솔루션의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증하는 등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3-2-4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고용

○ 정의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을 의미

○ 전국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고용(단위: 억 원, 명)



주: 벤처확인 공시시스템(벤처기업), 벤처투자종합정보(벤처투자기업), 한국고용정보(고용) 자료를 토대로 집계

구분	벤처투자 현황			벤처기업 고용현황				
	전체 (억원)	비대면 분야(억원)	비대면 분야 투자비중(%)	전체 고용(명)	대면 분야		비대면 분야	
					인원(명)	증감률(%)	인원(명)	증감률(%)
2019년 상반기	19,943	8,222	41.2	640,380	501,705	-	138,675	-
2020년 상반기	16,495	7,691	46.6	667,699	516,721	3.0	150,978	8.9

자료: “2020년 상반기 일자리 및 투자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8.5.).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495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대비 17.3% 감소했으나 비대면 분야 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41.2%에서 46.6%로 5.4%p 증가
- 벤처기업 고용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년 사이 27,319명 증가했는데 이 중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고용이 12,303명을 차지
- 벤처기업 중 대면 분야 기업의 고용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에 3.0% 증가했으며 비대면 분야 기업의 고용은 동기간 8.9% 증가했음
- 코로나19로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분야는 투자 확대 및 고용이 증가하였음

○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는 온라인 중개자 또는 기술 프레임워크 등 플랫폼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의미

- 플랫폼은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돕는 매개체임
-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나 데이터에만 머물지 않고 유통, 교통, 숙박 등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음
- 우리의 생활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검색, 쇼핑, SNS, 배달 등 대부분의 활동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행

○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음

- 대부분 플랫폼은 검색, 쇼핑, SNS, 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함
- 플랫폼은 검색과 매칭 기술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비용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함
- 거래비용이 작고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특성을 활용하여 에어비앤비, 우버 등 IT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통산업인 호텔, 운송업에 진출할 수 있었음

○ 플랫폼은 간접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로 인해 점차 거대해지고 시장을 독점하는 특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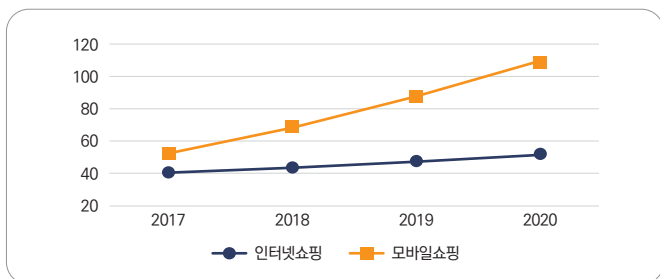
-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거래 상대방이 많을수록 상호 효용이 증가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플랫폼이 독점하는 특성을 보임
- 플랫폼경제의 성장은 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과 확장성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수 플랫폼에 의한 독점 현상이 발생하고 참여자들은(특히, 공급자나 플랫폼노동자)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플랫폼경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신규 비즈니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혁신을 가능케 하지만, 기존 산업과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3-3-1 온라인 쇼핑물 거래액

○ 정의

- 온라인 쇼핑물은 공급자인 판매자와 수요자인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의미하고, 연간거래액 2.4천만 원 이상인 온라인쇼핑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전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거래액(단위 : 조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94.2	113.3	135.3	161.1
인터넷쇼핑	41.3	44.1	48.0	52.4
모바일쇼핑	52.9	69.2	87.3	108.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온라인쇼핑물 취급상품범위별/상품군별거래액”.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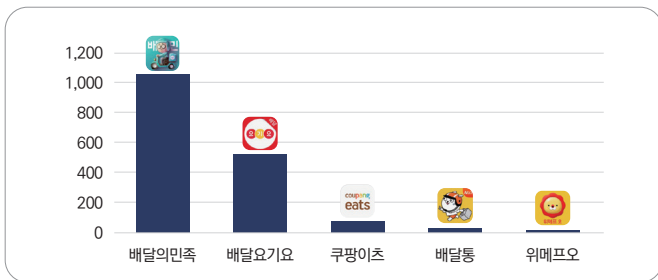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 94조 원에서 2020년 161조 원으로 3년 만에 71% 증가
- 온라인쇼핑 중에서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7년 52.9조 원에서 2020년 108.7조 원으로 3년 만에 105%가 증가하여 온라인쇼핑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20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9년 거래액 87조 원보다 24.5%나 증가한 108.7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3-3-2 배달대행 서비스앱 사용자수

○ 정의

- 배달앱은 공급자인 식당과 수요자인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안드로이드OS 기준 해당월 배달대행 서비스앱 사용자(MAU) 수를 대상으로 함

○ 전국 배달대행 서비스앱 사용자수(2020년 8월 기준, 단위: 만 명)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달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프오
사용자수	1,066	531	75	27	18

자료 : 아이지메이웍스(mobileindex.com).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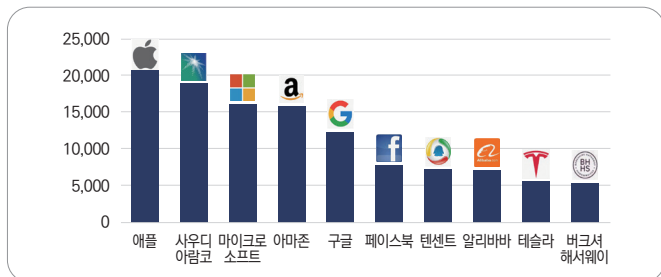
- 2020년 8월 기준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 사용자수 1위는 '배달의민족'이며, 다음으로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프오' 순으로 나타남
- '배달의민족'은 2위 '요기요'와 약 2배 격차의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3위-4위-5위는 2위와 큰 격차를 보임
- '요기요', '배달통'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점유율이 97.4%에 달하여 독과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함

3-3-3 글로벌 플랫폼기업 시장가치

○ 정의

- 시장가치는 주식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주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한 것으로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 함

○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기업(2020. 12. 6 기준, 단위: 억 달러)



기업	애플	사우디아라비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국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미국	미국
시가총액	20,784	19,086	16,206	15,868	12,352
기업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국가	미국	중국	중국	미국	미국
시가총액	7,966	7,279	7,230	5,678	5,422

자료 : 미스터캡(<http://www.mrktcap.com/>).

○ 주요 특징 및 해설

-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내의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사우디아라코, 다국적 금융회사 버크셔해서웨이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 모두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임
- 애플은 음원스트리밍, 앱스토어 등의 플랫폼, 아마존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글은 검색 및 광고 플랫폼

○ 한국의 창업기업 신생률과 소멸률은 전산업 대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높은 수준을 보임

- 전 산업 창업기업의 신생률은 2018년 기준 14.7%이며 소멸률은 11.1% 수준을 나타냄
- 제조업 창업기업의 신생률은 2018년 기준 8.9%이며 소멸률은 7.4%로 전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생률은 2018년 기준 19.1%이며 소멸률은 16.6%로 전 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창업과 폐업이 활발한 업종임

○ 유럽 주요국 대비 한국 창업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은 높은 수준이고 생존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산다사형' 창업생태계

- 한국 창업기업의 신생률은 유럽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14.7%)이며, 소멸률은 영국 11.3%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한국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1.2%이며, 네덜란드(57.7%), 프랑스(50.1%)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제조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41.2%로 전 산업 대비 10%p 높은 수준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5%로 1/5만이 생존

○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업기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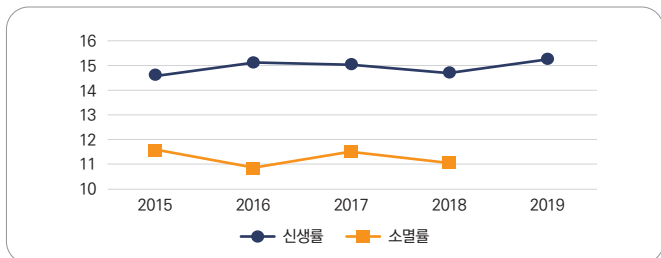
- 창업과 폐업, 생존율 등의 지표는 국가 창업생태계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다산다사형'으로 매년 다수의 기업이 생겨나고 이 중 많은 기업이 폐업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냄
- 제조업 등의 기술기반의 기회형 창업보다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이 활발하고 이들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불안정한 창업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퇴출기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재창업과 재취업 모색 기회 확대 등)

3-4-1 창업기업 신생률·소멸률

○ 정의

- 신생률은 당해 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멸률은 당해 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소멸기업의 비율을 의미(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전국 창업기업 신생률·소멸률(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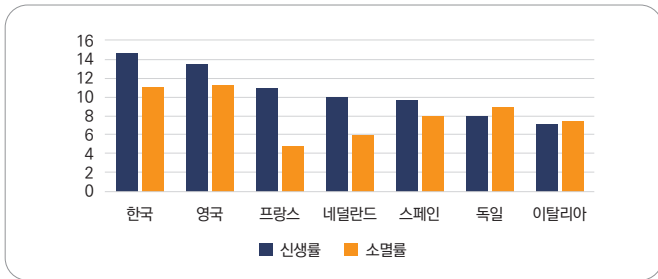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생률	소멸률	신생률	소멸률	신생률	소멸률	신생률	소멸률	신생률
전체	14.6	11.5	15.2	10.8	15.1	11.5	14.7	11.1	15.3
제조업	10.1	8.2	9.7	7.5	9.0	7.4	8.9	7.4	8.9
도소매업	15.0	13.0	15.2	12.1	14.8	12.6	13.5	12.3	14.1
숙박 및 음식점업	20.4	17.7	20.6	17.5	19.8	17.6	19.1	16.6	19.5
부동산업	14.4	10.3	15.7	9.1	17.0	10.7	17.2	10.4	17.2

자료 : 통계청(2019). “기업생멸행정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창업기업의 신생률은 2015년 14.6%에서 2019년 15.3%까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멸률은 2015년 11.5%에서 2018년 11.1%까지 소폭 감소하였음
- 주요 업종 중 제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은 2018년 기준으로 각각 8.9%와 7.4%로 전 산업 대비 낮은 수준임
-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신생과 소멸이 가장 활발한 업종이며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전 산업 대비 가장 높음

○ 주요국의 창업기업 신생률·소멸률(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신생률	14.7	13.5	10.9	9.9	9.7	8.0	7.1
소멸률	11.1	11.3	4.7	5.9	8.0	8.9	7.4

자료 : 통계청(2019). "기업생멸행정통계";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data/datab 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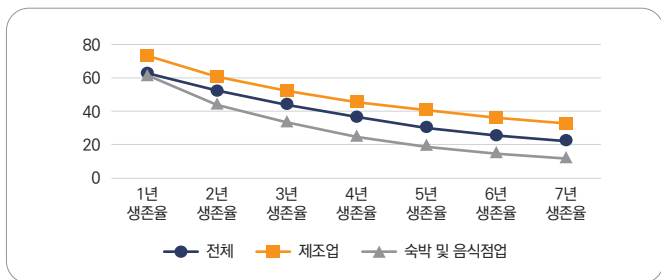
- 한국 창업기업의 신생률(14.7%)과 소멸률(11.1%)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유럽 국가 중 영국, 프랑스의 신생률이 2018년 기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소멸률은 영국이 11.3%로 가장 높음
- 한국의 창업환경은 유럽 주요국보다 창업과 폐업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창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3-4-2 창업기업 생존율

○ 정의

- 생존율은 전체 신생기업 중 '기준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 전국 창업기업 생존율(2018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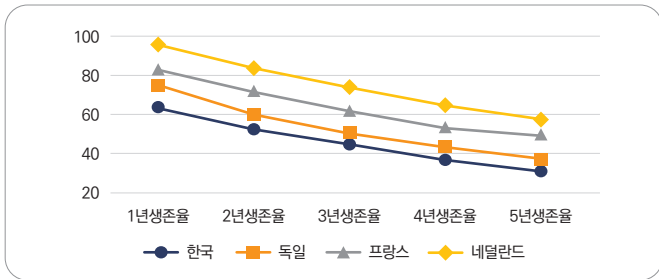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6년 생존율	7년 생존율
전체	63.7	52.8	44.7	36.7	31.2	26.1	22.8
제조업	73.5	61.3	52.7	45.9	41.2	36.5	33.2
숙박 및 음식점업	62.2	45.1	34.2	26.3	20.5	15.9	13.2

자료 : 통계청(2019), "기업생멸행정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창업 후 1년 63.7%, 2년 52.8%, 3년 44.7%, 4년 36.7%, 5년 31.2%, 6년 26.1%, 7년 22.8%로 급감
- 업종별 생존율을 비교하면 제조업의 7년 생존율은 33.2%로 전 산업 대비 10%p 이상 높은 수준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7년 생존율은 13.2%로 전 산업 대비 9.6%p 낮은 수준임
- 제조업 창업기업은 기술기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창업 진입장벽이 높고 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타 업종에 비해 생존율이 높게 나타남
-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생계형 창업기업의 폐업에서 주로 기인함

○ 주요국의 창업기업 생존율(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전산업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1년 생존율	63.7	73.5	62.2	74.9	75.6	83.3	81.2	95.6	89.2
2년 생존율	52.8	61.3	45.1	60.1	64.2	71.9	68.9	84.1	69.0
3년 생존율	44.7	52.7	34.2	50.7	56.5	62.3	60.3	74.3	55.1
4년 생존율	36.7	45.9	26.3	43.5	47.3	53.4	51.5	64.8	48.9
5년 생존율	31.2	41.2	20.5	36.5	43.8	50.1	42.3	57.7	41.8

자료 : 통계청(2019). "기업생멸행정통계".;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data/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유럽 주요국 중 창업기업 생존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1년 생존율이 95.6%, 5년 생존율이 57.7%로 창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생존함
- 창업기업의 신생률 대비 소멸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50.1%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생존함

○ 2020년 IMD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63개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23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대비 5단계 상승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매년 각국의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인프라 부문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발표
- 싱가포르를 전년에 이어 2020년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2위), 스위스(3위), 네덜란드(4위), 스웨덴(6위)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함

○ 2020년 세계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10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

-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인시아드(INSEAD) 등 7개 기관은 세계 각국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매년 「세계혁신지수(GII)」를 발표
- 2020년 세계혁신지수(GII) 1위는 스위스로 최근 5년 연속(‘16~’20)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웨덴(2위), 미국(3위), 영국(4위), 네덜란드(5위) 순임
- 20위권 국가의 대부분은 상위소득 국가이며, 중국(14위)은 유일하게 중간소득 국가로 2년 연속 20위권에 포함

○ 국가경쟁력 및 세계혁신지수 분석결과, 기술인프라 부문과 제도 및 창의적 성과 부문의 투자가 필요

- IMD 국가경쟁력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출액 중 ICT 서비스의 비중’,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등 다수의 항목이 30위권 밖에 위치함
- 세계혁신지수(GII)의 혁신투입과 혁신산출은 모두 양호한 결과(10위)를 보였지만, 혁신투입 대비 산출 값인 혁신 효율성(19위)은 부진함
- 세계혁신지수(GII) 인적자원 및 연구 부문은 전체 1위로 매우 훌륭하지만 제도 부문은 29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5-1 IMD 국가경쟁력

○ 정의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각국의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인프라 등 4개 부문별 국가경쟁력을 종합하여 순위를 발표

○ 주요국의 IMD 국가경쟁력(종합순위)

국가	2019년 순위	2020년 순위	변화	
싱가포르	1	1	0	-
덴마크	8	2	6	↑
스위스	4	3	1	↑
네덜란드	6	4	2	↑
홍콩	2	5	-3	↓
스웨덴	9	6	3	↑
노르웨이	11	7	4	↑
캐나다	13	8	5	↑
아랍에미리트	5	9	-4	↓
미국	3	10	-7	↓
:		:		
아이슬란드	20	21	-1	↓
뉴질랜드	21	22	-1	↓
한국	28	23	5	↑
사우디아라비아	26	24	2	↑

자료 : IMD 홈페이지(<http://www.im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IMD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대한민국은 63개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23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28위 대비 5단계 상승함
- 싱가포르는 전년에 이어 2020년에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덴마크(2위), 스위스(3위) 네덜란드(4위), 스웨덴(6위)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함
- 그 외 10위권 국가로는 홍콩(5위), 노르웨이(7위), 캐나다(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 등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IMD 부문별 국가경쟁력

과학인프라 분야			기술인프라 분야		
국가	2019년 순위	2020년 순위	국가	2019년 순위	2020년 순위
미국	1	1	싱가포르	1	1
스위스	4	2	스웨덴	5	2
한국	3	3	네덜란드	3	3
독일	5	4	핀란드	4	4
이스라엘	7	5	덴마크	7	5
스웨덴	9	6	미국	6	6
대만	8	7	홍콩	18	7
일본	6	8	대만	13	8
덴마크	10	9	스위스	8	9
중국	2	10	중국	2	10
영국	11	11	프랑스	9	11
오스트리아	13	12	노르웨이	10	12
네덜란드	15	13	한국	22	13
프랑스	12	14	캐나다	17	14
싱가포르	14	15	영국	12	15

자료 : IMD 홈페이지(<http://www.im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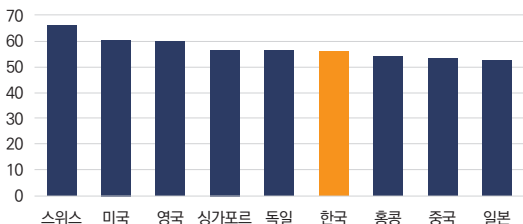
- 과학인프라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1위), 스위스(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대만, 일본, 중국도 10위 내에 위치해 아시아권 국가가 강세를 보임
-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 첨단기술산업 등 우리나라의 강점이 잘 유지되고 있어, 과학인프라 부문에서 강점을 보임
- 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싱가포르가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한 13위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서비스 수출액 중 ICT 서비스의 비중’,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등 다수의 항목이 30위권 밖에 있어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3-5-2 세계혁신지수(GII)

○ 정의

-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인시아드(INSEAD) 등 7개 기관은 세계 각국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매년 「세계혁신지수(GII)」를 발표

○ 주요국의 세계혁신지수(GII)(2020년 기준)



국가	스위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한국	홍콩	중국	일본
순위	1	3	4	8	9	10	11	14	16
세계혁신지수	66.08	60.56	59.78	56.61	56.55	56.11	54.24	53.28	52.70

자료 :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2020). *The Global Innovation Index*.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세계혁신지수(GII)에서 한국은 종합 10위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
- 2020년 세계혁신지수(GII) 1위는 스위스로 최근 5년간(2016~20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웨덴(2위), 미국(3위), 영국(4위), 네덜란드(5위) 순임
-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8위로 가장 우수하며, 한국(10위), 중국(14위), 일본(16위)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국인투자유치 분야의 규제가 다소 경직적으로 평가됨

- 각종 국제기구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임
※ 다만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규제수준 관련 지수들의 경우 관점에 따라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경향이 있어, 지수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
- OECD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도 한국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규제 여건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합리화 필요

○ 국내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권역별 특구 정책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

-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고용에 기여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은 지정에서 제외됨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도 지정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세제 지원이 없어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
- 경기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규제혁신과 투자유치 필요

○ 국내 규제혁신 정책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제도 설계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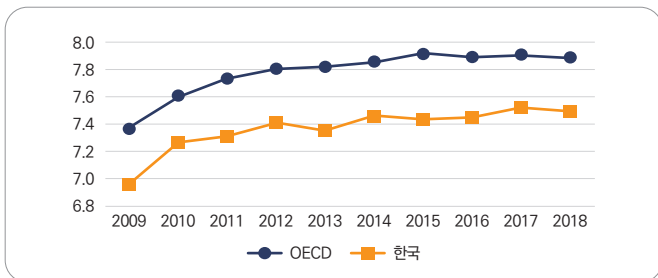
- 국내 규제혁신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로 비수도권에 지원 집중
-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 제도 설계, 신규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함

3-6-1 세계경제자유지수(규제수준)

○ 정의

- Fraser Institute는 신용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업 규제 등을 평가하여 매년 국가 순위를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규제 수준이 낮음)

○ 세계경제자유지수 중 규제수준(단위 : 점)



주 :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ECD	7.37	7.61	7.73	7.80	7.82	7.86	7.91	7.89	7.91	7.89
한국	6.96	7.27	7.31	7.41	7.35	7.46	7.43	7.45	7.52	7.49

자료 : Fraser Institute(2020).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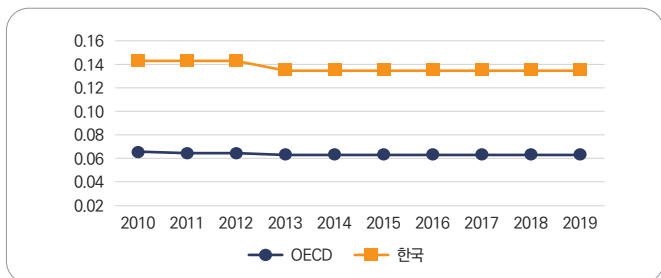
- 규제수준 지수는 최근 10년간 OECD 가입국과 한국 모두 소폭 개선되는 추세
- 한국의 규제수준은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나타나,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직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신용시장 규제와 기업 규제에 비해 노동규제 점수가 낮게 나타남
 - ※ 그러나 본 지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초점을 둔 지수이므로, 노동규제 점수가 낮을지라도 노동규제 완화 정책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

3-6-2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 정의

-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는 외국인 지분 제한, 선별 혹은 승인 메커니즘, 해외 취업 제한, 영업 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 제도를 평가한 지수(점수가 낮을수록 개방적임)

○ 한국 외국인투자제한지수(단위 : 점)



주 : 0~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외국인투자제한 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OECD	0.066	0.065	0.065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0.064
한국	0.143	0.143	0.143	0.135	0.135	0.135	0.135	0.135	0.135	0.135

자료 : 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Total FDI Index.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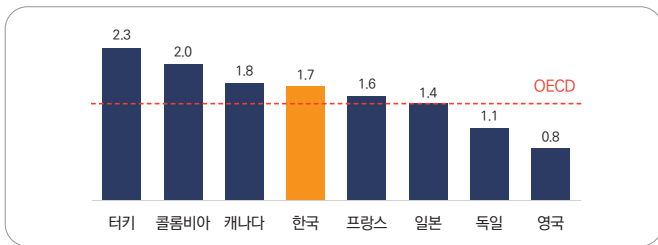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이후 동일한 수준 유지
-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19년도의 경우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6-3 상품시장규제지수

○ 정의

-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지수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제적 규제환경에 대해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과 진입장벽을 중심으로 산출된 지수(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

○ 주요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2018년 기준, 단위 : 점)



구분		OECD	한국
상품시장규제지수		1.40	1.69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1.65	1.66
	국유화	2.15	2.21
	기업활동 개입	1.29	1.92
	규제 간소화 및 평가	1.50	0.85
진입장벽		1.16	1.72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1.06	1.09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의 장벽	1.75	2.59
	무역 및 투자 부문의 장벽	0.67	1.49

자료 : OECD 홈페이지.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2018".
[\(https://www.oecd.org/economy/reform/indicators-of-product-market-regulation/\)](https://www.oecd.org/economy/reform/indicators-of-product-market-regulation/).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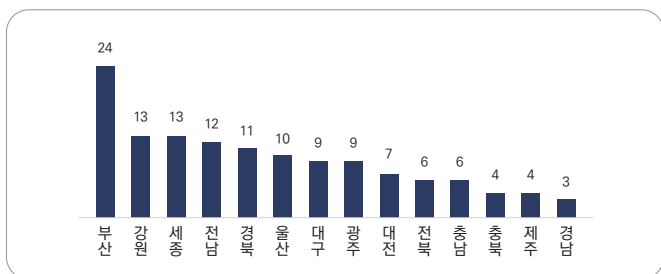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상품시장규제지수가 OECD 주요 국가 중 4번째로 높아 규제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는 1.69점으로 OECD 국가 평균 1.40점보다 높음
-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는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측정되어 왔으나, 2018년 측정 방법론의 변화로 이전 데이터와의 비교가 어려움

3-6-4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정의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

○ 시도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지정현황(단위 : 개)



지역	규제특례 지정 산업	개수	지역	규제특례 지정 산업	개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6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7
	액화수소산업	7		개농서비스산업	2
세종	자율주행실증	12		이산화탄소 자원화	1
	자율주행 로봇	2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7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7		그린에너지 ESS 발전	2
	산업용 헴프	4	부산	블록체인	21
대전	바이오 메디컬	7		해양모빌리티	3
대구	스마트 웰니스	7	전남	e-모빌리티	10
	이동식 협동로봇	2		에너지 신산업	2
전북	친환경 자동차	3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4
	탄소 융·복합 산업	3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6
경남	무인선박	1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4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2			

자료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http://rfz.go.kr/?menu=158>).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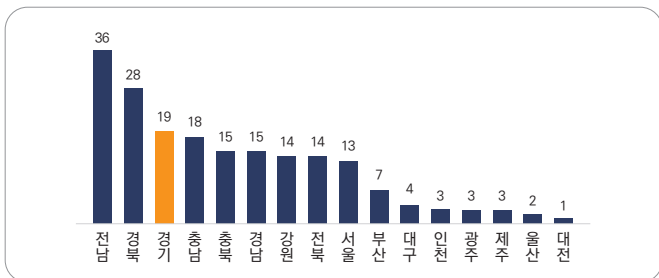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와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중세트 :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함께 적용
-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1,255개 일자리를 창출('20.12월 기준)

3-6-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 정의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구역

○ 시도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0.10). “지역특구 지정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메뉴판식 특례 128개가 적용되며, 규제샌드박스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음
- 시·군·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 총 195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음('20.10 기준)
- 경기도는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20년 지정)를 비롯 총 19개 특구를 지정·운영 중

3-6-6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 정의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

○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명칭	위치	지정	지구(개)	중점 유치업종
인천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2003.8.11.	32	바이오, 항공물류
부산·진해	부산 강서구, 경남 창원시	2003.10.30.	23	첨단수송기계 부품, 복합물류
광양만권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남 하동군	2003.10.30.	18	항만물류, 철강·화학소재
경기	경기 평택시, 시흥시	2008.5.6.	3	IT 관련 부품, 자동차 부품
대구·경북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2008.5.6.	8	첨단메디컬, IT융복합
동해안권	강릉시, 동해시	2013.2.14.	5	관광·레저, 금속·신소재
충북	청주시	2013.2.14.	4	바이오, 항공정비 및 부품

자료 :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fez.go.kr/global/why/about.do>) 및 경제자유구역 브로슈어.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8년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18년말 신고 기준, 누적)는 178억 달러이며,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외 5,250개 기업이 입주해 있음
- (조세감면 혜택)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규제완화 혜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노동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외환거래 자유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 제공
- (재정·입지지원 혜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 국·공유지 임대 지원, 임대료 감면 등 재정 및 입지지원 제공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4장

• 가계

4-1 가계소득

4-2 농가소득

4-3 서민금융

○ 한국의 경제성장과 가구의 실제 후생증가와의 괴리가 확대하는 추세

- 한국은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이 가계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가계의 체감경기가 악화
-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율 하락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이 심화하고, 중위소득 증가율의 하락에 따른 소득양극화 우려가 존재
- 2019년 기준 일부소득 분위에서 중위소득 증가율이 평균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아, 소득양극화 심화 가능성
- 가구평균소득 증가율은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1분위는 이전소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연도별 평균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 소득분위별 소득재분배 효과 감소는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 붕괴를 시사

-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소득5분위배율 및 소득10분위배율 등 소득불평등 지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 소득 배율은 6~10배 유지
- 최근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했으나, 세금을 납부하는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 대두
- 2012년 이후로 중위소득 증가율의 하락에 따른 중산층의 감소는 소비(심리) 위축, 기업의 판매 감소, 일자리 축소 등 악순환을 유발

○ 가계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소득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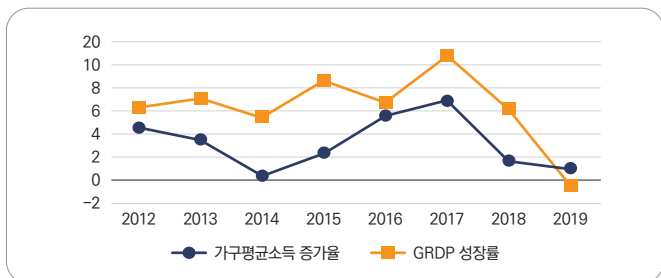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1년(17.1%) 이후 지속적인 증가
- 코로나19 이후 30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상환여력 감소에 따른 부채규모의 증가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존재
-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르므로, 장기적으로 자산 증가를 통한 부채상환 능력 역량 강화가 필요
- 한국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증가율은 정체하고,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평균소득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

4-1-1 가구평균소득 증가율

○ 정의

- 가구의 연도별 명목 경상소득의 증가율을 의미

○ 경기도 명목 가구평균소득 증가율 및 명목 GDP 성장률(단위 : %)



주 : 2017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소득 및 비소비지출 관련 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전 조사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고, 본 보고서는 과거(2012~17년) 자료에서 2012~16년 증가율을 추정하고, 최근(2017~20년) 자료에서 2017~19년 증가율을 추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가구평균소득 증가율	5.8	4.0	2.4	2.3	2.8	4.1	2.1	1.7
	명목 GDP 성장률	3.7	4.2	4.1	6.1	5.0	5.5	3.4	1.1
경기	가구평균소득 증가율	4.5	3.5	0.4	2.4	5.6	6.9	1.7	1.1
	명목 GRDP 성장률	6.3	7.1	5.5	8.6	6.7	10.8	6.3	-0.5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통계청(각년도), “지역소득”.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가구평균소득 증가율은 2012년 5.8%에서 2019년 1.7%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2~19년 동안 경기도의 가구평균소득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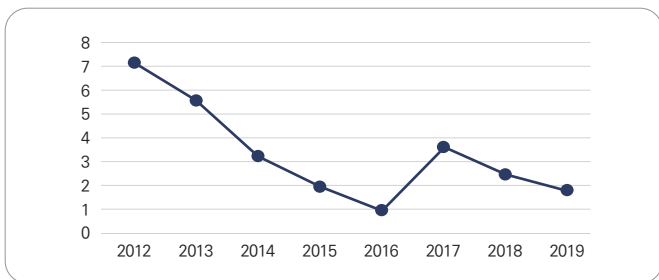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가구평균소득은 전국 5,924만 원, 경기도 6,503만 원이며, GDP는 1,919조 원, 경기도 GRDP는 477조 원임

4-1-2 가구중위소득 증가율

○ 정의

- 연도별 명목 가구중위소득의 증가율을 의미

○ 전국 명목 가구중위소득 증가율(단위 : %)



주 : 2017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소득 및 비소비지출 관련 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전 조사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고, 본 보고서는 과거(2012~17년) 자료에서 2012~16년 증가율을 추정하고, 최근(2017~20년) 자료에서 2017~19년 증가율을 추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구중위소득 증가율	7.1	5.6	3.3	1.9	1.0	3.7	2.5	1.9
명목 GDP 성장률	3.7	4.2	4.1	6.1	5.0	5.5	3.4	1.1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가구중위소득 증가율은 2012년 7.1%에서 2019년 1.9%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가구중위소득 증가율의 하락세는 중산층의 경제적 생활 수준 개선이 미약함을 의미
- 2012~19년 동안 전국의 가구중위소득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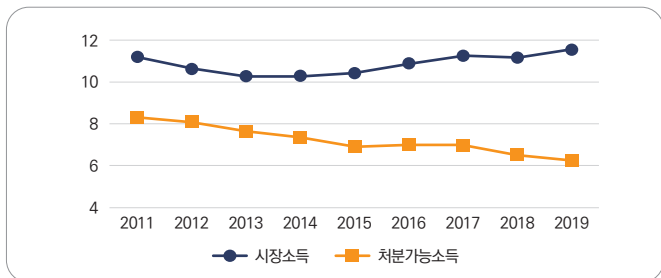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국의 가구중위소득은 4,652만 원, GDP는 1,919조 원임

4-1-3 소득5분위배율

○ 정의

-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로서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의 의미

○ 전국 소득5분위배율(단위 : 배)



주1 : 소득 5분위 균등화 평균소득과 소득 1분위 균등화 평균소득 간 배율 값임

주2 :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A)(배)	11.2	10.7	10.3	10.3	10.4	10.9	11.3	11.2	11.6
처분가능소득(B)(배)	8.3	8.1	7.7	7.4	6.9	7.0	7.0	6.5	6.3
개선효과(A-B)(배p)	2.9	2.6	2.6	3.0	3.5	3.9	4.3	4.6	5.3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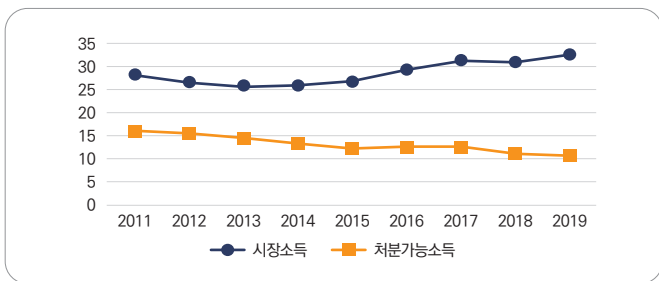
-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11.2배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9년 11.6배를 기록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8.3배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9년 6.3배까지 하락
-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개선효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9배p에서 2019년 5.3배p로 크게 상승

4-1-4 소득10분위배율

○ 정의

- 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로서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의 의미

○ 전국 소득10분위배율(단위 : 배)



주1 : 소득 10분위 균등화 평균소득과 소득 1분위 균등화 평균소득 간 배율 값임

주2 :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A)(배)	28.2	26.6	25.9	25.9	26.8	29.4	31.3	31.1	32.4
처분가능소득(B)(배)	16.0	15.8	14.6	13.5	12.3	12.5	12.5	11.4	10.7
개선효과(A-B)(배p)	12.2	10.8	11.3	12.4	14.5	16.9	18.7	19.7	21.7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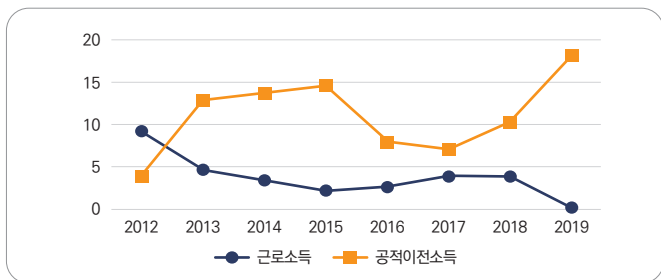
-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10분위배율은 2011년 28.2배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32.4배를 기록
-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10분위배율은 2011년 16.0배에서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9년 10.7배를 기록하여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감소
-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개선효과는 2011년 12.2배p에서 2019년 21.7배p로 크게 상승

4-1-5 가구 소득원천 구성비

○ 정의

- 가구균등화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가계금융복지조사)

○ 전국 가구 소득원천 구성비 증감률(전년대비,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소득	9.2	4.7	3.5	2.2	2.6	4.0	3.9	0.3
사업소득	-0.9	3.0	-1.5	-2.0	2.7	2.1	-5.3	-2.2
재산소득	7.9	-6.9	0.5	15.7	-4.1	7.6	0.0	9.7
공적이전소득	3.9	12.8	13.7	14.6	8.0	7.0	10.3	18.1
사적이전소득	-11.9	-1.4	-8.2	0.0	20.9	12.3	12.1	4.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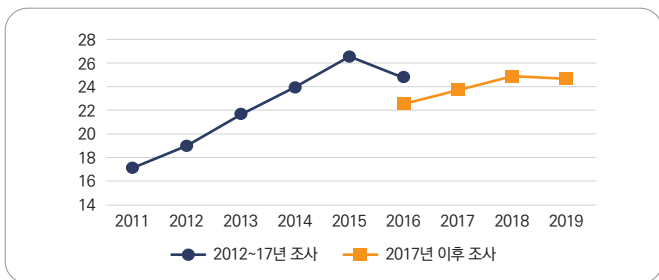
- 2012년 이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은 증가세를 보임
-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공적이전소득이 18.1%가량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소득 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 견인효과가 발생
- 2019년 기준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0.3% 소폭 증가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재산소득은 전년 대비 9.7% 증가하여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4-1-6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 정의

-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이자+원금) 상환비율을 의미

○ 전국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단위 : %)



주 : 2017 기준연도부터 소득 및 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하여, 2011~16년 기간 자료와 2016~19년 기간 자료를 모두 제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2~17년 조사	17.1	19.1	21.7	24.0	26.6	24.8	-	-	-
2017년 이후 조사	-	-	-	-	-	22.7	23.6	24.8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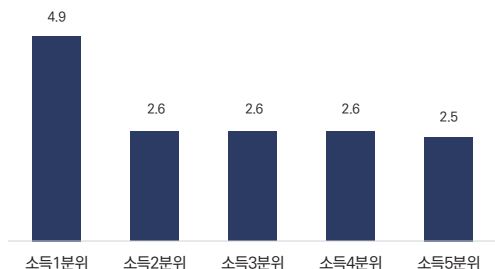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2011년(17.1%)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2011년 대비 2016년 원리금 상환비율(구조사)은 7.7%p 상승하고, 2016년 대비 2019년 원리금 상환비율(신조사)은 1.9%p 상승
- 2018년(24.8%) 대비 2019년(24.6%)의 원리금 상환부담비율은 0.2%가량 소폭 감소하였고, 가처분소득 증가 및 대출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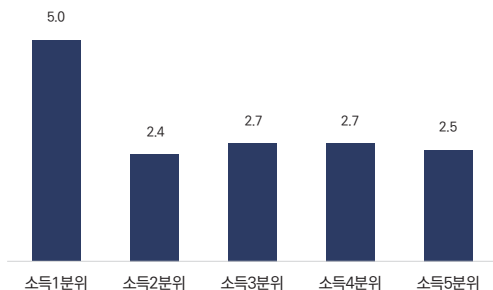
※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증가율

○ 전국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증가율(2017~19년 연평균,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전국 가구 소득분위별 중위소득 증가율(2017~19년 연평균,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전소득의 역할 확대

- 한국의 실질 농가소득은 2010년(3,465만 원) 대비 2019년(3,967만 원)에 14.5%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전소득 비중은 2010년(17.5%) 대비 2019년(27.3%)에 약 10%p가량 상승
- 경기도는 2019년 기준 농가소득 1위 지역이고, 농외소득의 비중(54.6%)이 전국(4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구조이지만 이전소득 비중도 꾸준히 증가

○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의 증가로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전환

-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농외소득은 2019년 42.0%를 기록하여, 농가 경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함
- 농외소득 비율이 2010년 이후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기초연금 도입(2014년) 등 이전소득 증가가 농가소득 증대를 견인
-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이행할 전망

○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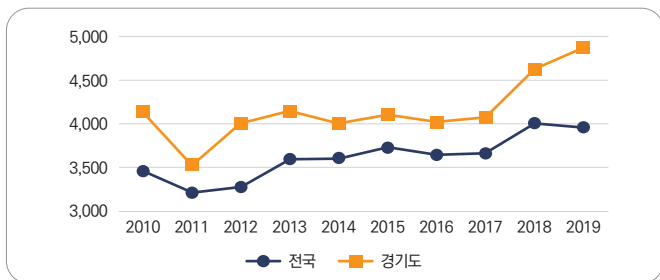
- 한국은 이전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도시가구와 농가 간 소득양극화가 여전하고, 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금의 비율이 낮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
-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13년 이후 63% 내외에 머물러 있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주거·의료·교육·환경 등 사회 제반분야의 불평등으로 확대할 우려
- 농림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72.3%로,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고 수령금도 낮아 노후소득의 불안감이 가중
- 향후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4-2-1 농가소득 현황

○ 정의

- 농가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농업·농외·이전·비경상소득)

○ 전국 및 경기도 실질 농가소득(2015년 물가 기준, 단위 : 만 원)



주 : 201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 소득 변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3,465	3,211	3,263	3,596	3,607	3,722	3,647	3,666	4,014	3,967
경기도	4,137	3,528	4,010	4,140	4,006	4,103	4,017	4,081	4,629	4,872

자료 :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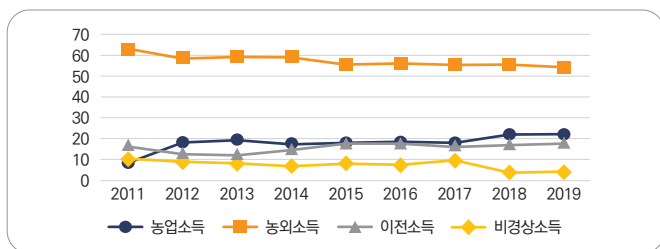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국과 경기도의 실질 농가소득은 각각 3,967만 원, 4,872만 원으로 경기도가 한국에 비해 22.8%가량 농가소득이 많음
- 실질 농가소득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2010년 대비 2019년 실질 농가소득 증가는 전국과 경기도에서 각각 14.5%, 17.8%임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20년 평균 농가소득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이전소득 증대, 2019년 쌀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농업소득 증대 등으로 2019년보다 5.3%가량 상승할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9년 기준 경기도 농가소득은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함

4-2-2 농가소득 원천별 구성

○ 정의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성

○ 경기도 농가소득 원천별 구성(단위 : %)



주 : 201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 소득 변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농업소득	29.0	29.4	29.1	29.5	30.2	27.1	26.3	30.7	24.9
	농외소득	43.0	43.8	45.5	42.3	40.1	41.0	42.5	40.3	42.1
	이전소득	18.1	18.1	16.9	19.5	21.2	23.6	23.3	23.5	27.3
	비경상소득	9.9	8.7	8.5	8.7	8.4	8.3	7.9	5.5	5.7
경기도	농업소득	8.6	18.6	19.5	18.0	18.4	18.8	17.7	22.3	22.5
	농외소득	63.3	59.0	59.3	59.4	55.9	56.4	55.7	55.9	54.6
	이전소득	17.5	13.6	13.1	15.1	17.5	17.8	17.0	17.9	18.4
	비경상소득	10.7	8.8	8.1	7.5	8.2	7.0	9.6	3.9	4.5

자료 :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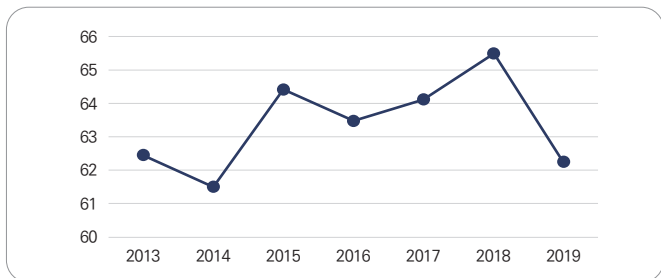
- 2019년 전국 기준으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4.9%, 농외소득은 42.1%, 이전소득은 27.3%, 비경상소득은 5.7%로 나타남
- 경기도는 농외소득 비중이 50% 이상으로 전국에 비해 12.6~17.1%p가량 높음
-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기초연금 도입(2014년) 등으로 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이전소득의 농가소득 견인효과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

4-2-3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

○ 정의

-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에서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전국 도·농 소득 비율(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농 소득 비율	62.5	61.5	64.4	63.5	64.1	65.5	62.2

자료 : 통계청(각년도). “농가경제조사”.; 유찬희 외(2019).; 농민신문(2019.5.24.; 2020.8.5.).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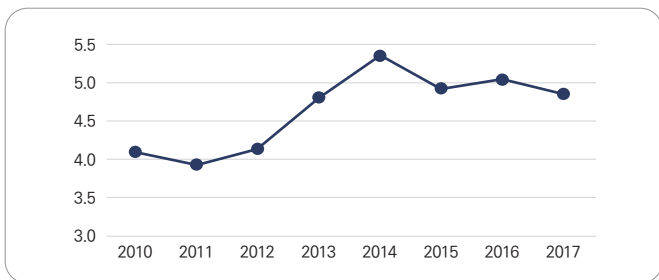
- 전국의 도시가구 대비 농가의 소득 비중은 2013년 62.5%에서 보험세를 유지하여 2019년 62.2%를 기록
- 2018년 대비 2019년의 도·농 간의 소득비율 값은 -3.3%p 하락
- 2019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도시가구근로자 가구 소득은 2018년 대비 200만 원 가량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88만 4천 원 가량 감소
- 2019년 수치는 2014년(6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주거·의료·교육·환경 등의 영역에서 불평등 발생하지 않도록 도·농 간의 소득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

4-2-4 농가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 정의

-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금의 비율(%)

○ 전국 농가소득 대비 농업보조금의 비율(단위 : %)



주 :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공적보조금 설문항목 중 농업보조금 변수를 사용함. 쌀 변동직불금은 농업잡수입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 시행하는 공익형직불제에는 변동직불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가소득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4.1	3.9	4.1	4.8	5.3	4.9	5.0	4.8

자료 : 김용준 외(2020)에서 직접 추정.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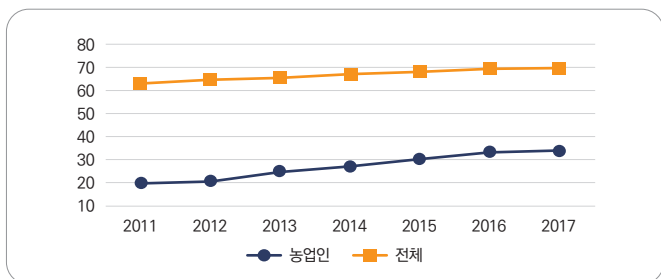
- 전국의 농가소득 중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4.1%)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7년에 4.8%를 기록
- 농가의 이전소득(농업 공적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사적 보조금의 합)은 2010년(17.5%) 대비 2017년(23.3%)에 약 5.8%가량 증가하였으나, 동기간에 농업보조금 증가율은 0.7%에 그침
- 이전소득 중 농업보조금의 증가율이 높은 쌀 농가를 제외하면, 평균 농가에서 이전소득의 증가는 농업보조금이 아닌 기타공적보조금(연금, 기타사회보장 수혜 등)이 견인

4-2-5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 정의

- 농업 분야 종사자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의 비중(%)을 의미

○ 전국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단위 : %)



주 :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은 20~59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총가입자(직장+지역)의 비중이고,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어업인 및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수치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인	20.0	21.2	25.3	27.3	30.8	33.3	34.0
전체	63.4	64.7	65.8	67.1	68.4	69.3	69.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에서 재인용.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7년 기준 20~59세 농가인구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의 비율은 34.0%로, 전산업 가입률(69.6%)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함
- 2011년 이후로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미가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농업인의 국민연금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

○ 제도금융기관의 신용할당(대출공급 제약) 관행은 고금리 대부시장을 이용하게 만들

-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용등급 '1~3등급과 거래하는 은행'과 '4~6등급과 거래하는 비은행금융기관', '7등급 이하와 거래하는 대부업'으로 금융시장이 분할
- 대부업 이용자의 70% 이상이 7~10등급에 속한 저신용계층
-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에 속한 사람은 약 392만 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
- 소득 1분위(저소득계층)의 신용대출에서 은행 이용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19년 44.9%로 하락, 대부업체 등 기타 금융기관 이용 비중은 17.6%에서 38.4%로 급등

○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기준으로 최고금리가 20%에 달함

- 대부업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2013년 403만 원에서 2019년 895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대부업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019년 기준으로 21.1%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정부 정책서민금융(생계자금대출)의 금리도 10.5~17.9%로 높고, 직업·소득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금공급자 중심으로 설계
-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자금대출금리는 3.6~4.5% 수준

○ '금융기본권'의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기본계좌제(기본대출권) 도입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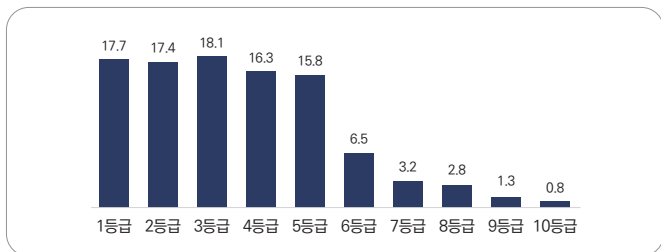
- 금융기본권은 '누구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여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하고 신용을 제공받을 권리'로 정의
- 금융배제는 사회 양극화의 결과이자 원인이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법정 최고금리는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

4-3-1 개인신용등급

○ 정의

- 개인신용등급은 신용등급평가사가 개인신용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대출승인 및 금리 설정 시 참고로 활용(2021년부터 개인신용등급제 폐지, 개인신용점수제 도입)

○ 전국 신용등급별 비중(2020년 6월 기준, 단위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신용등급별 비중	17.7	17.4	18.1	16.3	15.8	6.5	3.2	2.8	1.3	0.8
불량률	0.0	0.1	0.2	0.6	1.4	3.5	7.0	11.7	41.8	74.1

주 : 불량률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1년 내 KCB 90일 이상 연체 또는 CIS 신용도판단공공정보 등록 경험이 있는 대출자의 비율임
 자료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내부자료.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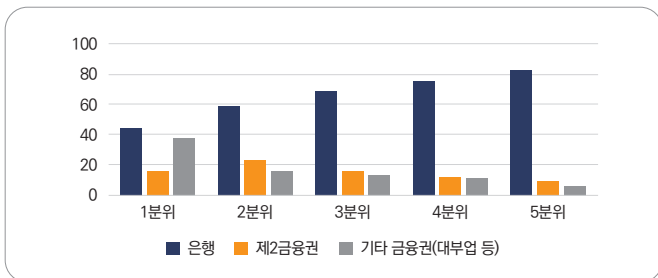
- 2002년 카드사 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은 개인신용평가에 기반한 수익성 중시 영업을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을 통해 저신용계층의 금융배제를 공식화
- 2000년대 중반 이후 '1~3등급과 주로 거래하는 은행'과 '4~6등급과 주로 거래하는 비은행금융기관', '7등급 이하와 주로 거래하는 대부업'으로 금융시장이 분할
-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에 속한 사람은 약 392만 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KCB)
- 전체에서 차지하는 7~10등급 비중은 2016년 12월 9.8%, 2017년 12월 9.1%, 2018년 12월 8.5%, 2019년 12월 7.6%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상승

4-3-2 소득분위별 이용 대출기관

○ 정의

- 시중 대출기관은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회사), 기타 금융권(대부업 등)으로 분류

○ 전국 소득분위별 이용 대출기관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은행	44.9	59.6	69.5	75.6	83.3
제2금융권	16.6	24.1	16.8	12.6	10.0
기타 금융권	38.4	16.3	13.6	11.8	6.8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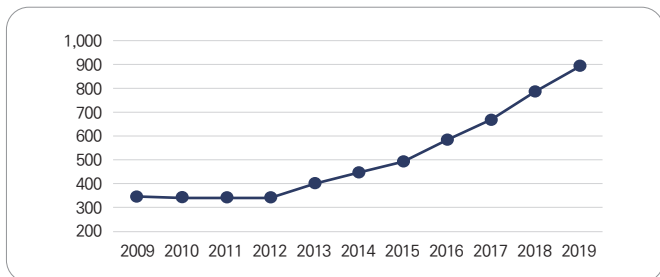
-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에서 은행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19년 44.9%로 하락한 반면, 대부업체 등 기타기관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7.6%에서 38.4%로 급등
- 2016년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등급 1~3등급에서 상승(65.7%→75.5%), 4~6등급(27.2%→19.5%) 및 7~10등급(7.1%→5.0%)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신용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집중화가 심화
- 2017~19년 동안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하락(4.3%→4.1%)하고 소득 5분위에서 상승(43.7%→44.8%)하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금융 접근성이 악화

4-3-3 대부업 현황

○ 정의

- 대부업 현황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집계

○ 전국 1인당 대출잔액(단위 : 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부업 대출잔액(조 원)	10.2	11.2	13.3	14.6	16.5	17.3	15.9
1인당 대출잔액(만 원)	403	449	494	584	667	784	895
등록대부업체수(개)	9,326	8,694	8,752	8,654	8,084	8,310	8,354
대부업 이용자수(만 명)	248.6	249.3	267.9	250.0	247.3	221.3	177.7
평균 신용대출금리(%)	34.6	32.1	29.9	25.0	24.0	21.7	21.1

자료 : 금융위원회(각년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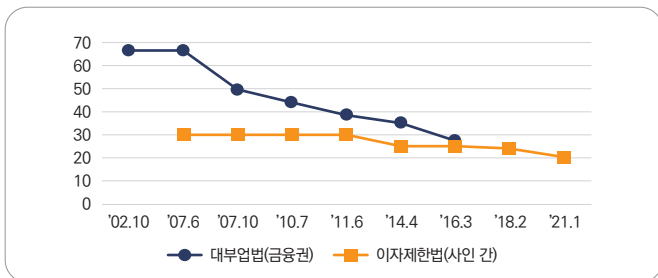
- 대부업체 수는 2017년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이후 감소세 지속
- 대부업 총대출잔액과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이자제한법 강화에도 증가세 지속
-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 비중은 1~3등급 0.02%, 4~6등급 28.8%, 7~10등급 71.2%로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신용계층으로 나타남

4-3-4 법정 최고금리

○ 정의

-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사인 간)에 따라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적용하는 대출 최고금리

○ 법정 최고금리(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부업법	39	34.9	34.9	27.9	27.9	24	24	24	20
이자제한법	30	25	25	25	25	24	24	24	20

자료 : 금융위원회·법무부(2020.11.16.).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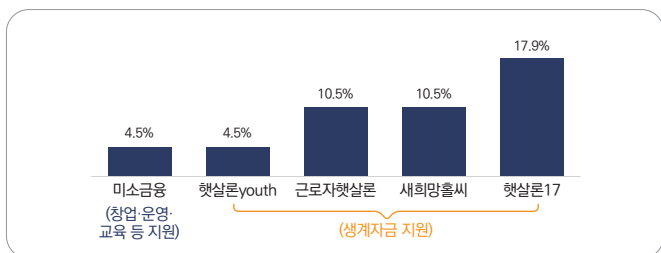
- 2002년에 「대부업법」의 제정을 통해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를 연 66%로 제한했으며, 2018년까지 최고금리를 점차 인하
- 2007년에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했으며, 2014년에 연 25%로 인하
-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금리 일원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8년 2월에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면서 일원화
- 2021년부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여 적용
 - ※ 김정훈 외(2020, 경기연구원)는 대부업 적정금리를 15% 이하 설정 가능 추정

4-3-5 정책서민금융 대출금리

○ 정의

- 정책서민금융은 채무·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서민(6등급·차상위계층 이하)을 대상으로 한 대출정책

○ 정책서민금융 대출금리(2020년 기준)



구분	용도	대출한도	연 금리
미소금융	창업자금	7,000만 원	4.50%
	운영자금	2,000만 원	4.50%
	교육비 지원	500만 원	4.50%
	취약계층자립	1,200만 원	3.00%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1,500만 원	10.5% 이하
햇살론17		700만~1,400만 원	17.90%
햇살론youth		1,200만 원	3.6~4.5%
새희망홀씨		3,000만 원	10.5% 이하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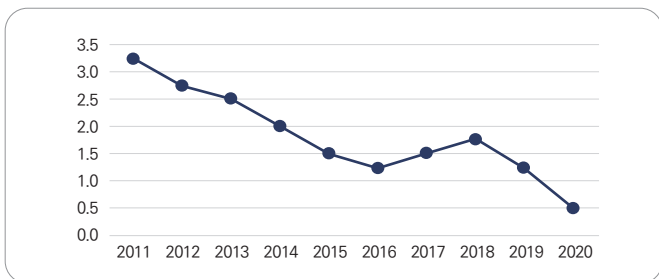
- 창업,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미소금융 금리는 낮은 수준이지만, 생계자금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
- 생계자금대출의 경우 직업 혹은 소득이 없는 자를 배제하여 긴급히 생계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움
- 현재 정책서민금융도 민간 금융시장과 유사한 자금공급자 중심으로 설계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정의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준금리	3.25	2.75	2.50	2.00	1.50	1.25	1.50	1.75	1.25	0.5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5장

•

고용·노동

5-1 고용 현황

5-2 일자리

5-3 고용 불균형

5-4 노동시장 이중구조

5-5 여성고용 불평등

5-6 노동환경

5-7 플랫폼 노동

○ 지난 10년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

-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66.2%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으나, 2020년 68.6%로 하락
-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두드러짐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OECD 평균 72.1%)

○ 전국 실업률은 2013년 3.1%를 기록한 이후로 매년 완만히 상승 중

- 2020년 기준 전국 실업률은 코로나19 여파로 4.0%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
- 2019~19년 한국의 연평균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0%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
-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전국 고용률은 완만하게 상승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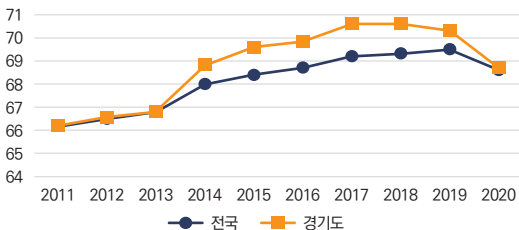
- 실망실업이나 구직포기의 경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실업률을 대신해 최근에는 고용률을 고용 상황 파악을 위한 지표로 많이 사용
- 전국 고용률은 2011년 63.9%에서 2019년 66.8%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65.9%로 전년 대비 0.9%p 하락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고용률은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OECD 평균 67.6%)이며, 이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 스웨덴(76.6%), 일본(75.5%), 독일(75.3%) 등은 75%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5-1-1 경제활동참가율

○ 정의

-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15~64세 경제활동인구를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

○ 전국 및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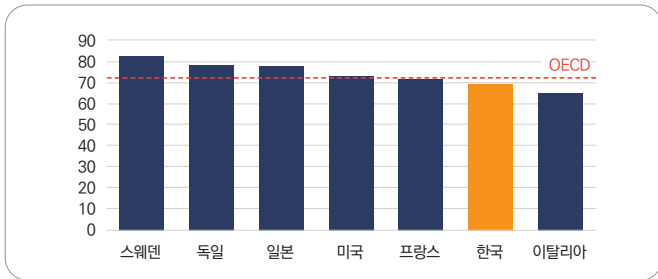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66.2	66.5	66.8	68.0	68.4	68.7	69.2	69.3	69.5	68.6
경기도	66.2	66.6	66.8	68.8	69.6	69.8	70.6	70.6	70.3	68.7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경제활동참가는 취업해 있거나 혹은 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
-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66.2%에서 2019년 69.5%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68.6%까지 하락
-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이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2015~19년 연평균, 단위 : %)



구분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OECD
경제활동참가율	82.4	78.3	77.8	73.3	71.6	69.0	65.2	72.1

자료 : OECD(각년도).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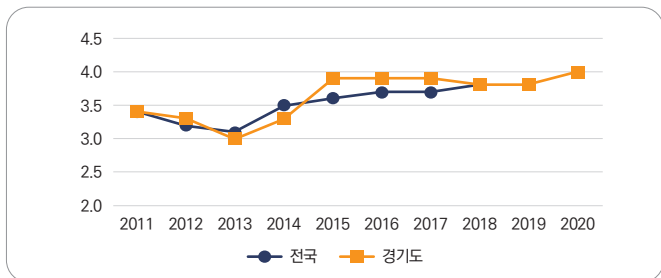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69.0%로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72.1%에 비해서도 약 3%p가량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냄
- 국가 경제에 주어진 인적자원 중에서 생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 국가 경제의 생산 잠재력이 높아지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5-1-2 실업률

○ 정의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로서, 15세 이상 실업자 수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산출

○ 전국 및 경기도 실업률(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경기도	3.4	3.3	3.0	3.3	3.9	3.9	3.9	3.8	3.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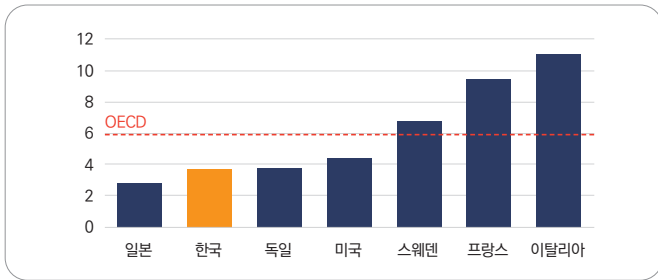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실업률은 2013년 3.1%를 기록한 이후로 매년 완만히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4.0%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경기도의 실업률은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의 변동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

○ 주요국의 실업률(2015~19년 연평균, 단위 : %)



구분	일본	한국	독일	미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OECD
실업률	2.8	3.7	3.8	4.4	6.8	9.5	11.1	6.0

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실업률은 3.7%로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국가에는 일본(2.8%)이 있음
- 유럽 국가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실정

※ 고용보조지표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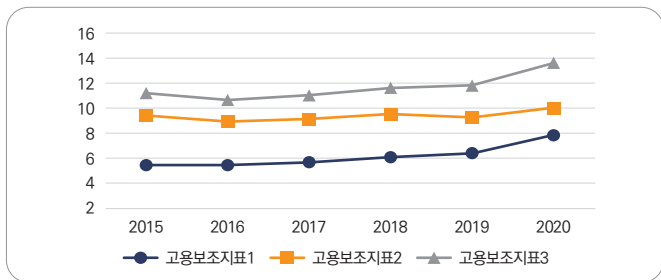
- 현실에서 실업률 통계와 체감 실업률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통계청은 확장실업률 지표인 고용보조지표(3종류)를 발표하여 공식 실업률을 보완

$$* \text{고용보조지표1}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text{고용보조지표2}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div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text{고용보조지표3}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div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전국 고용보조지표(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용보조지표1	5.5	5.5	5.7	6.1	6.4	7.8
고용보조지표2	9.4	8.9	9.1	9.5	9.3	10.0
고용보조지표3	11.0	10.7	11.0	11.6	11.8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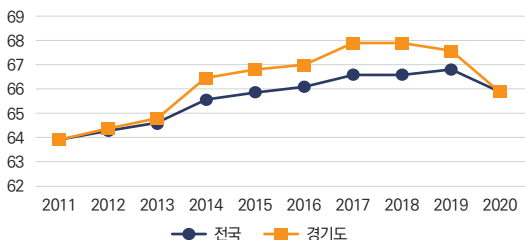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5-1-3 고용률

○ 정의

-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로서, 15~64세 취업자수를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

○ 전국 및 경기도 고용률(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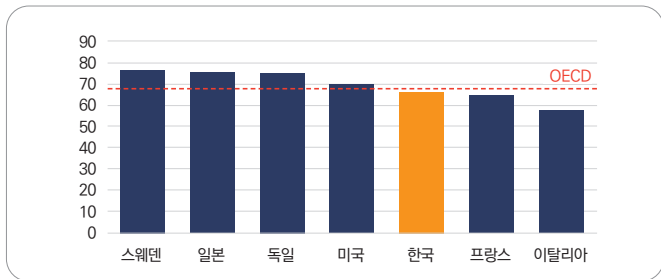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63.9	64.3	64.6	65.6	65.9	66.1	66.6	66.6	66.8	65.9
경기도	63.9	64.4	64.8	66.5	66.8	67.0	67.9	67.9	67.6	65.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전국 고용률은 2011년 63.9%에서 2019년 66.8%로 완만하게 상승해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65.9%를 기록
- 경기도의 고용률은 2011년 이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18년 67.9%를 정점으로 최근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주요국의 고용률(2015~19년 연평균, 단위 : %)



구분	스웨덴	일본	독일	미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OECD
고용률	76.6	75.5	75.3	70.1	66.4	64.7	57.8	67.6

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고용률은 66.4%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67.6%에 비해서도 1.2%p 낮은 고용률을 나타냄
- 스웨덴(76.6%), 일본(75.5%), 독일(75.3%) 등은 75%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낮은 고용률은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임

○ 2010년대 들어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가 가속화되는 추세

- 전국 취업자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2%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0.8%를 기록
- 2019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1%로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와 비슷하며 OECD 평균 0.9%보다는 높은 편
- 장기적으로 고용증가 둔화 추세에 대한 대응,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

○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는 제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6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 감소율은 계속해서 확대하는 추세(2019년 -1.8%)
-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1%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율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여 -1%를 기록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높아지기 시작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

○ 2010년대 들어 고용탄력성은 평균 0.4~0.5 사이에서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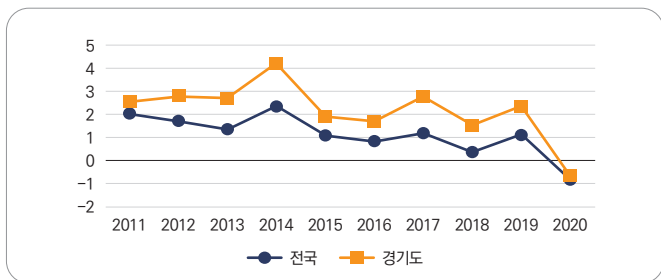
-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2010년대 초반 고용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0년대 후반 다소 감소
- 2000년대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높아져 고용창출력이 회복
- 2019년 기준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6으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 독일,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은 각각 2.1, 1.3, 0.9로 높은 고용탄력성을 나타내는 선진국의 사례는 고용창출력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함을 시사

5-2-1 취업자수 증가율

○ 정의

- 취업자수 증가율은 취업자수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전국 및 경기도 취업자수 증가율(전년대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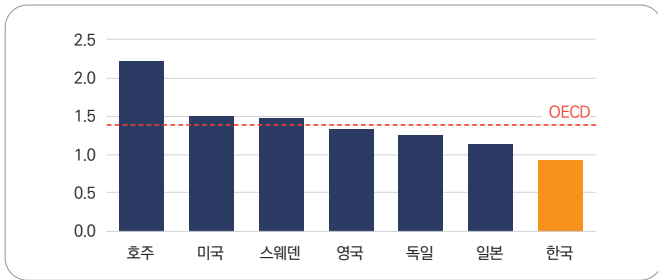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1	1.7	1.4	2.4	1.1	0.9	1.2	0.4	1.1	-0.8
경기도	2.6	2.8	2.7	4.2	1.9	1.7	2.8	1.6	2.4	-0.6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취업자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0.8%를 기록
- 경기도의 취업자수 증가율(2020년 경기도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0.6%)은 전국 취업자수 증가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거나 약 1%p 높은 수준을 유지
- 장기적으로 고용증가 둔화 추세에 대한 대응,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

○ 주요국의 취업자수 증가율(2015~19년 연평균,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한국	OECD
2015~19년	2.2	1.5	1.5	1.3	1.2	1.1	0.9	1.4
2019년	2.3	1.1	0.7	1.2	1.1	0.8	1.1	0.9

자료 : OECD(각년도).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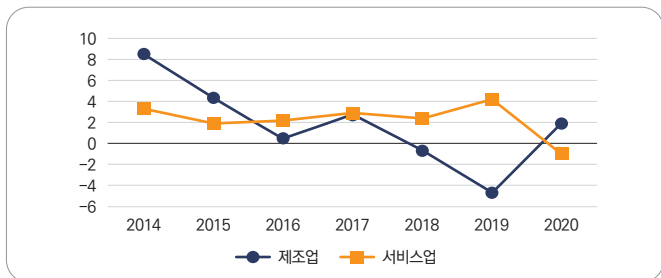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1.1%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
- 한국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1.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4%보다도 낮은 수준
-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8%)이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2.2%)보다 높은 것을 고려할 때 OECD 평균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OECD 평균 이상의 고용창출력을 의미하지 않음
- 일자리 창출 능력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

5-2-2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 정의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경기도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전년대비, 단위 : %)



주 :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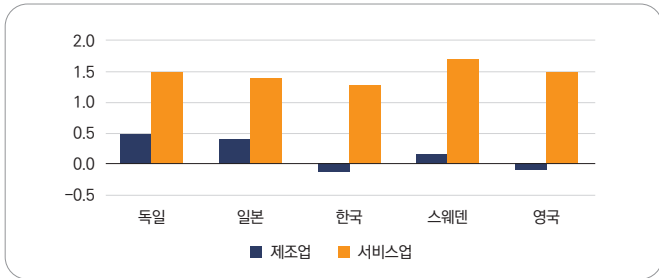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	3.5	3.3	-0.4	-0.4	-1.2	-1.8	-1.2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	2.7	1.2	1.5	1.6	0.5	1.6	-1.0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	8.5	4.3	0.5	2.8	-0.7	-4.7	1.9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	3.4	1.9	2.1	2.8	2.3	4.1	-1.0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6년부터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제조업보다 높아짐
- 2016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감소폭이 확대하고 있음
-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1%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율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여 -1%를 기록
- 경기도에서도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나 변동성이 큼

○ 주요국의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2015~19년 연평균, 전년대비, 단위 : %)



주 :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임

구분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2015~19년	제조업	0.5	0.4	-0.1	0.2	-0.1
	서비스업	1.5	1.4	1.3	1.7	1.5
2019년	제조업	0.2	0.3	-1.8	0.6	3.4
	서비스업	1.4	1.2	1.6	0.8	0.9

자료 : OECD(각년도).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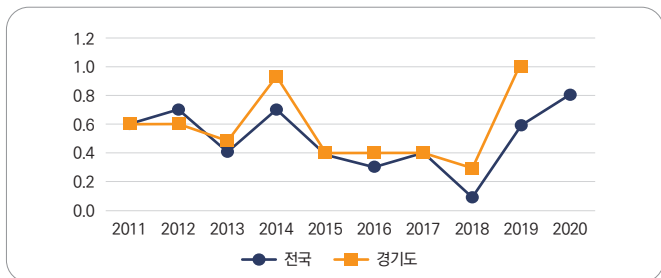
-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패턴
- 제조업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 취업자수 증가율이 낮음
- 서비스업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 서비스 관련 산업이 제조업과 자리바꿈을 하며 경제성장과 고용을 이끌어감

5-2-3 고용탄력성

○ 정의

- 고용탄력성은 취업자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으로 해석

○ 전국 및 경기도 고용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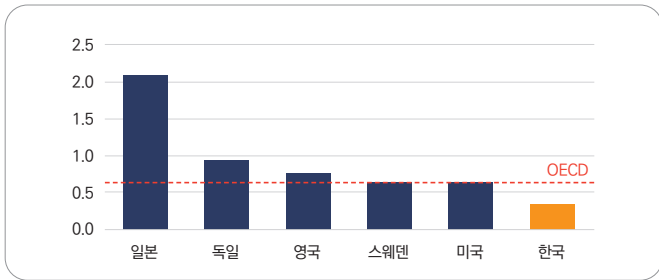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0.6	0.7	0.4	0.7	0.4	0.3	0.4	0.1	0.6	0.8
경기도	0.6	0.6	0.5	0.9	0.4	0.4	0.4	0.3	1.0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각년도). “국민계정”.; 통계청(각년도). “지역계정”.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0년대 들어 고용탄력성은 평균 0.4~0.5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냄
-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2010년대 초반 고용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0년대 후반 다소 감소
- 2000년대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높아져 고용창출력이 회복됨을 시사

○ 주요국의 고용탄력성(2015~19년 연평균)



구분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한국	OECD
2015~19년	2.1	0.9	0.8	0.6	0.6	0.3	0.6
2019년	1.3	2.1	0.9	0.5	0.5	0.5	0.6

자료 : OECD(각년도). "Labour Force Statistics".: OECD(각년도). "National Account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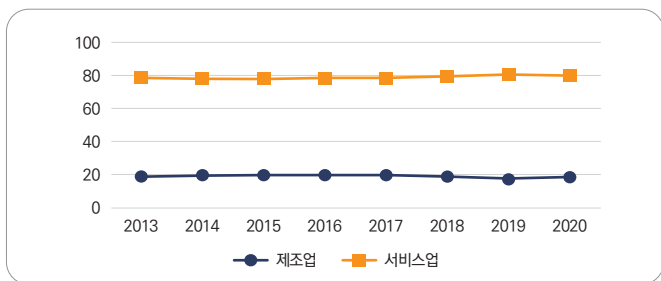
- 2015~19년 한국의 연평균 고용탄력성은 0.3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각각 2.1, 0.9, 0.8로 높은 고용창출력을 나타냄
- 한국의 경우, 2010년대 들어 고용탄력성이 회복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처럼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

5-2-4 제조업-서비스업 고용 비율

○ 정의

-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냄

○ 경기도 제조업-서비스업 고용 비율(단위 : %)



주 :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제조업	17.0	17.2	17.6	17.4	17.1	16.8	16.3	16.3
	서비스업	76.9	77.2	77.2	77.8	78.0	78.1	78.5	78.3
경기도	제조업	18.9	19.7	20.1	19.9	19.9	19.5	18.1	18.6
	서비스업	78.6	78.0	78.0	78.3	78.3	78.9	80.2	79.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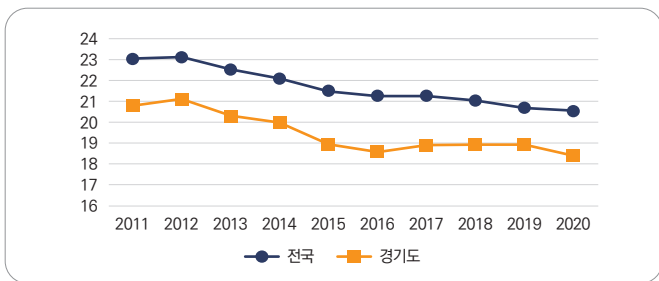
- 전국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13년 17.0%에서 2020년 16.3%로 점차 감소 추이
- 전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율은 2013년 76.9%에서 2020년 78.3%로 점차 증가 추이
-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18.6%, 서비스업 고용 비율은 79.9%로, 전국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용 비율이 높음

5-2-5 자영업자 고용 비율

○ 정의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냄

○ 전국 및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 비율(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3.1	23.1	22.5	22.1	21.5	21.3	21.3	21.0	20.7	20.6
경기도	20.8	21.1	20.3	20.0	18.9	18.6	18.9	18.9	18.9	18.4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자영업자 고용 비율은 2011년 23.1%에서 2020년 20.6%로 2.5%p 하락
- 2011~20년 동안 자영업자는 565.7만 명에서 553.1만 명으로 12.6만 명이 감소했으며, 그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4만 명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7만 명이 증가함
-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 비율은 18.4%이며, 전국에 비해 자영업자 고용 비율은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20대 고용률은 57.9%에서 55.7%로 하락하고,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39.0%에서 42.4%로 증가**

- 최근 5년 사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각각 2.2%p와 2.0%p 감소
- 최근 5년 사이 30대와 60세 이상 고용률은 각각 0.9%p와 3.4%p 증가
- 취업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신규채용 정체로 고용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
- 교육-일자리 불일치 해소 등 20대 고용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OECD 주요국에 비해 한국 20대의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낮음**

- 2019년 기준 한국 20대의 고용률은 58.2%로 대부분의 OECD 주요국의 20대 고용률이 70% 이상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비교해 중년층(30~59세)의 고용률도 약 10%p 낮은 편(2019년 기준 76.6%)
- 2019년 기준 한국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41.5%로 대부분의 OECD 주요국보다 높으며, 이는 미흡한 노후 소득보장과 자녀 취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청년니트 및 고학력 비중이 높은 한국 특성에 맞춘 청년고용 확대 정책이 필요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률 개선을 고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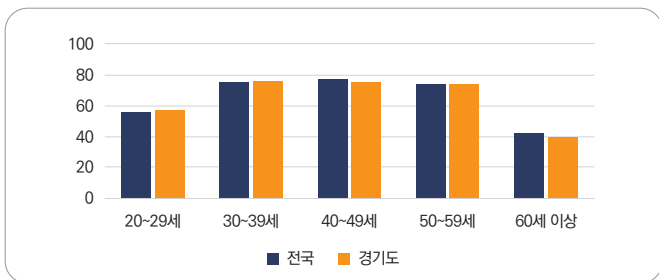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40% 미만으로 낮은 수준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3년부터 완만하게 하락하여 2019년 기준 각각 37.0%와 34.9%를 나타냄
-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장애인의 고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

5-3-1 연령대별 고용률

○ 정의

- 연령대별 취업자수를 같은 연령대의 인구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의미함

○ 전국 및 경기도 연령대별 고용률(2020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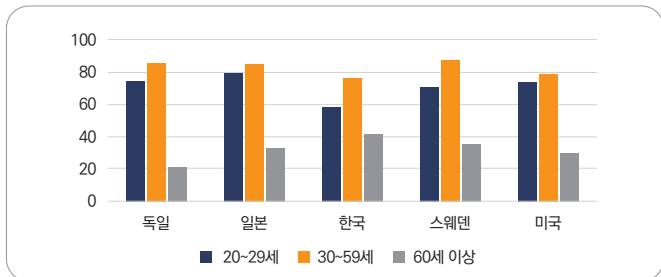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국	2015년	57.9	74.4	79.1	74.4	39.0
	2020년	55.7	75.3	77.1	74.3	42.4
	2015~20 증감(%p)	-2.2	0.9	-2.0	-0.1	3.4
경기도	2015년	61.6	73.9	80.0	73.5	35.5
	2020년	57.2	75.5	75.2	73.6	39.6
	2015~20 증감(%p)	-4.4	1.6	-4.8	0.1	4.1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5~20년 동안 전국 30대와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0.9%p, 3.4%p 상승
- 2015~20년 동안 전국 2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각각 2.2%p, 2.0%p 감소
-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20대 고용률은 높고,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낮은 편임

○ 주요국의 연령대별 고용률(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미국
20~29세	74.4	79.3	58.2	70.8	73.6
30~59세	85.4	85.1	76.6	87.7	78.5
60세이상	21.0	32.8	41.5	35.5	29.8

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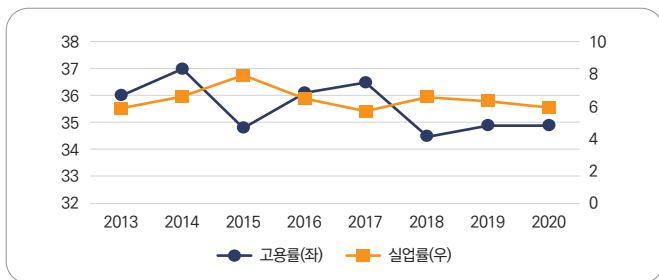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한국 20대의 고용률은 58.2%로 대부분의 OECD 주요국의 20대 고용률이 70% 이상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비교해 중년층(30~59세)의 고용률도 약 10%p 낮은 편(2019년 기준 76.6%)
- 2019년 기준으로 한국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41.5%로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서 20~30%대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음

5-3-2 장애인 경제활동

○ 정의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이고,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

○ 전국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활동참가율	38.3	39.6	37.7	38.5	38.7	37.0	37.3	37.0
고용률	36.0	37.0	34.8	36.1	36.5	34.5	34.9	34.9
실업률	5.9	6.6	7.9	6.5	5.7	6.6	6.3	5.9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 장애인의 실업률은 6%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음
-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장애인의 고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

○ 2019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78%로 상당한 수준의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

- 2016년 이후 전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약 3~4%p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
- 경기도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2011년 8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격차가 오히려 확대하는 추세
-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학력, 경력 등 노동자 개인 특성 외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의 수요 독점적 지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기인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10년 53.3%에서 2019년 50.5%로 악화되고 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 이후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학력, 연령, 경력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 개인 특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서 기인
-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침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완만히 감소해왔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3%p 정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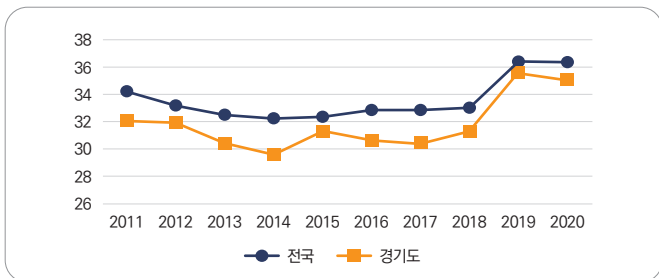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은 24.4%로 OECD 평균 11.8%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음
-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 한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함을 시사
-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의 악화에 대응한 정책 확대와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제한과 같은 제도 정책이 필요

5-4-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정의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이며, 비정규직근로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를 포함

○ 전국 및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단위: %)



주: 매년 8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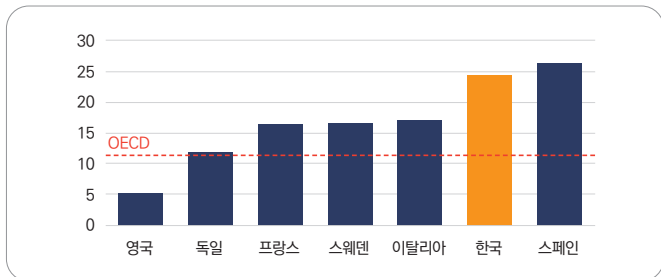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34.2	33.2	32.5	32.2	32.4	32.8	32.9	33.0	36.4	36.3
경기도	32.1	31.9	30.4	29.6	31.3	30.6	30.4	31.3	35.6	35.0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완만히 감소해왔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3%p 정도 증가하여 36% 수준임
 - ※ 2019년부터 기간 기준을 강화하여 세분화된 임금근로자 분류의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의 영향이 존재
- 경기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추세는 대체적으로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추세와 유사하나 약 1~2%p 정도 낮음

○ 주요국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로서 한시적 근로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자 등을 포함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OECD
한시적 근로자 비율	5.2	12.0	16.4	16.6	17.0	24.4	26.3	11.8

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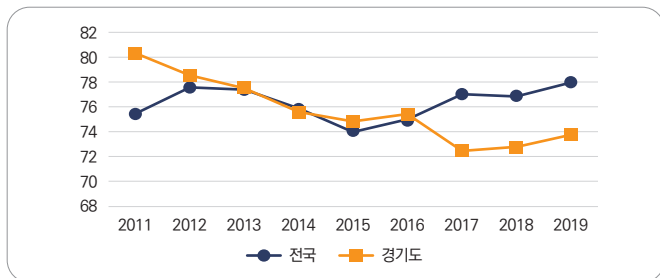
- 한국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비정규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은 24.4%로 OECD 평균 11.8%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음
- 주요국에 비해 한국에서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 한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함을 시사
-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제한과 같은 제도 강화가 필요

5-4-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 정의

- 대기업(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5~299인)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비율임

○ 전국 및 경기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단위 : %)



주 : 상용근로자 기준, 중소기업은 5~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75.5	77.6	77.4	75.8	74.1	75.0	77.1	76.9	78.0
경기도	80.4	78.6	77.5	75.6	74.8	75.4	72.5	72.8	73.8

자료 : 고용노동부(각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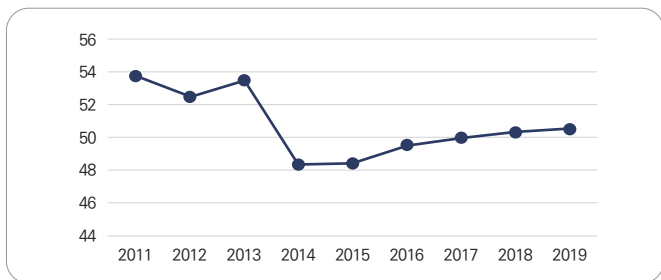
- 전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70%대에서 머무르고 있음
- 2016년 이후 전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약 3~4%p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다소 감소함
- 경기도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2011년 8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4~5%p 낮은 수준)

5-4-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정의

- 정규직근로자 평균 월급여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평균 월급여의 비율임

○ 전국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53.8	52.5	53.5	48.4	48.4	49.5	49.9	50.4	50.5

자료 :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11년 53.8%에서 2019년 50.5%로 악화
- 2014년을 기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그 이후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학력, 연령, 경력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 개인 특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서 주로 기인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나 여전히 낮은 편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기준 53.5%로 OECD 평균 수준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0%를 넘은 이후 매년 상승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
-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

○ 2020년 기준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7%에 불과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부족

-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3년 11.5%에서 2020년 15.7%로 증가하여 불평등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
-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은 모두 35%를 상회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장려

○ 남녀근로자 임금격차는 감소하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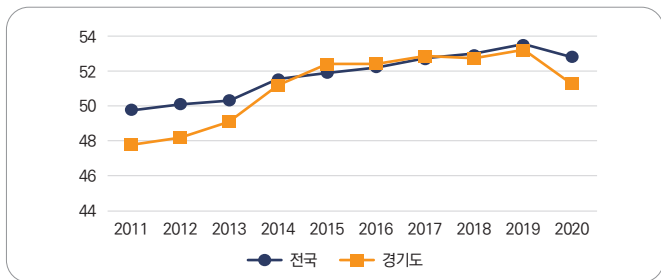
-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 비율은 2010년 62.6%에서 2019년 6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다소 감소
-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교육, 연령, 경력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기인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영향도 존재
-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한 남녀근로자 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 34.1%로 OECD 평균 12.9%와 비교해 매우 큰 격차가 존재
-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남녀근로자 임금격차는 20% 미만 수준
- 남성 중심의 채용 문화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5-5-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정의

- 여성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 전국 및 경기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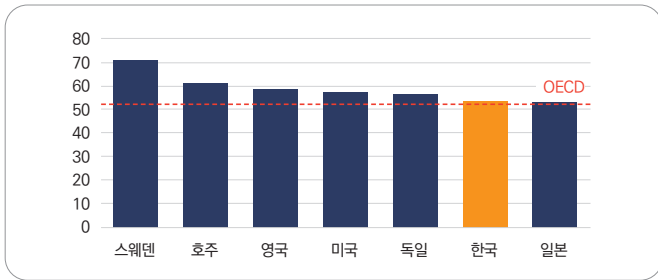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49.8	50.1	50.3	51.5	51.9	52.2	52.7	52.9	53.5	52.8
경기도	47.8	48.2	49.1	51.2	52.4	52.4	52.8	52.7	53.2	51.3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0%를 넘은 이후 매년 상승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
-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국가 경제의 생산 잠재력이 높아지므로, 성장력 제고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할 필요

○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스웨덴	호주	영국	미국	독일	한국	일본	OECD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1.0	61.0	58.7	57.4	56.6	53.5	53.3	53.1

자료 : OECD(각년도).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기준 53.5%로 OECD 평균 수준
-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개선의 여지가 큼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지원과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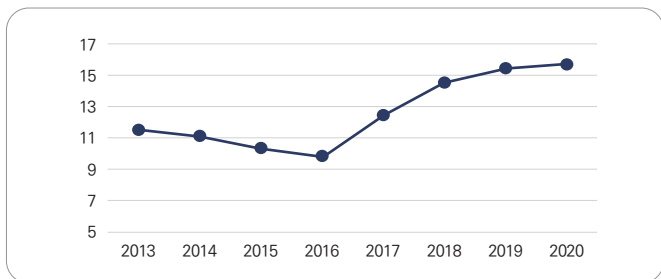
5-5-2 여성 관리자 비율

○ 정의

-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임

※ 관리자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전문 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을 의미함

○ 전국 여성 관리자 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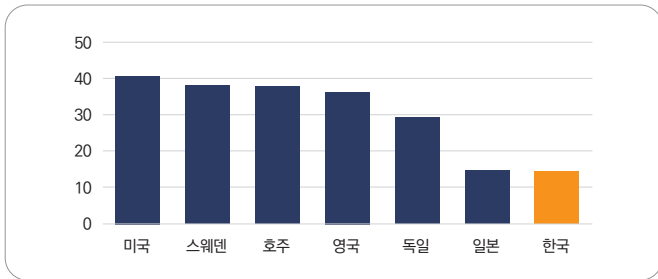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 관리자 비율	11.5	11.1	10.3	9.9	12.5	14.6	15.4	15.7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7%에 불과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부족
-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3년 11.5%에서 2020년 15.7%로 증가하여 불평등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장려할 필요

○ 주요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주 : 관리자는 국제표준직업분류 중 첫 번째 대분류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를 의미함

구분	미국	스웨덴	호주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	40.7	38.0	37.8	36.3	29.4	14.9	14.6

자료 : ILO(<http://www.ilo.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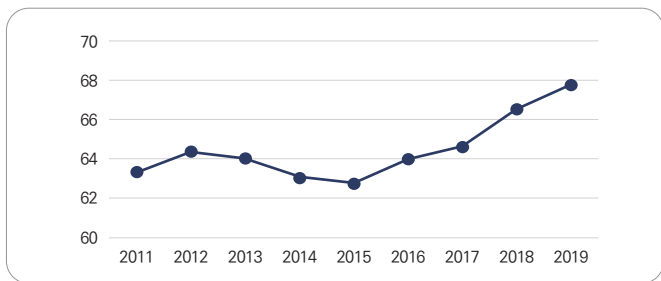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 약 1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의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은 모두 35%를 상회함
-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

5-5-3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비율

○ 정의

-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여 대비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의 비율임

○ 전국 남성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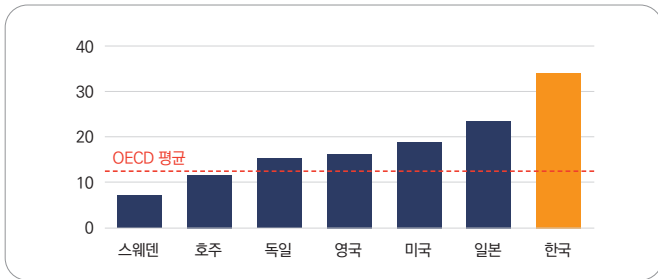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비율	63.3	64.4	64.0	63.1	62.8	64.1	64.7	66.6	67.8

자료 :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 비율은 2011년 63.3%에서 2019년 6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
-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교육, 연령, 경력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기인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영향도 존재
- 출산, 육아 등 혼인 이후 경력 단절과 미흡한 여성 대표성 등이 여성의 낮은 상대적 임금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주요국의 성별 임금격차(2018년 기준, 단위 : %)



주 : 성별 임금격차 = (남성중위임금 - 여성중위임금) ÷ 남성중위임금 × 100

구분	스웨덴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성별 임금격차	7.1	11.7	15.3	16.3	18.9	23.5	34.1	12.9

자료 : OECD(2018), "Employment Outlook".

○ 주요 특징 및 해설

-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한 남녀근로자 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은 한국의 경우 34.1%로 OECD 평균 12.9%와 비교해 20%p 이상의 큰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
-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남녀근로자 임금격차는 2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 남성 중심의 채용 문화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 산업재해율은 완만히 감소 중이며 산재 인정 범위는 확대

- 전국 산업재해율은 2010년 0.69%에서 꾸준히 감소하다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0.58%를 기록
-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해자 인정 수가 증가
- 2021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근로시간은 감소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긴 수준

-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2년 2,098시간에서 2019년 1,957시간으로 141시간이 감소
-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평균 1,50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 정착된 반면 한국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히
- 근로시간 단축시 노동생산성 상승,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 존재
-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 근로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터 혁신이 필요

○ 근로감독 수요에 비해 근로감독 인원이 부족하여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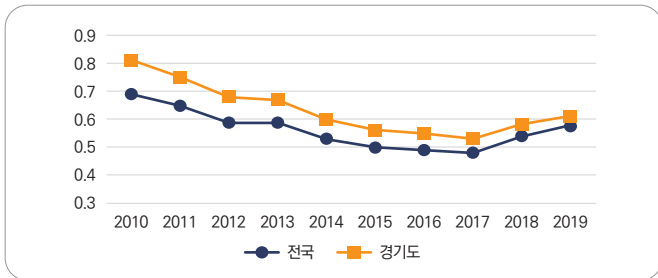
- 근로감독관 정원은 2013년 1,237명에서 2019년 2,213명으로 약 1,000여 명이 증원
- 2019년 기준 근로감독관 1명당 노동자수는 약 1만 2천 명을 넘어 여전히 효율적인 근로 현장 감독의 어려움이 존재
- 임금체불건 수는 2013년 18만여 건에서 2019년 22만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 효과적인 근로감독 행정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합리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근로감독 공백 해소를 도모할 필요

5-6-1 산업재해율

○ 정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율로서 재해근로자에는 사망자, 부상자, 업무상질병 요양자가 포함됨

○ 전국 및 경기도 산업재해율(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0.69	0.65	0.59	0.59	0.53	0.50	0.49	0.48	0.54	0.58
경기도	0.81	0.75	0.68	0.67	0.60	0.56	0.55	0.53	0.58	0.61

자료 : 고용노동부(각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산업재해율은 2010년 0.69%에서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0.58%를 기록
-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해자 인정 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할 필요
- 경기도의 산업재해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격차는 2010년 0.12%p에서 2019년 0.03%p로 하락
- 2021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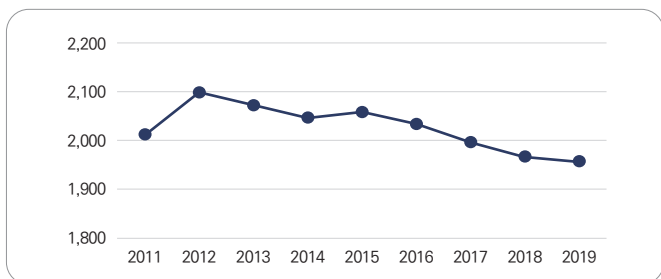
5-6-2 평균 근로시간

○ 정의

- 의존적 취업자(Dependent Employment) 연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총근로 시간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로 나누어 계산함

※ 의존적 취업자는 의존적 도급인,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 전국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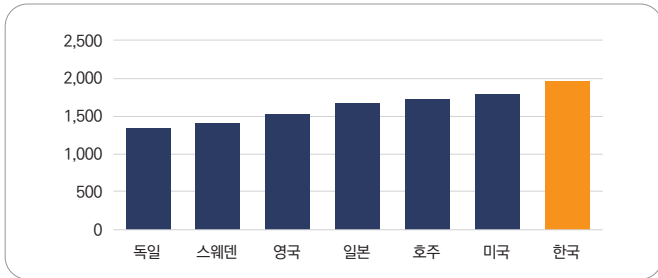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2,011	2,098	2,071	2,047	2,058	2,033	1,996	1,967	1,957

자료 : OECD(각년도).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2년 2,098시간에서 2019년 1,957시간으로 141시간이 감소
- 2021년에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와 노동시간 특례 업종 축소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예상됨
- 근로시간 단축 시 노동생산성 상승,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주요국의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2019년 기준, 단위 : 시간)



구분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호주	미국	한국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1,334	1,406	1,516	1,669	1,720	1,786	1,957

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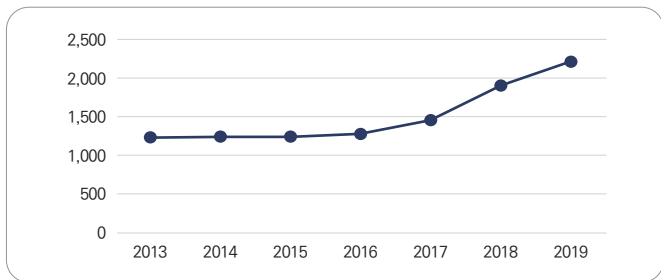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의존적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1,957시간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긴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평균 1,50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 정착됐지만, 한국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함
-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미국, 호주, 일본 등도 연평균 1,700시간 수준에 머물러 한국과의 격차가 상당함
-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 근로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터 혁신이 필요

5-6-3 근로감독관수

○ 정의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정원 수

○ 전국 근로감독관 정원(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감독관 정원	1,237	1,250	1,243	1,282	1,450	1,902	2,213

자료 : 고용노동부(2020). 『2020년판 고용노동백서』, p.234.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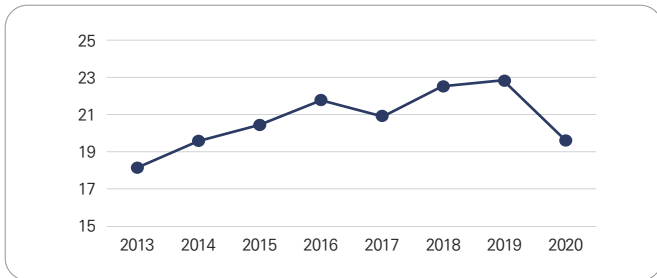
- 근로감독관 정원은 2013년 1,237명에서 2019년 2,213명으로 약 1,000여 명 증원
- 2019년 기준 근로감독관 1명당 노동자수는 12,250명으로 여전히 효율적인 근로 현장 감독의 어려움 존재
- 2019년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체는 전국 사업장 350만여 개 가운데 약 0.7%인 2만5천여 개에 불과하여 노동권익 사각지대가 발생
- 효과적인 근로감독 행정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합리적 협업방안을 모색할 필요

5-6-4 임금체불건수

○ 정의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신고건수

○ 전국 임금체불건수(단위 : 만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임금체불건수	18.1	19.6	20.4	21.8	21.0	22.5	22.8	19.7

자료 : 고용노동부(2021). “임금체불현황(2020년 말 기준)”.

○ 주요 특징 및 해설

- 임금체불건수는 2013년 18만여 건에서 2019년 22만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함
- 임금체불건수의 증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
- 근로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지면 노동 현장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2020년 기준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7.6%인 약 183만 명 정도로 추산

- 2018년 기준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플랫폼 경제 참여자는 평균 11.9% 수준으로 나타남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해 합의된 국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국가 간 비교는 어려움
- 향후 다양한 분야가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이 미래의 새로운 노동 형태로 확산될 전망

○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 50대 이상의 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비플랫폼 노동자 비중보다 약 10%p 높음
-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경제 일자리에서 많은 장년층이 종사하고 있음을 시사

○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보호의 확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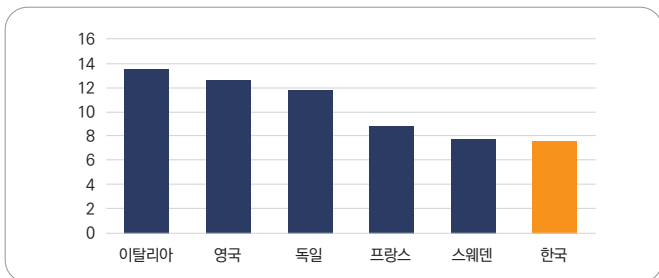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종사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
- 고용연계형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원이 10.2%, 퀵서비스 종사자가 19.6% 등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퀵서비스 종사자가 34.0%, 음식배달원이 37.8% 등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와 실업 인정을 소득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

5-7-1 플랫폼 노동자 비율

○ 정의

-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임.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사람으로 정의

○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자 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주 : 유럽 국가는 2018년 기준, 한국은 2020년 기준

구분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
플랫폼 노동자 비율	13.5	12.6	11.8	8.8	7.8	7.6

자료 : 장지연(2020).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Pesole et al.(2018). Platform workers in Europ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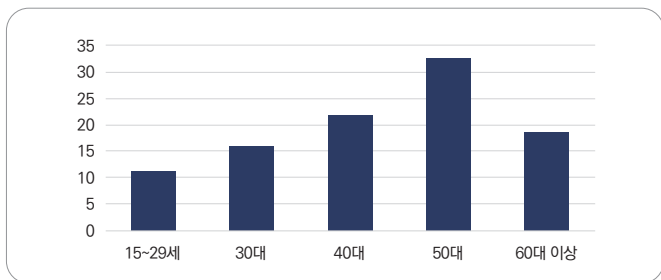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7.6%인 약 183만 명 정도로 추산
- 2018년 기준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플랫폼 경제 참여자는 평균 11.9% 수준으로 나타남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해 합의된 국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국가 간 비교는 어려움

5-7-2 연령별 플랫폼 노동자 비율

○ 정의

- 15세 이상 플랫폼 노동자의 연령대별 비율임

○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연령별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전국 15세 이상 인구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 1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고객에서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자

구분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플랫폼	11.2	15.9	21.7	32.6	18.6	100
비플랫폼	14.5	20.6	24.6	23.4	16.9	100

자료 : 김준영(2019).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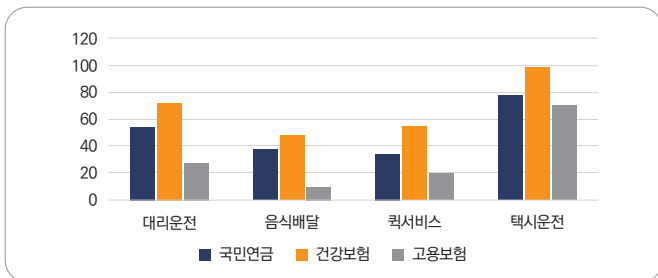
-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50%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비플랫폼 노동자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약 10%p 높음
-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 경제 일자리에서 많은 장년층이 종사하고 있음을 시사

5-7-3 플랫폼 노동 직종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 정의

- 4개 직종(대리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택시운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율

○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별 사회보험 가입률(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로 직종별 근로실태를 통계적으로 대표하지 않음

구분	대리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택시운전	전체
국민연금	53.9	37.8	34.0	77.6	52.6
건강보험	71.6	48.0	54.6	98.4	70.1
고용보험	27.5	10.2	19.6	70.4	34.4

자료 : 최기성(2019). 『플랫폼 경제종사자 주요 직종의 근로 실태』.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종사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
- 고용연계형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원이 10.2%, 퀵서비스 종사자가 19.6% 등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퀵서비스 종사자가 34.0%, 음식배달원이 37.8% 등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음
-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보호의 확대가 필요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6장

•

인구·가족

6-1 저출산·고령화

6-2 수도권·경기도 인구

6-3 성평등

6-4 일가정 양립

6-5 다문화 포용

○ 2028년을 정점으로 국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국내 인구는 1984년 4,000만 명을 넘어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8년 5,194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통계청)
- 경기도 인구는 2036년 1,445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
-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출산, 사망, 이동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유지 가능성 높음

○ 인구 규모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여 유소년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도 빨라지는 추세
- 생산연령인구의 급감, 노인인구의 급증은 부양인구비의 변화로 이어짐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는 18년,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는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임
※ 일본은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24년,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12년 소요
-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거나 정부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출생아수 감소와 혼인을 저하로 인한 초저출산의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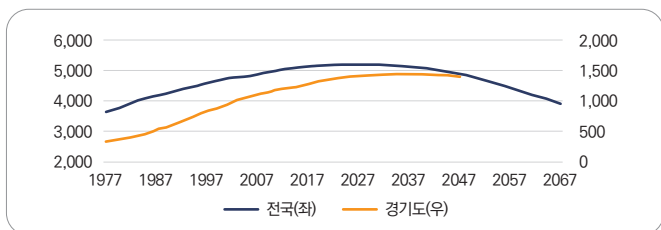
- 출산수준은 1983년 대체수준(2.1명) 이하로 낮아졌고, 2002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음
- 저출산 원인으로 혼인과 출산의 지연을 꼽을 수 있으며, 초혼인율의 꾸준한 감소와 초혼연령의 증가를 통해 알 수 있음
-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성장 동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6-1-1 총인구

○ 정의

-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의 통계를 활용한 가정에 따라 추계한 장래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나타냄

○ 전국 및 경기도 추계인구(2019년 6월 기준, 단위 : 만 명)



주 : 1977~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977	1987	1997	2007	2017	2027	2037	2047	2057	2067
전국 인구(만명)	3,641	4,162	4,595	4,868	5,136	5,193	5,138	4,891	4,439	3,929
0~14세 비중(%)	36.5	28.2	22.3	17.9	13.1	10.1	9.7	9.2	8.2	8.1
15~64세 비중(%)	60.0	67.3	71.4	72.3	73.2	67.5	58.9	52.4	49.4	45.4
65세이상 비중(%)	3.6	4.5	6.4	9.8	13.8	22.3	31.4	38.4	42.3	46.5
경기도 인구(만명)	338	529	845	1,106	1,279	1,411	1,445	1,399	-	-

자료 :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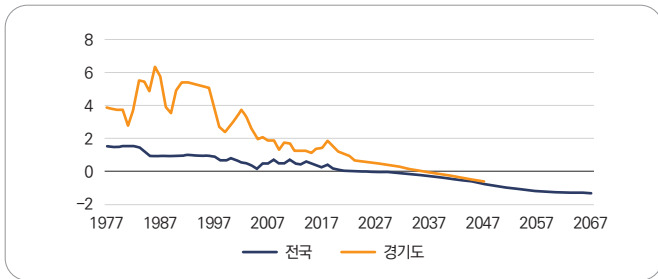
- 전국 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 명에서 증가하여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 명에 이를 전망
- 2017~67년 동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크게 감소(73.2% → 45.4%),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크게 증가(13.8% → 46.5%)할 전망
- 경기도 인구는 2017년 현재 1,278만 명에서 2036년 1,445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47년 1,398만 명에 이를 전망
- 경기도의 2047년 연령별 인구 비중은 15~64세 54.5%, 65세 이상 35.3%로 전망

6-1-2 인구성장률

○ 정의

-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모두 반영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임

○ 전국 및 경기도 인구성장률(단위 : %)



주 : 자연증가율은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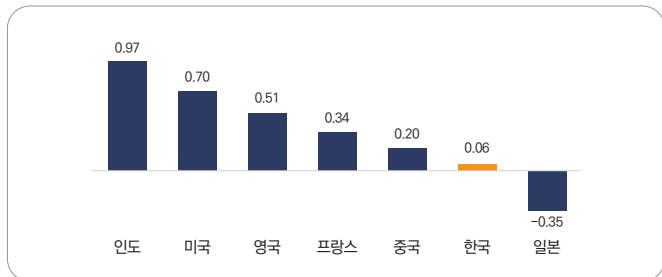
구분	1977	1987	1997	2007	2017	2027	2037	2047	2057	2067
전국	1.57	0.99	0.94	0.51	0.28	0.02	-0.26	-0.70	-1.15	-1.26
경기도	3.91	5.80	3.90	1.86	1.46	0.52	-0.02	-0.57	-	-

자료 :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이 시작되어 2067년에는 -1.2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경기도의 경우, 2037년 이후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19년 11월 기준으로 인구 자연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

○ 주요국의 인구성장률 전망(2020~25년 기준, 단위 : %)



주1 : 인구성장률 작성수식: $\ln(P_t/P_0)/T \times 100$ [P_t 는 t년도 총인구, T는 비교기간]

주2 : 비교국가의 '15~'20년과 '20~'25년의 인구성장률은 중위출산율(Medium Fertility) 가정에 의한 추정결과

구분	인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
'90~'95	1.97	1.04	0.28	0.45	1.23	1.01	0.36
'95~'00	1.84	1.21	0.33	0.40	0.68	0.83	0.20
'00~'05	1.65	0.92	0.45	0.62	0.55	0.49	0.20
'05~'10	1.46	0.91	0.82	0.55	0.54	0.56	0.05
'10~'15	1.23	0.72	0.65	0.45	0.54	0.58	-0.09
'15~'20	1.10	0.71	0.58	0.39	0.39	0.34	-0.23
'20~'25	0.97	0.70	0.51	0.34	0.20	0.06	-0.35

자료 :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2017~67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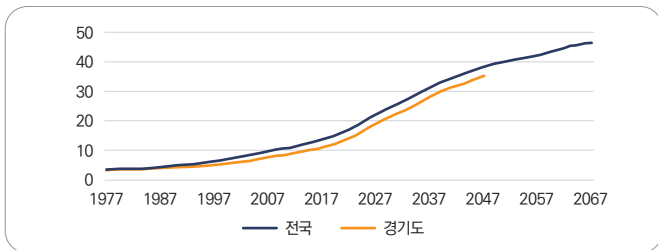
- 2020~25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06%로서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
- OECD 주요 회원국 중 일본은 2010~15년 사이에 이미 마이너스 인구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25년에는 -0.35%로 인구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
- 인도와 미국 등의 인구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에 인구증가 둔화세가 나타남

6-1-3 고령화율

○ 정의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7% 이상이면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Aged)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Super-Aged) 사회’로 분류

○ 전국 및 경기도 고령화율(단위 : %)



구분	1977	1987	1997	2007	2017	2027	2037	2047	2057	2067
전국 고령화율	3.6	4.5	6.4	9.8	13.8	22.3	31.4	38.4	42.3	46.5
전국 노령화지수	9.9	16.0	28.6	54.6	105.1	220.0	322.6	417.2	513.6	574.5
경기도 고령화율	3.5	4.1	5.1	7.7	11.1	19.0	28.2	35.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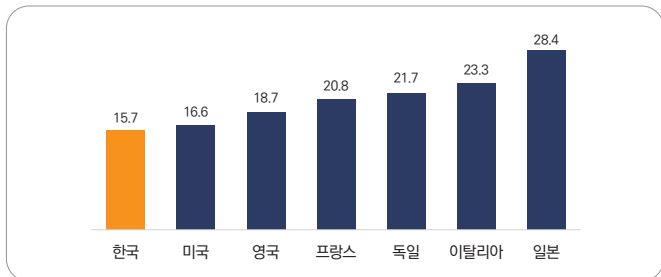
주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1977년 3.6%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4.9%이며, 2025년 20.3%, 2067년 46.5%가 될 것으로 예측
-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5.1에서 증가하여 2067년 574.5로 5배 이상 높아질 전망
-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11.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2년 14.2%, 2028년 20.0%를 넘어서고, 2047년에는 35.3%로 전망

○ 주요국의 고령화율(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2000	7.2	12.3	15.9	16.1	16.5	18.3	17.0
2010	10.8	13.0	16.6	16.9	20.6	20.4	22.5
2020	15.7	16.6	18.7	20.8	21.7	23.3	28.4
2030	25.0	20.3	21.5	24.1	26.2	27.9	30.9
2040	33.9	21.6	23.9	26.9	29.1	33.6	35.2
2050	39.8	22.4	25.3	27.8	30.0	36.0	37.7
2060	43.9	24.1	27.0	28.5	30.5	36.3	38.3

자료 : UN(202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http://population.un.org/wpp>).;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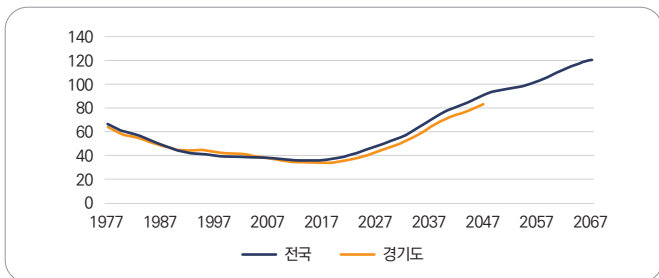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령화율은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지만,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2020년 기준으로 주요국 중에서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이 2020년 28.4%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23.3%), 독일(21.7%), 프랑스(20.8%) 등도 초고령사회에 진입
-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이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6-1-4 부양인구비

○ 정의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0~14세)과 노년(65세 이상)의 비율(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유소년과 노년 부양 인구수)을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총부양인구비(단위 : %)



주 : 총부양인구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구분	1977	1987	1997	2007	2017	2027	2037	2047	2057	2067
전국 총부양비	66.8	48.7	40.1	38.3	36.7	48.1	69.9	90.9	102.4	120.2
노인 1인당 생산연령인구	16.7	15.0	11.2	7.4	5.3	3.0	1.9	1.4	1.2	1.0
경기도 총부양비	64.1	48.7	43.5	38.1	34.3	43.3	63.7	8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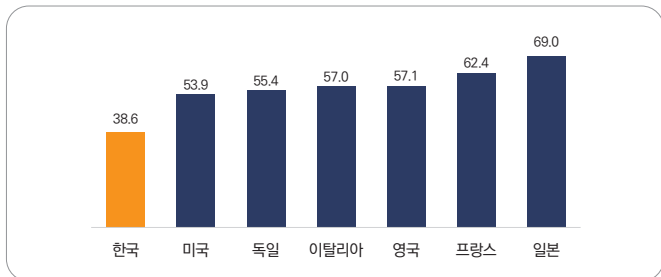
주 : 노인 1인당 생산연령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부양인구비는 2017년 36.7%에서 2037년에는 69.9%, 2067년에는 12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19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4.9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하지만 206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
- 경기도의 부양인구비는 2017년 34.3명에서 2047년 83.3명으로 증가 전망

○ 주요국의 부양인구비(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2000	39.5	51.6	47.4	48.4	53.7	53.8	46.6
2010	36.9	49.7	51.8	52.7	51.7	54.6	55.9
2020	38.6	53.9	55.4	57.0	57.1	62.4	69.0
2030	53.0	60.6	68.0	64.1	61.5	67.6	72.4
2040	77.5	63.4	74.8	81.2	65.5	74.6	86.3
2050	95.0	63.7	77.2	91.0	69.4	77.2	97.2
2060	108.2	67.6	80.8	91.3	73.5	77.8	99.2

자료 : UN(202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http://population.un.org/wpp>).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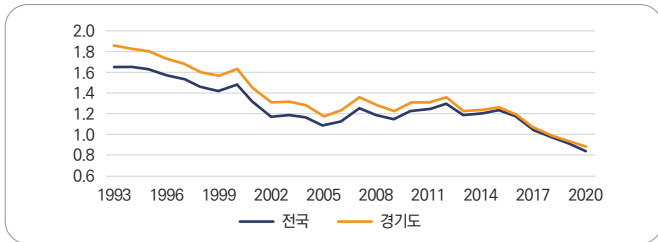
- 부양인구비는 사회발전 수준과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
- 2020년 한국의 부양인구비는 38.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 2020년 기준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일본이 69.0%로 가장 높고, 프랑스(62.4%), 영국(57.1%) 및 이탈리아(57.0%)를 포함한 유럽이 높은 부양인구비를 기록
- 한국은 부양인구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며, 2060년에는 전 세계에서 부양인구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

6-1-5 합계출산율

정의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전국 및 경기도 합계출산율(단위: 명)



주: 2020년은 잠정 집계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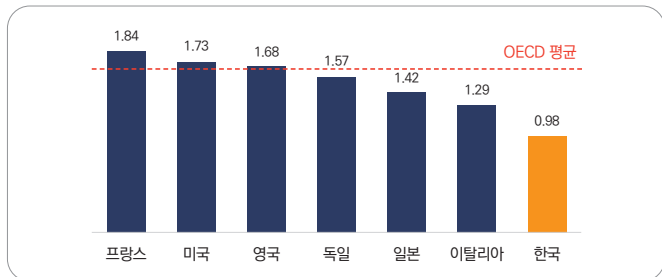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합계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전국 출생아수(만명)	43.6	43.5	43.8	40.6	35.8	32.7	30.3	27.2
경기도 합계출산율	1.23	1.24	1.27	1.19	1.07	1.00	0.94	0.88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주요 특징 및 해설

- 2002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초저출산)으로 낮아진 이후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
- 경기도는 2013년부터 초저출산 상태이며 2020년 0.88명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 출생아수는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7년 35.8만 명, 2020년에는 27.2만 명으로 집계됨
- 2020년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내려갔으며,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감소와 혼인건수의 감소로 인해 초저출산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18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OECD 평균
2018	1.84	1.73	1.68	1.57	1.42	1.29	1.63
2008	2.00	2.09	1.96	1.38	1.37	1.41	1.75

자료 : OECD(<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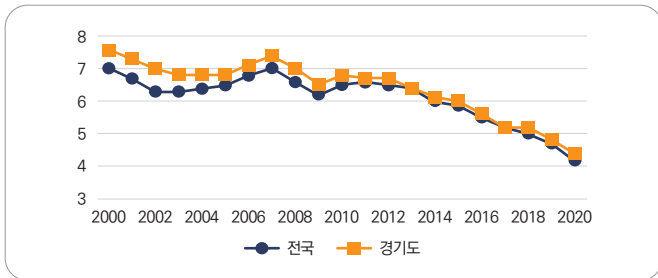
- 한국은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
- 스페인(1.26), 이탈리아(1.29)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되며, OECD 평균보다 출산율에 낮은 국가에는 유럽국가 등이 주로 포함
- 일본, 독일 등은 2008년에 비해 출산수준이 높아진 국가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출산수준이 낮아짐

6-1-6 조혼인율

○ 정의

-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로, 연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비로 나타낸 수치

○ 전국 및 경기도 조혼인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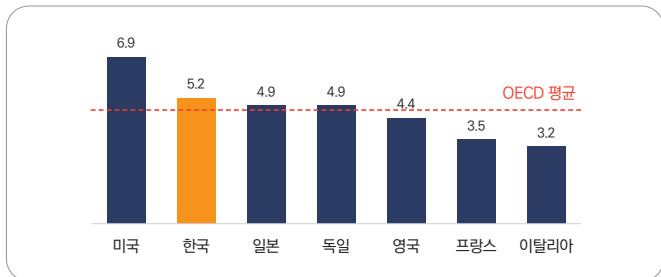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조혼인율(%)		6.5	6.4	6.0	5.9	5.5	5.2	5.0	4.7	4.2
초혼 연령(세)	남편	32.1	32.2	32.4	32.6	32.8	32.9	33.2	33.4	33.2
	아내	29.4	29.6	29.8	30.0	30.1	30.2	30.4	30.6	30.8
경기 조혼인율(%)		6.7	6.4	6.1	6.0	5.6	5.2	5.2	4.8	4.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총 혼인건수는 21.4만건이고 조혼인율은 4.2%로 집계
- 조혼인율은 2000년 7.0%에서 2014년까지는 6.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경기도의 조혼인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13년 이후 전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조혼인율의 감소는 초혼 연령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2000~20년 동안 남편은 29.3세 → 33.2세, 아내는 26.5세 → 30.8세로 4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

○ 주요국의 조혼인율(2017년 기준, 단위: %)



주: 영국은 2016년 자료임

구분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OECD 평균
2011	6.8	6.6	5.2	4.6	4.5	3.6	3.4	-
2012	6.8	6.5	5.3	4.8	-	3.7	3.5	-
2013	6.8	6.4	5.3	4.6	4.3	3.6	3.2	-
2014	6.9	6.0	5.1	4.8	4.5	3.6	3.1	4.6
2015	6.9	5.9	5.1	4.9	4.4	3.6	3.2	-
2016	7.0	5.5	5.0	5.0	4.4	3.5	3.4	4.8
2017	6.9	5.2	4.9	4.9	-	3.5	3.2	4.8

자료: OECD(<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혼인율은 5.2%로 미국을 제외하고 OECD(평균 4.8%)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임
-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는 사실혼이나 동거 등으로 인해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측됨
- 한국은 혼외출산이 매우 낮아 혼인이 출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혼인은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 수도권 주민등록인구는 1992년 1,961만 명에서 2020년 2,604만 명으로 643만 명이 증가

- 1992년 기준 경기도는 서울시 인구에 비해 433만 명이 적었으나, 2003년부터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시를 추월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에 비해 376만 명이 많음
- 2020년 기준 수도권 전체 순유입인구는 8.8만 명이며, 서울과 인천이 각각 6.5만 명, 1.6만 명이 감소했으나 경기도가 16.8만 명이 증가하여 경기도가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견인
- 2020년 기준 수도권 청년(만 20~34세) 순유입인구는 9.1만 명이며,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6.2만 명, 3.4만 명이 증가(인천 0.5만 명 감소)하여, 청년 인구의 유입은 서울에서도 지속

○ 최근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대부분 순유입인구 증가에서 기인

- 경기도의 자연증가인구는 1995년 10.7만 명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5만 명 증가에 그침
- 경기도의 순유입인구는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2020년에는 경기도로 16.8만 명이 순유입

○ 2020년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인구는 1,343만 명이며, 그 중 경기북부인구는 350만 명(26.0%), 경기남부인구는 993만 명(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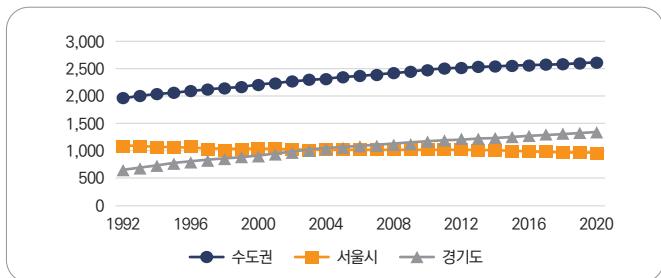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는 0~19세 247만 명(18.4%), 20~34세 267만 명(19.9%), 35~64세 651만 명(48.5%), 65세 이상 178만 명(13.2%)임
- 2011~20년 동안 청년인 20~34세는 12만 명 증가, 35~64세는 111만 명 증가, 65세 이상은 70만 명이 증가했으나, 유소년층인 0~19세는 44만 명이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

6-2-1 수도권 인구

○ 정의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단, 외국인은 제외)

○ 수도권 인구 추이(단위: 만 명)



구분	1992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수도권	1,961	2,069	2,208	2,347	2,486	2,547	2,604
서울시	1,094	1,055	1,031	1,017	1,031	1,002	967
경기도	661	779	922	1,070	1,179	1,252	1,343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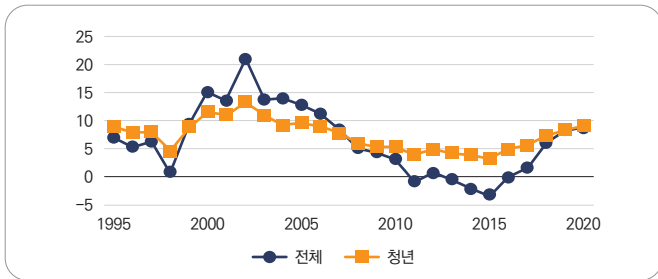
- 수도권 주민등록인구는 1992년 1,961만 명에서 2020년 2,604만 명으로 643만 명이 증가
- 서울시는 1992년 1,094만 명에서 2020년 967만 명으로 127만 명이 감소
- 경기도는 1992년 661만 명에서 2020년 1,34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1992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서울시 인구에 비해 433만 명이 적었으나, 2003년 이후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시보다 많아져 2020년에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에 비해 376만 명이 많음

6-2-2 수도권 순유입인구

정의

-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순유입인구수

수도권 순유입인구 추이(단위 : 만 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9	15.0	12.9	3.1	-3.3	-0.1	1.6	6.0	8.3	8.8
청년	8.9	11.6	9.7	5.3	3.3	4.9	5.5	7.4	8.4	9.1

자료 : 통계청(각년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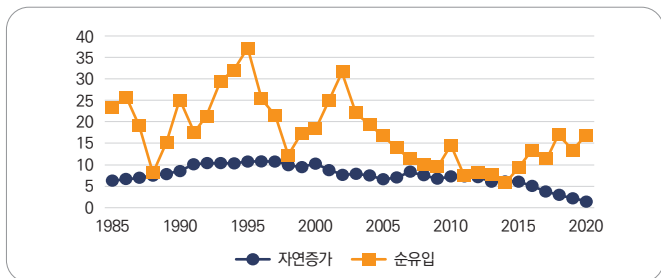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수도권 전체 순유입인구는 8.8만 명이며, 서울이 6.5만 명 감소, 경기도가 16.8만 명 증가, 인천이 1.6만 명 감소로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경기도에서 기인함
- 2020년 기준 수도권 청년(만 20~34세) 순유입인구는 9.1만 명이며, 서울이 3.4만 명 증가, 경기도가 6.2만 명 증가, 인천이 -0.5만 명 감소하여 서울과 경기도에서 수도권 청년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남
- 수도권 전체 순유입인구 증가는 2002년 이후 둔화세를 보인 후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2010년대 이후 수도권의 청년 순유입인구가 전체 순유입인구보다 많은 특징을 보임

6-2-3 경기도 인구 변화

○ 정의

- 자연증가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인구수이며, 순유입인구는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수

○ 경기도 인구 변화(단위: 만 명)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연증가	6.3	8.5	10.7	10.3	6.7	7.4	6.0	1.5
순유입	23.4	25.1	37.3	18.4	16.9	14.2	9.5	16.8

자료 : 통계청(각년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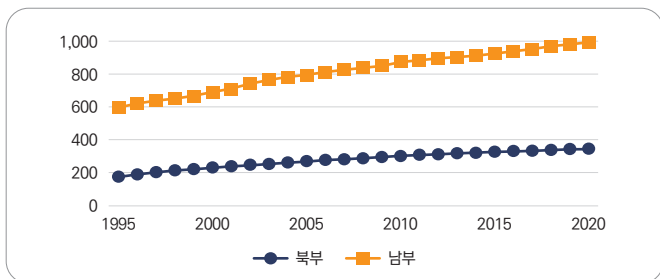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경기도의 자연증가인구는 1.5만 명이고 순유입인구는 16.8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증가는 대부분 인구유입에서 기인
- 경기도의 자연증가인구는 1995년 10.7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이며, 특히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경기도의 순유입인구는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6-2-4 경기도 북부·남부 인구

○ 정의

- 경기북부인구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등 10개 시군의 주민등록법상 인구이며, 경기남부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에서 경기북부인구를 제외한 인구

○ 경기도 북부·남부 인구(단위 : 만 명)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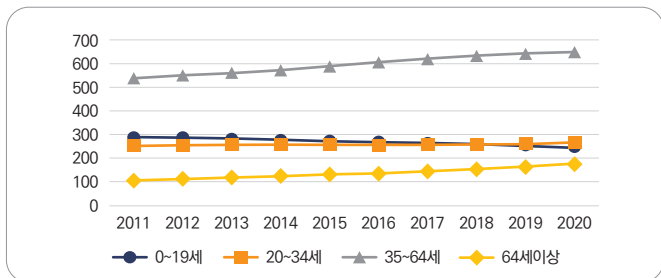
- 전체 경기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경기북부인구는 1995년 23.1%에서 2015년 26.3%로 증가한 후, 최근 26.1%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2020년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인구는 1,343만 명이며, 그 중 경기북부인구는 350만 명(26.0%), 경기남부인구는 993만 명(74.0%)
- 2020년 기준 경기도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수원시로 119만 명이고, 그다음으로 고양시 108만 명, 용인시 107만 명임
- 반면 인구가 적은 시군은 과천시 6.3만 명, 가평군 6.2만 명, 연천군 4.4만 명임

6-2-5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

○ 정의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가로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단, 외국인인 제외)

○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단위: 만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19세	292	288	283	278	273	269	264	259	254	247
20~34세	255	256	259	258	258	258	257	259	262	267
35~64세	540	552	562	574	589	607	619	634	643	651
65세이상	107	114	120	125	132	137	147	155	165	178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기준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는 0~19세 247만 명(18.4%), 20~34세 267만 명(19.9%), 35~64세 651만 명(48.5%), 65세 이상 178만 명(13.2%)
- 2011~2020년 동안 20~34세는 12만 명 증가, 35~64세는 111만 명 증가, 65세 이상은 70만 명 증가했으나, 0~19세는 44만 명 감소하여 유소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과 행동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6년 32.4%에서 2020년 62.5%로 약 30%p 증가
- 나머지 의견 중에는 아내가 주도가 34.8%, 남편이 주도가 2.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여전히 가사에 대한 아내 중심적 태도가 존재
- 실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는 비율은 2006년 7.5%에서 2020년 20.7%로 증가했으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과 행동 간 격차는 2006년 24.9%p(32.4%-7.5%)보다 2020년 41.8%p(62.5%-20.7%)로 확대됨
- 성평등 문화나 의식에 대한 견해와 의견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

○ 남녀간 성불평등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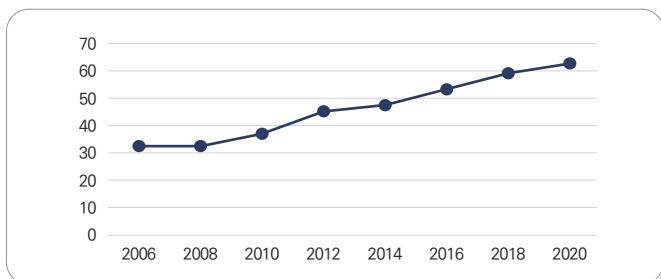
- 성불평등을 보여주는 지수는 포함되는 영역 및 산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
- 건강, 교육 등의 지표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
- 정치참여, 경제활동은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영역으로,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임
- 성평등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 확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경제활동 기회 보장 등 일상적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이 중요
-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보장을 위한 태도가 일상생활에서 실제 행동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

6-3-1 가사분담 견해

○ 정의

-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응답(13세 이상) 비율

○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 비율(단위 : %)



주 : 2010년까지는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 / 2012년부터는 조사대상은 13세 이상 인구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아내가 주도	65.4	66.5	61.3	52.0	50.2	43.8	38.4	34.8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5.9	6.7	6.4	5.3	5.3	4.3	3.8	4.0
아내가 주로하지만 남편도 분담	59.4	59.8	54.9	46.7	44.9	39.5	34.6	30.8
공평하게 분담	32.4	32.4	36.8	45.3	47.5	53.5	59.1	62.5
남편이 주도	2.3	1.1	1.9	2.6	2.3	2.7	2.5	2.7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1.9	0.9	1.6	2.2	1.9	2.1	1.9	1.9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0.3	0.2	0.3	0.4	0.4	0.6	0.6	0.8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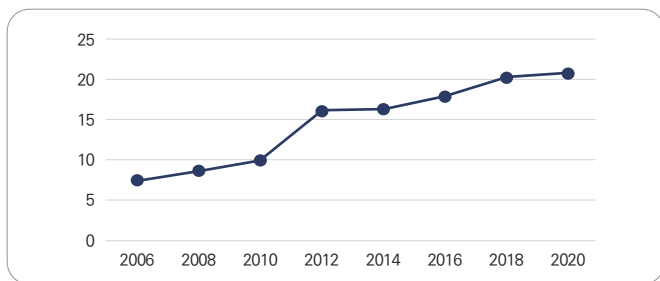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0년 62.5%로 2010년 36.8%에서 25.7%p 증가
-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34.8%)이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2.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꾸준히 필요

6-3-2 가사분담 실태

○ 정의

- 부부간 가사분담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

○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남편 기준,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31.9	33.4	31.2	24.4	25.0	24.0	21.9	21.1
아내가 주로하지만 남편도 분담	57.6	56.0	56.2	56.1	55.5	54.9	54.3	54.6
공평하게 분담	7.5	8.7	10.0	16.1	16.4	17.8	20.2	20.7
남편이 주로하지만 아내도 분담	2.4	1.4	2.0	2.6	2.3	2.7	2.9	2.7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0.6	0.4	0.6	0.8	0.8	0.5	0.8	1.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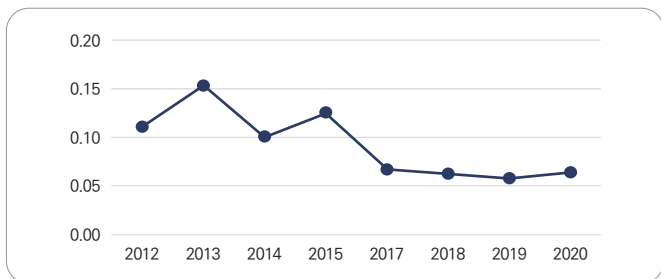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0년 20.7%로 2006년(7.5%) 이후 꾸준히 증가
- 아내가 주도한다는 응답이 75.7%로 높고,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
-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내가 전적으로 하거나 주로 담당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2020년 22.9%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6-3-3 성불평등지수(GII)

○ 정의

- UNDP가 2010년 각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지수로,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부문에서 5개 지표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불평등이 큰 것을 의미

○ 한국 성불평등지수(단위 : 점)



주 : GII 값이 0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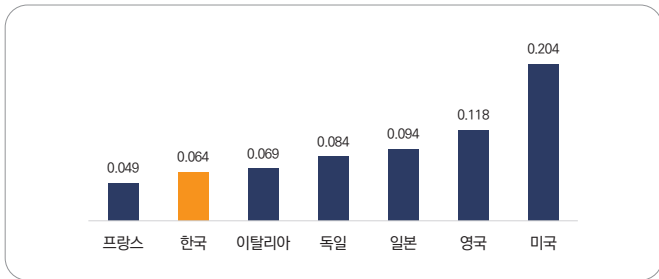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성불평등지수	0.111	0.153	0.101	0.125	0.067	0.063	0.058	0.064
세계순위	11	27	17	23	10	10	10	11
대상 국가수	146	148	152	155	188	189	189	189

자료 : UNDP(각년도). "Human Development Report".

○ 주요 특징 및 해설

- 성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크게 낮아져 2020년 기준으로 대상 국가 중 11위를 기록
- 노동참여 영역에서 불평등은 감소했으나, 생식건강 영역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여성권한 영역은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

○ 주요국의 성불평등지수(2020년 기준, 단위 : 점)



구분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성불평등지수		0.049	0.064	0.069	0.084	0.094	0.118	0.204
세계순위		8	11	14	20	24	31	46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8.0	11.0	2.0	7.0	5.0	7.0	19.0
	청소년 출산율(%)	4.7	1.4	5.2	8.1	3.8	13.4	19.9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36.9	16.7	35.3	31.6	14.5	28.9	23.7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인구 비율(%)	81.7	80.4	75.9	95.9	95.3	78.0	96.1
	중등교육 이상 받은 남성인구 비율(%)	86.8	95.5	83.4	96.3	92.3	79.3	96.0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0.8	52.9	40.8	55.3	52.7	57.6	56.1
노동참여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59.9	73.1	59.0	66.6	71.3	68.1	68.2

자료 :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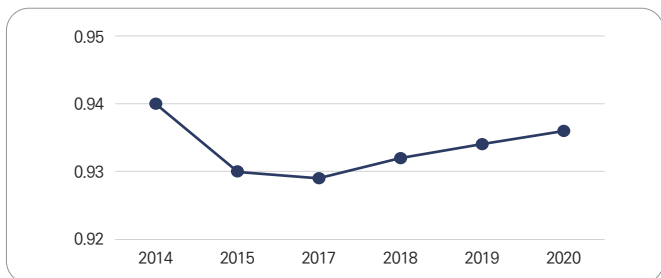
-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점수는 0.064로 OECD 국가 중 11위에 해당되며, 아시아 국가중에는 싱가포르(0.065), 일본(0.094), 중국(0.168) 등에 비해 성불평등이 낮음
- 성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0.025)이며, 다음으로 덴마크(0.038), 스웨덴(0.039) 등의 유럽국가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생식건강부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여성권한, 노동참여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

6-3-4 성개발지수(GDI)

○ 정의

- 건강한 삶, 교육, 적절한 표준 삶 영역의 지표들로 산정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성별격차(남성 대비 여성 비율)를 측정하는 지수로, 1보다 작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

○ 한국 성개발지수(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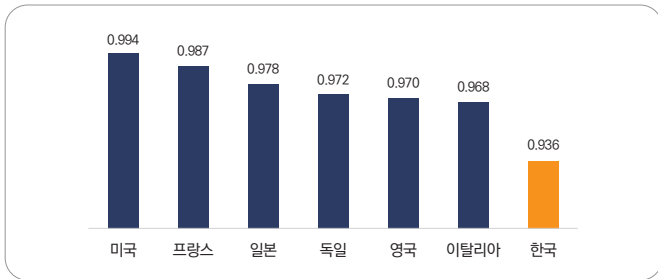
구분	GDI	HDI 점수		출생시 기대여명(세)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1인당 GNI(달러)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0	0.936	0.881	0.941	86.0	79.9	15.9	17.0	11.4	12.9	27,734	58,309
2019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2018	0.932	0.866	0.929	85.3	79.2	11.4	12.9	15.9	17.1	22,572	49,297
2017	0.929	0.866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2015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4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자료 : UNDP(각년도). "Human Development Report".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인간개발지수는 남성 0.941, 여성 0.88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 HDI의 성별격차인 GDI는 0.93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HDI가 낮게 나타나며, 2019년과 비교해서는 0.002점 높아짐

○ 주요국의 성개발지수(2020년 기준)



구분	GDI	HDI 점수		출생시 기대여명(세)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1인당 GNI(달러)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미국	0.994	0.922	0.928	81.4	76.3	16.9	15.7	13.5	13.4	50,590	77,338
프랑스	0.987	0.895	0.907	85.5	79.7	16.0	15.3	11.3	11.7	39,478	55,375
일본	0.978	0.906	0.927	87.7	81.5	15.2	15.3	13.1	12.6	30,584	55,869
독일	0.972	0.933	0.960	83.7	78.9	16.9	17.0	13.9	14.4	45,277	65,599
영국	0.970	0.916	0.944	83.0	79.6	18.0	17.0	13.2	13.2	33,323	59,135
이탈리아	0.968	0.875	0.905	85.5	81.3	16.4	15.8	10.2	10.6	31,639	54,529
한국	0.936	0.881	0.941	86.0	79.9	15.9	17.0	11.4	12.9	27,734	58,309

자료 :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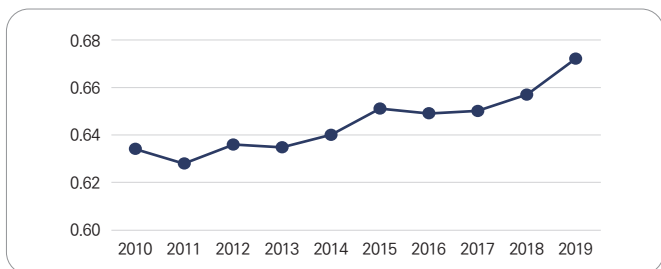
- 한국의 GDI는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은 남녀의 차이가 커서 GDI 순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침
- 남성의 HDI 점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지만, 여성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GDI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3-5 성격차지수(GGI)

○ 정의

-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한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이 커짐을 의미

○ 한국 성격차지수(단위 : 점)



주: GGI는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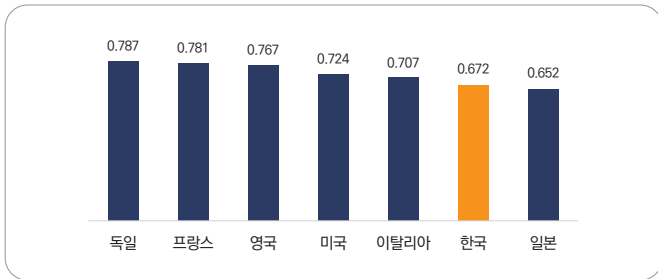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격차지수	0.634	0.628	0.636	0.635	0.640	0.651	0.649	0.650	0.657	0.672
경제참여 및 기회	0.520	0.493	0.509	0.504	0.512	0.557	0.537	0.533	0.549	0.555
교육적 성취	0.947	0.948	0.959	0.959	0.965	0.965	0.964	0.960	0.973	0.973
건강과 생존	0.973	0.974	0.973	0.973	0.973	0.973	0.973	0.973	0.973	0.980
정치적 권한	0.097	0.097	0.102	0.105	0.112	0.107	0.120	0.134	0.134	0.179

자료 : WEF(각년도), "Global Gender Gap Report".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10년 0.634점에서 2019년 0.672점으로 상승하여 성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적 성취' 영역은 변화가 없고, '건강과 생존' 및 '경제참여 및 기회'는 소폭 상승, '정치적 권한'은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정치적 권한' 영역의 변화는 '장관비율 성비'의 개선으로 인한 상승이 주된 원인

○ 주요국의 성격차지수(2019년 기준, 단위 : 점)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
성격차지수	0.787	0.781	0.767	0.724	0.707	0.672	0.652
순위	10	15	21	53	76	108	121

자료 : WEF(각년도). "Global Gender Gap Report".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GGI 점수는 0.672점, 순위는 153개국 중 108위로 낮은 편에 해당
- 경제참여 및 기회는 127위, 교육적 성취 101위로 하위권이며, 정치적 권한은 79위로 중위권, 건강과 생존은 1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성격차지수 순위가 다른 지수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정치와 경제 참여 부분이 지수 산출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임
- 성격차지수의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이며, 다음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
- 성격차지수는 격차를 비교하는 데 특화돼 있지만 여성인권의 절대적 수준(level)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위치 차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는 특징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증대

-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 비율은 자녀 양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맞벌이가구 비율의 증감은 자녀양육과 경력단절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음
- 가사노동참여에의 불평등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성평등 보장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서 부부, 기업, 국가의 다차원적인 역할 중요
-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이 조화를 이룰 때, 일가정 양립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음

○ 남성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 및 보장 필요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2015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 사용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8.7%로 편중되어 있어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지만 근로환경이나 기업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문화 및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 함

○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과 정책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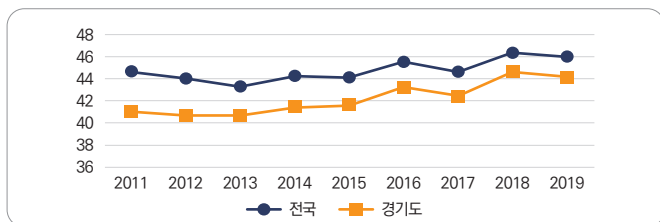
-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 필요
-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6-4-1 맞벌이 가구 비율

○ 정의

- 유배우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의 비율

○ 전국 및 경기도 맞벌이 가구 비율(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유배우 가구(천가구)	11,761	11,822	11,940	12,049	12,139	12,190	12,224	12,245	12,305
전국 맞벌이 가구(천가구)	5,241	5,201	5,175	5,331	5,358	5,545	5,456	5,675	5,662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4.6	44.0	43.3	44.2	44.1	45.5	44.6	46.3	46.0
경기 맞벌이 가구 비율(%)	41.0	40.7	40.7	41.4	41.6	43.2	42.4	44.6	44.1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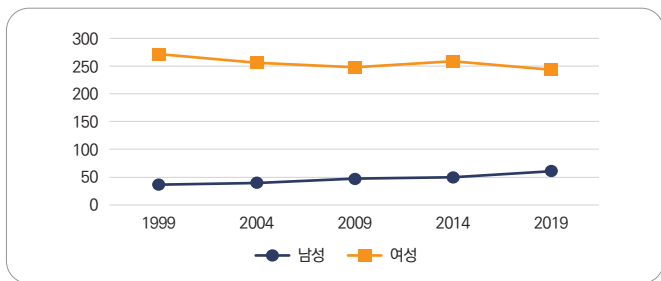
- 2019년 맞벌이가구는 566.2만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46.0%를 차지하며, 2018년보다 0.3%p 감소
-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임
-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5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64세, 30~39세의 순임
-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는 2019년 138만 가구, 유배우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1%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6-4-2 가사노동시간

○ 정의

- 19세 이상 기혼 남녀가 1일 평균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

○ 전국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단위 : 분)



주 : 2014년 이전까지는 20세 이상 기혼 남녀 대상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총시간	160	36	271	156	40	256	154	47	248	152	50	259	150	60	244
가정관리	125	25	214	119	27	199	118	33	193	115	34	199	115	43	190
가족돌봄	35	11	57	37	13	57	36	14	55	37	16	60	35	17	5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생활시간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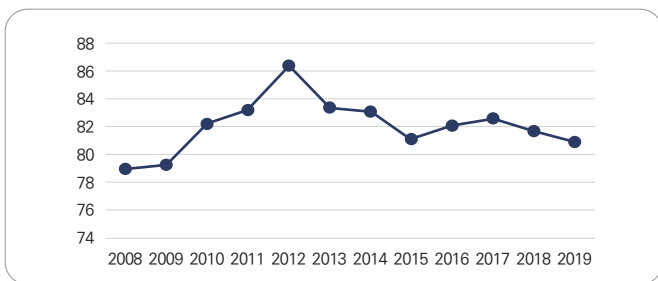
- 2019년 기혼 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60분, 여자는 244분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의 4배에 해당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
- 전체 가사노동에서 음식준비, 세탁, 청소, 쇼핑, 가정 경영 등의 가정관리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족돌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자는 1999년(271분)에 비해 27분 줄어들었으며, 남자는 24분 증가함
- 배우자가 있는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244분으로 미혼(64분), 사별 및 이혼(159분)에 비해 높은 편임

6-4-3 어린이집 이용률

정의

-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2.2	83.2	86.4	83.4	83.1	81.1	82.1	82.6	81.7	80.9
국공립	89.5	90.8	91.8	90.8	88.5	87.9	89.1	89.1	87.1	86.1
사회복지법인	79.3	79.4	80.3	77.9	76.3	73.5	73.9	73.4	72.0	70.0
법인·단체등	81.5	82.1	83.0	82.3	80.0	77.4	77.5	76.8	75.2	74.5
민간	81.1	82.0	84.9	82.1	81.9	79.4	80.4	80.6	80.2	79.7
가정	83.3	84.9	90.9	86.0	87.1	86.1	87.6	89.2	87.9	85.9
부모협동	85.3	83.9	83.5	81.2	80.6	84.0	83.9	81.9	80.0	77.8
직장	77.3	76.8	77.8	77.0	76.0	75.6	75.1	76.1	76.9	77.3

자료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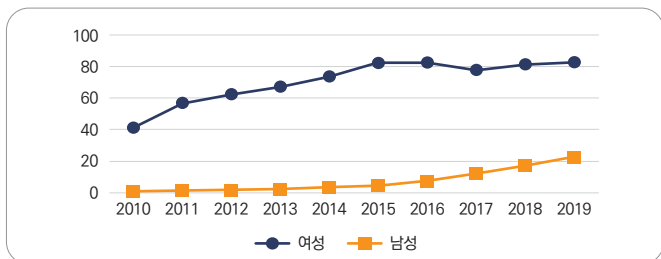
- 2019년 어린이집 이용률은 80.9%로 정원 168만 명 대비 136만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8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85.9%, 민간어린이집 79.7%의 순서임
- 경기도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83.8%로 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종류별로는 가정어린이집 88.1%, 국공립어린이집 87.8%의 순임

6-4-4 출산·육아휴직

○ 정의

-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 전국 성별 육아휴직자 수(단위: 천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산전후 휴가자 수	75.7	90.3	93.4	90.5	88.8	94.6	89.8	81.1	76.4	73.3
육아휴직자 수	41.7	58.1	64.1	69.6	76.8	87.3	89.8	90.1	99.2	105.2
여성근로자	40.9	56.7	62.3	67.3	73.4	82.5	82.2	78.1	81.5	82.9
남성근로자	0.8	1.4	1.8	2.3	3.4	4.9	7.6	12.0	17.7	22.3

자료 : 고용노동부(각년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육아휴직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 여성 82,868명, 남성 22,297명으로 집계
- 2010년에 비해 여성은 약 2배, 남성은 약 27.2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며, 최근 들어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2.0%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로 가파르게 증가
- 출산전후 휴가자수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94,59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73,306명으로 집계

○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 필요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경제구조문제,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지속 거주 문제,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교육 및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2019년 221.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를 차지
- 국제결혼은 인구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200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
- 2019년 전체 혼인은 23.9만 건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7.2%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4.0% 증가
-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 외국인 증가와 다양화는 불법체류자나 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체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현재 불법체류자는 39만 명으로 전체 대비 15.5%임
- 불법체류자 수와 불법체류율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와 비율이 더 늘어날 전망
- 다문화, 국제이동과 관련하여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난민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정자는 매우 낮은 수준
-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등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높이기 위한 태도와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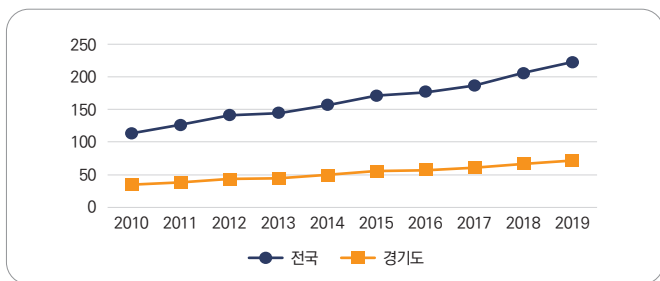
-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진 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높아짐
-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

6-5-1 외국인 주민수

○ 정의

- 국적 취득여부 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

○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 주민수(단위 : 만 명)



주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등이 포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외국인 주민수(만 명)	171.1	176.5	186.1	205.5	221.7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만 명)	136.4	141.4	147.9	165.2	177.9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만 명)	15.0	15.9	17.0	17.7	18.6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만 명)	19.8	19.1	21.2	22.6	25.2
외국인 비율(%)	3.4	3.4	3.6	4.0	4.3
경기도 외국인 주민수(만 명)	55.0	57.1	60.4	67.3	72.0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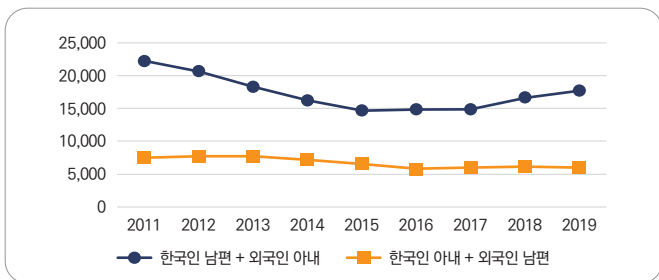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221.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를 차지함
- 외국인 주민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80.3%)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11.4%), 한국국적 취득자(8.4%) 등의 순서임
- 외국인 주민수가 가장 많은 도시인 경기도에는 2019년 72만 명이 거주하며 전체 외국인 주민 중 32.5%를 차지

6-5-2 국제결혼

○ 정의

- 국적이 다른 사람 간의 혼인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 국제결혼 건수(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인남편 +외국인아내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17,687
한국인아내 +외국인남편	7,497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6,090	5,95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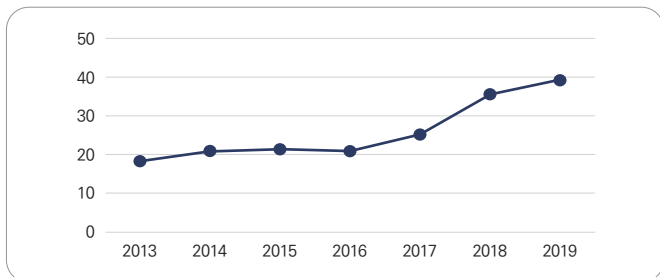
- 외국인과의 혼인 중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의 결혼에 약 3배 높게 나타남
-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건수는 2005년 3만 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반등하여 2019년 기준 17,687건(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 7.4%)으로 집계됨
-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순이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베트남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4,808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1,751건임

6-5-3 불법체류자

○ 정의

- 체류외국인 중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전국 불법체류자 수(단위 : 만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불법체류자(만명)	18.3	20.9	21.4	20.9	25.1	35.5	39.0
총 체류자(만명)	157.6	179.8	190.0	204.9	218.0	236.8	252.5
불체율(%)	11.6	11.6	11.3	10.2	11.5	15.0	15.5

자료 : 법무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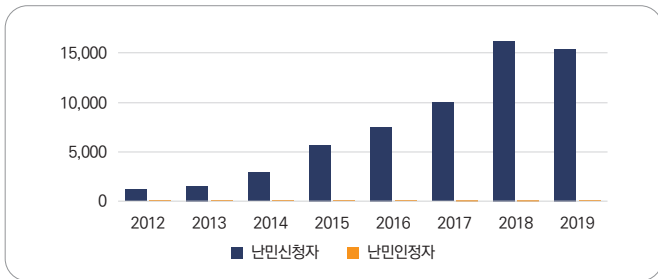
-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2013년 18.3만 명에서 2019년 현재 3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15.5%를 차지하며, 특히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불법체류자 출신 국가별로는 태국이 39.1%로 가장 많고, 중국 18.1%, 베트남 15.0% 등의 순임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불법체류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6-5-4 난민 신청자·인정자

○ 정의

-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1호)을 의미

○ 전국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난민 신청자	1,143	1,574	2,896	5,711	7,542	9,942	16,173	15,451
난민 인정자	60	57	94	105	98	121	144	79

자료 : 법무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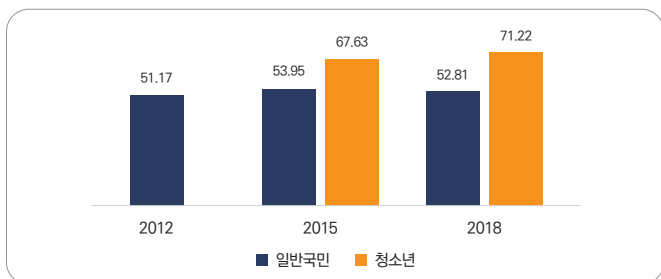
- 2019년 난민 신청은 15,451건으로 2018년 16,173건에 비해 약간 낮아진 수치임
- 난민신청 사유별로 보면, 기타 사유(45.5%) 신청이 가장 많고, 난민협약 상 5대 박해 사유는 종교(24.5%), 정치적 의견(12.5%),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9.5%), 인종(4.9%), 국적(0.8%) 순으로 나타남
- 난민 인정자는 2019년 79건으로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난민 인정자의 국적은 미얀마가 가장 많고,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의 순임

6-5-5 다문화 수용성

○ 정의

- 다문화수용성은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공존)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

○ 전국 다문화수용성 점수(단위 : 점)



주 : 2012년 청소년조사는 미 실시
 자료 : 여성가족부(각년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2018년 52.81점으로 2015년에 비해 1.14점 낮아진 반면, 청소년은 2015년 67.63점에서 2018년 71.22점으로 3.59점 높아짐
- 이에 따라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점수의 차이는 2015년 13.68점에서 2018년 18.41점으로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 연령별로 20대 55.61점, 30대 55.07점, 40대 53.74점, 50대 51.49점, 60세 이상 48.20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
- 다문화교육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다문화수용성 증진이 요구됨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7장

•

사회복지

7-1 소득분배

7-2 빈곤

7-3 사회안전망

7-4 건강수준

7-5 보건의료

7-6 장애인 포용

7-7 사회적 유대

○ 한국에서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은 소폭 완화

-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418로 가장 높았다가 2015년 0.396까지 낮아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9년 0.339로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한국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낮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기 때문임

○ 한국은 OECD 주요국 대비 불평등이 심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이 크지 않음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니계수 격차는 커지고 있음
- 10분위소득은 1분위소득의 16.04배(2011년)에서 10.71배(2019년)로 감소하고 5분위소득은 1분위소득의 8.32배(2011년)에서 6.25배(2019년)로 감소해 소득불평등은 완화하는 추세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정분배 정책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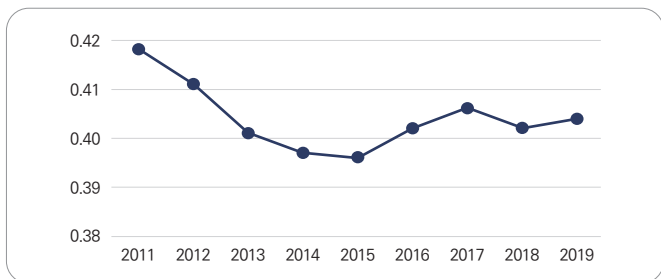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재분배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황
- 재분배 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시장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의 고용 및 사회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함

7-1-1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 정의

-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가구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을 의미하고,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 한국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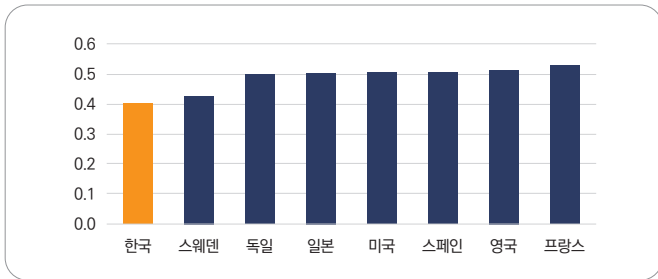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0.402	0.404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0.42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1년 0.418로 가장 높았다가 2015년 0.396까지 낮아진 이후 다시 상승세
- 2017년 0.406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고 2010년대 후반에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2010년대 중반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약간 심화됨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입되기 이전 1차소득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2018년 기준)



주 : 독일, 미국은 2017년, 일본 2015년 자료임

구분	한국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0.402	0.428	0.500	0.504	0.505	0.506	0.513	0.529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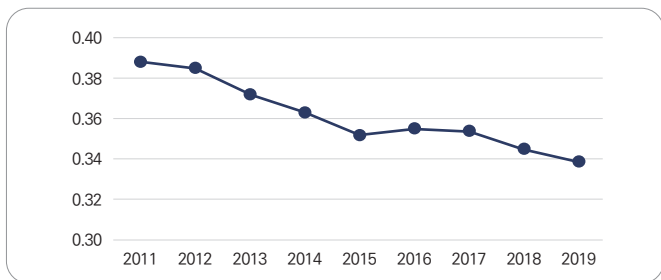
- 2018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402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년도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낮았음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OECD 회원국은 아이슬란드(2017년 기준 0.369), 스위스(2017년 기준 0.386), 슬로바키아(2018년 기준 0.387) 순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가 0.5 이상인 국가는 프랑스(0.529), 영국(0.513), 스페인(0.506), 미국(0.505), 일본(0.504), 독일(0.500) 등임

7-1-2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 정의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공적 이전지출(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의미하고,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 한국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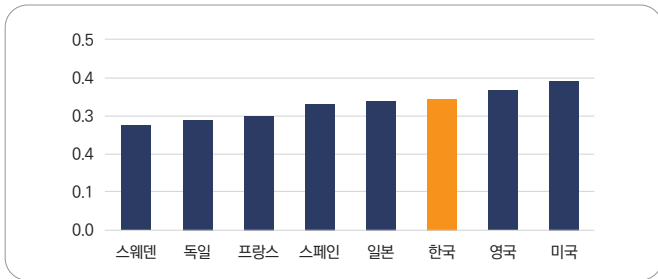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0.339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된 모습을 보임
- 2011년 0.388이었던 지니계수는 2019년 0.339까지 하락
- 한국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이 지니계수를 크게 낮추지는 못하는 실정임

○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2018년 기준)



주 : 독일, 미국은 2017년, 일본 2015년 자료임

구분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한국	영국	미국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0.28	0.289	0.301	0.33	0.339	0.345	0.366	0.39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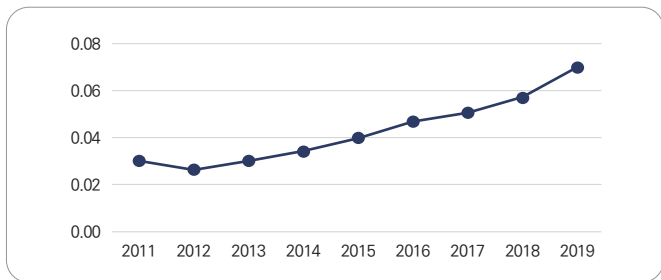
-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45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대조적인 양상
- 최근 년도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 (2018년 기준 0.345)이 27위를 차지
-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볼 때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미국(0.39), 영국(0.366), 한국(0.345)이며,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는 독일 (0.289)와 스웨덴(0.275)임

7-1-3 지니계수 격차

○ 정의

- 지니계수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간 차이를 의미하고, 격차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

○ 한국 지니계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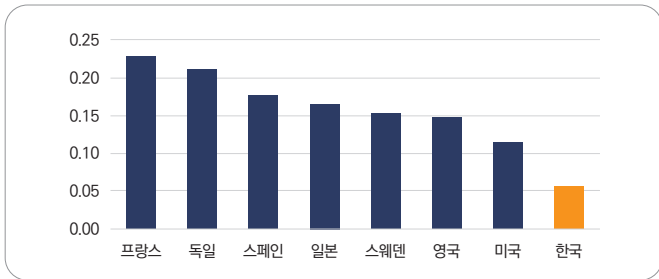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니계수 격차	0.03	0.026	0.03	0.034	0.04	0.047	0.05	0.057	0.07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에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격차는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
- 2012년 지니계수 격차는 0.026에서 2019년 0.07까지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다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요국의 지니계수 격차(2018년 기준)



주 : 독일, 미국은 2017년, 일본은 2015년 자료임

구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지니계수 격차	0.228	0.211	0.176	0.165	0.153	0.147	0.115	0.057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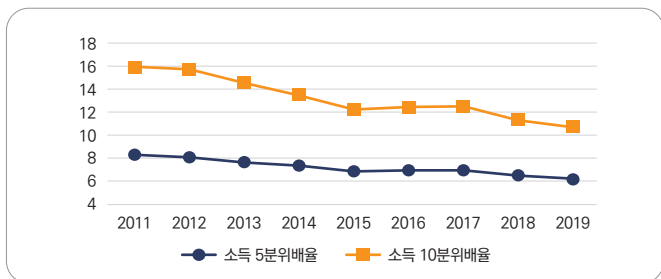
- 한국에서 지니계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OECD 주요국에 비해 격차폭이 상당히 적고, 특히 프랑스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함
- 최근 년도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 격차는 한국(2018년 기준 0.057)이 33위를 차지
- 지니계수 격차가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은 핀란드(2018년 기준 0.240), 아일랜드(2017년 기준 0.240), 벨기에(2018년 기준 0.232) 순임
- 프랑스(0.228)와 독일(0.211)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높은 편이지만 공적 이전소득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낮추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지만 지니계수 격차가 가장 작아 소득재분배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스웨덴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가장 낮아 소득보장 정책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음

7-1-4 소득 5분위배율 및 소득 10분위배율

○ 정의

- 소득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소득 10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

○ 한국 소득 5분위배율 및 10분위배율(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처분 소득	5분위 배율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6.25
	10분 위배율	16.04	15.75	14.60	13.51	12.27	12.47	12.54	11.36	10.71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에서 소득 5분위배율과 소득 10분위배율은 모두 하락세를 보여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분위소득은 1분위소득의 16.04배(2011년)에서 10.71배(2019년)로 감소했고, 5분위소득은 1분위소득의 8.32배(2011년)에서 6.25배(2019년)로 감소

○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연령별 빈곤율은 편차가 크고 특히 노인빈곤이 매우 심각한 실정

-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16.3%로 가장 낮아졌으나, 하락폭은 2.3%p로 급격한 빈곤 감소를 실현하지는 못함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고, 특히 76세 이상 빈곤율은 55% 수준으로 개선의 추이가 없음
-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미국보다는 낮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준

○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9년 기준 12.2%로 OECD 평균 수준 20.0%에 비해 매우 낮음
-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대비 5%p 정도 높고 서울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노인빈곤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득보장 정책과 탈빈곤 정책을 병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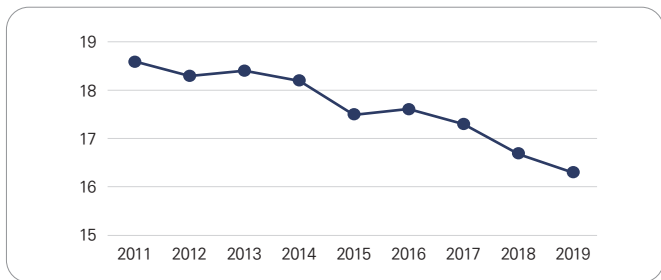
-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9년 전국 대비 17.4% 수준으로 맞춤형 제도로 개편되면서 수급자수가 증가
- 아직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낮추기에 역부족
이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기초보장선을 설정
- 기초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병행한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도입 필요

7-2-1 상대빈곤율

○ 정의

-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균등화(가구원수로 조정) 처분가능소득의 중위 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전국 상대빈곤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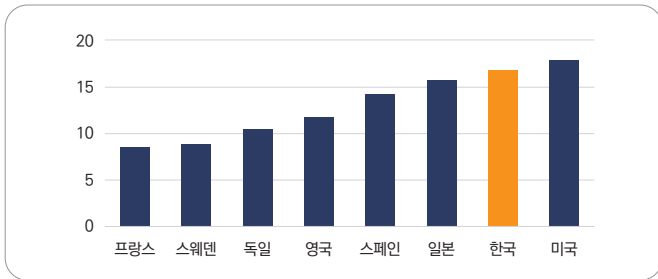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대빈곤율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2011년 18.6%에서 2015년 17.5%로 낮아진 후 2019년에는 가장 낮은 16.3%를 기록

○ 주요국의 상대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



주 : 독일, 미국 2017년, 일본 2015년 자료임

구분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	미국
상대빈곤율	8.5	8.9	10.4	11.7	14.2	15.7	16.7	17.8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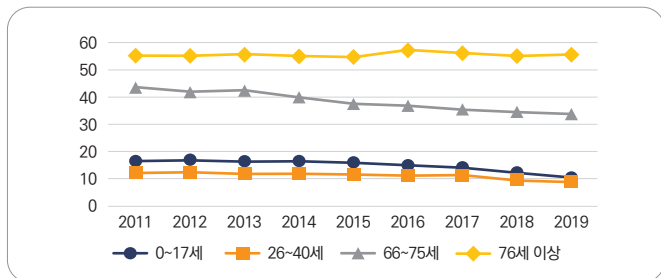
- OECD 주요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8~18%로 큰 편차를 보임
- 최근 년도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상대빈곤율은 한국(2018년 기준 16.7%)이 32위를 차지해 높은 수준
-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OECD 회원국은 아이슬란드(2017년 기준 4.9%), 덴마크(2017년 기준 6.1%), 체코(2018년 기준 6.1%) 순이며, 프랑스와 스웨덴도 상대빈곤율이 8%대로 낮게 나타남
- 미국, 한국, 일본, 스페인은 13% 이상으로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 속함

7-2-2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 정의

- 각 연령별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해당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전국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17세	16.4	16.8	16.4	16.5	16.0	15.2	14.2	12.3	10.6
18~25세	13.0	13.1	12.9	13.2	11.1	11.9	11.3	11.3	10.0
26~40세	12.2	12.4	11.9	12.0	11.7	11.2	11.3	9.6	8.9
41~50세	14.5	14.9	14.6	13.9	12.8	13.1	12.0	11.6	10.5
51~65세	16.3	15.2	15.6	15.6	15.2	14.7	14.7	13.7	13.6
66~75세	43.5	42.0	42.5	40.0	37.5	36.8	35.6	34.6	33.7
76세 이상	55.3	55.1	55.7	55.1	54.5	57.1	56.2	55.1	55.6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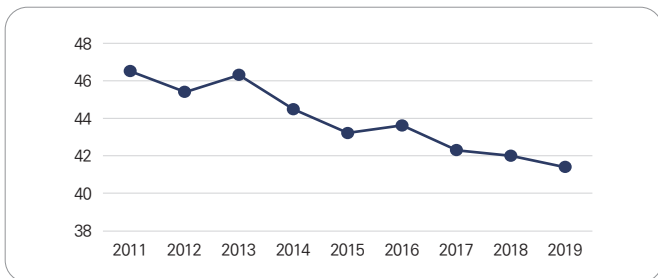
-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은 20% 미만에서 유사한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음
- 특히 76세 이상 빈곤율은 55% 이상을 유지하면서 개선의 추이가 나타나지 않음

7-2-3 노인빈곤율

○ 정의

-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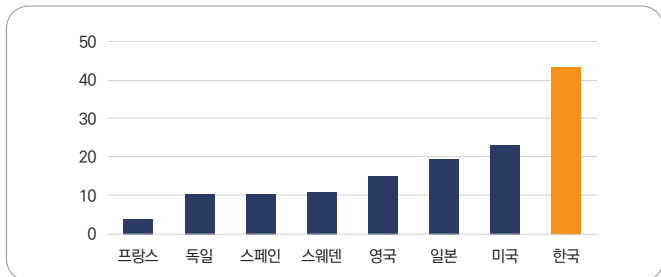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인구 상대적 빈곤율	46.5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노인빈곤율도 전체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매우 높음
-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9년 41.4%까지 감소했으나 전체 인구 빈곤율 16%의 2.5배가 넘는 수준

○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상대빈곤율(2018년 기준, 단위 : %)



주 : 독일, 미국 2017년, 일본 2015년 자료임

구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일본	미국	한국
65세 이상 인구 상대적 빈곤율	4.1	10.2	10.2	10.9	14.9	19.6	23.1	43.4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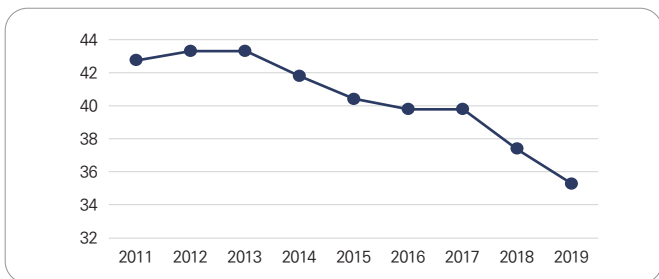
- 최근 년도 기준 36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은 한국(2018년 기준 43.4%)이 36위를 차지해 최하위를 기록
-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OECD 회원국은 덴마크(2017년 기준 3.0%), 아이슬란드(2017년 기준 3.1%), 네덜란드(2016년 기준 3.1%) 순으로 나타남
-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연금제도가 오랜 시간 발전해왔기 때문에 전체 연령 대비 노인의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경우도 연금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한국의 국민연금만 그 역사가 30년 정도에 불과하여 2007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임

7-2-4 노인빈곤갭

○ 정의

- 평균빈곤갭은 빈곤인구(소득수준이 빈곤선보다 적은 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으로,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과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평균빈곤갭(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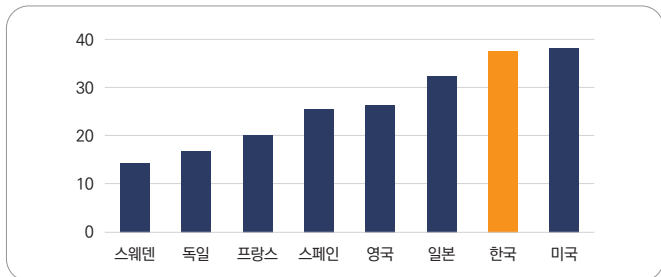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인구 평균 빈곤갭	42.8	43.3	43.3	41.8	40.4	39.8	39.8	37.4	35.3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평균빈곤갭은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빈곤갭은 35.3%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노인인구의 빈곤갭은 2013년(43.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에서 하락폭이 커짐

○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평균빈곤갭(2018년, 단위 : %)



주1 : 독일, 미국 2017년, 일본 2015년 자료임

주2 : 한국의 경우 OECD 기준과 국내통계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함

구분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한국	미국
65세 이상 인구 평균 빈곤갭	14.4	17.0	20.2	25.7	26.4	32.4	37.6	38.2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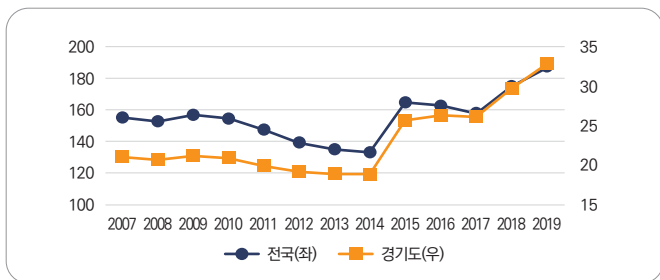
-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빈곤갭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선과 하위소득 노인계층의 평균소득 갭은 줄어들고 있음
-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빈곤갭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노인빈곤갭이 가장 낮은 스웨덴은 14.4%로, 가난한 노인들이 상대적빈곤선을 넘으려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의 14.4% 정도가 추가로 필요함을 의미함

7-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수를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단위 : 만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46.9	139.4	135.1	132.9	164.6	163.1	158.2	174.4	188.1
경기도	19.9	19.2	18.9	18.9	25.8	26.4	26.1	29.7	32.9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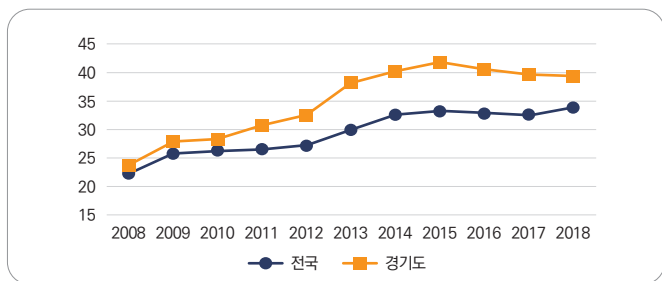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도 도입 이후 133만 명~155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188만 명 수준
- 20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맞춤형 제도로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각각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경기도의 수급자수는 2019년 전국 대비 17.4% 수준

7-2-6 공공사회복지지출(GDP 대비)

○ 정의

-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GDP 대비 수준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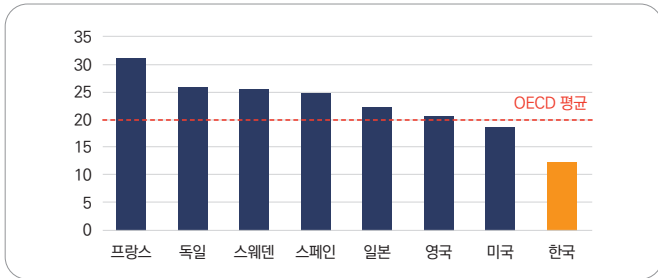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22.3	25.8	26.3	26.6	27.4	30.1	32.6	33.3	33.0	32.7	34.0
서울	20.3	23.9	25.3	25.9	27.8	32.8	35.3	34.0	33.9	33.3	34.9
경기도	24.6	27.4	28.5	31.2	33.8	38.6	40.2	42.0	40.6	39.8	39.6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과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은 2018년 34.0%, 경기도는 39.6%로 10년 전 대비 12~15%p 증가
-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대비 5%p 정도 높고 서울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OECD 평균인 2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빠르게 발전시켜 온 서구 유럽 국가들이 주로 해당함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세부적으로 가족, 노인, 장애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는 관대한 연금제도로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편임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큼

- 건강보험은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 과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종에 따른 별도 제도를 운영하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배제되는 인구는 거의 없음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률이 크게 차이남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존재함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409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781만 명 중 52.3%가 노령연금을 수급함
-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은 3%, 연금급여 수준은 70%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불균형을 야기함
- 2008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년당 0.5%p씩 낮아지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4.5%, 보험료율은 9%임

○ 현재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과 노후 소득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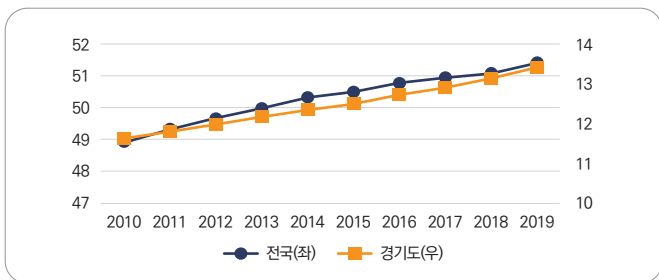
- 고용계약관계가 모호한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설계한 전통적 사회보험은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양산함
- 임금노동자 중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30%를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동시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존 사회보험에 포괄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
-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 확대는 미래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임

7-3-1 건강보험 적용인구

○ 정의

-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포괄하는 구분한 건강보험 적용인구임

○ 전국 및 경기도 건강보험적용인구(단위 : 백만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8.9	49.3	49.7	50.0	50.3	50.5	50.8	50.9	51.1	51.4
경기도	11.6	11.8	12.0	12.2	12.3	12.5	12.7	12.9	13.1	13.4
서울	10.1	10.0	10.0	10.0	9.9	9.9	9.8	9.7	9.7	9.7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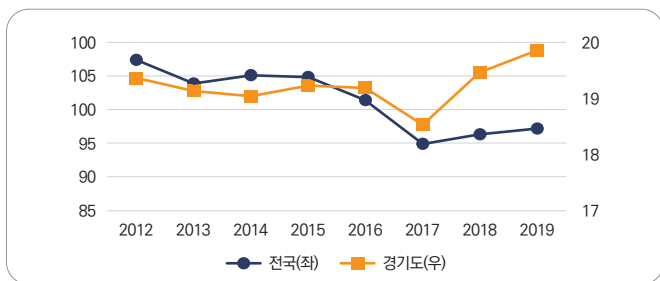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꾸준히 증가는 추세이며, 전국은 5,139만 명, 경기도는 1,341만 명이며 서울은 968만 명 수준
- 건강보험은 국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보편성을 높게 달성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95% 이상의 적용률을 유지하고 있음
- 과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종에 따른 별도 제도를 운영하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배제되는 인구는 거의 없음

7-3-2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

○ 정의

-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인원수를 의미함

○ 전국 및 경기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단위 : 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07.4	103.9	105.2	104.9	101.5	95.0	96.3	97.2
경기도	19.4	19.2	19.0	19.2	19.2	18.5	19.5	19.9
서울	43.3	40.6	40.0	40.3	39.2	36.4	35.3	32.6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는 2012년 107만 명에서 2017년 95만 명으로 감소한 후 2019년 9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는 2012년 19만 3천 명에서 2017년 18만 5천 명으로 감소한 후 2019년 19만 9천 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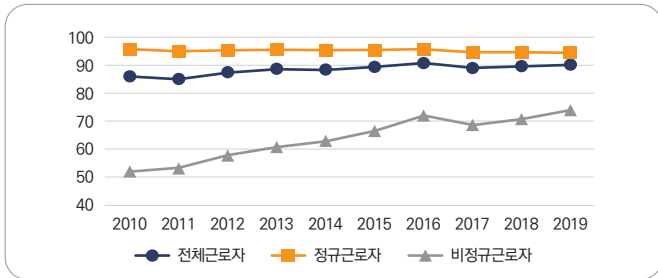
7-3-3 고용보험 가입률

○ 정의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의미

※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 전국 고용보험 가입률(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86.0	85.1	87.5	88.6	88.5	89.3	90.7	89.1	89.6	90.3
정규직	95.7	94.9	95.4	95.6	95.4	95.4	95.7	94.7	94.6	94.4
비정규직	52.1	53.5	57.8	60.9	63.0	66.7	72.1	68.7	70.8	74.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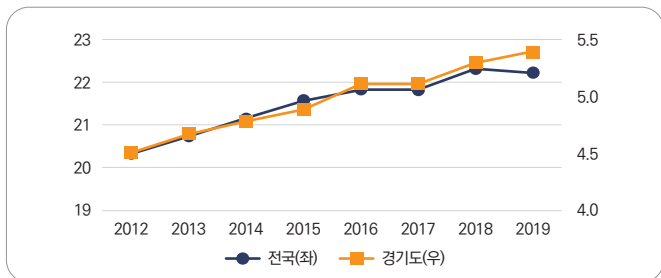
-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2011년 85.1%에서 2019년 90.3%로 상승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이 지난 10여 년간 20%p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규직보다 20%p 낮아 비정규직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7-3-4 국민연금 가입자수

○ 정의

-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원수를 의미하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 전국 및 경기도 국민연금 가입자수(단위 : 백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20.3	20.7	21.1	21.6	21.8	21.8	22.3	22.2
경기도	4.5	4.7	4.8	4.9	5.1	5.1	5.3	5.4
서울	5.8	5.9	5.9	5.9	6.0	6.0	6.1	6.0

자료 : 국민연금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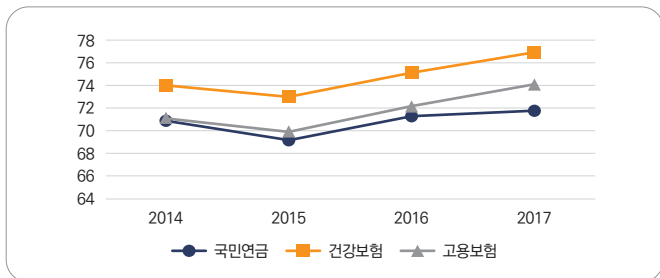
-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기준 전국 기준 2,221만 명이 가입하였고 경기도는 537만 명이 가입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보험에 비해 적용인구가 적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가 큰 문제가 존재함

7-3-5 임금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

○ 정의

-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

○ 경기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전국	69.1	72.1	68.9	68.9	72.0	69.2	70.3	73.6	71.1	69.6	74.8	71.9
경기도	70.9	74.0	71.1	69.2	73.0	69.9	71.3	75.1	72.2	71.8	76.9	74.1
서울	68.2	71.2	67.7	66.9	69.6	67.0	70.8	74.2	71.8	68.8	74.8	71.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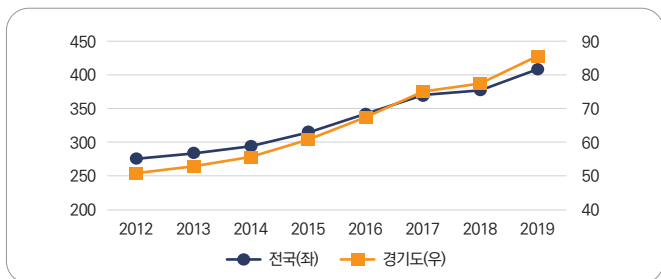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소폭 상승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은 건강보험으로 임금 근로자의 70%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경기도의 가입률은 0.3%p 정도 낮음
- 고용보험은 2017년 전국 임금근로자의 71.9%가 가입하여 2014년 68.9% 대비 3%p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임금근로자의 71.6%가 가입하여 2014년 67.7% 대비 4.0%p 상승함
- 국민연금 가입률도 약간 상승했으나 2017년 기준 69.6%로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경기도 임금근로자의 경우 68.8%가 국민연금에 가입함

7-3-6 노령연금 수급자수

○ 정의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전국 및 경기도 노령연금 수급자수(단위 : 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274.8	284.1	294.7	315.1	341.2	370.7	377.9	409.0
경기도	50.8	53.1	55.7	60.8	67.5	75.0	77.5	85.6
서울	52.3	53.7	55.5	58.9	63.1	68.0	68.3	73.5

자료 : 국민연금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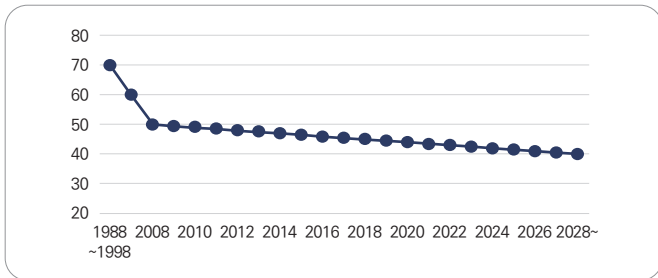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과 함께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409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781만 명 중 52.3%가 노령연금을 수급함
- 경기도의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85만 명으로 경기도 노인 인구 162만 명 중 52.4%가 노령연금을 수급함

7-3-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정의

-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소득대체율을 의미하고,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임

○ 전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단위 : %)



주 : 2020년 이후는 추정치

구분	1988 ~1998	1999 ~2007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5	2028 이후
대체율	70.0	60.0	50.0	49.0	48.0	47.0	46.0	45.0	44.0	41.5	4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주요 특징 및 해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도입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로, 1999~2007년 60.0%에서 2020년 44.0%로 하락하고 2028년 이후 40.0%로 예측됨
-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은 3%, 연금급여 수준은 70%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월소득의 3%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 월평균소득의 70%를 월 연금급여로 받는 구조)
- 2008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에서 2028년 40%가 되도록 1년당 0.5%p씩 낮아지도록 재설계됨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지표는 OECD 국가 중 상위 그룹에 속하여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양호함

- 특정 국가의 출생인구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인 기대여명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80.7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OECD 회원국 중 상위 10위에 위치
- 각 국가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수준을 포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은 635.9명으로 OECD 24개 회원국 중 상위 3위로 우수한 수준임

○ 경기도의 건강수준 지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하여 전국 대비 우수함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기대여명은 84.4세로 전국 평균 83.3세 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85.4세에 이어 2위 수준임
-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울산(82.7세) 간 기대여명 격차는 2.4세로 나타남
-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은 경기도가 292.6명으로 전국 평균 305.4명 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263.6명에 이어 3위 수준임

○ 경기도 전체의 건강수준은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이지만, 경기도 내 시군 간의 격차는 매우 커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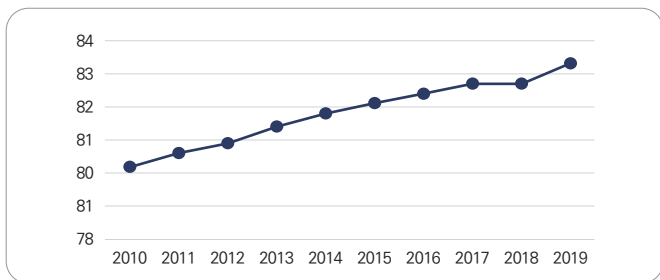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대여명을 비교해보면, 용인시 수지구의 기대여명이 87.2세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81.5세로 가장 낮아, 최상위 및 최하위 시군의 기대여명 격차가 5.7세에 달함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과천시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224.3명으로 가장 낮고 동두천시가 404.7명으로 가장 높아, 사망률 격차가 180.4명에 달함
- 경기도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7-4-1 기대여명

○ 정의

-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특히 0세인 출생인구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함(각 나라의 건강수준 및 의료수준을 포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

○ 전국 기대여명(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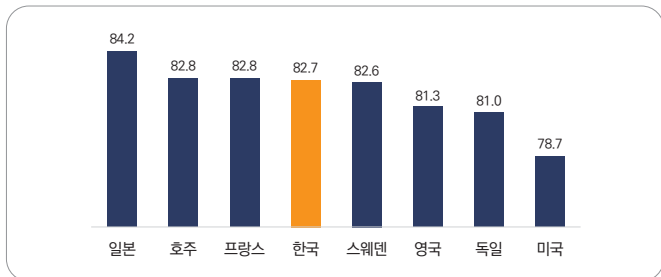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대여명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기대여명은 2010년 80.2세에서 2019년 83.3세로 높아지는 추세임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기대여명은 84.4세로 전국(83.3세) 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85.4세에 이어 상위 2위 수준임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대여명을 비교해보면, 용인시 수지구의 기대여명이 87.2세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81.5세로 가장 낮아 격차는 5.7세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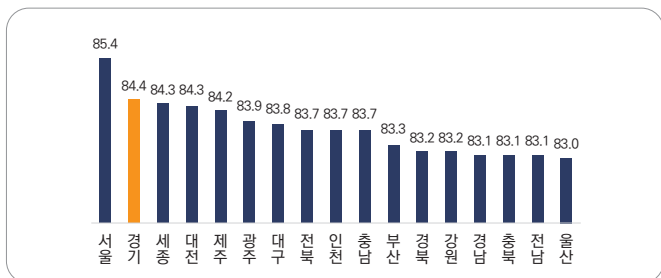
○ 주요국의 기대여명(2018년 기준, 단위: 세)



주: 일본은 2017년 자료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 시도별 기대여명(2019년 기준, 단위: 세)



자료: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https://www.ggpi.or.kr>).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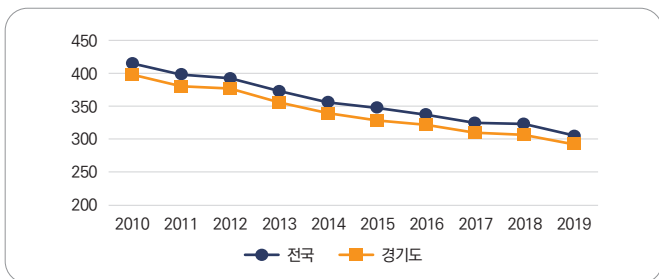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OECD 회원국 평균 80.7세보다 높은 수준임(OECD 국가 중 상위 10위)
- 주요 국가 중 한국보다 기대여명이 높은 나라는 일본(84.2세), 호주(82.8세), 프랑스(82.8세) 등이 있음

7-4-2 사망률

○ 정의

- 특정 인구에 대한 일정 기간의 사망자수 비율로서, 지역사회 전반적 건강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이자 인구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 전국 및 경기도 연령표준화 사망률(단위 : 명/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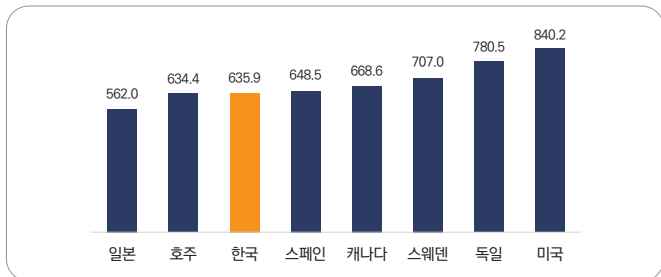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14.3	398.4	392.2	372.0	355.7	347.6	337.2	324.3	322.6	305.4
경기도	398.0	380.5	376.7	356.3	339.5	328.7	321.8	310.1	306.8	292.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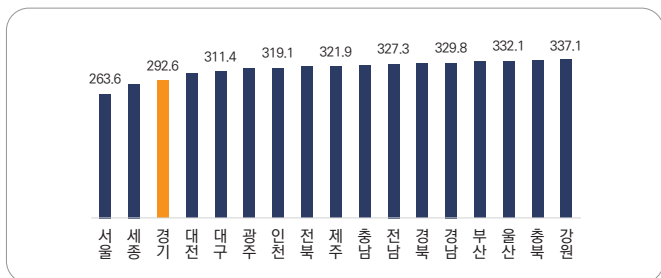
- 전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0년 414.3명에서 2019년 305.4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임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92.6명으로 전국의 305.4명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263.6명에 이어 상위 3위 수준임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과천시 사망률 224.3명으로 가장 낮고, 동두천시가 404.7명으로 가장 높아 격차는 180.4명에 달함

○ 주요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2017년 기준, 단위 : 명/십만 명당)



주 :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2019년 기준, 단위 : 명/십만 명당)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십만 명당)은 635.9명으로, OECD 24개 회원국 중 상위 3위를 차지함
- 한국보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일본(562.0세), 호주(634.4명)가 있음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자원 중 하드웨어인 병상수는 많으나 소프트웨어인 의료인력은 부족한 수준

- 보건의료 자원 중 하드웨어에 속하는 병상자원은 OECD 회원국 평균 4.4병상에 비해 우리나라는 12.4병상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 2위로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 28위 수준임

○ 경기도의 보건의료자원은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경기도의 보건의료 자원 중 하드웨어인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10.1병상으로 전국 평균 13.6병상보다 적고,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적은 수준임
-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전국의 3.0명보다 적고,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수준임(서울시가 4.5명으로 전국 1위)

○ 경기도 내 시군 간 보건의료 자원 격차가 매우 커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필수 의료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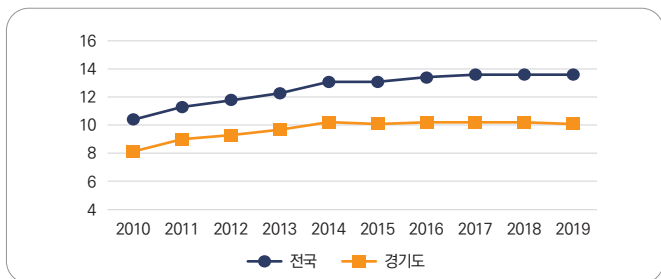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동두천시가 25.1병상으로 가장 많고, 하남시가 4.7병상으로 가장 적음(두 지역 간 격차가 5배)
-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성남시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가 1.2명으로 가장 적으며, 두 지역 간 격차는 3배 이상임

7-5-1 병상수(인구 천 명당)

○ 정의

- 인구 천 명당 병상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사회의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성을 가능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지표로 활용됨
(총병상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천 명당 병상수(단위: 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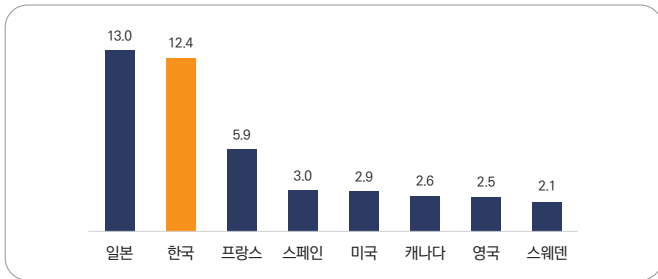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0.4	11.3	11.8	12.3	13.1	13.1	13.4	13.6	13.6	13.6
경기도	8.1	9.0	9.3	9.7	10.2	10.1	10.2	10.2	10.2	10.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2010년 10.4병상에서 2019년 13.6병상으로 꾸준히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10.1병상으로 전국 13.6병상보다 적고,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불과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동두천시가 25.1병상으로 가장 많고, 하남시가 4.7병상으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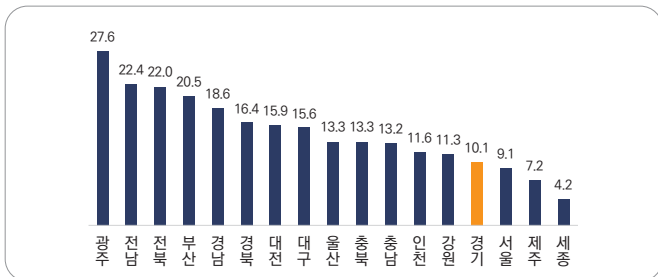
○ 주요국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2018년 기준, 단위 : 병상)



주 : 미국은 2017년 자료임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 시도별 인구 천 명당 병상수(2019년 기준, 단위 : 병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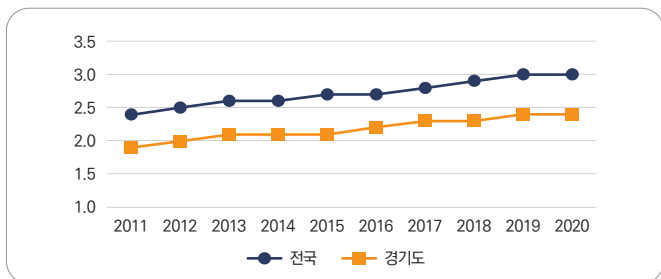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12.4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 4.4병상보다 크게 많은 수준임(OECD 국가 중 상위 2위)

7-5-2 의사수(인구 천 명당)

○ 정의

- 인구 천 명당 의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정 보건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천 명당 의사수(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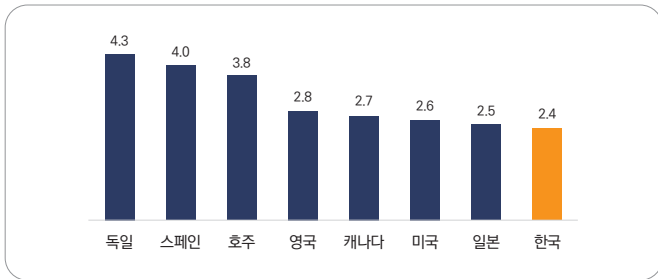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4	2.5	2.6	2.6	2.7	2.7	2.8	2.9	3.0	3.0
경기도	1.9	2.0	2.1	2.1	2.1	2.2	2.3	2.3	2.4	2.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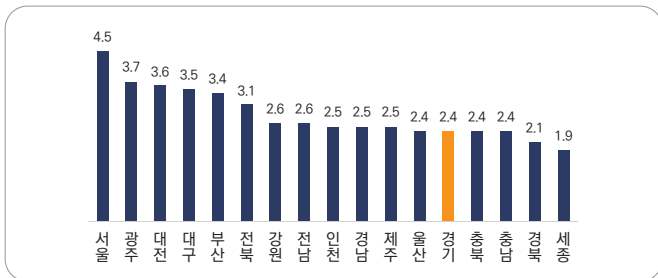
- 전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2011년 2.4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전국의 3.0명보다 적고,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수준임(서울 4.5명으로 전국 1위)
-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를 비교해보면, 성남시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가 1.2명으로 가장 적어 격차가 3배 이상임

○ 주요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2018년 기준, 단위 : 명)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수(2020년 기준, 단위 : 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에 위치해 상당히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중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많은 나라는 독일(4.3명), 스페인(4.0명), 호주(3.8명) 등임

○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두 배 정도 높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음

-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매우 낮고, 장애인 실업률은 2019년 기준 6.3%로 높은 수준임
-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
- 스웨덴의 전체 고용률은 75.7%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가 크지 않음

○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은 매우 낮음

- 한국의 장애급여와 상병급여 지출은 GDP 대비 0.4%로 OECD 평균(1.5%) 대비 매우 낮음
- 장애급여와 상병급여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네덜란드(2.6%)와 스웨덴(2.0%)으로 나타남

○ 장애인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및 인식 개선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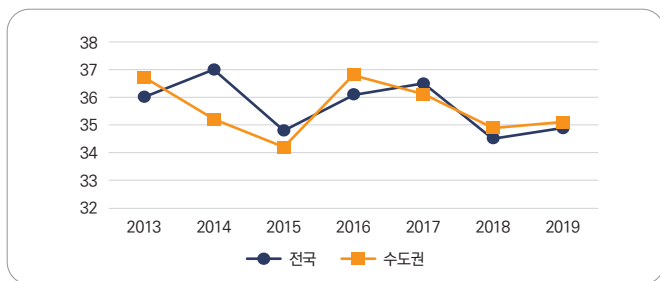
-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5배 증가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함
- 한국은 OECD 국가 중 장애인 출현율(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는데, 장애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보다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고용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복합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
- 장애인 포용정책은 고용률이나 실업률 개선의 지표와 더불어 장애인 출현율 개선이 정책목표로 설정될 필요

7-6-1 장애인 고용률

○ 정의

- 장애인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전국 및 수도권 장애인 고용률(단위 : %)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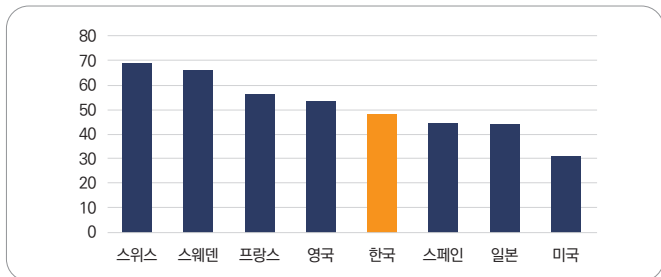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36.0	37.0	34.8	36.1	36.5	34.5	34.9
수도권	36.7	35.2	34.2	36.8	36.1	34.9	35.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고용률 60.9%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
-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24.1%)과 고용률(22.7%)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46.5%)과 고용률(43.8%)의 절반 수준임
-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36%대에서 2018년 이후 34%대로 하락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의 장애인 고용률이 35.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률(단위 : %)



주 : 2014~20년 중 각 국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사용함. 미국 2019년, 유럽 국가는 2014년. 일본은 기준연도 미표기

구분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영국	한국	스페인	일본	미국
장애인 고용률	69.0	66.2	56.2	53.6	48.0	44.3	44.2	30.9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한 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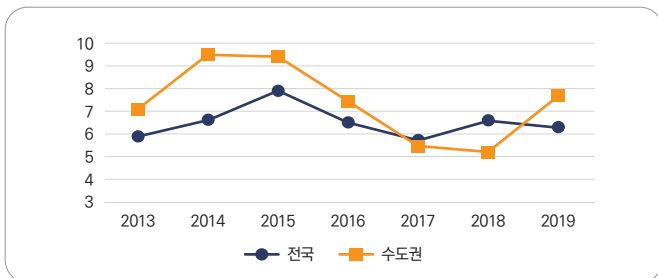
-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주요국 대비 중간 정도 수준임
-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30.9%)이며 스웨덴(66.2%)과 스위스(69.0%)에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 스웨덴의 전체 고용률은 75.7%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가 크지 않음

7-6-2 장애인 실업률

○ 정의

- 장애인 실업률은 장애인 실업자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전국 및 수도권 장애인 실업률(단위: %)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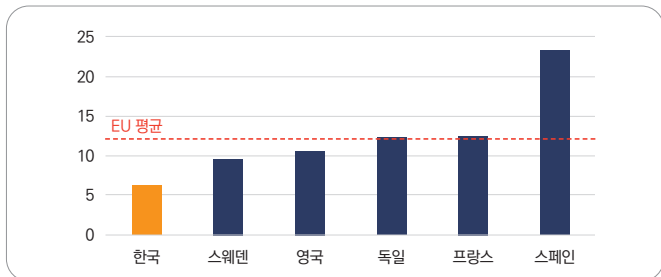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5.9	6.6	7.9	6.5	5.7	6.6	6.3
수도권	7.1	9.5	9.4	7.4	5.5	5.2	7.7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년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은 2019년 기준 6.3%로 전체 실업률 3.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으며, 장애인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각각 6.1%, 5.8%로 큰 차이가 없음
- 수도권의 장애인 실업률은 7.7%로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장애인 실업률(단위 : %)



주 : 2014~20년 중 각 국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사용함. 미국 2019년, 유럽 국가는 2014년. 일본은 기준연도 미표기

구분	한국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EU 평균
장애인 실업률	6.3	9.6	10.6	12.2	12.3	23.3	12.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한 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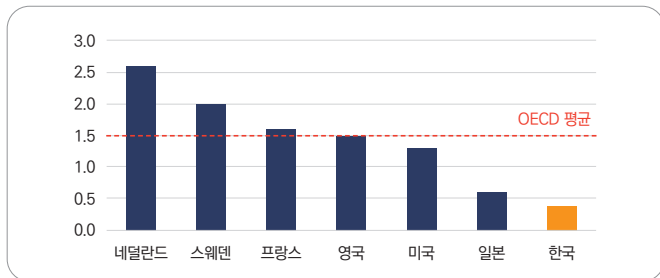
-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애인 출현율(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중)이 5.4%에 불과하고 국가마다 장애인 정의가 다양하므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함
- ※ 일본(7.6%)과 중국(6.3%)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장애인 출현율이 낮고 핀란드(35.7%), 덴마크(31.1%) 등 북유럽 국가에서 장애인 출현율이 높음

7-6-3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공적 지출(GDP 대비)

○ 정의

- 장애급여는 선천적 혹은 중도에 얻은 장애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의미하고, 상병급여는 산재가 아닌 상해, 질병 등으로 일시적 근로 불능 때문에 소득의 손실을 입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의미

○ 주요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공적 지출 비율(2015년 기준, 단위: %)



주: 미국, 한국은 2016년 기준 자료임

구분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공적 지출 비율	2.6	2.0	1.6	1.5	1.3	0.6	0.4	1.5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한 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한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와 상병급여 지출은 0.4%로 OECD 평균(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주요국 중 급여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2.6%)와 스웨덴(2.0%)으로 두 국가는 장애인 고용률도 가장 높은 국가임

○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대인신뢰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

- 대인신뢰도는 2013년 72.2%에서 2019년 66.2%로 6%p 하락
- 대인신뢰도의 저하는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결속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조성 중요

-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파악 가능
- 사회적 고립도는 2009년 31.2%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이며, 2019년 28.6%로 2015년보다 1.6%p 감소
- OECD 국가들의 사회적 고립도 평균은 2016년 기준 11.4%이며, 한국은 24.1%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

○ ‘공정과 포용’의 관점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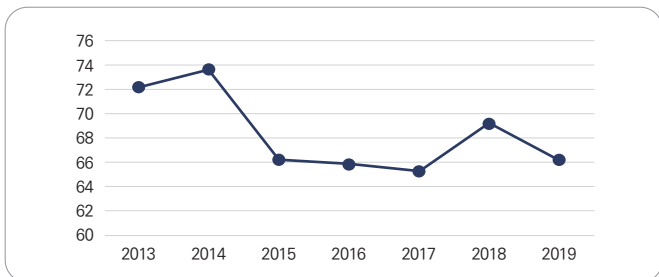
- 소수자 포용성은 장애인, 외국인 이민자 및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 전과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
- 특히 동성애자와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은 여전히 높은 수준
- 2019년 소수자 포용성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이 12.9%p 하락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

7-7-1 대인신뢰도

○ 정의

- 대인신뢰도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측정

○ 전국 대인신뢰도(단위 : %)



주 : 대인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72.2	73.6	66.2	65.9	65.3	69.2	66.2
도시	71.4	74.2	65.7	65.4	65.2	68.7	64.9
농촌	76.5	70.9	69.0	69.0	65.6	71.7	72.7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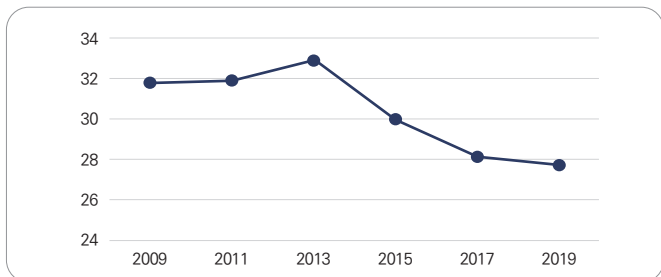
-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신뢰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
- 대인신뢰도는 2013년 72.2%에서 2019년 66.2%로 6%p 하락
- 2019년 기준 대인신뢰도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7.8%p 높은 수치를 기록

7-7-2 사회적 고립도

○ 정의

-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서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 전국 사회적 고립도(단위 : %)



주1 : 사회적 고립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주2 :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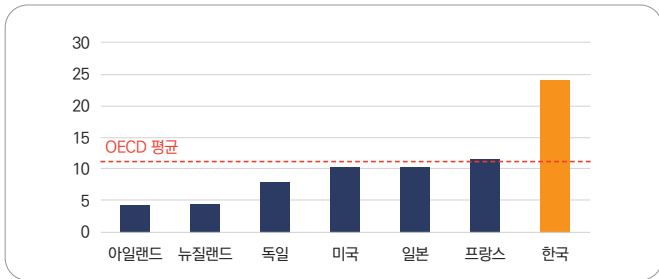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31.8	31.9	32.9	30.0	28.1	27.7
19~29세	22.3	21.6	23.8	21.3	19.1	18.4
30~39세	27.9	27.1	27.3	26.3	22.1	21.0
40~49세	32.9	32.9	33.0	30.1	27.4	26.9
50~59세	34.6	35.2	36.6	32.7	32.5	30.4
60세 이상	41.2	41.8	42.0	37.4	35.8	36.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까지 32.9%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27.7%를 기록
- 연령대별로는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36.6%, 50~59세가 30.4%로 나타나 젊은 층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편임

○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2014~16년 평균, 단위 : %)



주 : 사회적 고립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구분	2005~07년 평균	2008~10년 평균	2011~13년 평균	2014~16년 평균
아이슬란드	-	2.4	3.4	1.7
아일랜드	3.6	2.9	3.7	4.3
뉴질랜드	4.4	4.4	5.5	4.6
덴마크	4.1	4.8	4.6	4.7
호주	3.8	5.2	5.6	6.4
영국	2.7	4.5	6.2	6.8
독일	5.9	7.5	6.9	8.0
스웨덴	7.2	8.0	8.9	8.2
미국	4.5	7.4	8.5	10.1
일본	7.0	11.2	9.2	10.3
프랑스	6.3	7.3	8.0	11.6
한국	21.9	22.2	21.8	24.1
OECD 평균	8.3	10.6	11.7	11.4

자료 :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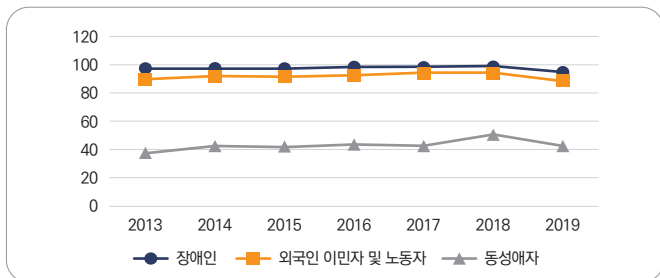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2014~16년 기준으로 OECD 3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4.1%로 나타남
- 2014~16년 OECD 국가별 사회적 고립도는 아이슬란드가 1.7%로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아일랜드(4.3%), 뉴질랜드(4.6%), 덴마크(4.7%) 순

7-7-3 소수자 포용성

○ 정의

- 장애인과 외국인 이민자 및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집단을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구의 비율

○ 전국 소수자 포용성(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장애인	97.3	97.7	97.4	98.6	98.3	98.7	95.0
외국인 이민자 및 노동자	90.1	92.0	91.9	92.9	94.3	94.3	88.7
북한이탈주민	80.1	84.8	87.3	87.9	85.8	87.4	74.5
동성애자	37.9	43.1	42.3	44.2	42.8	51.0	43.0
전과자	31.6	32.7	33.5	30.8	30.5	37.3	32.0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소수자 포용성은 장애인, 외국인 이민자 및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 전과자 순으로 높음
-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성애자와 전과자는 낮은 편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8장

•

교육·문화여가

8-1 교육의 질

8-2 교육 기회

8-3 취약계층 문화기본권

8-4 문화·여가서비스 공급

8-5 생활문화시대

○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원아수는 꾸준히 감소해 교육 여건 개선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 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주요 지표
- 전국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1년 19.7명에서 2020년 15.2명으로 4.5명 감소
- 경기도 역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많은 편임
- 전국 교원 1인당 원아수는 2011년 14.6명에서 2019년 11.4명으로 3.2명 감소

○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수업 집중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

- 국가별 교육의 비교 기준인 OECD 교육지표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 여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1년 28.4명에서 2020년 22.1명으로 6.3명 감소
- 경기도는 2011년 30.6명에서 23.9명으로 6.7명 감소했으나 전국에 비해 많은 수준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28개 OECD 회원국 중 22위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임

○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원아수와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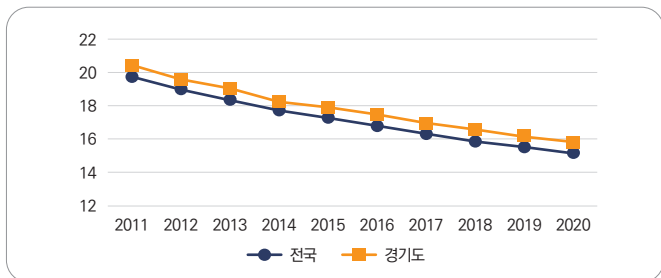
- 교사가 맡는 학생수가 적으면 교육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고,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수업 집중력은 높아짐
-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원아수와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교사 증원 등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8-1-1 교원 1인당 학생수

○ 정의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의 수로서 적을수록 교육 여건 개선

○ 전국 및 경기도 교원 1인당 학생수(단위: 명)



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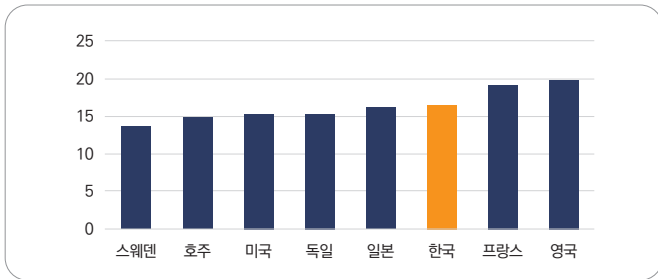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9.7	19.0	18.4	17.7	17.3	16.8	16.3	15.9	15.5	15.2
경기도	20.5	19.6	19.1	18.2	17.9	17.5	17.0	16.6	16.2	15.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기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1년 19.7명에서 2020년 15.2명으로 꾸준히 감소
- 경기도 역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1년 20.5명에서 2020년 15.8명으로 감소세
-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으며 2020년 기준 경기도가 전국보다 0.6명 많음

○ 주요국의 초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2018년 기준, 단위 : 명)



주 :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기준임

구분	스웨덴	호주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교원 1인당 학생수	13.6	14.9	15.2	15.3	16.2	16.5	19.2	19.9

자료 :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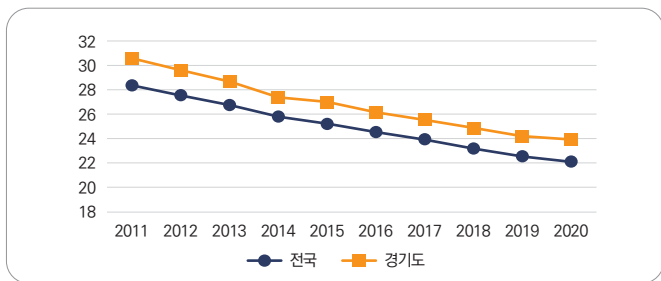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초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16.5명)는 27위로 하위권에 속함
- 2018년 기준 주요국의 초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스웨덴(13.6명), 호주(14.9명), 미국(15.2명)이 적었으며, 프랑스(19.2명), 영국(19.9명)은 한국의 16.5명보다 높은 수준
- OECD 회원국 중 초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룩셈부르크(9.0명), 그리스(9.2명), 폴란드(9.6명) 순으로 적음

8-1-2 학급당 학생수

○ 정의

- 학급수 대비 학생수로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수업 집중도 개선

○ 전국 및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단위 : 명)



주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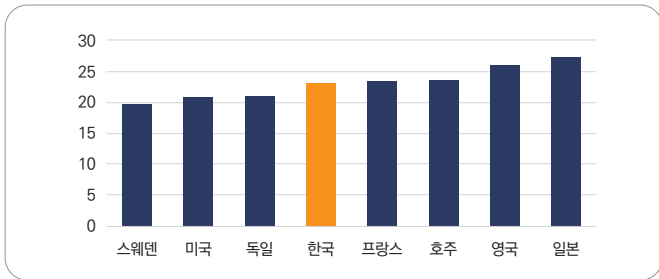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8.4	27.6	26.8	25.8	25.2	24.6	23.9	23.2	22.5	22.1
경기도	30.6	29.6	28.7	27.4	26.9	26.1	25.5	24.8	24.2	23.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기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학급당 학생수는 2011년 28.4명에서 2020년 22.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
-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또한 2011년 30.6명에서 2020년 23.9명으로 감소
-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많으며 2020년 기준 경기도가 전국보다 1.8명 많음

○ 주요국의 초등교육 학급당 학생수(2018년 기준, 단위 : 명)



주 :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기준임

구분	스웨덴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학급당 학생수	19.9	20.9	21.0	23.1	23.3	23.5	26.0	27.2

자료 :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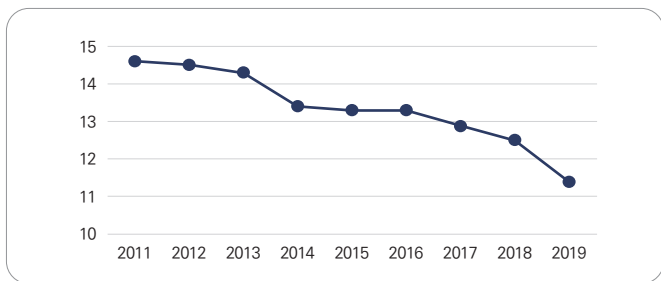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한국의 초등교육 학급당 학생수(23.1명)는 22위로 하위권에 속함
- 2018년 기준 주요국의 초등교육 학급당 학생수는 스웨덴(19.9명), 미국(20.9명), 독일(21.0명)이 한국(23.1명)보다 적으며, 프랑스(23.3명), 호주(23.5명), 영국(26.0명), 일본(27.2명)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
- OECD 회원국 중 초등교육 학급당 학생수는 라트비아(16.5명), 리투아니아(17.3명), 그리스(17.4명) 순으로 적음

8-1-3 유아교육 규모

○ 정의

- 유아교육 규모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 지표로서 교원 1인당 원아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개선

○ 전국 유아교육 규모(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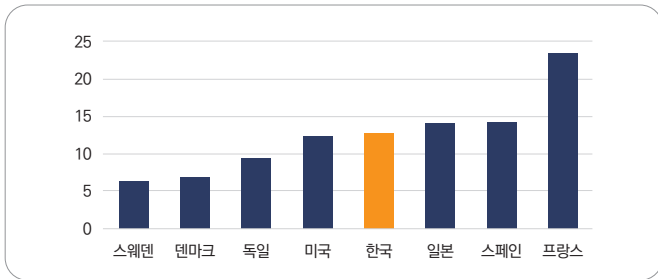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치원수(원)	8,424	8,538	8,678	8,826	8,930	8,987	9,029	9,021	8,837
학급수(학급)	26,990	28,386	30,597	33,041	34,075	35,790	36,469	37,748	37,268
원아수(명)	564,834	613,745	658,188	652,546	682,553	704,138	694,631	675,998	633,913
교원수(명)	38,662	42,235	46,126	48,530	50,998	52,923	53,808	54,892	53,362
취원율(%)	41.0	43.5	46.7	47.0	48.9	49.0	47.4	49.9	48.1
교원 1인당 원아수(명)	14.6	14.5	14.3	13.4	13.3	13.3	12.9	12.5	11.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 유치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학급 수와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
- 취원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이 갈수록 보편화함을 의미
- 1982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후 유치원 수가 크게 증가(1980년 901개 원에서 1985년 6,242개 원)
- 우리나라 취원율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로 OECD 주요국 취원율(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보다 높은 상황

○ 주요국의 유아교육 교원 1인당 원아수(2018년 기준, 단위 : 명)



주 :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기준임

구분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	한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교원 1인당 원아수	6.3	6.8	9.4	12.3	12.7	14.0	14.2	23.3

자료 :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8년 기준 OECD 32개 회원국 중 한국의 유아교육 교원 1인당 원아수(12.7명)는 16위를 차지하여 중간 수준임
- 2018년 기준 주요국의 유아교육 교원 1인당 원아수는 스웨덴(6.3명), 덴마크(6.8명), 독일(9.4명)이 적었으며, 일본(14.0명), 스페인(14.2명), 프랑스(23.3명)는 한국의 12.7명보다 높은 수준
- OECD 회원국 중 유아교육 교원 1인당 원아수는 아이슬란드(5.1명), 스웨덴(6.3명), 뉴질랜드(6.5명) 순으로 적음

○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6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

- 한국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 비율로 구분
- 형식교육은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정규교육과정이고, 비형식교육은 공식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하지 않는 정규교육 외 구조화된 학습활동이며, 무형식 학습은 구조화하지 않은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우연한 활동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
-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6년 35.7%에서 2019년 43.4% 상승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증대
- 2019년 기준으로 비형식교육이 42.5%, 형식교육이 1.7%로 나타나 비형식교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

- 2010~19년 동안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평균 3.1%(명목) 상승하고,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매우 높은 수준

○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편차가 매우 큼

- 월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200만 원 미만)와 가장 많은 가구(월 800만 원 이상) 간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44만 원 차이(5.2배)

○ 우리 사회에서 기회와 경쟁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생애주기별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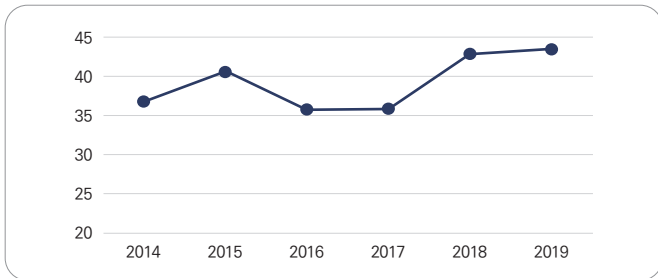
- 정규교육 과정으로 전생애주기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학습 사회로 진입 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식과 영역에서 학습 기회 확대 필요
- 비대면 수업을 통해 학습 공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교육 양극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중요성 대두
- 홈스쿨링 선택제를 도입하여 공교육과 병행함으로써 학습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필요
- 성인 중심 평생학습을 취학 전 아동부터 전생애주기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교육을 유연하게 실시함으로써 학벌중심사회 구조를 직업능력 중심으로 전환 필요

8-2-1 평생학습 참여율

○ 정의

- 정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 참여율로서 연간 평생학습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성인 전체의 형식/비형식 학습 참여율을 의미

○ 전국 평생학습 참여율(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참여율	36.8	40.6	35.7	35.8	42.8	43.4
형식교육	3.1	3.5	2.8	2.2	2.7	1.7
비형식교육	35.2	39.1	34.2	34.6	41.8	42.5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25.4	27.7	17.3	16.0	21.2	21.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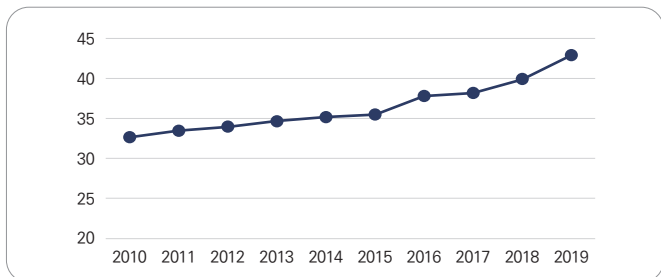
- 2016년 이후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비형식교육 참여율이 특히 눈에 띄게 상승함
- 평생학습 6대 영역(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가운데 직업능력 비형식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저조
- 고등교육에서 국민의 직업능력교육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능력을 활성화하는 정책 필요

8-2-2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정의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으로서 초·중·고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사적인 수요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의미

○ 전국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단위 : 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교육비(만 원)	32.7	33.5	34.0	34.7	35.2	35.5	37.8	38.2	39.9	42.9
사교육참여율(%)	73.6	71.7	69.4	68.8	68.6	68.8	67.8	71.2	72.8	74.8

자료 : 통계청(각년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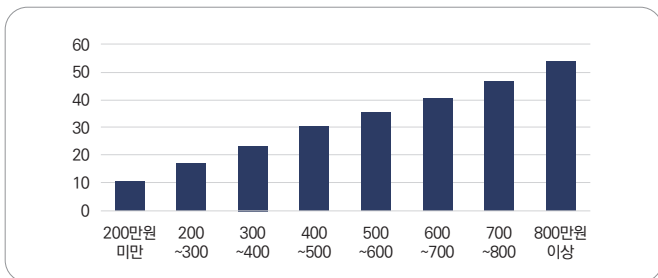
- 2019년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32.7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하여 물가상승률 1.6% 보다 빠르게 증가
- 사교육 참여율은 2010년 73.6%에서 2014년 68.6%로 하락한 후 2019년 74.8%로 상승하는 추세
- 2019년 전체 학생(비참여학생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 원이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45.1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35.8만 원, 세종시 34.1만 원 순

8-2-3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정의

- 가구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으로서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정도를 나타냄

○ 전국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9년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800만원	800만원 이상
사교육비	10.4	17.0	23.4	30.0	35.4	40.4	46.4	53.9
대상 분포(%)	7.1	12.4	17.0	18.2	15.7	8.9	6.6	14.1

자료 : 통계청(2020). "초중교사교육비조사 결과".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비례
-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4만 원인 반면, 가구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9만 원으로 43.5만 원 차이(5.2배)

○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이동 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에 대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

- 2019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15%를 넘어서면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세계 선진국들은 장애인 등의 관광편의를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도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도입
-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를 누적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49개소가 조성완료 또는 진행 중(경기도 3개소)
- 경기도는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 추진

○ 문화기반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 2% 수준에 불과

- 전국 문화기반시설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전체 중 2.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전국 공연장, 전시장, 공공도서관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은 39%로 전체 1/3을 넘는 수준
-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및 휴게시설 확대 필요

○ 공정성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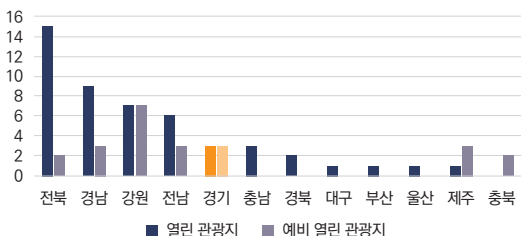
-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바우처사업은 현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형식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 문화바우처사업 예산은 2011년 340억 원에서 2019년 1,299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는 2012년 1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9년 기준 약 163만 명으로 정체 상태임

8-3-1 열린 관광지

○ 정의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시도별 열린 관광지 및 예비 열린 관광지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주: 열린 관광지는 2019년 12월 현재 29개소 조성완료, 20개소가 조성 중이며, 예비 열린 관광지는 2020년 총 23개소가 선정됨

구분	전국	전남	강원	전남	경기	충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제주	충북
열린 관광지	49	15	9	7	6	3	3	2	1	1	1	0
예비 열린 관광지	23	2	3	7	3	3	0	0	0	0	3	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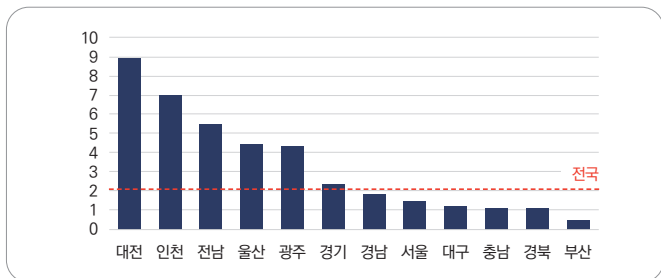
- 2015년에 시작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 총 49개소 조성완료 또는 진행중
- 지역별로는 전북이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남(9개소), 강원(7개소), 전남(6개소) 순이며, 경기도는 3개소로 낮은 수준
- 조성 진행 예정인 '예비 열린 관광지'는 총 23개소로서 경기, 전남, 경남, 제주 등이 각 3개소씩 지정

8-3-2 문화기반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

○ 정의

- 지자체 내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인증을 받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시설 수의 비율

○ 시도별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2017년 기준, 단위 : %)



주 : 강원, 세종, 충북, 전북, 제주는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이 없어 제외함

구분	전국	대전	인천	전남	울산	광주	경기
인증 시설 수(개)	39	4	7	6	2	2	6
인증 비율(%)	2.08	8.89	7.00	5.45	4.44	4.35	2.37
구분	경남	서울	대구	충남	경북	부산	-
인증 시설 수(개)	1	7	1	1	1	1	-
인증 비율(%)	1.82	1.51	1.20	1.11	1.09	0.5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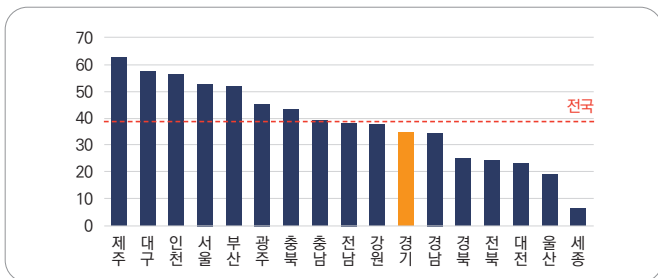
- 전체 문화기반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2.08%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
- 2017년 기준 경기도의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은 2.3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대전(8.89%), 인천(7.00%), 전남(5.45%), 울산(4.44%)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8-3-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 정의

-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내 수유 공간, 임산부 배려석 등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확보한 비율

○ 시도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2017년 기준, 단위 : %)



구분	전국	제주	대구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충북	충남
설치율(%)	39.0	62.5	57.3	56.1	52.8	51.7	45.3	43.3	39.3
시설수(개)	158	2	6	7	18	12	5	7	10
구분	전남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북	대전	울산	세종
설치율(%)	38.3	37.8	34.6	34.5	25.0	24.3	23.3	19.2	6.7
시설수(개)	14	11	26	12	12	8	3	4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지역문화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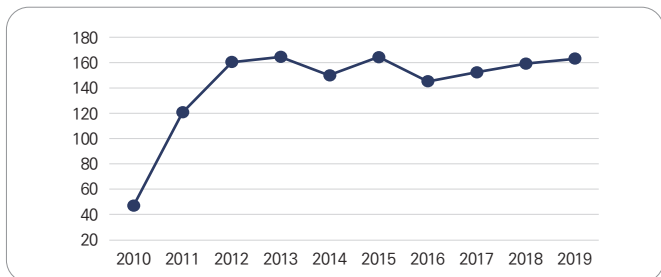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및 전시장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의무사항(공공도서관은 의무사항 아님)
- 2017년 12월 기준 전국 공연장, 전시장, 공공도서관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보유한 시설의 비율은 39%로 전체 1/3을 넘는 수준에 불과
- 제주도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관내 문화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이 34.6%로 전국 평균을 하회

8-3-4 문화바우처사업 수혜인원

○ 정의

-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을 관람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의 수혜인원을 의미

○ 전국 문화바우처사업 수혜인원(단위 : 만 명)



주 : 문화바우처사업은 20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억 원)	68	340	487	493	732	968	785	992	1,167	1,299
수혜인원 (만 명)	47.0	120.9	160.5	163.9	149.8	164.1	145.1	152.4	159.2	162.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 주요 특징 및 해설

- 문화예술 분야의 유일한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 이용권(문화누리카드) 형식으로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 운영 이후, 사업예산은 2006년 26억 원에서 2014년 73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총 1,299억 원으로 증가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163만 명으로 2012년 이후 정체를 보임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 분야 재정지원 확대 필요

- 국민 여가 향유권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문화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7년까지 정부재정 대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재정 비율 증가 추세
-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사업 종료로 2018년 이후 정부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비율은 이전보다 다소 하락한 1.2%대를 유지
- 문체부 재정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5.1% 증가하였으나 이는 동기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8.6%)보다 낮은 수준

○ 경기도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상대적 공급량 다소 부족

- 전국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 문화적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
-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4.3개로 전국 평균(5.8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과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확대 필요

○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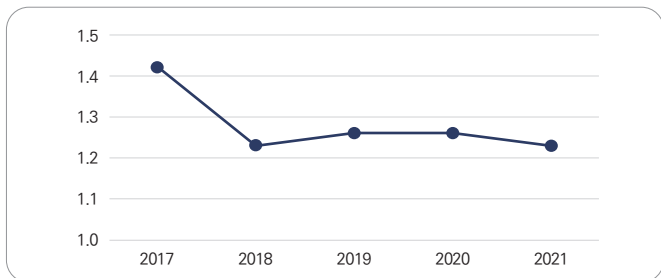
- 2018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으나 이 중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은 전년 대비 증가
-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업소수는 107.4개로 전국 평균(109.7개)에 비해 다소 적은 수준
-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 다만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4.51㎡로서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하는 5.73㎡의 78.7% 수준에 그침

8-4-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비율

○ 정의

- 문체부 재정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에 편성되는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정부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비율을 의미

○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단위 : %)



주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문체부 재정(억 원)	56,971	52,578	59,233	64,803	68,637
정부재정 대비 비율(%)	1.42	1.23	1.26	1.26	1.23
전년 대비 증감률(%)	3.7	7.7	12.6	9.4	5.9

자료 :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으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02.).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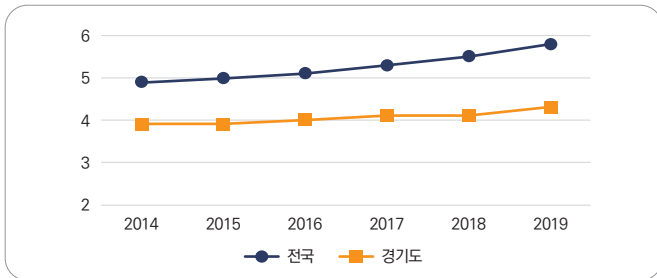
- 2021년 문체부 재정은 전년 대비 5.9%(3,834억 원) 증가한 6조 8,637억 원이며, 이는 정부재정의 1.23% 수준으로 전년 대비 0.03% 낮아진 수치
- 정부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년(1.42%)에 비해서는 0.19% 하락
-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32.3%(2조 2,165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체육(25.6%), 관광(21.9%), 콘텐츠(14.9%) 순

8-4-2 문화기반시설수

○ 정의

-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의미하며,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로 계산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단위 : 개)



주 :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 = (문화기반시설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수(개)	2,519	2,595	2,657	2,749	2,825	3,017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개)	4.9	5.0	5.1	5.3	5.5	5.8
경기	문화기반시설수(개)	481	492	504	526	537	567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개)	3.9	3.9	4.0	4.1	4.1	4.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문화기반시설총람".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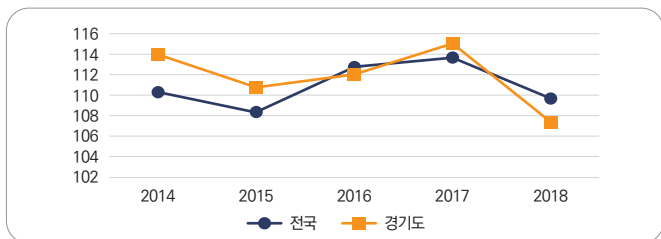
- 전국 문화기반시설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총 3,017개이며, 경기도는 전체 중 1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4.3개로 전년 대비 0.2개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5.8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경기(4.3개), 서울(4.2개), 인천(3.9개)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상대적 공급량이 높은 편임

8-4-3 체육시설업

○ 정의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신고된 체육시설업소수를 집계하여 인구단위(십만 명)로 계산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수(단위 : 개)



주 :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업소수 = (체육시설업소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체육시설업소수(개)	56,629	55,857	58,321	58,884	56,854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업소수(개)	110.3	108.4	112.8	113.7	109.7
경기	체육시설업소수(개)	14,084	13,869	14,251	14,823	14,048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업소수(개)	114.0	110.8	112.1	115.1	107.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전국 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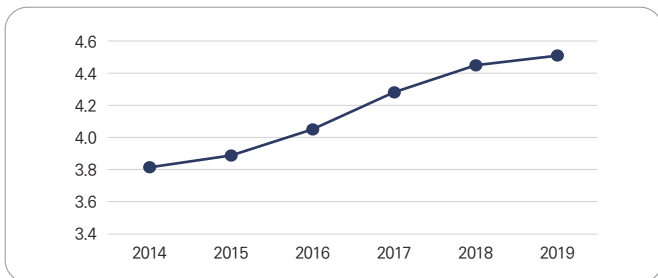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56,854개이며, 경기도는 전체 중 24.7%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음
- 체육시설의 상대적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업소수는 2018년 기준 109.7개로 2014년에 비해 0.6개 감소
-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업소수는 107.4개로 2014년 대비 6.6개 감소하여 전국보다 감소 폭이 컸으며, 서울(115.5개), 인천(109.4개) 보다 적음

8-4-4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정의

-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체육시설이며,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공공, 민간,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 면적을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

○ 전국 1인당 체육시설 면적(단위 : m^2)



주 : 스키장, 골프장, 요트장 등 제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체육 시설수(개)	전국	21,317	22,662	24,303	26,927	28,578	30,185
	경기	3,557	3,677	3,941	4,541	4,806	5,105
전국 1인당 체육시설 면적(m^2)		3.81	3.89	4.05	4.28	4.45	4.51

주 : 공공체육시설수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각 년도 말 기준 자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수는 총 30,185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
- 최근 5년간(2014~2019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나타나 전국 연평균 증가율(7.2%)을 상회하는 수준
-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14년에 비해 0.7m^2 증가한 4.51m^2

○ 국민의 문화여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가계지출 중 5.4% 차지

- 가구의 문화여가지출은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을 오락문화비로 나누어 산출하며, 여가자원의 투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 문화여가지출률은 2014년 4.35%에서 2018년 5.76%로 증가
- 2019년 기준 문화여가지출률은 전년 대비 0.35%p 감소한 5.41%

○ 2019년 기준 국민의 문화예술관람률은 63.6%

- 문화예술관람률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
- 1990년 33.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이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4%p 감소한 63.6%를 기록
- 문화예술관람률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고, 나이가 젊을수록 높은 편

○ 여가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편

- 여가생활만족도는 여가활용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
- 2009년 21.8%에서 2013년 27.1%로 높아진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여가활용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일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일 평균 여가시간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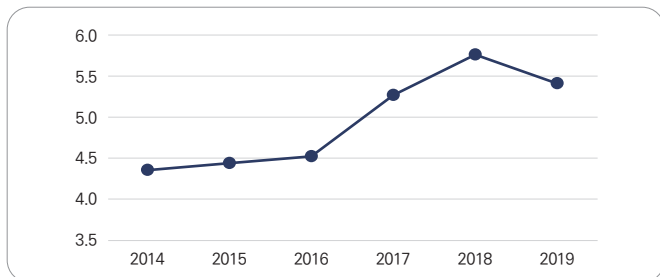
- 여가시간은 일, 가사, 수업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한 자유시간으로 정의
-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은 2019년 기준 4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증가하였으나 2014년(4.2시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
- 여가시간충분도는 59.2%로 나타나 2014년에 비해 7%나 감소
- OECD 주요국의 여가시간비율(2018년 기준)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7.9%로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임

8-5-1 가계문화여가지출률

○ 정의

-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의 비율로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가계 지출총액을 오락문화비로 나누어 산출

○ 전국 가계문화여가지출률(단위 : %)



주1 : 문화여가지출률 =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 × 100

주2 : 1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이며, 2016년까지는 농어가 제외, 2017년부터 농어가 포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여가지출률(%)	4.35	4.44	4.53	5.27	5.76	5.41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만 원)	290.1	288.7	285.8	331.6	332.7	333.0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만 원)	12.6	12.8	12.9	17.5	19.5	18.0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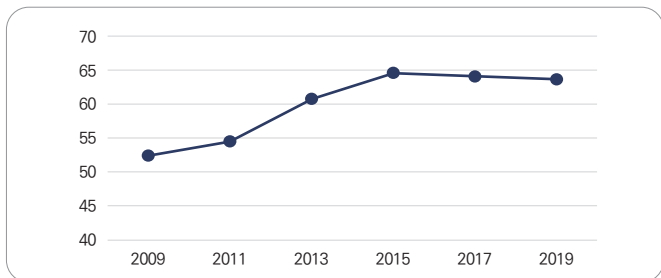
- 가구의 여가자원 투입수준을 보여주는 오락문화비는 2014년 약 12만 6천 원에서 2019년 약 18만 원으로 증가
- 2019년은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전년 대비 3,040원 증가했음에도 월평균 오락문화비는 11,471원 감소
- 문화여가지출률은 2019년 기준 5.41%로 전년에 비해 0.35%p 감소

8-5-2 문화예술관람률

○ 정의

-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람을 위해 문화예술시설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서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을 포함

○ 전국 문화예술관람률(단위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52.4	54.5	60.8	64.5	64.0	63.6
성별	남자	50.5	51.5	58.5	62.0	61.6	61.1
	여자	54.2	57.4	62.9	66.9	66.3	66.1
연령별	20세미만	77.2	77.9	82.6	84.5	86.0	83.8
	20~29세	79.6	78.2	83.4	83.8	83.8	82.8
	30~39세	68.2	70.6	77.2	79.2	78.6	79.8
	40~49세	53.4	58.7	67.4	73.2	73.7	74.4
	50~59세	35.0	41.2	48.1	56.2	58.0	58.9
	60세이상	13.4	16.6	21.7	28.9	29.1	31.2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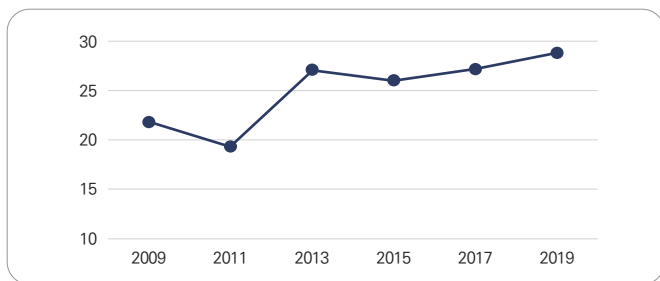
- 문화예술관람률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4.5%로 나타났으나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0.5%p, 0.4%p 감소
-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편이며, 나이가 젊을수록 높은 수치
- 50~59세는 2009~19년 동안 23.9%p 상승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연령대임

8-5-3 여가생활만족도

정의

- 현재 여가활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사람 비율

전국 여가생활만족도(단위 :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21.8	19.3	27.1	26.0	27.2	28.8
성별	남자	23.3	20.6	28.4	27.1	27.6	29.4
	여자	20.4	17.9	25.8	24.8	26.9	28.2
연령별	20세 미만	25.2	29.8	40.0	40.6	43.7	43.3
	20-29세	26.1	23.1	33.9	32.1	33.9	35.5
	30-39세	20.9	16.8	26.5	25.9	26.5	29.6
	40-49세	21.3	18.1	27.4	25.6	26.9	29.8
	50-59세	21.4	18.6	23.8	23.4	25.1	26.4
	60세 이상	18.5	14.3	18.1	17.6	19.2	21.0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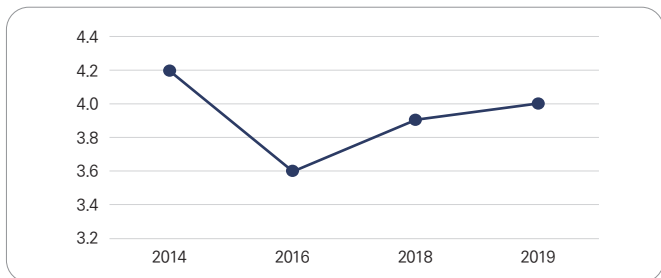
- 여가생활만족도는 2013년 19.3%에서 2013년 27.1%로 높아진 후 26%~28% 수준을 유지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나이가 적을수록 높은 편임
-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여가생활만족도는 2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음

8-5-4 여가시간

○ 정의

- 여가시간은 1일 평균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 전국 일평균 여가시간(단위 : 시간)



주 : 일평균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구분		2014	2016	2018	2019
여가시간	요일평균	4.2	3.6	3.9	4.0
	평일	3.6	3.1	3.3	3.5
	휴일	5.8	5.0	5.3	5.4
여가시간 충분도	요일평균	66.2	60.1	52.4	59.2
	평일	62.2	53.3	46.3	53.2
	휴일	70.2	66.9	58.5	65.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국민의 여가시간은 요일평균 4시간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1시간 증가하였으며, 여가시간 충분도도 전년에 비해 6.8%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2014년에 비해 여가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9장

교통·안전

9-1 이동서비스 및 교통복지

9-2 안전한 도로교통

9-3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9-4 사회재난

9-5 안전취약계층

○ 우리나라 도로보급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값보다 낮아 지역의 교통 수요를 고려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

- 도로시설과 대중교통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은 이동을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가시키는 척도라 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전국이 1.54, 경기도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60의 절반 이하 수준임
- 지역의 버스노선을 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천 명당 버스노선수로 나타낼 때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기도는 전국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직장인이 통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비율이 전국 평균 17.9%이고 경기도는 26.1%로 경기도 직장인이 통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 비해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국토계수당 도로밀도와 버스노선수는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 경기도 인구밀도를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이동을 위한 저상버스의 확충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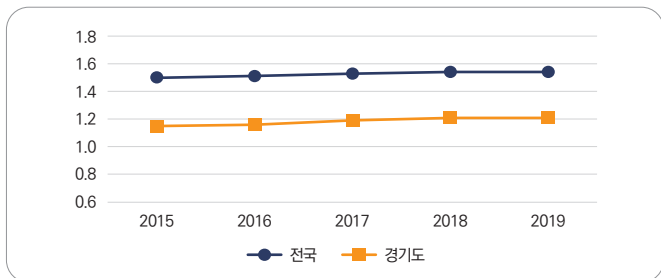
- 교통복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의미함
- 특별교통수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18.1%가 보급되었고 경기도는 167.4%가 보급되었음
- 저상버스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23.4%가 보급되었으나 경기도는 12.7%로 나타남
- 교통약자의 광역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통 관련 접근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9-1-1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 정의

- 시도별 면적과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타낸 도로연장 길이를 의미하며, 도로보급률 지표 중 하나임

○ 전국 및 경기도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단위 : km/√km²×천 명)



주 : 도로보급률(국토계수당 도로밀도) = 도로연장(km) / √(국토면적(km²)×인구(천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50	1.51	1.53	1.54	1.54
경기도		1.15	1.16	1.19	1.21	1.21
OECD	평균	3.40	3.60	3.50	3.60	-
회원국	대한민국 순위	30위	32위	31위	32위	-

자료 : e-나라지표(각년도). “도로보급률”.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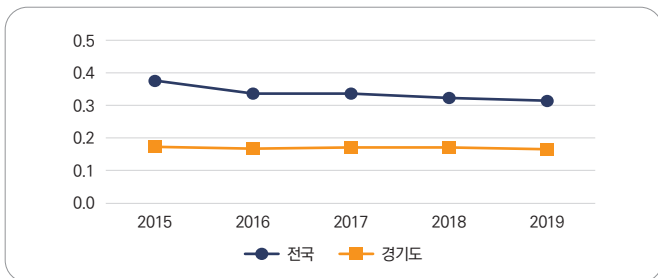
- 2018년 우리나라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1.54, OECD 회원국 평균은 3.60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32위에 위치함
- 2019년 우리나라 전국 도로연장 길이는 111,314km, 경기도는 14,033km이며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201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정체
- 이는 SOC 관련 사업과 예산부족 등으로 도로투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결과로서, 향후에도 도로보급률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9-1-2 버스노선수

○ 정의

- 버스노선수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개수를 의미하며 그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지표임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천 명당 버스노선수(단위 : 개)



주 : 버스노선에는 시내, 농어촌, 시외버스 노선이 포함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버스노선수(개)	19,390	17,463	17,478	16,757	16,329
	인구 대비 버스노선수(개/천 명)	0.38	0.34	0.34	0.32	0.31
경기도	버스노선수(개)	2,164	2,144	2,229	2,266	2,217
	인구 대비 버스노선수(개/천 명)	0.17	0.17	0.17	0.17	0.17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각년도), “버스통계편람”.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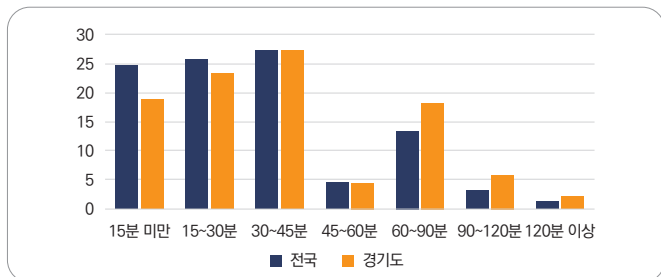
- 전국의 인구 대비 버스노선수는 2015년 이후 점차 감소(경기도는 0.17개/천 명 유지)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버스노선수는 2,217개, 버스면허대수는 13,651대, 차량보유대수는 13,717대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경기도는 92개 버스업체가 운영되고, 23,341명의 버스운전자가 근무

9-1-3 통근소요시간별 인구비율

○ 정의

- 직장인이 통근을 목적으로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편도 통행시간을 통근자수로 나눈 비율의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통근소요시간별 인구비율(2015년 기준, 단위 : %)



주 : 편도 기준 직장인의 통근소요시간

구분		15분 미만	15~30분	30~45분	45~60분	60~90분	90~120분	120분 이상	합계
전국	인구(천 명)	5,794	6,035	6,383	1,055	3,159	762	312	23,500
	비율(%)	24.7	25.7	27.2	4.5	13.4	3.2	1.3	100
	누적비율(%)	24.7	50.3	77.5	82.0	95.4	98.7	100	100
경기도	인구(천 명)	1,083	1,341	1,563	261	1,044	335	118	5,746
	비율(%)	18.8	23.3	27.2	4.5	18.2	5.8	2.1	100
	누적비율(%)	18.8	42.2	69.4	73.9	92.1	97.9	100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2019). "인구총조사-표본(20%)부문-소요시간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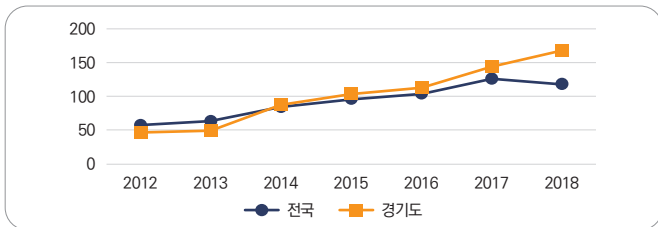
-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직장인의 27.2%가 통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편도 30분~45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간대가 가장 비율이 높음
- 통근하는 데 60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직장인의 비율은 전국 17.9%, 경기도 26.1%로 경기도가 전국에 비해 1시간 이상 통근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9-1-4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정의

- 특별교통수단은 거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기준대수 대비 운행대수로 산정

○ 전국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단위: %)



주: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 ÷ 법정기준대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법정기준대수(대)	2,793	2,780	2,692	2,726	2,731	2,327	2,699
	운행대수(대)	1,597	1,752	2,298	2,601	2,820	2,932	3,187
	보급률(%)	57.2	63.0	85.4	95.4	103.3	126.0	118.1
경기도	법정기준대수(대)	559	558	543	547	578	556	567
	운행대수(대)	263	277	475	566	651	797	949
	보급률(%)	47.0	49.6	87.3	103.5	112.6	143.3	167.4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교통약자실태조사보고서".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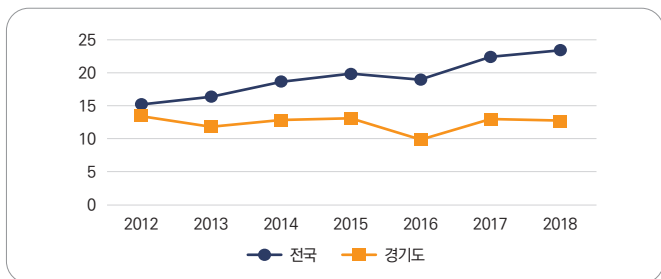
-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대수는 보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9.7.5.)」 시행규칙 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국가는 제3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서 2021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이 118.1%, 경기도가 167.4%임

9-1-5 저상버스 보급률

○ 정의

-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체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저상버스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대수를 시내버스대수로 나누어 산정

○ 전국 및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단위 : %)



주 : 저상버스 보급률(%) = 저상버스대수 ÷ 시내버스대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저상버스대수(대)	4,720	5,447	6,076	6,737	6,447	7,556	8,038
	보급률(%)	15.2	16.4	18.7	19.9	19.0	22.4	23.4
경기도	저상버스대수(대)	1,042	1,218	1,255	1,376	1,051	1,316	1,343
	보급률(%)	13.5	11.8	12.8	13.1	9.9	13.0	12.7

자료 : 국토교통부(각년도), "교통약자실태조사보고서".

○ 주요 특징 및 해설

-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 4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제3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2017~2021)」), 2018년 기준으로 23.4%에 불과한 실정임
- 경기도 저상버스대수는 2018년 기준으로 1,343대이고 보급률은 12.7%임
-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노선을 발굴하고 저상버스 차종의 다양화가 필요함

○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국 7.32명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 5.37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경기도는 5.32명)
- 교통안전지수란 교통사고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표인데 2019년 전국 기준 78.98점으로 2015년 78.50점에 비해 소폭 상승
-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의 종합적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

○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어린이 등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교통사고 원인에 맞게 수립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1,48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83명보다 3배가량 많음
- 2019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 11,054건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 2,920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 중 약 26.4%가 경기도에서 발생
- 2015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세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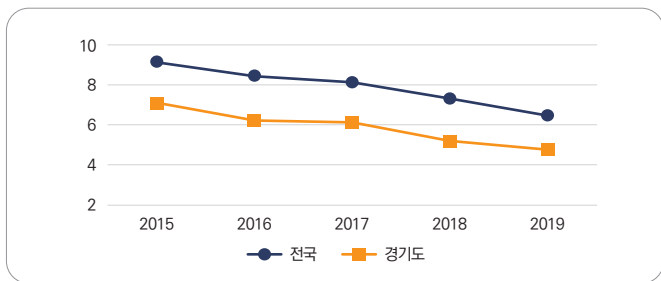
- 2019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 33,239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10.4% 증가
- 경기도는 2019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6,445건 발생했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14.5% 증가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시급함

9-2-1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 10만 명당)

○ 정의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여 계산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9.13	8.45	8.13	7.32	6.48
경기도		7.10	6.23	6.12	5.23	4.77
OECD	평균	5.51	5.54	5.19	5.37	-
회원국	대한민국 순위	3위	4위	4위	7위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각년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국가교통사고 발생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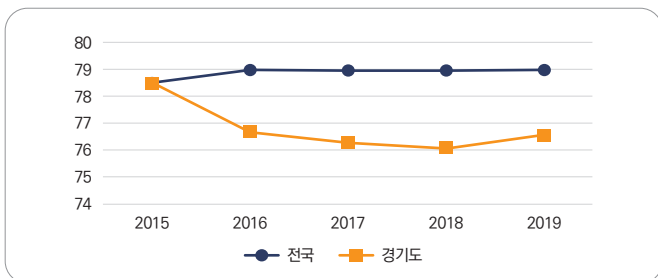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37명이며 우리나라는 7.32명으로 7위를 차지함
- 경기도는 교통사고로 인구 10만 명당 5.2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9-2-2 교통안전지수

○ 정의

- 교통사고 심각도별(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부상신고사고)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지역의 교통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

○ 전국 및 경기도 교통안전지수(단위 : 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점수	78.50	78.98	78.97	78.97	78.98
	개선율(%)	4.39	0.61	-0.01	0.00	0.01
경기도	점수	78.50	76.70	76.29	76.06	76.54
	개선율(%)	1.29	-2.30	-0.53	-0.30	0.64

주 : 개선율(%) = (전년도점수 - 당해연도점수) ÷ 전년도점수 × 100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각년도). "교통안전지수".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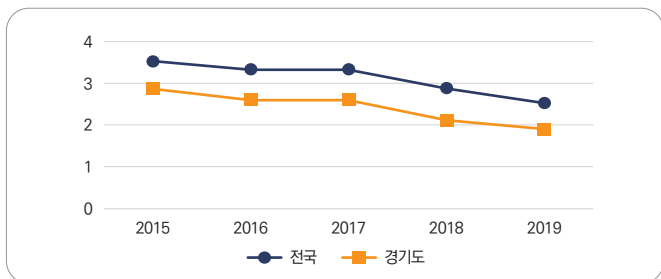
- 전국 평균 교통안전지수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78점대를 유지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 소폭 상승함
- 교통안전지수는 도로환경(교차로, 단일로), 사업용자동차(버스, 화물, 택시), 자전거 및 이륜차의 사고발생 유형에 따라 평가됨

9-2-3 보행자 교통사고

○ 정의

- 보행자 교통사고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서,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의미함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사고건수(건)	101.5	96.1	92.2	89.0	90.3
	사망자수(명)	3.5	3.3	3.3	2.9	2.5
경기도	사고건수(건)	86.3	81.6	80.8	78.6	77.6
	사망자수(명)	2.9	2.6	2.6	2.1	1.9
OECD 회원국	사망자수 평균(명)	1.1	1.1	1.0	1.1	-
	대한민국 순위	2	2	2	2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각년도). “부문별 교통사고현황”, “OECD 국가교통사고 발생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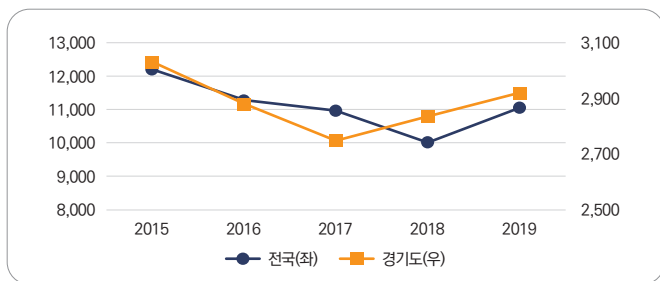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2.9명 발생하고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1명, 경기도는 2.1명으로 우리나라 사망자수가 높게 발생하고 있음

9-2-4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정의

- 도로교통사고 중 연령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전국 및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사고건수	사고건수(건)	12,191	11,264	10,960	10,009	11,054
		증가율(%)	0.7	-7.6	-2.7	-8.7	10.4
	사망자수(명)		65	71	54	34	28
경기도	사고건수	사고건수(건)	3,030	2,881	2,748	2,835	2,920
		증가율(%)	9.7	-4.9	-4.6	3.2	3.0
	사망자수(명)		13	15	10	14	1

주: 증가율 = (해당년도 사고건수 - 전년도 사고건수) ÷ 전년도 사고건수 × 100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각년도).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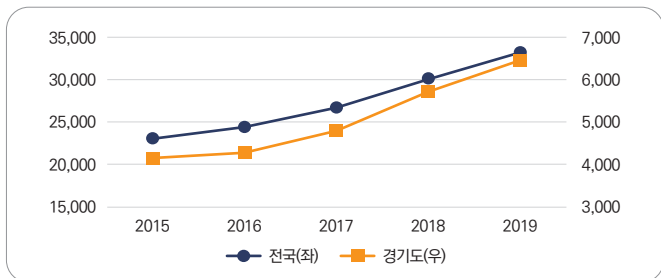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에는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는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9-2-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

정의

- 도로교통사고 중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를 의미함

전국 및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사고건수	사고건수(건)	23,063	24,429	26,713	30,012	33,239
		증가율(%)	13.8	5.9	9.3	12.3	10.8
	사망자수(명)		815	759	848	843	769
경기도	사고건수	사고건수(건)	4,160	4,285	4,795	5,730	6,445
		증가율(%)	25.5	3.0	11.9	19.5	12.5
	사망자수(명)		113	96	126	112	101

주: 증가율 = (해당년도 사고건수 - 전년도 사고건수) ÷ 전년도 사고건수 × 100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각년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주요 특징 및 해설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333만 명, 경기도는 74만 명으로 나타남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전국은 33,239건, 경기도는 6,445건이 발생하여 감소대책이 절실함

○ 경기도는 수도권 통행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통행에서 경기도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37.3%이고 승용차 분담률은 57.4%로 승용차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경기도 대중교통 분담률은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49.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
- 이러한 결과는 서울, 인천과 비교하여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철도공급 수준이 낮아 철도/지하철의 분담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친환경 교통수단의 분담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아직은 낮은 실정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보행 분담률은 24.1%이고 자전거 분담률은 1.7%에 불과함
- 공공자전거 도입, 자전거 도로 건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분담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음
-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3.4%이며, 경기도는 3.5%로 서울 4.4%, 인천 3.8% 보다 낮은 수준임

○ 교통부문에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전국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00~18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
- 경기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전국보다 급격히 증가
- 국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0%로 지난 18년 동안 7.0% 정도 증가

○ 대중교통 분담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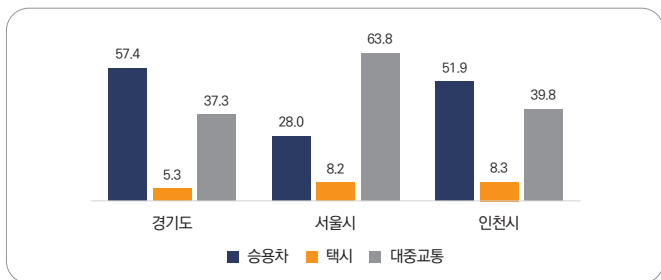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공급 수준을 높여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의 건설뿐 아니라 도심부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9-3-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정의

- 경기·서울·인천의 대도시권(수도권) 광역통행 수단분담률을 의미함

○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2019년 기준, 단위 : %)



주 : 수도권 내부 통행량 분석결과(도보, 자전거, 이륜차 등 기타수단 제외)

구분	승용차	택시	대중교통			합계
			버스	철도/지하철	소계	
수도권	43.7	6.9	29.9	19.5	49.4	100
경기도	57.4	5.3	28.3	9.1	37.3	100
서울시	28.0	8.2	32.4	31.4	63.8	100
인천시	51.9	8.3	26.2	13.6	39.8	100

자료 : 국가교통DB 수도권 수단OD(2019년 기준).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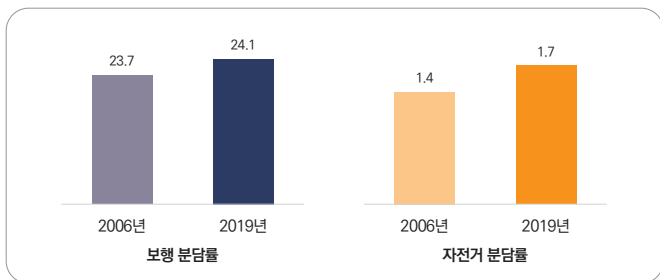
- 경기도 대중교통 분담률은 37.3%로 서울 63.8%에 비하여 대중교통 분담률이 매우 낮고 인천 39.8%에 비해서도 낮음
- 경기도의 승용차 분담률은 57.4%로 서울 28.0%에 비하여 승용차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경기도 버스 분담률(28.3%)은 수도권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철도공급 수준이 서울과 인천에 비해 낮기 때문에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

9-3-2 보행 및 자전거 부담률

○ 정의

- 총 수단통행량 중 도보와 자전거 통행량의 비율을 의미

○ 경기도 보행 및 자전거 부담률(단위 : %)



주 : 수도권 내부 통행량 분석결과

구분	보행 부담률(%)			자전거 부담률(%)		
	2006년	2019년	변화	2006년	2019년	변화
수도권	21.7	23.7	2.0	1.3	1.7	0.4
경기도	23.7	24.1	0.4	1.4	1.7	0.3
서울시	19.7	23.3	3.6	1.3	1.7	0.3
인천시	23.4	23.9	0.4	1.0	1.7	0.6

자료 : 국가교통DB 수도권 수단OD(2006년, 2019년 기준).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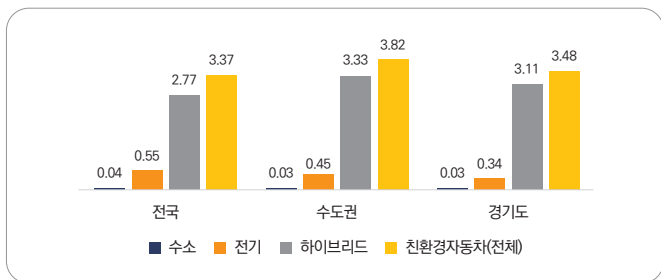
- 2006년~2019년 동안 수도권과 경기도의 보행 및 자전거 부담률이 다소 증가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보행 부담률은 23.7%이고, 자전거 부담률 1.7%임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보행 부담률은 24.1%이고 자전거 부담률은 1.7%로 나타나 보행 부담률이 서울과 인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9-3-3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 정의

-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서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의 비율을 의미함

○ 전국 및 수도권·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등록대수(대)				보급률(%)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전체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전체
전국	10,906	134,962	674,461	820,329	0.04	0.55	2.77	3.37
수도권	3,737	49,236	360,581	413,554	0.03	0.45	3.33	3.82
경기도	1,578	20,477	186,711	208,766	0.03	0.34	3.11	3.48
서울시	1,671	23,393	115,280	140,344	0.05	0.74	3.65	4.44
인천시	488	5,366	58,590	64,444	0.03	0.32	3.49	3.84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2020.12월말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78).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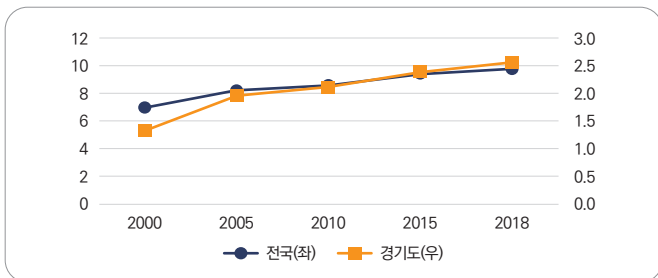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82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3.37%를 차지
- 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 8천대로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3.48%)은 서울(4.44%), 인천(3.84%)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9-3-4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정의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의 에너지 분야 중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한 이산화탄소 환산량임

○ 전국 및 경기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 만톤 CO₂eq.)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연평균 증가율
전국 배출량	6.99	8.18	8.54	9.42	9.81	1.9
경기도						
배출량	1.32	1.97	2.11	2.38	2.55	3.7
전국비중(%)	18.9	24.0	24.6	25.2	26.0	-
OECD 국가순위	11위	11위	11위	10위	10위	-

주 : OECD 국가순위는 37개 OECD 가입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순위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공표(<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OECD, *Stat Greenhouse gas emissions*(<https://stats.oecd.org/>).

○ 주요 특징 및 해설

-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만 8천 톤CO₂eq로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많으며 경기도는 2만 5천 톤CO₂eq로 전국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1.9%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경기도는 이보다 높은 3.7% 증가율로 증가해 오
- 경기도가 국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9%에서 2018년 26.0%까지 증가해 왔고 국가순위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지속적인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 사회재난은 인간의 부주의나 기술적 문제에 의한 사고성 재난, 고의성에 의한 범죄성, 재난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오염에 의한 재난 등을 포함
- 각종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고도화·복잡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대형화
- 안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대표적 사회재난인 산업재해, 화재, 5대 강력범죄 발생은 감소세

- 산업재해 사망자의 50%는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40%를 차지하고 소규모사업장 및 고령 근로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
- 산업재해 사망률은 감소추세이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화재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화재의 대형화에 따라 피해 규모는 증가
- 5대 강력범죄 발생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 최근 소폭 증가했으며, 살인, 강도, 폭력이 감소한 반면 성범죄 및 절도는 증가

○ 사회재난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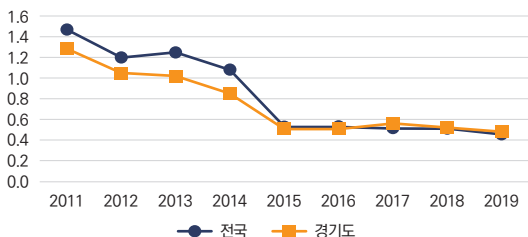
- 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신체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배분을 유도
-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7분) 확보 등 제도 및 규정에 대한 개선 검토(골든타임 도착률 전국 65.1%, 경기도 47.4%)
- 범죄 저감을 위한 범죄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 파악 및 방범용 CCTV 증설을 통한 예방 강화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CCTV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할 필요

9-4-1 산업재해 사망률

○ 정의

-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업무상 사고(재해)나 질병을 포함

○ 전국 및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률(만 명당, 단위 : %)



주 :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47	1.20	1.25	1.08	0.53	0.53	0.52	0.51	0.46
경기도	1.28	1.05	1.02	0.85	0.51	0.51	0.56	0.52	0.48

자료 : 안전보건공단(각년도). "산업재해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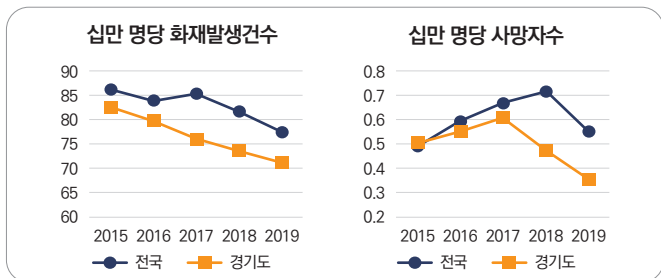
- 산업재해에 의한 사고사망률은 2015년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정체 상태이며, 2019년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855명(경기도 217명)
 - 사고사망자는 건설업(428명, 50.1%), 5~49인 사업장(359명, 42.0%), 60세 이상 근로자(285명, 33.3%), 떨어짐(347명, 40.6%)이 가장 많음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 대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건설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
- ※ 각국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

9-4-2 화재사고건수

○ 정의

- 의도하지 않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화학적인 폭발현상

○ 전국 및 경기도 화재발생건수 및 사망자수(십만 명당, 단위 : 건수, 명)



구분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화재발생건수	86.2	84.0	85.3	81.7	77.3
	화재사망자수	0.49	0.59	0.67	0.71	0.55
경기도	화재발생건수	82.5	79.8	76.1	73.7	71.2
	화재사망자수	0.50	0.55	0.61	0.47	0.35

자료 :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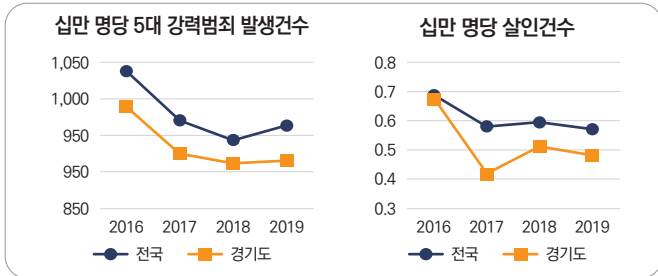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재난인 화재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화재에 의한 사망자수는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
- 최근 3년(2017~19년) 동안 화재에 의한 전국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42,206건, 화재사망자수는 333명, 재산피해는 6,417억 발생
- 화재사고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가장 높게 발생
-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재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십만 명당 0.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9-4-3 5대 강력범죄건수

○ 정의

-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들로, 경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 지표

○ 전국 및 경기도 5대 강력범죄 및 살인발생건수(십만 명당, 단위 : 건수)



구분	기준	2016	2017	2018	2019
전국	5대 강력범죄	1,038	971	945	964
	살인	0.69	0.58	0.60	0.57
경기도	5대 강력범죄	989	925	912	916
	살인	0.68	0.42	0.51	0.48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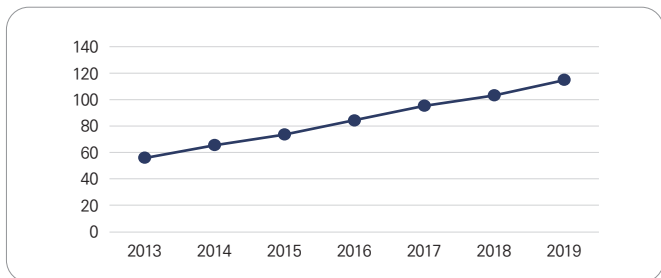
- 5대 강력범죄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다소 증가
- 최근 3년(2017~19년) 동안 5대 강력범죄 평균비율은 폭력(58.2%), 절도(36.7%), 강간(4.8%), 강도(0.2%), 살인(0.2%) 순임
- 5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폭력 범죄는 감소세이나, 강간 등 성범죄는 증가세이고 절도범죄도 2019년에 급격히 증가
- 2018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의 인구 십만 명당 살인건수는 평균 2.2건이며, 한국은 0.6건으로 5위를 차지하여 양호한 수준

9-4-4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

○ 정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교통수집정보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 대수

○ 전국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단위 : 만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56.6	65.5	73.9	84.5	95.4	103.3	114.9
범죄예방	26.0	29.1	34.1	40.9	45.9	51.0	59.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7.8	33.3	36.3	39.7	44.4	47.0	50.3
교통단속	1.7	1.9	2.1	2.4	3.0	3.0	3.3
교통정보수집·분석	1.1	1.2	1.4	1.6	2.2	2.3	2.0

자료 : 행정안전부(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 범죄예방, 시설안전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및 사고 저감을 위하여 CCTV 설치 대수는 증가 추세(2013~19년 동안 연평균 12.6%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용도별 CCTV 설치는 범죄예방 51.6%, 시설안전·화재예방 43.8%, 교통 관련 4.6% 순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 필요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안전취약계층은 35%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세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느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65세 이상) 증가로 안전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14세 이하) 비율은 소폭 감소
- 2015년부터 2019년 장애인등록 비중은 매년 소폭 상승(4.9% → 5.1%)하고 있으며,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년층에 해당

○ 안전사고에 의한 어린이와 노인 사망률은 다른 연령층 대비 3.6배

-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모두 감소세이나, 2019년 기준으로 다른 연령층 대비 운수사고(4.6배), 추락사고(7.6배), 익사(4.1배), 화재(5.0배), 중독(1.4배) 등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임
-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 주원인은 운수사고와 추락이 높은 비중을 차지
-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능력 저하는 장애로 이어지거나 안전사고에 따른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안전취약계층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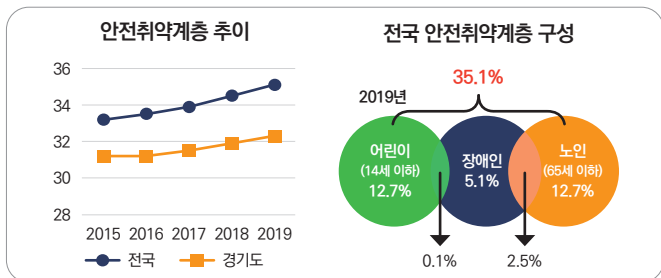
- 안전사고유형은 동일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따른 취약성 원인은 다르므로, 사고 유형별 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를 위한 안전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며 복지사업과 연계한 안전지원대책을 검토

9-5-1 안전취약계층 비율

○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9의 3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정의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대비 안전취약계층 현황(단위 : %)



주 : 안전취약계층 총비율은 연령에 따른 취약계층과 장애인 중복을 고려하여 산출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33.2	33.5	33.9	34.5	35.1
경기도	31.2	31.2	31.5	31.9	3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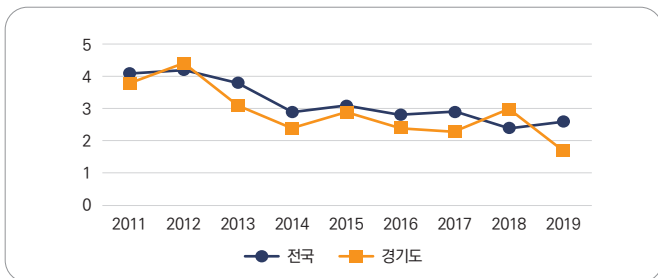
- 전체 인구 대비 신체적·정신적 안전취약계층은 35.1%로 3명당 1명 이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경기도는 32.3%)
- 아동 비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서 노인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짐
- 장애인 등록비율은 소폭 상승(2015년 4.9% → 2019년 5.1%)
- 신체적·정신적 취약요소(나이 및 장애)를 둘 다 갖춘 취약계층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약 2.6%로 나타남
- 노년층 장애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9-5-2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 정의

- 아동인구(0~14세) 중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질병을 제외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비율

○ 전국 및 경기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십만 명당,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1	4.2	3.8	2.9	3.1	2.8	2.9
경기도	3.8	4.4	3.1	2.4	2.9	2.4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과(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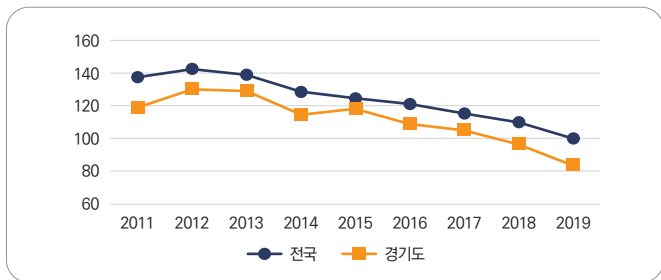
-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십만 명당)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6명(경기도 1.7명)을 기록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아동 안전사고 사망 유형별 비율은 운수사고(32.3%)가 가장 높고 추락(16.2%), 익사(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사고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2.8명으로 OECD 32개국 평균(3.1명)에 비해 낮고 12번째에 위치함

9-5-3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

○ 정의

- 노인인구(65세 이상) 중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질병을 제외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비율

○ 전국 및 경기도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십만 명당,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137.7	142.3	139.1	128.3	124.5	120.9	115.4
경기도	119.5	129.6	128.7	114.7	118.4	109.0	10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과(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십만 명당)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나,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00명(경기도 83.5명)을 기록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
- 2019년 기준으로 노인 안전사고 사망 유형별 비율은 운수사고(26.1%)가 가장 높고, 추락(20.8%), 익사(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노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39.3% → 2019년 45.5%)하고 있음
- 노인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 외에 자살에 의한 사망은 2019년 기준으로 십만 명당 46.6명을 기록하여 전체 연령 평균 26.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10장

•

도시·주택·균형발전

10-1 주택 현황

10-2 주택시장

10-3 주거복지

10-4 주택소유현황

10-5 균형발전지수

10-6 수도권규제

○ 주택 재고는 양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향후에도 양질의 적절한 주택 공급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의 절대 부족 해소를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집중한 결과,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0.5% (경기도 97.3%)로 100%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04.8% (경기도 101.5%)임
-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1995년 214.5호(경기도 210.0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411.6호(경기도 374.3호)임
-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안정세를 보이거나 1·2인 가구증가, 경제적 변인, 주택의 노후화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적절한 양질의 주택 공급 필요

○ 자가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현재처럼 유지되는 반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난 10년간(2008~19년) 전국 자가점유율은 56.4%에서 58.0%로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임차부문은 전세보다 월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23.9%로 증가한 전국 월세가구 비율은 전세가구 비율(19.6%)을 추월한 이후 2019년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6년 이후 월세가구 비율(23.3%)이 전세가구 비율(19.9%)보다 높게 나타남

○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공익적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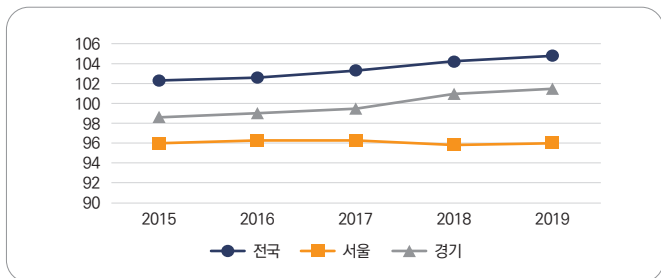
- 그동안 주택공급 정책은 신규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자가주택 거주 기회를 늘리고 필터링 효과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임대시장의 불안정으로 한계를 나타냄
- 향후 임차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10-1-1 주택보급률

○ 정의

- 주택보급률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택재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수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전국 및 서울·경기 주택보급률(단위 : %)



주 :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가구수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주택수	19,559	19,877	20,313	20,818	21,310
	주택보급률	102.3	102.6	103.3	104.2	104.8
경기도	가구수	4,385	4,484	4,603	4,752	4,908
	주택수	4,329	4,444	4,580	4,798	4,979
	주택보급률	98.7	99.1	99.5	101.0	101.5

자료 : 국토교통부(각년도). "주택보급률".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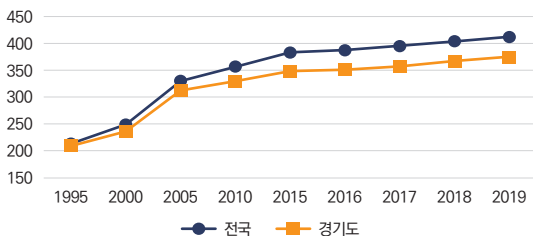
-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주택수가 꾸준히 늘어나, 2015년 주택수는 19,559천호에서 2019년 21,310천호로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로 100%를 상회하고, 서울(96.0%)을 제외한 전체 시도에서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101.5%를 기록

10-1-2 주택수(인구 천 명당)

○ 정의

-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여 주택보급률에 비해 주택의 양적수급 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전국 및 경기도 인구 천 명당 주택수(단위: 호)



주1 : 인구 천 명당 주택수 = (총주택수 ÷ 총인구) × 1,000

주2 : 2000년 이전까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1호로 산정한 주택수이고, 2005년 이후부터는 다가구주택의 각 구분거처를 1호로 산정한 주택수이며, 2010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자료임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248.7	330.4	356.8	383.0	387.7	395.0	403.2	411.6
수도권	221.6	314.7	336.2	356.8	360.8	365.8	372.9	380.1
경기도	236.6	311.8	329.5	346.9	350.7	356.4	366.2	374.3

자료 : 국토교통부(각년도). “주택보급률”.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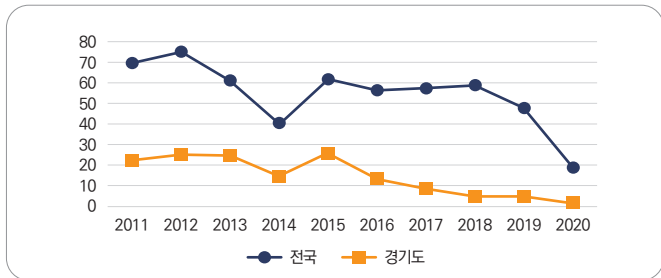
-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2010년 356.8호에서 2019년 411.6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374.3호로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10-1-3 미분양 주택수

○ 정의

- 미분양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은 주택수를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미분양 주택수(단위 : 천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69.8	74.8	61.1	40.4	61.5	56.4	57.3	58.8	47.8	19.0
수도권	27.9	32.5	33.2	19.8	30.6	16.7	10.4	6.3	6.2	2.1
경기도	22.4	25.0	24.8	14.7	25.9	13.4	8.8	5.0	5.1	1.6

자료 : 국토교통부(각년도),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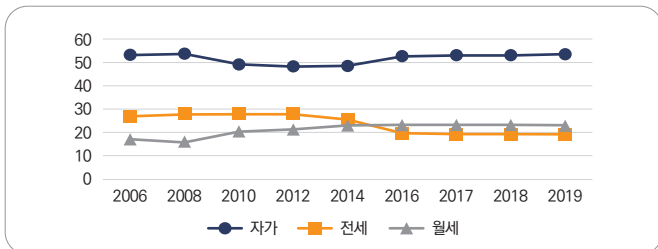
-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2011년 69,807호에서 2020년 19,005호로 급격하게 감소
- 85㎡초과 미분양주택수가 2019년 3,833호에서 2020년 700호로 81.7%p나 감소

10-1-4 주거점유형태

○ 정의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를 파악하는 지표

○ 경기도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단위 : %)



주 : 현재 거주하고 주택의 점유형태별 일반가구의 비율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국	자가	55.6	56.4	54.3	53.8	53.6	56.8	57.7	57.7	58.0
	전세	22.4	22.3	21.7	21.8	19.6	15.5	15.2	15.2	15.1
	월세	19.0	18.2	21.5	21.6	23.9	23.7	23.3	23.1	23.0
	무상	3.1	3.0	2.7	2.8	2.8	4.0	3.9	4.0	3.9
경기	자가	53.2	53.7	49.3	48.3	48.7	52.7	53.0	53.0	53.5
	전세	26.9	27.8	27.9	27.9	25.6	19.9	19.5	19.4	19.2
	월세	17.2	15.8	20.6	21.3	23.1	23.3	23.4	23.5	23.2
	무상	2.7	2.7	2.2	2.6	2.5	4.1	4.2	4.2	4.1

자료 : 국토교통부(각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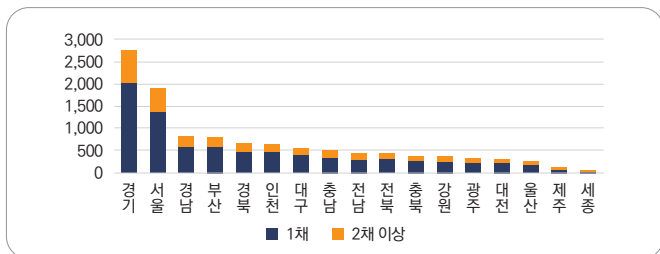
- 월세와 자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전세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 2014년을 기점으로 전국 월세가구 비율이 전세가구 비율을 추월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자가 58.0%, 전세 15.1%, 월세 23.0%를 기록
- 경기도는 전세비율(19.2%)과 월세비율(23.2%)이 전국보다 높은 반면, 자가 비율(53.5%)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10-1-5 주택소유 가구수(주택소유물건수별)

○ 정의

- 주택소유물건수는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수를 합산하여 집계한 지표(동일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1건으로 집계)

○ 시도별 주택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 가구수(2019년 기준, 단위: 천가구)



년도	거주지역	합계	1채	비율(%)	2채이상	비율(%)
2018	전국	11,234	8,153	(72.6)	3,081	(27.4)
2019	전국	11,456	8,288	(72.3)	3,168	(27.7)
	서울	1,895	1,373	(72.5)	521	(27.5)
	경기	2,745	2,011	(73.2)	735	(26.8)
	세종	69	47	(68.1)	22	(31.9)
	충남	505	348	(68.9)	157	(31.1)
	제주	141	93	(65.9)	48	(34.1)

자료 : 통계청(2019). "주택소유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주택을 소유한 1,146만 가구 중 317만 가구로 27.7%를 차지
- 경기도에서 2019년 기준으로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는 201만 가구이고 2채 소유한 가구는 73.5만 가구로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26.8%를 차지
- 2채 이상 주택 소유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4.1%), 세종(31.9%), 충남(31.1%) 순으로 나타남

○ 주택가격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장기적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

-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

○ 매매수요 심리를 안정화시키며 수요다변화에 대응하는 공급체계 마련

-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수요심리가 자극되어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택가격의 격차는 커짐
- 1인 가구 및 노인, 외국인 가구 등 증가와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와 함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주택의 면적이나 유형, 주거환경 등에 대한 수요 다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임대차신고 의무화 등 임대차 3법 등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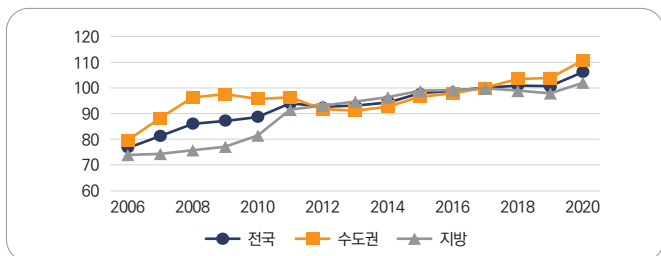
- 계속된 저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했으나 임대차 3법은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2-1 주택매매가격

○ 정의

-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기준 시점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각 연도 12월)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 전국 및 수도권·지방 주택매매가격(12월 기준, 2017.11=100)



주 : 1986~2002년은 KB국민은행 변동률 반영, 2003~11년은 KB국민은행 표본을 이용하여 개선된 방식(기존 Carli 지수를 Jevons 지수로 변경)으로 작성, 2012년 이후는 한국감정원 표본으로 작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94.1	92.8	93.0	94.6	98.0	98.7	100.1	101.2	100.9	106.3
수도권	96.5	92.3	91.3	92.6	96.7	97.9	100.3	103.6	104.0	110.8
지방	91.9	93.1	94.7	96.5	99.1	99.3	100.0	99.1	98.0	102.3

자료 : 한국감정원(각년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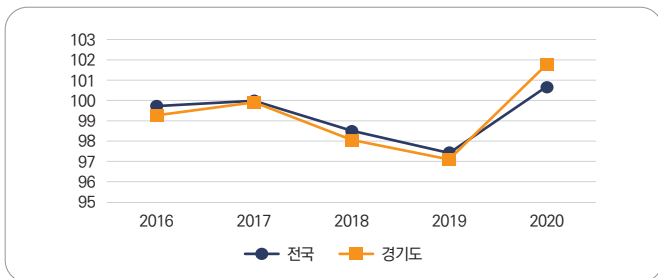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소유 가구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며,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전환하면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자산이 부실해지면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2008년 이전까지 침체기를 겪은 지방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였고, 2015년부터는 침체하던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최근까지 크게 상승
- 2017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방권보다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10-2-2 전월세통합가격지수

정의

- 주택전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를 전년도 전월세 주택 재고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

전국 및 경기도 주택전월세통합가격지수(12월 기준, 2017.11=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지수	변동률
전국	99.7	0.7	100.0	0.2	98.5	-1.5	97.4	-1.1	100.7	3.4
수도권	99.1	1.4	100.0	0.9	99.0	-1.0	98.3	-0.7	102.3	4.0
지방권	100.3	0.2	100.0	-0.4	98.1	-1.8	96.6	-1.5	99.3	2.7
경기도	99.3	1.4	99.9	0.6	98.1	-1.9	97.1	-1.0	101.8	4.8

자료: 한국감정원(각년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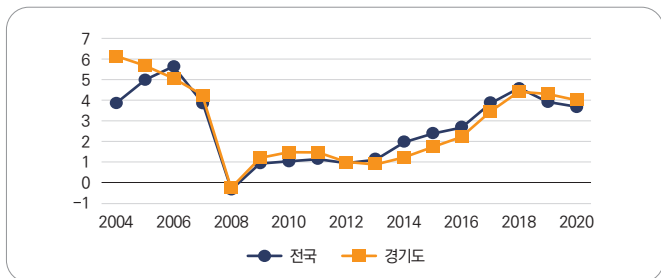
- 전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18~19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저금리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상승
- 2020년 12월 전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수도권이 4.0% 상승하여 지방(2.7%)보다 빠른 가격 상승세를 보임

10-2-3 지가변동률

○ 정의

-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 등에 지가변동률이 활용됨

○ 전국 및 경기도 지가변동률(2014.12=100, 단위 : %)



주 : 지가변동률 = $\{(당해년 지가지수 \div 전년 지가지수) - 1\} \times 10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2	1.0	1.1	2.0	2.4	2.7	3.9	4.6	3.9	3.7
서울	1.0	0.4	1.2	2.7	2.7	3.0	4.3	6.1	5.3	4.8
경기	1.5	1.0	0.9	1.2	1.7	2.2	3.5	4.4	4.3	4.0

자료 : 국토교통부(각년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co.kr).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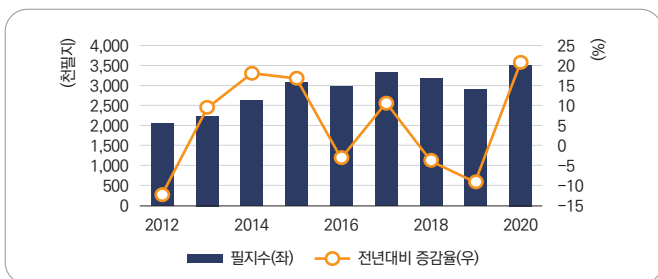
- 전국 지가변동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상승률이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이후 전국 지가변동률은 4.0% 내외로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냄

10-2-4 토지거래량

○ 정의

- 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대상 부동산거래 통계를 취합한 자료로, 부동산 정책 효율성 및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지표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전국 토지거래량(단위 : 천필지,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필지수 (천필지)	2,044	2,241	2,643	3,087	2,995	3,315	3,186	2,902	3,506
전년대비 증감률(%)	-12.2	9.6	18.0	16.8	-3.0	10.7	-3.9	-8.9	20.8
면적(백만㎡)	1,823	1,826	1,968	2,181	2,176	2,206	2,071	1,870	2,051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부동산거래현황”.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co.kr).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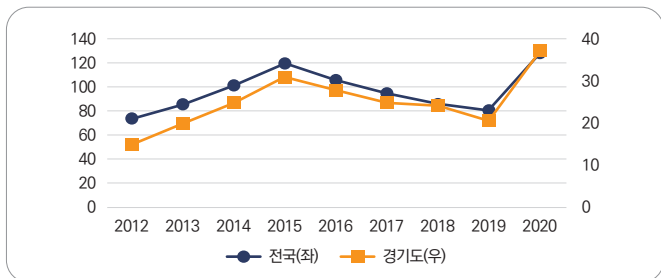
- 2020년 전체 토지거래량(건축물 부속토지 포함)은 약 350만 6천 필지 (2,051km²,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2019년 전체 토지거래량 대비 20.8% 증가
- 저금리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 거래 증가(21.4%)와 전국 주거용 토지 거래 증가(32.4%)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 수준을 보임

10-2-5 주택매매 실거래량

○ 정의

-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와 아파트 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합한 거래량을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주택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 단위 : 만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73.5	85.2	100.5	119.4	105.3	94.7	85.6	80.5	127.9
수도권	27.2	36.3	46.2	61.2	56.8	50.4	47.1	39.9	64.3
경기도	15.1	20.0	24.8	30.8	27.7	24.8	24.1	20.6	37.1
지방권	46.3	48.9	54.3	58.2	48.5	44.3	38.6	40.6	63.7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부동산거래현황”.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co.kr).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5년 119.4만 건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127.9만 건이나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 2020년 수도권 거래량이 전년대비 61.1% 증가하여 지방(56.7%)보다 증가율이 컸으며, 특히 경기도의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80.3%로 나타나 수도권 주택매매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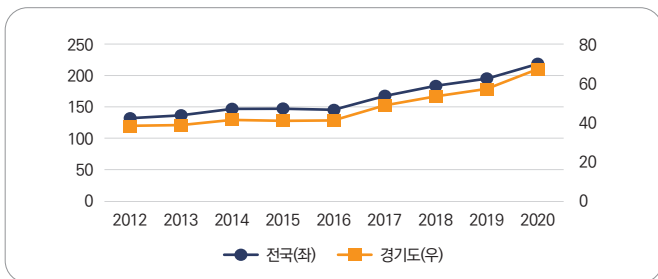
10-2-6 주택 전월세 실거래량

○ 정의

-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전월세 거래량을 의미

※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전국 및 경기도 주택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기준, 단위 : 만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32.4	137.3	146.7	147.2	146.0	167.4	183.1	195.4	219.0
수도권	88.8	91.5	97.8	97.2	95.8	111.0	121.8	129.4	148.7
경기도	38.5	38.8	41.4	41.0	41.1	48.7	53.4	57.1	67.3
지방권	43.6	45.9	48.8	50.0	50.2	56.4	61.3	66.1	70.2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각년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월세 거래량은 2012년부터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주택 전월세 거래량과 전년 대비 증가율 각각 219만건, 12.0%로 최대치를 기록
- 2020년 수도권(15.0%)과 경기도(17.9%)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이 지방(6.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

-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9년 4.5%로 잔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공급체계 혁신을 통해 재고율을 20% 이상으로 높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도록 노력
- 지역간 수급불균형과 특정 유형의 공급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 필요
- 2019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72.4%(120.2만호)가 NH가 공급한 것으로 여전히 중앙에 의존적인 공급구조의 변화가 필요

○ 주거급여와 같은 수요자 지원도 동시에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임대료를 무한정 낮추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바, 임대료 보조 제도를 병행 시행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15%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 주거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아동 빈곤가구 등 잔여적 계층의 주거지원 대책을 보완할 필요

○ 노후 주거지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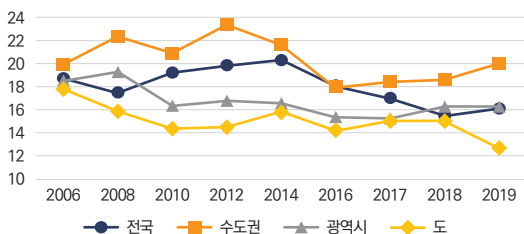
- 현재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은 18.2%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성 시가지 내 노후주택의 개량, 정비, 재생 등의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도심에 적정한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임

10-3-1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정의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단위 %)



주1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주2 :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 지역)에 포함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국	18.7	17.5	19.2	19.8	20.3	18.1	17.0	15.5	16.1
수도권	19.9	22.3	20.9	23.3	21.6	17.9	18.4	18.6	20.0
광역시	18.5	19.3	16.4	16.8	16.6	15.4	15.3	16.3	16.3
도	17.8	15.9	14.4	14.5	15.8	14.2	15.0	15.0	12.7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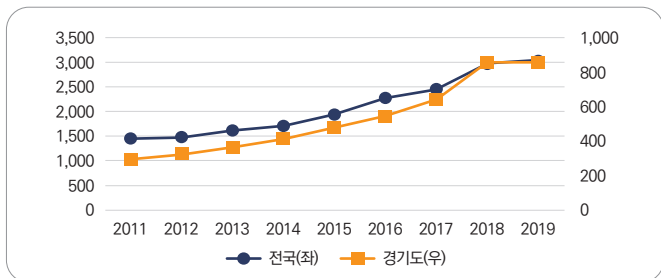
- 전국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9년 16.1%로 2018년보다 0.6%p 상승
- 수도권은 2016년 이후 20% 아래로 떨어졌으나, 2019년에는 20.0%로 2018년보다 2.4%p 상승
-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지방 거주자에 비해 3.7%p 높게 나타남

10-3-2 임대주택 재고

○ 정의

- 임대주택 재고는 현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득하여 임대 중에 있는 주택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동향조사 및 임대주택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 전국 및 경기도 임대주택 재고(12월 말 기준, 단위 : 천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계	1,460	1,487	1,616	1,709	1,938	2,273	2,444	2,985	3,045
	공공부문	1,019	1,038	1,125	1,177	1,257	1,358	1,441	1,570	1,660
	민간부문	440	449	492	532	680	916	1,003	1,414	1,385
경기도	계	297	325	364	411	479	546	644	859	859
	공공부문	224	243	264	287	309	347	387	428	464
	민간부문	73	82	100	124	170	199	257	432	394

자료 : 국토교통부(시도별 자료).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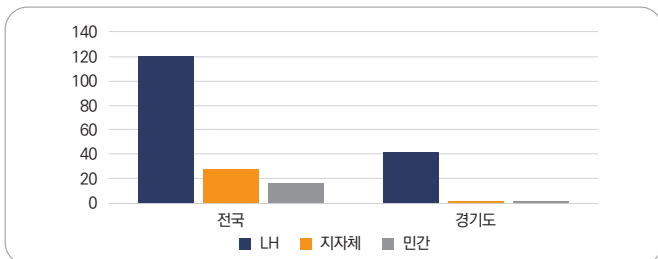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2019년 감소
-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건설형 공공부문 임대주택 유형 통일

10-3-3 공공임대주택 재고

○ 정의

- 임대주택 재고는 현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득하여 임대 중에 있는 주택 물량을 의미

○ 전국 및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2019년 기준, 단위 : 만호)



구분	계	공급주체별			임대형태별				
		LH	지자체	민간	장기공공임대	분양전환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사원임대
전국	166.0	120.2	28.7	17.1	95.9	27.4	26.6	14.6	1.5
수도권	85.5	59.4	23.4	2.7	51.7	9.2	15.9	8.1	0.6
경기도	46.4	41.9	2.0	2.6	27.5	8.1	7.0	3.2	0.6
지방	80.5	60.8	5.3	14.4	44.2	18.2	10.6	6.5	0.9

주1 : 장기공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주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 10년임대

자료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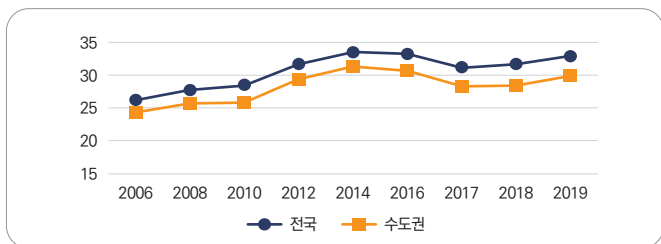
- 2019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166만호의 51.5%(85.5만호)는 수도권에, 48.5%(80.5만호)는 지방에 위치하며,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46.4만호(28.0%)로 가장 많음
- 사업주체별로는 LH 120.2만호(72.4%), 지자체 28.7만호(17.3%), 민간 17.1만호(10.3%)로 대부분 시도가 LH의 재고량이 많지만, 서울은 지자체, 전남은 민간이 보유한 재고량이 가장 많음

10-3-4 1인당 주거면적

○ 정의

-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적절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 질 측정의 핵심 지표

○ 전국 및 수도권 1인당 주거면적(단위 : m^2)



주 : 2017년부터 공동주택의 면적을 행정자료와 연계함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지역	전국	28.5	31.7	33.5	33.2	31.2	31.7	32.9
	수도권	25.9	29.4	31.3	30.7	28.3	28.5	29.9
	광역시 등	28.3	32.6	34.5	33.2	32.0	32.5	33.3
	지방 도지역	32.4	34.6	36.2	37.1	35.1	36.1	37.3
소득 계층	하위	33.9	39.0	40.0	39.8	37.1	37.6	38.8
	중위	24.7	26.3	29.8	28.4	27.0	27.8	29.6
	상위	27.0	27.6	30.1	28.8	27.6	27.8	28.9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1인당 주거면적은 2012년 $31.7m^2$ 로 늘어난 후 최근까지 $30m^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방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 순
- 수도권과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축소
- 1인당 주거면적은 소득계층별로도 차이가 나며, 소득 하위가구가 소득 중위 가구나 상위가구에 비해 가구당 주거면적은 더 작지만 1인당 주거면적은 더 크며, 이는 소득 하위가구의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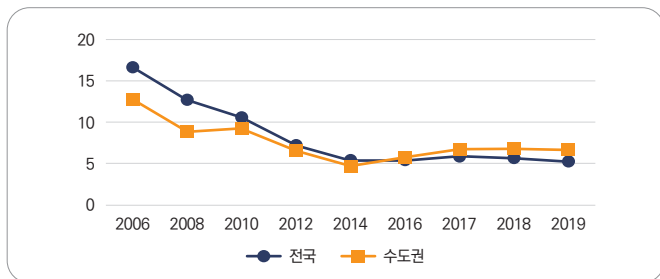
10-3-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정의

-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양적인 크기뿐 아니라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

※ 최저주거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14㎡의 방 1개에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함

○ 전국 및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단위 : %)



주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총가구수) × 100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국	16.6	12.7	10.6	7.2	5.4	5.4	5.9	5.7	5.3
수도권	12.8	8.9	9.3	6.6	4.7	5.8	6.7	6.8	6.7
광역시	17.7	13.3	10.4	5.2	4.9	5.0	4.5	4.4	4.3
지방 도지역	21.6	18.2	12.7	9.5	6.7	5.1	5.6	4.7	3.9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주거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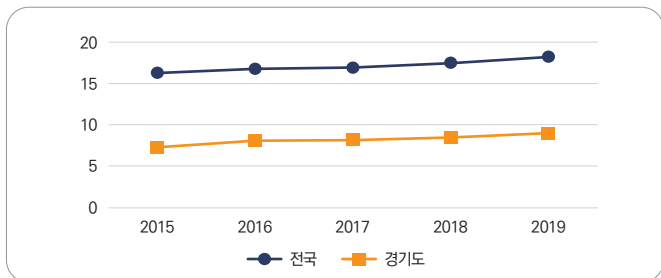
-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9년 5.3%로 크게 감소했으며,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지방 도지역이 3.9%로 낮음
- 수도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6년 12.8%에서 2019년 6.7%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광역시는 17.7%에서 4.3%, 지방 도지역은 21.6%에서 3.9%로 감소하여 도지역의 주거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10-3-6 노후주택 비율

○ 정의

- 노후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수 중에서 30년 이상이 된 주택수를 나눈 비율로, 주택의 노후도 정도를 파악하는 도시재생 지표로 활용

○ 전국 및 경기도 노후주택 비율(단위 : %)



주 : 노후주택비율 = (30년 이상 된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 1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6.3	16.8	16.9	17.5	18.2
경기도	7.3	8.1	8.2	8.5	9.0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주택수는 3,291,159호로 전체주택의 18.2%에 해당됨
- 경기도의 노후주택 비율은 9.0%로 전체 주택수 4,354,776호 중 393,542호로 나타나 전국 시도에서 세종시(6.2%) 다음으로 낮음
-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중 단독주택이 61.0%를 차지

○ 전국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상승 추세

- 전국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016년 55.5%에서 2019년 56.3%로 상승
- 경기도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2016년 55.0%에서 2019년 55.9%로 0.9%p 상승했으며, 전국보다는 낮은 편

○ 전국 주택소유 가구 중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

- 전국 주택소유 가구 중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가구는 2015년 25.5%에서 2019년 27.7%로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11,456천 가구 중 2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168천 가구로 전년 대비 2.8% 증가
-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가구 비율은 26.8%로 전국 (27.7%)에 비해 낮음

○ 주택 자산가액 기준으로 상위 분위로 갈수록 평균 소유주택수, 주택면적, 가구원수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2019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 7천 5백만 원, 평균 면적은 86.4㎡이고, 평균 가구주 연령은 55.8세, 평균 가구원수는 2.74명임

○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015년 1.32호에서 2019년 1.37호로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10분위(2.55호)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분위(0.97호)에 비해 1.58호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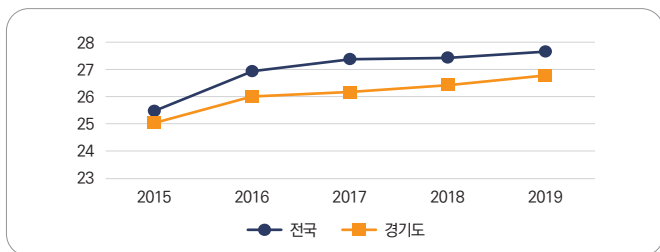
10-4-1 주택소유 가구 비율(주택소유물건수별)

○ 정의

- 주택소유물건수는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 건수를 합산하여 집계한 지표

※ 동일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1건으로 집계

○ 전국 및 경기도 주택소유 가구 중 소유물건 2건 이상 가구 비율(단위 : %)



구분	소유물건수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건	74.5	73.1	72.6	72.6	72.3
	2건 이상	25.5	26.9	27.4	27.4	27.7
경기도	1건	74.9	74.0	73.8	73.6	73.2
	2건 이상	25.1	26.0	26.2	26.4	26.8

자료 : 통계청(각년도). "주택소유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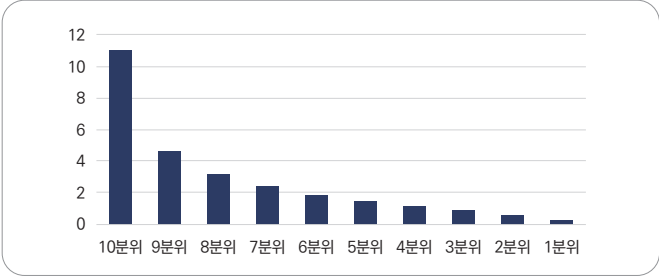
- 전국 주택소유 가구 중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가구는 2015년 25.5%에서 2019년 27.7%로 꾸준히 증가
- 2019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11,456천 가구 중 2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168천 가구로 전년 대비 2.8% 증가
-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소유물건이 2건 이상인 가구 비율은 26.8%로 전국 (27.7%)에 비해 낮음
- 2건 이상 주택소유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34.1%), 세종(31.9%), 충남(31.1%) 순으로 나타남

10-4-2 주택 자산가액(10분위별)

정의

- 가구의 주택자산 가액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자료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반영하여 집계

전국 10분위별 주택 소유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2019년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전체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주택자산 가액(억 원)	2.8	11.0	4.6	3.2	2.4	1.9	1.5	1.2	0.9	0.6	0.3
주택 면적(m ²)	86.4	120.9	109.0	98.1	90.6	85.1	80.8	76.3	72.8	68.0	62.0
가구주 연령(세)	55.8	56.5	54.9	54.3	53.9	53.8	54.0	54.9	56.4	57.9	61.4
가구원 수(명)	2.7	3.0	3.0	2.9	2.9	2.9	2.8	2.7	2.6	2.4	2.2

주 :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의 면적을 평균하였으며, 주택면적은 주거용 연면적을 집계
 자료 : 통계청(각년도). “주택소유통계”.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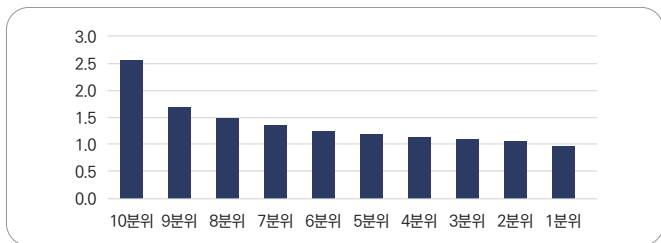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 7천 5백만 원, 평균 면적은 86.4㎡이고, 평균 가구주 연령은 55.8세, 평균 가구원수는 2.74명임
-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상위 분위로 갈수록 주택면적, 가구원수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10-4-3 소유 주택수(10분위별)

○ 정의

- 소유 주택수는 주택자산 가액별 구간에 속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을 반영한 후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수임

○ 전국 10분위별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2019년 기준, 단위: 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32	1.35	1.36	1.36	1.37
10분위	2.55	2.64	2.64	2.59	2.55
9분위	1.62	1.64	1.66	1.67	1.68
8분위	1.36	1.41	1.42	1.45	1.47
7분위	1.25	1.28	1.29	1.33	1.35
6분위	1.19	1.21	1.21	1.23	1.24
5분위	1.13	1.16	1.16	1.17	1.18
4분위	1.10	1.12	1.12	1.12	1.13
3분위	1.06	1.08	1.08	1.09	1.09
2분위	1.02	1.04	1.04	1.04	1.05
1분위	0.95	0.96	0.97	0.96	0.9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주택소유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015년 1.32호에서 2019년 1.37호로 꾸준히 증가 추세
- 2019년 기준으로 10분위(2.55호)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분위(0.97호)에 비해 1.58호 더 많음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비해 균형발전지표 수준이 높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연함

- 균형발전지표 중 핵심지표(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비해 발전되어 있음
- 균형발전 수준이 상위인 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이고, 중위인 시도는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충남, 충북, 하위인 시도는 경북, 강원, 전북, 전남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지역발전지수는 6.5점인 반면 호남권은 5.3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발전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도 고려할 필요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발전지표 측정 결과,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6개 시·군이 낙후지역으로 평가됨
- 경기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 교통 인프라, 지식기반 산업,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기 남부지역과의 격차가 심각함

○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진입

- 인구소멸지수 산출 결과 경기 북부의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등 5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평가됨

○ 수도권 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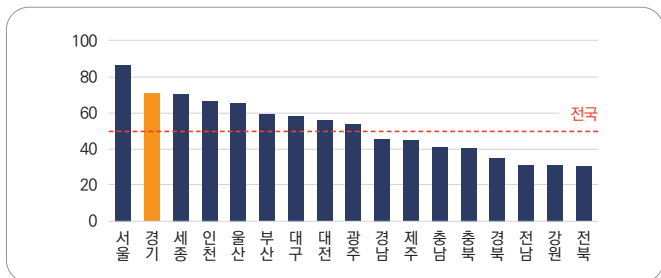
- 경기도 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시·군간 지역 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있어 수도권 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할 새로운 관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10-5-1 인구증감률 및 재정자립도(시도별)

○ 정의

- 지역간 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의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됨

○ 시도별 재정자립도(2016~18년 연평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세종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인구증감률	1.0	0.9	3.6	1.7	2.8	2.9	0.7	1.2	2.2
재정자립도	52.1	86.3	70.7	70.5	66.7	65.7	59.1	58.0	55.8
구분	광주	경남	제주	충남	충북	경북	전남	강원	전북
인구증감률	1.8	0.5	1.0	0.0	0.1	-0.5	-1.5	-0.5	-0.7
재정자립도	53.6	45.8	44.7	41.3	40.4	35.1	31.3	31.2	30.3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NABI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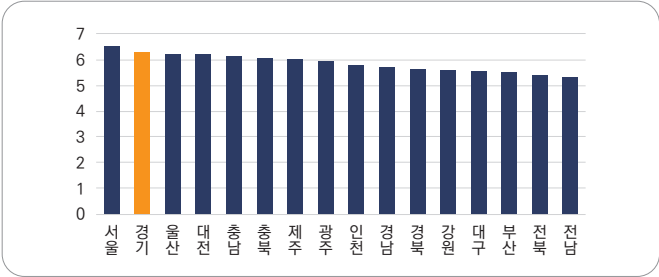
- 핵심지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를 상위(서울, 경기, 인천, 울산), 중위(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충남, 충북), 하위지역(경북, 강원, 전북, 전남)으로 구분
- 경기도는 서울과 비수도권에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1975~2015년 인구가 연평균 3.6%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2.1%)보다 높은 수치인 70.7%를 기록함

10-5-2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지역발전지수)

정의

-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여건 등 지역발전을 구성하는 제반 요인을 포괄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평가하는 지수

시도별 지역발전지수(2018년 기준, 단위: 점)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지역발전지수(종합)	6.5	6.2	5.3	5.4	5.5	5.3	5.6
지역발전지수(경제력)	6.7	6.1	4.8	5.2	5.4	4.8	5.3
지역발전지수(주민생활력)	5.9	6.4	6.5	6.0	5.8	6.6	6.2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지역발전지수(2018년 기준)
 (https://www.oecd.org/economy/reform/indicators-of-product-market-regulation/).

주요 특징 및 해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발전지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지역경쟁력지수 (소득수준, 산업발전정도, 혁신역량, 인력개발, SOC/재정력)에서 격차가 두드러짐
- 지역발전지수 중에서 주민생활력지수는 오히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지역발전지수는 서울, 경기, 울산 순으로 상위권을, 부산, 전북, 전남이 하위권을 기록하여 수도권의 지역발전 수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됨

10-5-3 경기도 지역발전지표(시군)

○ 정의

- 인구활력(인구증가율, 고령화율), 경제기반(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비율, 지식기반 산업 종사자비율), 물리적 기반시설(철도역 밀도, 상·하수도 보급률), 사회적 서비스 시설(종합병원 병상수, 도시가스보급률), 재정력(1인당 지방소득세, 경제개발비 총액)의 5개 부문 10개 지표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발전 수준을 측정

○ 경기도 시군별 지역발전지표(단위: 점)

순위	시군명	점수
A그룹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4이상
B그룹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이천시, 평택시	2이상~4미만
C그룹	김포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0이상~2미만
D그룹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5이상~0미만
E그룹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5미만

주 : 경기도 지역발전지표 개선 대안 1(A) 지표 기준.

자료 : 이상대 외(2018).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

○ 주요 특징 및 해설

- 경기도 시군별 지역발전지표 분석 결과,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이 낙후지역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발전 수준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객관적 발전 수준을 높이고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관적 만족을 제고할 필요

10-5-4 경기 남부·북부 간 격차(1)

정의

- 경기 남부·북부 간 지역격차를 핵심지표(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을 중심으로 비교

경기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지표(1)

부문	지표명	경기도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3.6	3.8	2.2
경제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70.7	50.9	37.7
주거	노후주택비율(%)	8.5	11.2	11.7
	빈집비율(%)	6.0	6.5	6.3
	상수도보급률(%)	98.3	96.7	94.5
	하수도보급률(%)	90.0	94.1	92.8
교통	도로포장률(%)	98.1	95.8	99.2
	고속도로 IC 접근성(km)	10.1	5.9	11.2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km)	30.1	18.8	35.0
	주차장 서비스권역(0.75km) 내 인구비율(%)	46.2	48.5	41.3
산업· 일자리	최근 3개년 사업체수 증감률(%)	3.0	3.4	3.2
	최근 3개년 종사자수 증감률(%)	3.8	4.0	3.4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개년 평균(%)	1.2	1.2	0.7
	상용근로자 비중(%)	65.5	65.4	58.7
교육	유아(0~5세)천 명당 보육시설수(개소/천 명)	17.4	17.3	19.9
	학령인구 천 명당 학교수(초중고)(개소/천 명)	1.5	1.7	2.5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83.0	80.1	72.0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50.4	46.7	41.7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NABIS.

주요 특징 및 해설

- 핵심지표 및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부문의 객관지표 비교 결과 경기남부와 북부 간 지표상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특히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교통 인프라, 지식기반산업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10-5-5 경기 남부·북부 간 격차(2)

○ 정의

- 경기 남부·북부 간 지역격차를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비교

○ 경기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지표(2)

부문	지표명	경기도	경기남부	경기북부
문화·여가	인구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개소)	4.1	5.9	6.9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98.2	97.5	92.4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54.7	51.2	42.8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11.1	9.7	15.3
안전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72,745	75,120	57,539
	소방서 접근성(km)	6.9	4.9	6.0
	경찰서 접근성(km)	4.5	3.4	4.1
환경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천 명)	11,226	18,494	15,945
	녹지율(%)	77.3	75.1	77.2
	1㎢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톤/㎢·년)	67,451	149,930	74,492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65.1	60.8	50.5
보건·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5.0	5.2	7.4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	34.9	33.7	33.1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개소)	16.9	16.8	31.6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병상수(병상수)	10.2	9.4	13.2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89.4	87.3	75.9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91.2	90.0	72.4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13.5	12.0	11.4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NABIS.

○ 주요 특징 및 해설

-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부문의 객관지표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안전 인프라 접근성, 도시공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경기북부의 65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10-5-6 경기도 인구소멸지수(시군)

정의

-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0.5 미만으로 가임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역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고 정의함

경기도 시군별 인구소멸지수(단위 : 점)

구분		시군명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화성시, 오산시	1.5이상
소멸위험 보통		광주시, 의왕시, 용인시, 성남시, 구리시, 고양시, 안양시, 평택시, 군포시,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1.0~1.5미만
주의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이천시, 파주시, 과천시, 광명시	0.5~1.0미만
소멸위험 지역	소멸위험 진입 단계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0.2~0.5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	0.2미만

자료 : 이상호(2020).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20.5 기준)”, 국토연구원.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 진입 단계 및 소멸고위험지역)은 총 105개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남
-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역이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해당됨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전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각종 입지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경기도 내 행정구역 면적 대비 22.3%의 지역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 내 행정구역 면적 대비 23.5%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가균형발전이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에 혜택을 제공하여 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기조로 유지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적인 균형을 도모
- 수도권 규제완화가 곧 비수도권 발전을 억제한다는 논리에 따라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

○ 규제특례와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수도권에 제외되어, 수도권 지역에서의 산업 발전과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음

- 수도권에는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어 민간의 활발한 개발 활동이 어려움
-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가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신산업 발전,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저발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10-6-1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 정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전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 공장총량제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됨

○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현황(단위 : km², 명)

권역	구분	면적(km ² , %)		인구(명, %)	
총계		10,192.5	100	13,239,666	100
과밀억제권역	계	1,173.2	11.5	6,925,841	52.3
	남부	743.4	7.3	4,992,493	37.7
	북부	429.8	4.2	1,933,348	14.6
성장관리권역	계	5,188.9	50.9	5,083,352	38.4
	남부	2,390.0	23.4	3,762,147	28.4
	북부	2,798.9	27.5	1,321,205	10.0
자연보전권역	계	3,830.4	37.6	1,230,473	9.3
	남부	2,791.8	27.4	1,039,972	7.9
	북부	1,038.6	10.2	190,501	1.4

주 : 면적과 인구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현황 대비 해당 지역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규제지도 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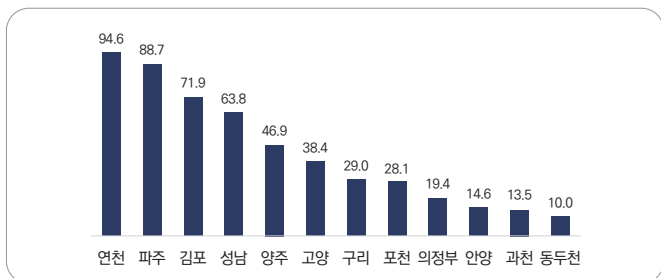
- 과밀억제권역은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성장관리권역은 이전기능 수용과 자족기반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보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 규제 중심의 기존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 동반발전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10-6-2 군사시설보호구역

○ 정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지정

○ 경기도 시군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상위 12곳, 단위 : %)



주 : 면적과 인구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현황 대비 해당 지역별 비중을 의미함

구분	행정구역(km ²)	군사시설보호구역(km ²)			
		계(통제+제한)	통제보호	제한보호	보호구역비율(%)
총계	10,183.6	2,269.6	470.4	1,799.2	22.3
경기남부	5,918.7	446.6	49.0	397.5	7.5
경기북부	4,264.9	1,823.0	421.4	1,401.7	42.6

자료 : 경기도(2020.4).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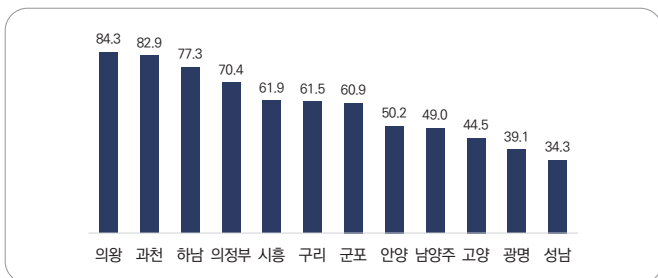
-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과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됨
-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군부대 동시 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를 받기 어려워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실정임
- 현재 제한보호구역 25km라는 구역 범위 설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군사작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구역 운용이 필요

10-6-3 개발제한보호구역

○ 정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제한됨

○ 경기도 시군 면적 대비 「개발제한보호구역」 현황(상위 12곳, 단위 : %)



주 : 면적과 인구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현황 대비 해당 지역별 비중을 의미함

구분	개발제한구역 면적(km ²)			
	행정구역 면적	개발제한구역 면적	행정구역 대비 비율(%)	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대비 비율(%)
총계	4,952.6	1,165.9	23.5	100
경기남부	3,801.1	667.7	17.6	57.3
경기북부	1,151.5	498.2	43.3	42.7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규제지도 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도내 21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3,837km²)의 30.4%, 도 전체 면적의 11.4%에 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계획이 필요함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11장

환경·에너지

11-1 탄소중립 동향

11-2 에너지 소비

11-3 유해물질

11-4 폐기물 및 녹색구매

11-5 녹지서비스

11-6 하천 관리

11-7 그린 모빌리티

11-8 친환경 경쟁력

○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 특별보고서 발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 2015년 파리협정(COP 21)은 산업화 이전 대비 21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기온상승을 1.5℃로 억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 달성해야 가능
- 2019년 EU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 딜'을 발표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고, 중국(20.9)과 일본(20.10)도 각각 2060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

○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기업의 RE100 등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

- EU는 그린딜에 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조정(BCA : Border Carbon Adjustment)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 예정
- 미국도 미국에서 기후와 환경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Quota·수입 물량 제한) 부과 추진
-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에 288개의 글로벌 기업 가입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등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주요 수출업종에서만 한 해 6,100억 원 추가 부담 발생, 2030년에는 비용부담이 3배 증가한 1조 8,700억 원으로 추정

○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선언(2020. 10. 28) 이후 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대전환 필요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2050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 목표
- 특히 제조업과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 고탄소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전환에 따른 지원 등 공정한 전환이 중요한 과제
- 탄소중립 주류화 및 이행평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개혁과 정책수단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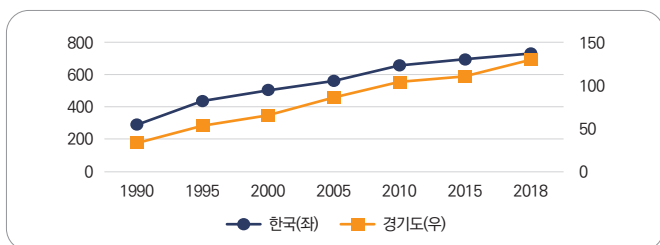
11-1-1 온실가스 배출량

○ 정의

-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직접온실가스를 CO₂ 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 이하 'CO₂eq.')으로 산정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 한국 및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 백만톤)



주 : 경기도 2005년 이전 배출량은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의 한계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1990~2018 증감률
한국	292.2	433.9	502.9	560.9	656.3	692.5	727.6	149.0
경기도	33.3	53.3	65.6	86.4	104.2	111.7	130.0	290.8
영국	797.8	751.7	716.3	695.4	614.5	512.1	465.9	-41.6
독일	1,249.5	1,121.4	1,043.4	993.2	942.3	906.3	858.4	-31.3
일본	1,270.0	1,374.5	1,374.8	1,378.8	1,302.5	1,319.8	1,238.3	-2.5
미국	6,437.0	6,771.0	7,275.4	7,391.8	6,981.6	6,676.4	6,676.6	3.7

자료 : 주요국가 자료-UNFCCC GHG Data Interface.

한국, 경기도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광역지자체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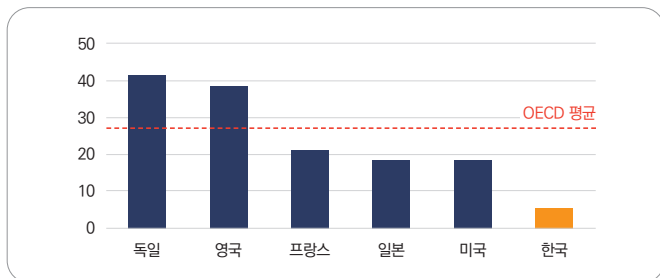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OECD 중 5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27.6백만톤)은 1990년 대비 149.0%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분야 배출량이 전체의 86.9% 차지
- 영국, 독일, 일본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각각 41.6%, 31.3%, 2.5% 감소하였고 미국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
- 경기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90.8% 증가

11-1-2 재생에너지 비중

○ 정의

-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등) 발전량 비중

○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



구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OECD평균
석탄	29.4	2.4	1.1	31.2	24.0	40.4	21.9
원자력	12.1	16.5	69.4	6.6	19.4	24.8	17.9
천연가스	15.0	40.7	6.6	34.4	37.0	26.1	29.0
재생에너지	41.6	38.5	21.2	18.6	18.4	5.6	28.5
기타	1.9	1.9	1.7	9.2	1.2	3.1	2.7

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2021). “국가기후환경회의 통계자료집”, p.41.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9년 기준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5%, 석탄 비중은 21.9% 차지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6%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석탄 발전(40.4%) 의존도가 높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제약조건으로 작용
-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비중은 3.2%로 국가수준 보다 낮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다만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도내 발전소 가동률 증가로 발전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감소의 원인
 -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 37.3%, 수력 24.0%, 해양 20.0%, 바이오 13.3%, 폐기물 5.1%, 풍력 0.2% 차지(폐기물에 비재생에너지 포함)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으로 전망(효율 향상 40%, 재생에너지 35% 순)
-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성공
-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86.9%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 환경 및 탄소배출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에너지 고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

- 시장의 가격 신호 →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 →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 → 시장 및 일자리 창출 → 저탄소 소비 및 생산 시스템 전환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중 두 번째로 저렴하며,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률도 28개국 평균(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 수준
- IEA도 최근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탄소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과세가 저탄소 기술 촉진에 중요하다고 강조

○ 에너지가격 및 전기요금 체계,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계속 지연되어 온 만큼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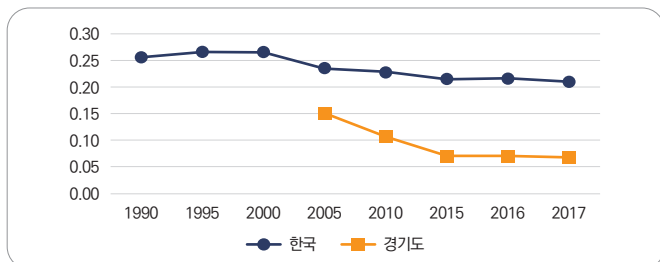
- 올해 1월부터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 개편 필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확대·강화, 원자력 이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피해비용 과세, 전력 판매시장 개방 등에 대한 로드맵 구체화 필요

11-2-1 에너지원단위

○ 정의

- 에너지원단위는 단위당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 소비량(총에너지 사용량/GDP)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 간 에너지소비효율 비교를 위한 지표

○ 한국 및 경기도 에너지원단위(단위 : toe/천\$, 2010년 USD 기준)



주 : 경기도 에너지원단위는 GRDP 백만 원 당 최종에너지소비(toe/백만 원)이며, 국가별 자료와 비교가 어려움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한국	0.26	0.27	0.27	0.24	0.23	0.22	0.22	0.21
경기도	-	-	-	0.15	0.11	0.071	0.071	0.069
영국	0.13	0.12	0.11	0.09	0.08	0.07	0.07	0.06
독일	0.14	0.12	0.11	0.11	0.10	0.08	0.08	0.08
일본	0.09	0.10	0.10	0.09	0.09	0.07	0.07	0.07
미국	0.21	0.20	0.18	0.16	0.15	0.13	0.13	0.12
OECD 평균	0.16	0.15	0.14	0.13	0.12	0.11	0.11	0.10

자료 : KESIS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세계에너지수급 및 주요 지표"(<http://www.kesis.net>).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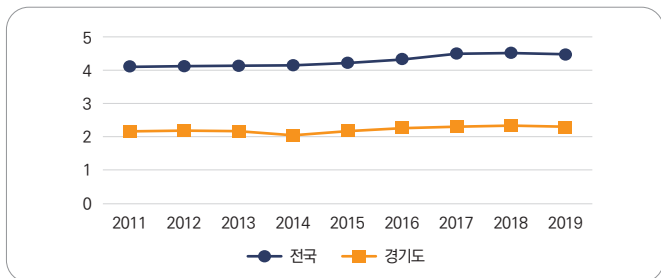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소비구조의 고착화 추세이며, 2017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단위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
- 주요 선진국은 GDP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에너지소비는 감소하여 탈동조화 실현

11-2-2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 정의

- 한 국가의 에너지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인구 대비 에너지소비량을 나타냄

○ 전국 및 경기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단위 : toe/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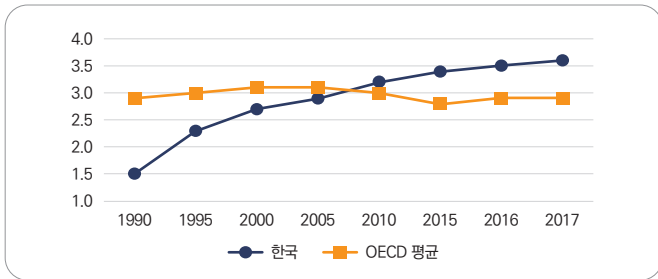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11	4.12	4.13	4.15	4.22	4.33	4.49	4.52	4.47
경기도	2.18	2.19	2.16	2.06	2.18	2.27	2.31	2.35	2.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0). “2020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1년 4.11toe/인에서 2019년 4.47toe/인으로 꾸준히 증가 추이
-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는 2.30toe/인으로 전국(4.47toe/인)에 비해 절반 수준

○ 주요국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단위 : toe/인)



주 : 한국의 통계는 OECD 자료와 “2020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간 차이가 있음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한국	1.5	2.3	2.7	2.9	3.2	3.4	3.5	3.6
영국	2.4	2.5	2.6	2.5	2.2	1.9	2.0	1.9
독일	3.0	2.9	2.8	2.8	2.9	2.7	2.7	2.7
일본	2.3	2.6	2.6	2.6	2.4	2.3	2.3	2.3
미국	5.2	5.2	5.5	5.3	4.9	4.7	4.7	4.7
OECD 평균	2.9	3.0	3.1	3.1	3.0	2.8	2.9	2.9

자료 : KESIS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세계에너지수급 및 주요 지표”(http://www.kesis.net).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는 OECD 평균(2.9toe/인)보다 높은 3.6toe/인이며 1990년 대비 140% 증가
-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2017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대비 각각 21%, 10%, 9.6% 감소

11-2-3 전기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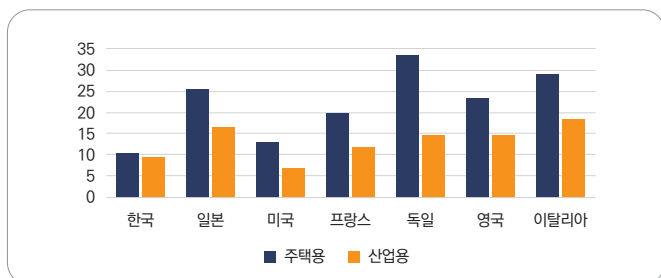
○ 정의

- 전력 1kWh당 부과하는 요금으로 국내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이 포함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등 용도별로 전력 판매단가가 다르게 적용

*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을 위해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 주요국의 전기요금(2019년 기준, 단위 : US cent/kWh)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주택용	10.2	25.4	13.0	19.9	33.4	23.4	28.9
산업용	9.5	16.4	6.8	11.8	14.6	14.7	18.5

자료 : EPSI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해외 전기요금(<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Main.do?locale=>).

○ 주요 특징 및 해설

-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요금은 10.2센트/kWh로 전력요금이 가장 비싼 독일 (33.4센트/kWh)의 1/3 수준으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음
-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요금은 9.5센트/kWh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으며 OECD 평균보다 12.9% 저렴
- 우리나라 1인당 전기요금은 2000년 대비 2018년 50% 증가한 반면 OECD 28개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은 131% 증가하여 전력 과소비의 원인 제공
 - ※ 2014~2019년 전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5% 상승, 전기료 물가지수 약 14% 하락

○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2019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3\mu\text{g}/\text{m}^3$ 으로 중국, 인도 등의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나, 동경, 런던, 뉴욕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나쁨
- 2020년 들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상반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예년 수준으로 복귀

○ 미세먼지는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 관리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교통체계 개선 등 사회경제 기반의 친환경화를 통해 근본적 개선이 가능

-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규제와 지원의 조화로운 접근 필요
- 교통부문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더욱 촉진하고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요관리 강화,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물류체계의 녹색화 등 추진
- 생활부문에서는 생활용품의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기여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노천소각 등 주변 관리를 강화

○ 유해화학물질은 생산, 소비,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관리, 사고대비체계 구축 등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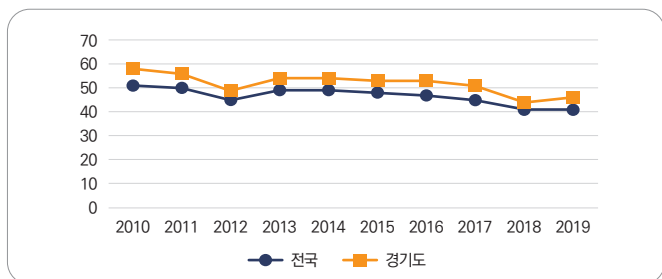
- 유해화학물질의 대표적 오용 사건인 가습기살균제는 60여만 명이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중 2천여 명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
- 일상생활에서 주로 화학물질이 원인인 환경성질환자(아토피, 천식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851만 명)
- 'No Data, No Market'에 기반한 화학물질의 전과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석면, 전자파, 라돈, 빛공해 등 생활주변 유해인자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
-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현장의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체계 구축, 사고 발생 후에는 신속한 대응과 함께 원인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3-1 미세먼지 농도

○ 정의

-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입자(Fine Particle) 양을 무게단위로 측정하고, 미세먼지(PM10, 직경 10 μ m 이하 입자 총량)와 초미세먼지(PM2.5, 직경 2.5 μ m 이하 입자 총량)로 구분

○ 전국 및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단위: μ g/ m^3)



주 : 초미세먼지(PM2.5)는 '15.1.1부터 대기환경기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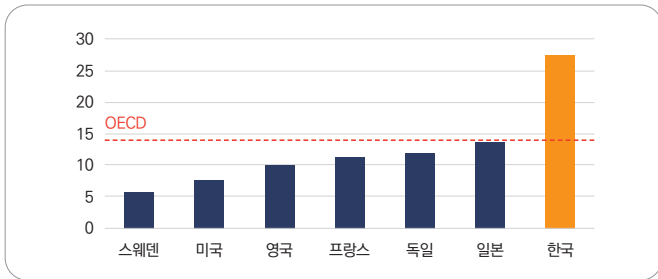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미세먼지	51	50	45	49	49	48	47	45	41	41
	초미세먼지	-	-	-	-	-	26	26	25	23	23
경기	미세먼지	58	56	49	54	54	53	53	51	44	46
	초미세먼지	-	-	-	-	-	26	28	27	25	26

자료 : 환경부(2020). "2019 대기환경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및 경기도의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나, 최근 들어 개선 정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PM10 농도는 전국 농도보다 매년 3~7 μ g/ m^3 높은 수준을 보이고, PM2.5 농도 역시 전국에 비해 약 2~3 μ g/ m^3 가량 높게 나타남
-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로부터의 장거리 영향과 국내 영향이 비슷한 정도로 기여하고, 국내의 경우 산업활동, 교통,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주요 원인임

○ 주요국의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2019년 기준, 단위: $\mu\text{g}/\text{m}^3$)



주 : 한국의 통계는 OECD 자료와 “2019 대기환경연보” 간 차이가 있음

구분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OECD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	5.7	7.7	10.0	11.4	11.9	13.6	27.4	13.9

자료 : OECD. *Air quality and health*.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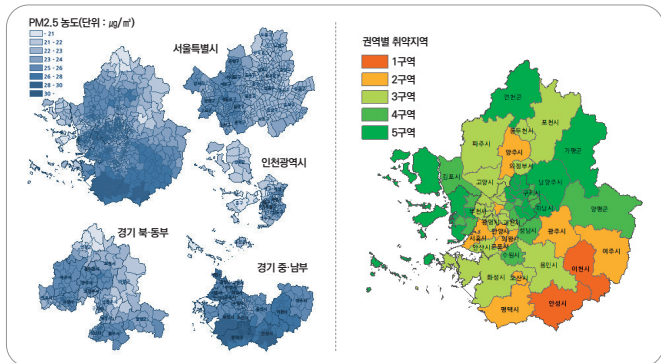
-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27.4\mu\text{g}/\text{m}^3$)는 OECD의 $13.9\mu\text{g}/\text{m}^3$ 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
- 주요 국가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낮은 국가는 스웨덴($5.7\mu\text{g}/\text{m}^3$), 미국($7.7\mu\text{g}/\text{m}^3$), 영국($10.0\mu\text{g}/\text{m}^3$) 등이 있음

11-3-2 수도권 미세먼지 취약지역

○ 정의

-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의 공간적 분포 및 노출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상대적인 취약 정도를 분석

○ 수도권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분포 및 취약지역(2019년 기준)



구분	지역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서울 영등포구 경기 이천, 안성, 오산, 군포, 안양, 시흥, 여주, 의왕, 양주, 평택, 광주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	서울 송파구, 강남구, 도봉구, 동대문구, 종로구, 광진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인천 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하남, 연천, 남양주, 가평

자료 : 경기연구원(2019).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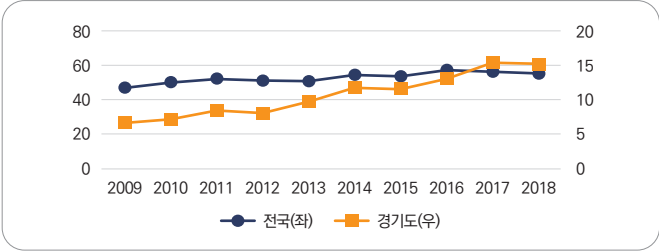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 수도권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의 공간적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도 서로 상이
-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사업장 배출시설, 교통, 생활배출원 등)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중요

11-3-3 화학물질 배출량

정의

-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량 및 배출량을 조사(화학물질관리법)
 ※ 2018년 기준 조사대상 사업장은 3,768개소(경기도 976개)이며,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총 228개(경기도 140개)

전국 및 경기도 화학물질 배출량(단위: 백만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배출량	47.0	50.0	52.3	51.1	50.8	54.3	53.7	57.2	56.2	55.2
	조사 사업장수	2,917	2,985	3,159	3,268	3,435	3,524	3,634	3,732	3,798	3,768
경기	배출량	6.7	7.2	8.4	8.1	9.7	11.7	11.5	13.1	15.4	15.2
	조사 사업장수	739	751	790	801	877	889	909	925	973	976

자료 : 화학물질안전원(각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https://icis.me.go.kr/prtr/main.do>).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총 배출량은 2009년 4천7백만톤에서 2018년 5천5백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경기도에서의 배출량은 2009년 7백만톤(전국 14%)에서 2018년 1천5백만톤(전국 25%)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 정도로 전국평균보다높은 수준임
-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99% 이상은 대기로 배출되며, 그 외 수계, 폐기물 로도 배출됨. 이동량은 80% 이상이 폐기물 형태로 이동되며, 그다음은 폐수 형태로 이동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전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및 주택의 증가로 인해 2010년 0.96kg/일에서 2019년 1.09kg/일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10년 0.86kg/일에서 2019년 0.97kg/일로 증가
- 경기도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 0.92kg/일로 전국 1.06kg/일, OECD 1.44kg/일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 내외에서 정체하는 양상

- 2019년 전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9%, 경기도는 60.6%로 60% 내외에서 정체하는 양상
- 경기도의 2018년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7.7%로 전국 13.4%, OECD 평균인 4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7%로 OECD 평균 42.7%에 비해 1.4배가량 높은 수준

○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

- 전국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4,875톤/일에서 2019년 11,014톤/일로 2배 이상 증가
- 경기도의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101톤/일에서 2019년 3,096톤/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
- 전국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은 2010년 48.3%에서 2019년 57.4%로 9.1%p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은 2010년 49.7%에서 2019년 53.7%로 4.0%p 증가 추세이나, 전국 대비 3.7%p 낮은 수준

○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지난 6년간 2배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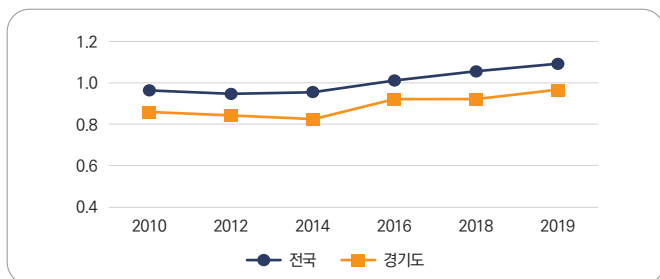
- 전국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3년 19.6%에서 2019년 41.3%로 2배 이상 상승
- 경기도 녹색구매율은 53%로 전국 41%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부산 65%, 서울 58%에 비해 낮은 수준

11-4-1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정의

-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며 생활폐기물에는 생활(가정)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포함됨

전국 및 경기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단위 : kg/일)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전국	0.96	0.95	0.95	1.01	1.06	1.09
경기도	0.86	0.84	0.83	0.92	0.92	0.97
OECD 평균	1.46	1.43	1.43	1.45	1.44	-

자료 : OECD “Environment Statistics(database)”;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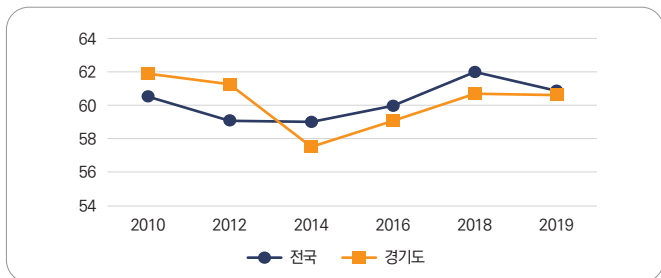
- 전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및 주택의 증가로 인해 2010년 0.96kg/일에서 2019년 1.09kg/일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10년 0.86kg/일에서 2019년 0.97kg/일로 증가
- 경기도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 0.92kg/일로 전국 1.06kg/일, OECD 1.44kg/일에 비하여 낮은 수준
- 경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2.7% 증가하고,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배출시설계폐기물 증가로 연평균 4.4% 증가함

11-4-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정의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로 산출

○ 전국 및 경기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단위 :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전국	60.5	59.1	59.0	60.0	62.0	60.9
경기도	61.9	61.3	57.5	59.1	60.7	60.6
OECD 평균	29.9	34.0	37.1	38.5	42.7	-

자료 : OECD "Environment Statistics(database)";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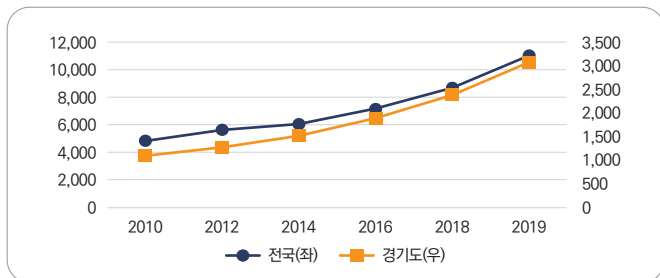
- 2019년 전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9%, 경기도는 60.6%로 60% 내외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보임
- 경기도의 2018년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7.7%로 전국 13.4%, OECD 평균 4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7%로 OECD 평균 42.7%에 비해 1.4배가량 높은 수준임

11-4-3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 정의

-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은 생활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류와 비닐류(합성수지류)를 포함하는 폐기물임

○ 전국 및 경기도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단위 : 톤/일)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전국	4,875	5,654	6,037	7,155	8,690	11,014
경기도	1,101	1,282	1,513	1,893	2,381	3,096

자료 :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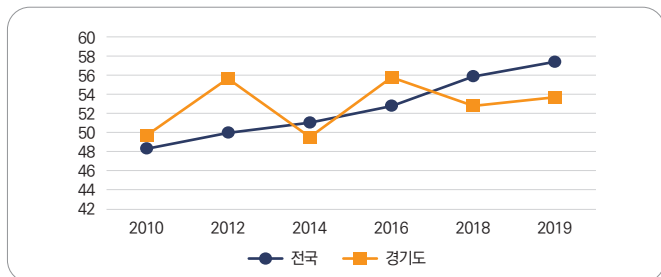
- 전국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4,875톤/일에서 2019년 11,014톤/일로 2배 이상 증가함
- 경기도의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101톤/일에서 2019년 3,096톤/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이 급격히 증가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플라스틱폐기물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

11-4-4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

○ 정의

-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조작에 의하여 감량화, 무해화, 혹은 재생 이용을 도모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로 구분함

○ 전국 및 경기도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단위 :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전국	48.3	50.0	51.0	52.8	55.9	57.4
경기도	49.7	55.6	49.5	55.8	52.8	53.7

자료 : 환경부(각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은 2010년 48.3%에서 2019년 57.4%로 9.1%p 상승함
- 경기도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은 2010년 49.7%에서 2019년 53.7%로 4.0%p 증가 추세이나, 전국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률에 비하여 3.7%p 낮은 수준임
- 경기도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은 재활용 53.7%, 소각 38.6%, 매립 7.8%로, 발생된 생활계 플라스틱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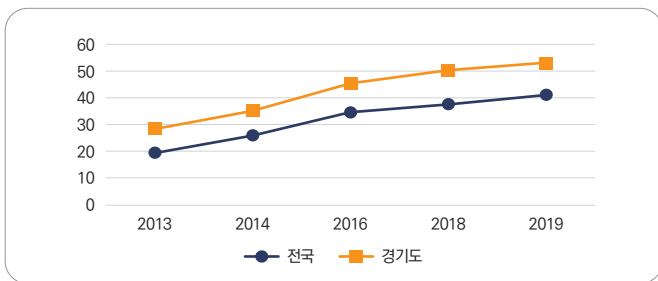
11-4-5 녹색제품 구매비율

○ 정의

-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녹색제품구매액/총구매액'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 전국 및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비율(단위 : %)



구분	2013	2014	2016	2018	2019
전국	19.6	26.1	34.7	37.7	41.3
경기	28.5	35.2	45.3	50.3	53.0
서울	30.6	42.1	41.6	45.1	57.5
부산	22.0	25.3	48.0	52.2	65.1

자료 : 환경부(각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보고".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3년 19.6%에서 2019년 41.3%로 2배 이상 상승
-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53.0%이고, 전국 41.3%보다 높은 수준이나 부산 65.1%, 서울 57.5%에 비해 낮은 수준
- 경기도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13년 28.5%에서 2019년 53.0%로 24.5%p 상승

○ 국내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며, 특히 최근 10년간 급격히 감소

- 산림면적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공장이나 택지, 도로 등 개발사업이고, 최근에는 불법산림훼손과 태양광사업도 산림면적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 산림은 전국토의 63%를 차지하지만 숲의 울창한 정도(ha당 임목축적)는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
- 종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산림면적 감소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 이후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급감하여 공원 서비스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

-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를 지정하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로 1인당 8.8㎡에서 8.5㎡로 큰 폭 하락(조성면적 기준)
- 도시공원이 도시민에게 주는 공원서비스는 환경, 경관, 휴식, 건강,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함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 공원녹지 면적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
-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현황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적극성이 다르므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

○ 도시공원, 녹지 등이 제공하는 혜택은 영향권(유치권)이 존재하며, 이는 지자체 간 지역적 불평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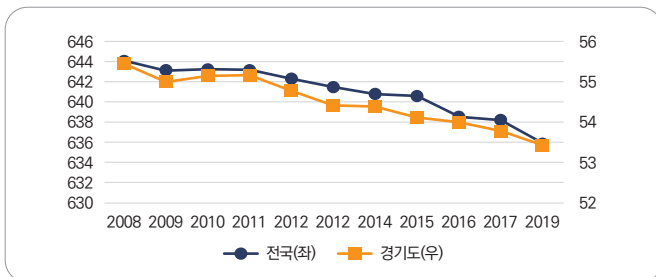
- 도시공원의 혜택은 시민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서비스
- 도시공원, 녹지의 혜택의 불균형은 지역 주민의 건강, 교육, 재산, 휴식 등에 큰 불균형으로 이어짐
- 현재 경기도는 공원서비스에서 소외된 인구가 절반이 넘으며, 지역 및 지자체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
- 공원서비스 불균형 지역에 대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

11-5-1 산림면적

○ 정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정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목이 임야인 면적과는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함

○ 전국 및 경기도 산림면적(단위 : 만ha)



주 : 임업통계연보 2018년 데이터 오류로 인해 제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전국	644.1	643.1	643.2	643.1	642.2	641.4	640.7	640.5	638.5	638.2	635.9
경기	55.5	55.0	55.1	55.2	54.8	54.4	54.4	54.1	54.0	53.8	53.4

자료 : 산림청(각년도), "임업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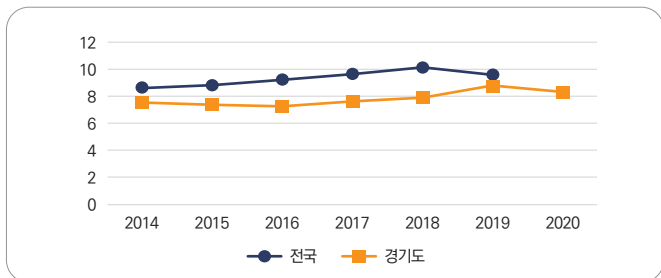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과 경기도의 산지면적은 지속적인 감소세
- 전국 산림은 지난 10년간 82,000ha가 감소(2008년에 비해 약 1.27% 감소)
- 경기도 산림은 지난 10년간 21,000ha가 감소했으며, 2008년에 비해 약 3.78% 감소하여 전국보다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남

11-5-2 1인당 도시공원면적

○ 정의

-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면적을 해당 시점의 지자체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된 면적과 미조성된 면적을 포함하는 시설결정면적으로 구분

○ 전국 및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완료면적(단위 : $\text{m}^2/\text{인}$)



주 : 2020년 전국 평균은 현재 2020년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제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당 도시공원 조성완료면적	전국	8.6	8.8	9.2	9.6	10.1	9.6	-
	경기도	7.5	7.4	7.2	7.6	7.9	8.8	8.3
1인당 도시공원 시설결정면적	전국	19.3	18.1	18.2	17.8	17.9	17.4	-
	경기도	18.5	16.4	16.0	15.5	15.6	15.2	13.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도시계획 현황", 경기도 공원녹지와 내부자료.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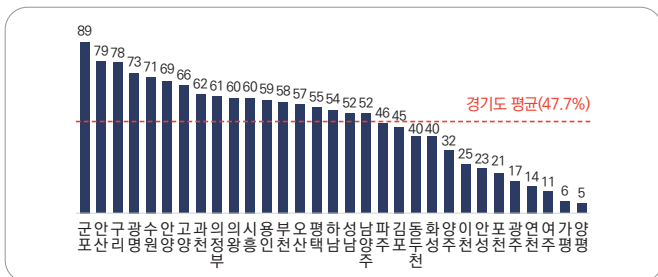
- 전국 1인당 도시공원면적(조성완료 기준)은 2014년 8.6m^2 에서 2019년 9.6m^2 로 증가
- 반면, 전국 1인당 도시공원 시설결정면적은 2014년 19.3m^2 에서 2019년 17.4m^2 로 크게 감소
- 경기도의 1인당 도시공원 시설결정면적이 2019~2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2020.7.1. 시행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일몰제) 시행이 원인임
- WHO의 1인당 도시녹지 권장 면적은 9.0m^2 이며,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은 이를 넘어섰으나 경기도는 8.8m^2 로 이에 미치지 못함

11-5-3 녹지 접근성

○ 정의

- 녹지 접근성은 조성완료 도시공원에 걸어서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각 지자체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경기도 시군별 녹지 접근성(2019년 기준, 단위 : %)



자료 : 경기연구원(2019). “경기도 도시공원 신규지표 도입방안” 재구성.

○ 주요 특징 및 해설

- 도시공원서비스의 혜택은 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나, 경기도민의 녹지 접근성은 지자체별로 매우 편차가 크며, 공원서비스의 소외인구가 매우 심각한 시군이 많이 존재
- 경기도의 52.3%에 해당하는 인구가 도시공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
- 경기도에서 녹지 접근성이 낮은 시군은 양평, 가평, 여주, 연천, 광주, 포천 순임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대표하는 지표는 주요 하천의 수질과 보의 숫자로 선정함

- 하천의 수질은 자연성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하천 유역에의 토지이용과 산업활동의 결과가 '수질'이라는 지표로 나타남
-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성 회복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질 추이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함
- 주요 치수 대책인 제방을 변경시키려면 하천의 폭을 확장하거나 재질을 자연성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표화하기 어려움
- 보는 하천의 치수 대책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의 종적 연결을 단절시키는 구조물이므로 보의 숫자는 자연성 회복의 지표로 상징성이 있음

○ 지난 5년간 5대강의 수질(BOD 기준)은 영산강을 제외하고 개선

- 한강과 낙동강은 수질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금강과 영산강은 조금씩 나빠지다가 2020년에는 비교적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 수도권 주민들에게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팔당호는 BOD 1.2mg/L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양호함

○ 전국의 보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하천 1km당 약 1.1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생태계 단절의 주요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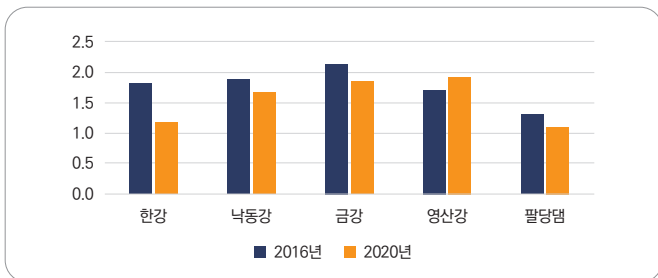
- 전국에 33,900개가 넘는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보는 하천수의 유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며 대규모 보의 운영 미숙이나 미작동시 홍수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보 설치의 당초 기능이나 용도를 상실한 보에 대한 조사한 이후 보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철거할 필요성이 있음

11-6-1 하천 수질

정의

- 수질항목 중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수치가 낮을수록 하천의 수질이 좋은 것으로 해석함

주요 하천 지점 수질(단위 : BOD mg/L)



주 : 4대강 수질은 강별 모든 측정지점의 평균값 적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한강	1.8	1.5	1.5	1.4	1.2	1.5
낙동강	1.9	1.9	1.9	1.7	1.7	1.8
금강	2.1	2.1	2.2	2.3	1.8	2.1
영산강	1.7	2.0	2.1	2.1	1.9	2.0
팔당댐	1.3	1.1	1.2	1.2	1.1	1.2

자료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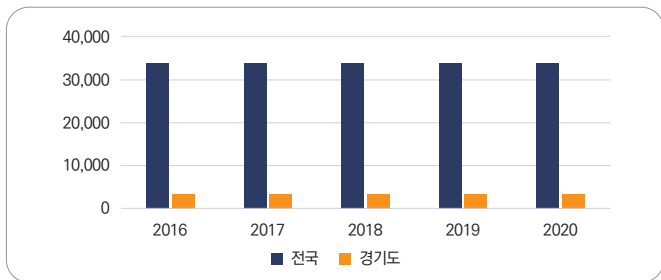
- 4대강의 경우 한강의 수질이 BOD 평균 1.5mg/L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과 금강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임
- 한강과 낙동강은 수질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금강과 영산강은 조금씩 나빠지다가 2020년에는 비교적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 수도권 주민들에게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팔당호는 BOD 1.2mg/L를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양호함

11-6-2 보 현황

○ 정의

- 전국과 경기도에 설치된 보의 숫자를 의미하며, 보의 수가 많은 경우 하천의 치수 대책에 방해되고 생태계의 종적 연결을 단절시키는 문제 발생

○ 전국 및 경기도 보 시설 수(단위 :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33,852	33,905	33,893	33,914	33,914
경기도	3,257	3,251	3,251	3,250	3,250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 주요 특징 및 해설

- 보의 개수가 전국적으로 과거 5년 동안 약간 증가하거나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이후로는 33,914개소로 변화가 없음
- 경기도의 경우 2016년 3,257개소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km당 약 1.1개소의 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1km당 1개소보다 다소 많음
- 기능을 못 하거나 용도가 사라진 보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의 보도 시설을 개선하여 보가 하천 수생태를 단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로 자동차 분야 친환경화 각축

-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 정부와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수소차 투자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박차
- 노르웨이의 2025년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중단을 시작으로 주요국과 GM 등 완성차업계 2030~40년 내연기관차 자국 내 완전 퇴출
- 세계 전기차는 2020년 718만대에서 2025년 5,449만대, 수소차는 동기간 5.1만대에서 180만대 보급 예상
-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20조 원 규모의 그린 모빌리티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충전시설 4.5만기,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소 450개소 구축, 노후 경유차 제로화 계획

○ 2040년 우리나라 내연기관차 46.6%, 전기차 29.7%, 수소차 10.7%, 하이브리드차 13.1% 구성 전망(한국교통연구원)

- 2019년 기준 세계 전기차는 479만대이며 이 중 중국이 258만대로 압도적이고 유럽 97만대, 미국 88만대, 기타 36만대 순으로 보급
- 2020년 기준 수소차는 한국이 10,906대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국 8,890대, 중국 7,115대, 일본 4,212대, 독일 875대 순으로 보급
- 충전인프라의 경우 공용 전기차충전기는 중국 515,908기, 미국 77,358기, 네덜란드 50,153기, 한국 34,630기 순이며, 수소충전소는 일본 137개, 독일 93개, 미국 68개, 한국 37개 순으로 기 구축

○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통한 그린 모빌리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충전인프라의 대폭적인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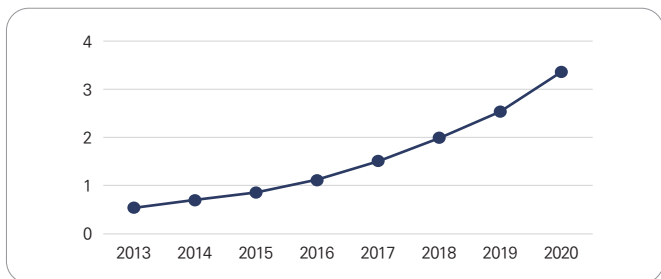
- 전기차충전기의 경우 통행량이 많은 곳에 급속충전기 확대, 아파트 등 주거지와 직장 업무시설 완속충전기 확대, 기존 주유소 복합 설치 등 필요
- 수소충전소는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도심지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수소 불안에 대한 주민반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정부가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조속 결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 수립·이행

11-7-1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 정의

- 친환경차는 미래차,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로 순수전기차(BEV),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통칭하고, 충전인프라는 공용 급속/완속 전기차충전기, 개방형 수소충전소 등을 포함

○ 전국 친환경차 등록률(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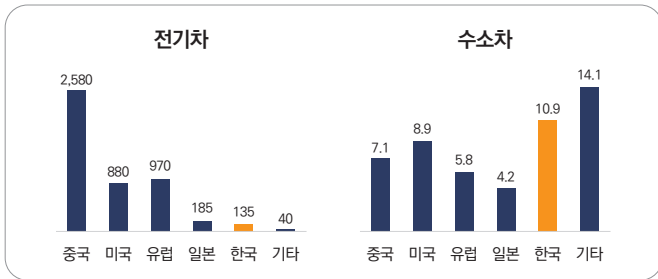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대수 (천대)	친환경차	105.0	140.3	180.4	244.2	339.1	461.7	601.0	820.3
	하이브리드차	103.6	137.5	174.6	233.2	313.9	405.1	506.0	674.5
	전기차	1.5	2.8	5.7	10.9	25.1	55.8	89.9	135.0
	수소차	-	-	0.0	0.1	0.2	0.9	5.1	10.9
친환경차 등록률		0.5	0.7	0.9	1.1	1.5	2.0	2.5	3.4

자료 : “20.12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 친환경차 80만대 돌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20).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의 친환경차 등록률은 2013년 0.5%에서 2020년 3.4%로 2.9%p 상승
-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2013년 10만 5천대에서 82만 3백대로 7배 이상 증가
- 2020년 기준으로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는 82.2%, 전기차는 16.5%, 수소차는 1.3% 차지

○ 주요국의 전기차·수소차 보급 현황(단위 : 천대)



주 : 전기차 2019년(한국 2020년), 수소차 2020년, 공용 전기차충전기 2019년(한국 2020년), 수소충전소 2020년 기준임

구분	세계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경기도)	기타
전기차(천대)	4,790	2,580	880	970	185	135	20	40
수소차(천대)	51.0	7.1	8.9	5.8	4.2	10.9	1.6	14.1
공용 전기차 충전기(천기)	846.9	515.9	77.4	168.4	30.4	34.6	7.5	20.2
수소충전소(개소)	490	33	68	190	137	47	6	15

자료 : IEA(2020). Global EV Outlook 2020; 독일 수소기업 린데(Linde)社(<https://www.h2stations.org>); 저공해차통합누리집(<https://www.ev.or.kr/evmonitor>); 하이넷(http://hynet.co.kr/sub/sub02_02.php); 국토교통부(2020). “통계누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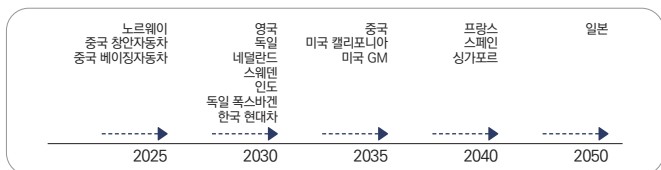
-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시장을 각각 54%, 61%나 차지하면서 독주하고 있으며, 한국은 수소차 보급에서, 일본은 수소충전소 구축에서 선두
-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복합 급속충전기 확충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는 도심지에 조속 확충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수소 안전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필요

11-7-2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 정의

-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전국(戰國)시대, 수소차 여명(黎明)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주범인 가솔린, 경유, LPG 등 화석연료 사용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본격화

○ 주요국 및 자동차제조사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



○ 우리나라의 경유차 퇴출 목표

구분	그린뉴딜(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노후경유차 퇴출 목표	2024년까지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제로화 ※ 경기도는 2021년까지 제로화
1톤 트럭 LPG 전환	13.5만대 ('20~'25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8.8만대 ('20~'25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 노르웨이를 필두로 2030년 영국·독일·인도, 2035년 중국, 2040년 프랑스·스페인 등이 내연기관차를 자국내 생산·판매 금지를 선언
- 중국 창안·베이징자동차 2025년, 한국 현대자동차 2030년, 미국 GM 2035년 등 자동차제조사들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친환경차 생산에 올인 - 노르웨이, 세계 최초로 2021년 1월 전기차 등록 비중이 내연기관차 추월
-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한국의 내연기관차 퇴출시기를 2040년 이내로 권고했지만, 정부가 국내 자동차업계의 충격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
- 한편, 국내 내연기관차의 급격한 퇴출은 연간 최대 2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하에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고용안정 등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추구할 필요

○ 친환경은 단순 환경 의제가 아닌 인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의제

- 기후위기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기업, 민간 모두에게 친환경이 경쟁력인 시대에 진입
- 기업은 친환경을 경영방침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 글로벌 친환경 녹색경제(Green Economy) 규모는 2009년 2조 달러에서 2018년 4조 달러, 2020년 5조 달러(5,600조 원)로 성장했으며, 이 중 에너지 효율 및 전환 분야가 4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FTSE Russell)
- 정부와 기업은 친환경을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ESG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 하거나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RE100 운동을 확대

○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ESG 경영과 RE100을 자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 시도

- 무디스는 최근 전 세계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ESG를 평가했는데, 한국은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과 함께 최고등급에 위치
- 한국기업지배구조 원은 최근 국내 7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등급 평가에서 우수 108개사, 보통 394개사, 미흡 258개사를 발표
-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은 구글, 애플, GM 등 250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국내 기업으로는 SK그룹 8개사가 참여를 선언

○ 친환경 경제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및 기후위기를 극복할 필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G 경영,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전환, 친환경기술 개발 노력이 곧 국가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연결
- 보다 강한 친환경 경제 구축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민간부문이 서로 긴밀 협력하면서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친환경 전환의 핵심

11-8-1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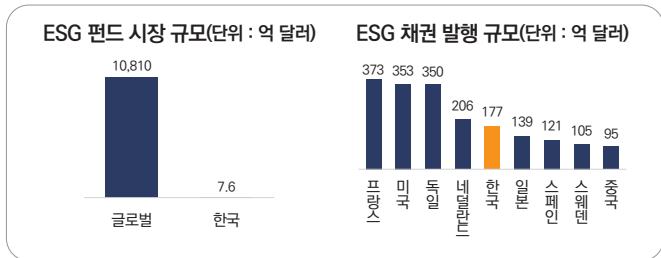
○ 정의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활동에서 자원절약 등 환경보호(E),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공헌(S), 투명한 기업운영 등 윤리경영(G)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을 의미

○ ESG 등급 및 ESG 펀드 규모(2020년 기준)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			국내기업 ESG 등급	
등급	선진국	신흥국	등급	기업수
긍정적	한국,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등(11개국)	-	S	0사
중립적	미국, 영국, 호주 등 (20개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등 (10개국)	A+	16사 (2.1%)
다소 부정적	일본, 그리스 등(6개국)	중국, 러시아 등(32개국)	A	92사 (12.1%)
부정적	-	남아공, 베트남 등(45개국)	B+	134사 (17.6%)
매우 부정적	-	라오스, 레바논 등(20개국)	B	260사 (34.2%)
			C	236사 (31.1%)
			D	22사 (2.9%)
			계	760사

자료 : "https://www.moodys.com";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



자료 : 모닝스타(2020).; 블룸버그(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의 ESG 등급은 1등급이며, 지배구조 1등급, 환경과 사회 2등급 수준
- 국내 기업 중 ESG 등급이 최우수인 기업은 없으며, B*와 B가 52%로 대부분 차지
- 세계적으로 ESG 펀드와 채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ESG 펀드가 7.6억 달러(8,490억 원), ESG 채권 발행이 177억 달러(19조 7,000억 원) 수준

11-8-2 RE100 이니셔티브와 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

정의

- 수요 측면의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란 기업 등 에너지사용 주체가 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것을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 공급 측면의 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RECAI: Renewable Energ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별 평가지표(EY)

국가별 RE100 참여 기업수, RECAI 평가 순위(2020년 기준)

RE100 참여 기업수(단위 : 개사)		RECAI 평가순위	
국가	참여 기업 수	순위	국가
미국	64	1	미국
영국	36	2	중국
일본	28	3	호주
스위스	11	4	인도
한국	8	5	영국
네덜란드	8	6	독일
독일	8	7	프랑스
프랑스	8	8	일본
중국	4	9	네덜란드
대만	3	10	스페인
		11	칠레
		12	덴마크
		13	한국

자료 : CDP 한국위원회(2020). “국내의 기업의 RE100 추진 사례 및 개선과제”.

자료 : EY(2020). RECAI Issue 56: index scores.

주요 특징 및 해설

- RE100은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인 에너지전환 가속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
- RE100 캠페인에는 구글, 애플 등 25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K그룹 8개사 참여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가 현재 세계 13위에 머물고 있으며, 수요 측면의 RE100과 공급 생산 측면의 RECAI를 활성화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산업경제 기반 구축을 촉진할 필요
-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전력산업 기반 자금(5조 원)을 적극 활용·지원하는 방안 필요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12장

•

행정·재정·정치·외교

12-1 재정부담 및 세율

12-2 세출 구조

12-3 정치외교 위상과 국격

○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재정부담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로 표현

-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세부담률로 표현
- 그러나 국민들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에서는 조세부담률 대신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부담률을 사용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상승 추세이나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에서 2019년 20.0%로 2.1%p 상승
-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2019년 27.4%로 5.0%p 상승하여 조세 부담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0%, 26.8%로 주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주요 국가에 비해 최고 법인세율은 중위권, 소득세율은 높은 수준

-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법인세율은 2011~17년 동안 24.2%를 유지하다 2018년 27.5%로 3.3%p 인상
- 최고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은 2011년 38.5%에서 2020년 46.2%로 7.7%p 인상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물가 상승에 따른 세액 상승이 주된 이유임

○ 국민부담은 사회보장 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과 국민부담률을 연계하여 파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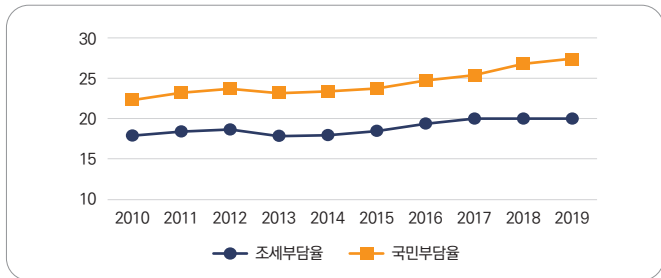
- OECD 국가 중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의무화하거나 사회보장 혜택이 많은 국가들은 국민부담률도 높게 나타남
- 사회보장 범위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민부담률 증가의 문제는 정부의 기능확대 (큰 정부 vs 작은 정부)와 연계되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12-1-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정의

-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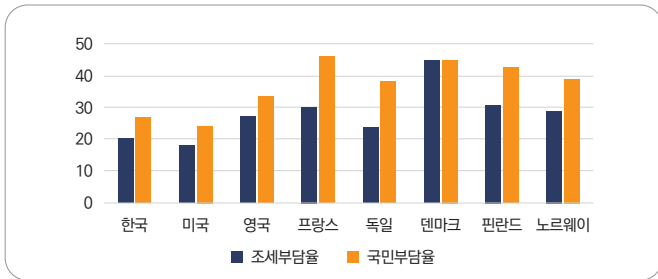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세부담률	17.9	18.4	18.7	17.9	18.0	18.5	19.4	20.0	20.0	20.0
국민부담률	22.4	23.2	23.7	23.1	23.4	23.7	24.7	25.4	26.8	27.4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OEC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에서 2019년 20.0%로 2.1%p 상승
-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2019년 27.4%로 5.0%p 상승하여 조세 부담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
 - ※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조세부담률	20.0	18.2	27.1	30.0	23.8	44.8	30.8	28.9
국민부담률	26.8	24.3	33.5	46.1	38.2	44.9	42.7	39.0

자료 : OEC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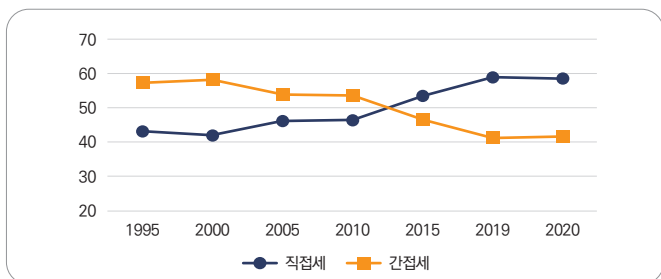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0%, 26.8%로 주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주요 국가 중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46.1%), 덴마크(44.9%), 핀란드(42.7%) 등이 있음
- OECD에서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

12-1-2 직·간접세 비중

○ 정의

-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며,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같으면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다르면 간접세(소비세, 유통세 등)로 분류

○ 직·간접세 비중(단위 : %)



주 : 1995~2019년은 징수액기준, 2020년은 예산액 기준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직접세	43.1	41.9	46.2	46.5	53.3	58.8	58.4
간접세	56.9	58.1	53.8	53.5	46.7	41.2	41.6

자료 : 기획재정부.

○ 주요 특징 및 해설

- 1995~2010년에는 간접세의 비중이 직접세보다 높았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아짐
- 국세 중 직접세의 비중은 1995년 43.1%에서 2020년 58.4%로 15.3%p 상승
-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은 1995년 56.9%에서 2020년 41.6%로 18.3%p 감소
- 2020년 예산 기준 직접세는 164.3조 원, 간접세는 116.8조 원임

※ 2020년 세수구조

○ 2020년 세수구조(단위 : 조 원, %)

구분	2019			2020		
	실적	국세 대비%	GDP 대비%	예산	국세 대비%	GDP 대비%
국세	293.5	100.0	15.3	291.2	100.0	14.8
(직접세)	166.7	58.8	8.7	164.3	58.4	8.4
소득세	83.6	29.5	4.4	88.4	31.4	4.5
• 종합소득세	16.8	5.9	0.9	17.4	6.2	0.9
• 양도소득세	16.1	5.7	0.8	16.8	6.0	0.9
• 근로소득세	38.5	13.6	2.0	41.8	14.9	2.1
법인세	72.2	25.4	3.8	64.3	22.9	3.3
상속·증여세	8.3	2.9	0.4	8.3	3.0	0.4
종합부동산세	2.7	0.9	0.1	3.3	1.2	0.2
(간접세)	116.9	41.2	6.1	116.8	41.6	6.0
부가가치세	70.8	25.0	3.7	68.6	24.4	3.5
개별소비세	9.7	3.4	0.5	9.8	3.5	0.5
증권거래세	4.5	1.6	0.2	4.4	1.6	0.2
인지세	0.8	0.3	0.0	1.1	0.4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4.6	5.1	0.8	15.7	5.6	0.8
관세	7.9	2.8	0.4	8.8	3.1	0.4
교육세	5.1	1.8	0.3	5.1	1.8	0.3
주세	3.5	1.2	0.2	3.3	1.2	0.2
농어촌특별세 ¹⁾	3.9	-	0.2	4.6	-	0.2
(과년도수입) ²⁾	5.9	-	0.3	5.4	-	0.3

주1 :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액,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증부세, 취득세 등의 부가세(Sur-Tax)에 따라 비중 계산시 제외

주2 : 지난 해에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여러 세목이 합산된 결과임에 따라 비중 계산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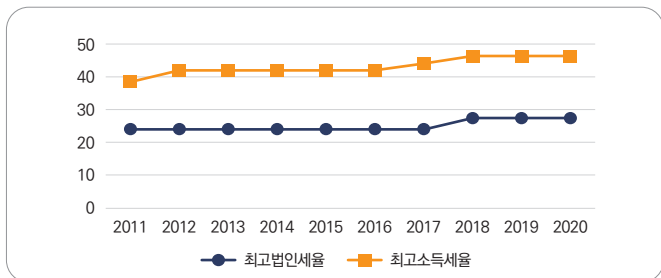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년 경제·재정수첩”.; 예산은 추경예산기준, 2020년 GDP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19.9) 자료.

12-1-3 법인세·소득세 명목최고세율

○ 정의

-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

○ 법인세·소득세 최고명목세율(지방세 포함, 단위 : %)



주 :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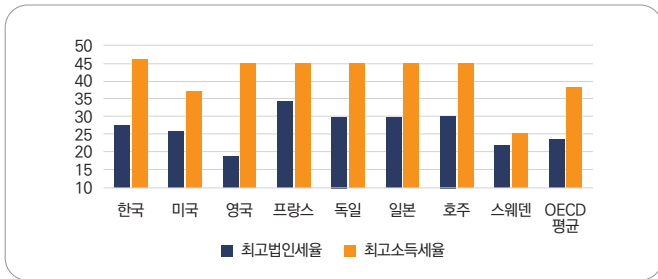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고법인세율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27.5
최고소득세율	38.5	41.8	41.8	41.8	41.8	41.8	44.0	46.2	46.2	46.2

자료 : OECD, Tax 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법인세율은 2011~17년 동안 24.2%를 유지하다 2018년 27.5%로 3.3%p 인상
- 최고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은 2011년 38.5%에서 2020년 46.2%로 7.7%p 인상
- 2020년 기준으로 국제인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은 25%,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은 42%이나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본세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하는 최고명목세율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의 1.1배 수준
- 2021년 소득세 세율인상에 따라 최고명목세율은 49.5%(소득세 45%, 지방 소득세 4.5%)로 증가

○ 주요국의 법인세·소득세 최고명목세율(2018년 기준, 단위 : %)



주: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스웨덴	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	27.5	25.8	19.0	34.4	29.9	29.7	30.0	22.0	23.7
최고소득세율	46.2	37.0	45.0	45.0	45.0	45.0	45.0	25.0	38.3

자료 : OECD, Tax Database.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평균(23.7%)을 상회
- 주요 국가 중 최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4.4%), 호주(30.0%), 독일(29.9%) 등이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46.2%로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포함되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도 45.0%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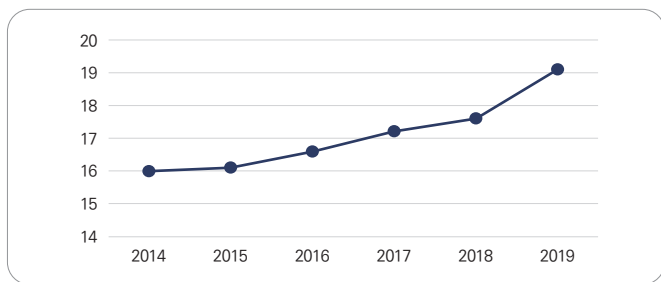
12-1-4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정의

-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text{실효세율}(\%) = (\text{총부담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100$$

○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 단위 : %)



주 : 소득귀속연도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실효세율	16.0	16.1	16.6	17.2	17.6	19.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은 2014년 16.0%에서 2019년 19.1%로 3.1%p 상승
- 2018년 기준으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할 경우 18.4%, 외국납부세액,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0.1%로 나타남

※ 주요국의 법인세 과표구간수 비교

○ 과표구간수별 국가

과표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2개국	호주 ¹⁾ , 오스트리아, 벨기에 ²⁾ , 캐나다 ³⁾ ,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⁴⁾ ,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⁵⁾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개	1개국	네덜란드 ⁶⁾ , 프랑스 ⁷⁾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⁸⁾
4개	1개국	한국

주 : 특정소득(체코, 슬로베니아 등), 특정산업(이스라엘, 영국), 특정도시(룩셈부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소규모 법인(호주, 일본) 등에 대한 차등세율은 단일세율로 분류하며, 지방세(Local Tax)나 법인세에 부가되는(Sur-Tax)를 제외한 중앙정부 법인세 기준의 과세표준 구간수임(2020년 기준)

- 1) 호주: 기본세율 30%, 2,500만 AUD 미만 소기업 26.0%
- 2) 벨기에: 기본세율 29%에 추가 과세하는 Crisis Tax 2% 포함시 29.58%
- 3) 캐나다: 연방법인세율은 38%이나 연방법인세 공제·감면 등을 감안한 순법인세율은 15%, 50만 CAD 이하 소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으로 인해 9% 세율이 적용
- 4) 일본: 기본세율은 23.4%,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 소기업 15%
- 5) 포르투갈: 기본세율 21%에 부가세(Sur-Tax)로 과세소득 150만유로/750만유로/3,500만유로 기준, 0%/3%p/5%p/9%p씩 추가 과세
- 6) 네덜란드: 20만 유로 미만 20%, 20만 유로 이상 25%
- 7) 프랑스: 매출 2억 5,000만 유로 미만 28%, 2억 5,000만 유로 이상 31%, 납부세액 763만 유로이상인 경우 3.3% 할증되어 32.02%
- 8) 룩셈부르크: 17.5만 유로/17.5~20만 유로/20만 유로 이상 15~17%이며, 20만 유로 이상의 경우 고용기금납입료 포함 18.19%에 지방세 적용으로 24.94% 세율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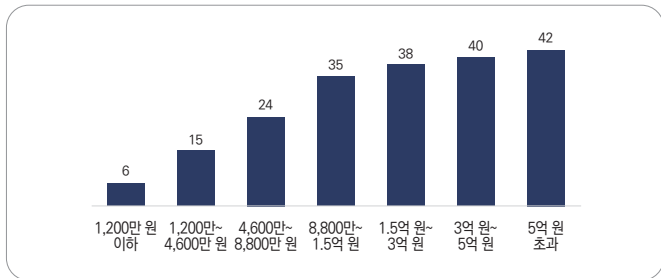
자료 :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2020)에서 재인용.

12-1-5 소득세율

○ 정의

-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 소득세 세율(2018년 기준, 단위 : %)



구분	1995	2005	2015	2016	2017	2018
1,200만 원 이하	6	6	6	6	6	6
1,200만~4,600만 원	15	15	15	15	15	15
4,600만~8,800만 원	25	24	24	24	24	24
8,800만~1.5억 원	35	35	35	35	35	35
1.5억~3억 원	35	35	35	38	38	38
3억~5억 원	35	35	38	38	38	40
5억 원 초과	35	35	38	38	40	4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https://www.nabostats.go.kr).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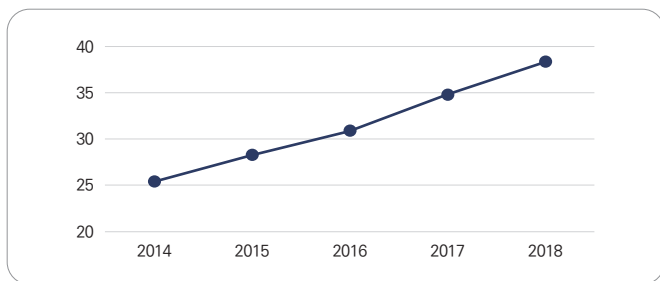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소득세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5억 원 35%, 1.5억~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를 적용하고 있음
- 1995~2018년 동안 1.5억 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율 변화가 거의 없으나, 1.5억 원 이상 구간은 2015년 이후 세분화되며 소득세율이 상승함

12-1-6 근로소득세

○ 정의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단위 : 조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25.4	28.3	30.9	34.8	38.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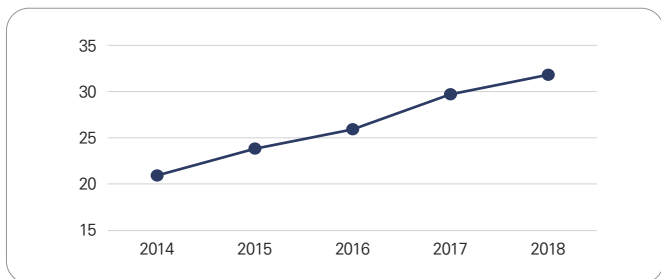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2014년 25.4조 원에서 2018년 38.3조 원으로 50.8% (+12.9조 원) 증가
- 201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별 결정세액이 큰 구간은 1억~1.5억 이하가 5.1조 원, 4.6천만~6천만 이하가 4.7조 원, 1.2천만~3천만 이하가 3.8조 원 순으로 나타남
- 1.2천만~3천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2014년 2.8조 원에서 2018년 3.8조 원으로 35.7%(+1조 원) 증가함

12-1-7 종합소득세

○ 정의

- 종합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연금·사업·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산이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단위 : 조 원)



주 : 소득귀속연도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1.0	23.8	25.9	29.7	31.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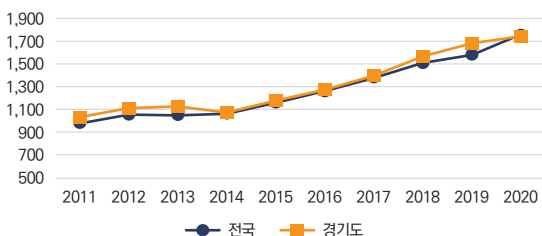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2014년 21.0조 원에서 2018년 31.8조 원으로 51.4% (+10.8조 원) 증가
- 2018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별 결정세액이 큰 구간은 10억 초과가 7.6조 원, 3억~5억 원 이하가 3.6억 원, 2억~3억 원 이하가 3.1조 원 순으로 나타남

12-1-8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 정의

- 지방세액(보통세+목적세+과년도 수입)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산출함

전국 및 경기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985	1,060	1,055	1,065	1,158	1,258	1,377	1,505	1,579	1,754
경기도	1,030	1,109	1,133	1,080	1,181	1,277	1,396	1,567	1,681	1,739

자료 : 지방재정365.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2010-2020)".

○ 주요 특징 및 해설

-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임
- 1인당 지방세 부담의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방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액의 상승에 따른 결과임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경우 2020년 기준 화성시(1,375,000원)가 가장 높고 의정부시(440,000원)가 가장 낮음

○ 정부의 전체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분

- 2020년 기준으로 정부 재원(본예산 기준) 512.3조 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80.5조 원(35.2%)이 배분되었고, 그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79조 원(15.4%), 교육 분야 72.6조 원(14.2%), 국방 50.2조 원(9.8%)이 배정
- 2016~20년 동안 재원 배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도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46.3% 증가했으며, 그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5.4% 증가, 교육 분야 36.5% 증가, 일반·지방행정 분야 32.8% 증가
- 다른 분야의 경우 2016~20년 동안 정부 총지출 증가율(명목)인 32.6%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원 배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정부 재정의 의무지출비율이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비율은 감소

- 의무지출비율(본예산 기준)은 2016년 4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8~19년에는 50%를 상회했으나, 2020년에는 49.9%(255.6조 원)로 다소 하락
- 재량지출비율(본예산 기준)은 2016년 52.7%에서 2020년 50.1%(256.7조 원)로 2.6%p 하락
- 2016~19년 동안 재량지출에 비해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량지출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12-2-1 분야별 자원배분

○ 정의

- 정부 재원의 배분과 그 변화는 국가 운영을 위한 지출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

○ 분야별 자원배분(단위 : 조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건·복지·고용	123.4 (126.9)	129.5 (131.9)	144.7 (145.8)	161.0 (162.6)	180.5 (185.4)
교육	53.2 (55.1)	57.4 (59.4)	64.2 (64.4)	70.6 (70.7)	72.6 (72.8)
문화·체육·관광	6.6 (6.9)	6.9 (7.0)	6.5 (6.5)	7.2 (7.3)	8.0 (8.8)
환경	6.9 (7.0)	6.9 (7.1)	6.9 (7.0)	7.4 (8.6)	9.0 (9.0)
R&D	19.1 (19.1)	19.5 (19.5)	19.7 (19.7)	20.5 (20.9)	24.2 (24.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16.0 (18.8)	16.3 (18.2)	18.8 (20.5)	23.7 (27.3)
SOC	23.7 (23.7)	22.1 (22.2)	19.0 (19.1)	19.8 (20.4)	23.2 (22.4)
농림·수산·식품	19.4 (19.6)	19.6 (19.8)	19.7 (19.8)	20.0 (20.3)	21.5 (21.3)
국방	38.8 (38.8)	40.3 (40.3)	43.2 (43.2)	46.7 (46.7)	50.2 (48.7)
외교·통일	4.7 (4.7)	4.6 (4.6)	4.7 (4.7)	5.1 (5.1)	5.5 (5.2)
공공질서·안전	17.5 (17.5)	18.1 (18.2)	19.1 (19.1)	20.1 (20.2)	20.8 (20.8)
일반·지방행정	59.5 (62.9)	63.3 (65.1)	69.0 (69.1)	76.6 (76.7)	79.0 (91.4)
총지출	386.4 (398.5)	400.5 (410.1)	428.8 (437.7)	469.6 (475.4)	512.3 (531.1)

주 : 본예산기준, 괄호는 추경(2020년은 제2회)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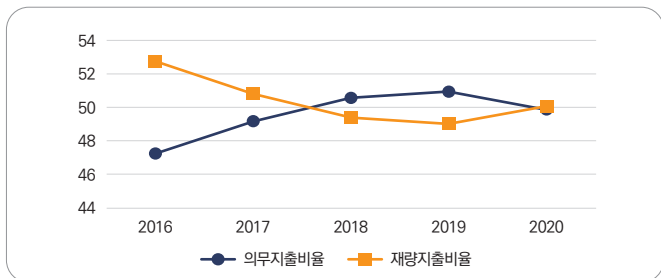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정부 재원(본예산 기준) 512.3조 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80.5조 원(35.2%)이 배분되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투입
- 2016~20년 동안 자원 배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도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46.3% 증가했고, 그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45.4% 증가

12-2-2 재정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정의

-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을 의미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비율(단위 : %)



주 : 본예산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무지출(조 원)	182.6	197.0	216.9	239.3	255.6
재량지출(조 원)	203.8	203.5	211.9	230.3	256.7
의무지출비율(%)	47.3	49.2	50.6	51.0	49.9
재량지출비율(%)	52.7	50.8	49.4	49.0	50.1

자료 : 기획재정부.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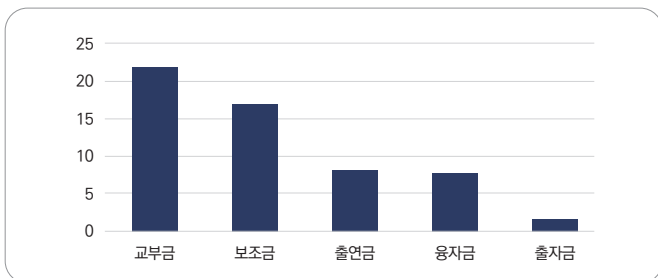
- 의무지출비율은 2016년 4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8~19년 동안 50%를 상회했으나, 2020년에는 49.9%로 하락
- 재량지출비율은 2016년 52.7%에서 2020년 50.1%로 2.6%p 하락
- 2020년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255.6조 원이며, 재량지출은 256.7조 원임

12-2-3 재정지출 유형별 비율

○ 정의

- 일반회계 세출은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총지출 대비 재정지출 유형별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



주 : 본예산 기준. 보조금에서 해외이전보조는 제외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지출 (조 원)	교부금	77.4	87.6	99.4	111.5	112.3
	보조금	60.3	59.6	66.9	77.9	86.7
	출연금	33.5	34.3	32.7	35.3	42.0
	용자금	31.7	29.3	31.3	33.0	39.3
	출자금	4.5	5.4	5.4	7.3	8.6
재정지출 비율 (%)	교부금	20.0	21.9	23.2	23.7	21.9
	보조금	15.6	14.9	15.6	16.6	16.9
	출연금	8.7	8.6	7.6	7.5	8.2
	용자금	8.2	7.3	7.3	7.0	7.7
	출자금	1.2	1.4	1.3	1.6	1.7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교부금 21.9%, 보조금 16.9%, 출연금 8.2%, 용자금 7.7%, 출자금 1.7%를 차지함
- 2016~20년 동안 교부금은 77.4조 원에서 112.3조 원으로 45.1% 증가하고, 보조금은 60.3조 원에서 86.7조 원으로 43.8% 증가

○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20년 '제한적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진입하는 성과

- 영국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측정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됐으며, 세계 167개국에서 23위 수준
-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따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확대되어 유럽 민주국가에 대한 평가는 후퇴했으나, 한국은 방역과 민주주의 양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한국의 인권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인터넷 정보 이용에 대한 제약 등은 인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 '부분적 자유국가'에서 '자유국가'로 종합평가가 개선되었으나, 정치적 권리보다 시민의 자유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특히 인터넷 사용에서 미풍양속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속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지속되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

○ U.S. News World Report의 국력 평가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진입

-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이 세계 4위로 평가됨
- ※ U.S. News World Report의 다른 국력 평가 항목인 지도자 평가, 정치력 평가 등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객관적 평가보다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평가 기준에 의문이 제기됨

○ 북한의 경제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로 국가적 위기에 진입

- 북한의 경제상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 북한 경제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함으로써 역성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

12-3-1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 정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민주주의를 ①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② 정부의 기능, ③ 정치참여, ④ 정치문화, ⑤ 시민의 자유 등 5분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결과(각 항목 10점 만점)

○ 세계의 민주주의(2020년 12월 기준)

순위	국가	전체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자유
1	노르웨이	9.8	10.0	9.6	10.0	10.0	9.4
2	아이슬란드	9.4	10.0	8.6	8.9	10.0	9.4
3	스웨덴	9.3	9.6	9.3	8.3	10.0	9.1
11	대만	8.9	10.0	9.6	7.2	8.1	9.7
14	독일	8.7	9.6	8.2	8.3	8.1	9.1
16	영국	8.5	10.0	7.5	8.9	7.5	8.8
21	일본	8.1	8.8	8.6	6.7	8.1	8.5
23	한국	8.0	9.2	8.2	7.2	7.5	7.9
24	프랑스	8.0	9.6	7.5	7.8	6.9	8.2
25	미국	7.9	9.2	6.8	8.9	6.3	8.5
74	싱가포르	6.0	4.8	7.9	4.4	6.3	6.8
124	러시아	3.3	2.2	2.1	5.0	3.1	4.1
151	중국	2.3	0.0	4.3	2.8	3.1	1.2
167	북한	1.1	0.0	2.5	1.7	1.3	0.0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06년 이래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평가가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등장했고, 2020년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최악의 퇴행이 발생
- 한국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서 총 평점에서 0.1점이 상승하여 과거 3년간 8.0 미만으로 제한적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종합평가 상향
 -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점수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보다 높은 수준
 - 5개 분야 중 선거과정·다원주의와 정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북한은 선거와 시민의 자유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는 전체주의 국가로 평가를 이어감

12-3-2 한국의 인권과 자유 수준

○ 정의

- Freedom House에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40점)와 시민의 자유(60점)를 기준으로 지역전문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을 평가하고 지수화한 결과

○ 인권 및 인터넷 자유 평가(2020년 기준)

■ 인권평가

국가	총점	평가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국가	총점	평가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스웨덴	100	F	40	60	미국	86	F	33	53
네덜란드	99	F	40	59	한국	83	F	33	50
캐나다	98	F	40	58	이스라엘	76	F	33	43
호주	97	F	40	57	인도	71	F	34	37
일본	96	F	40	56	러시아	20	NF	5	15
독일	94	F	39	55	중국	10	NF	-1	11
프랑스	90	F	38	52	북한	3	NF	0	3

주 : F-자유(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F-부분적 자유(69점에서 34점) NF-자유 없음(34점 이하)

■ 인터넷 자유 평가

국가	총점 및 상태	접근의 제약	내용의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아이슬란드	95 Free	25	34	36
미국	76 Free	21	30	25
일본	75 Free	21	28	26
한국	66 Partly Free	22	24	20

자료 : Freedom House Human Rights Index 2020(<https://freedomhouse.org/countries/freedom-world/scores>).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20년 Freedom House 인권평가 결과, 한국은 2019년에는 ‘부분적 자유’에서 ‘자유’로 평가가 개선
 - 북한은 정치적 권리에서 0점과 시민의 자유에서 3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기록
- 2019년에 비해서 전 세계 37개 나라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개선됐지만, 64개 나라에서는 인권의 존중이 쇠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14년 연속 자유가 쇠퇴한 곳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인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
- 한국은 인터넷과 정보원에 대한 접근의 권리와 내용의 제약 등에서 국가 기관의 통제로 인해 ‘부분적 자유’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인권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강화할 필요

12-3-3 한국의 종합국력

○ 정의

- U.S. News World Report에서 국가별 국력 평가를 국제협력, 경제적 영향력, 지도자,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종합국력을 평가한 결과

○ 국가별 종합국력 평가(2020년 기준, 단위 : %)

구분	종합평가	국제협력	경제력	지도자	군사력	정치력
미국	100.0	100.0	98.3	99.1	96.7	95.6
러시아	98.7	95.2	86.5	100.0	100.0	100.0
중국	92.0	74.9	100.0	87.6	97.0	91.3
독일	86.0	94.4	93.7	86.5	64.4	82.8
영국	82.6	95.3	90.2	76.1	60.9	83.9
프랑스	66.6	97.2	66.4	49.7	44.8	72.2
일본	62.3	75.2	94.6	63.2	28.1	47.9
이스라엘	58.9	63.3	24.6	29.5	97.6	76.0
한국	58.3	57.8	74.6	23.2	91.1	47.6
사우디	57.4	47.7	77.2	32.5	66.5	62.9
UAE	55.5	58.3	86.5	44.0	36.1	51.8
캐나다	45.2	79.1	67.4	38.3	6.2	35.9
스위스	29.5	48.5	60.6	24.8	1.3	15.2
인도	27.9	25.9	38.3	18.0	37.7	20.9
호주	26.1	61.9	45.9	15.6	2.5	9.1
터키	24.7	21.9	15.5	11.4	56.3	19.6
이탈리아	23.5	62.6	27.7	11.4	3.9	15.4
카타르	20.4	17.8	52.9	10.1	9.2	15.3
스페인	17.6	47.4	21.9	7.0	5.1	10.1
스웨덴	17.3	35.6	29.7	11.6	1.3	11.2

자료 : U.S. News World Report, Country Power Ranking(<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power-rankings>).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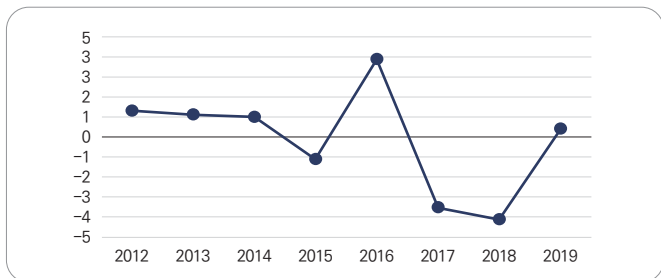
-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80개국 중에서 2019년 10위에서 1계단 상승하여 9위를 차지했고, 재래식 군사력 기준으로는 전 세계 4위를 차지
 - 북한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항목 중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임
- ※ 지도자 역량 평가와 정치력 평가는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 많아 기존의 국가의 명성에 따른 고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판단

12-3-4 북한경제

○ 정의

-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의 추이를 살펴봄

○ 북한의 경제성장률(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1.3	1.1	1.0	-1.1	3.9	-3.5	-4.1	0.4
실질 국민총소득(조 원)	33.5	33.8	34.2	34.5	36.4	36.6	35.9	35.6
1인당 국민소득(만 원)	137.1	137.9	133.8	139.3	146.1	146.4	124.8	140.8
인구(만 명)	2,371	2,385	2,393	2,406	2,419	2,431	2,443	2,455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에 따라 국제제재에 직면
- UN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었고 이는 2021년을 지나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평등
통계로 본
우리
사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부록

•

A. 청년 현황

A-1 청년 고용

A-2 청년 주거

A-3 청년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인식

A-4 청년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

A-5 청년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크게 나타남

- 15~29세의 취업자수 증감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체 인구의 취업자수 증감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
-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29세 취업자수는 월평균 4.0% 감소(전년동월대비)하여 전체 연령의 월평균 0.9% 감소보다 4배 이상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15~29세의 고용률 하락폭과 실업률 상승폭도 전체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남

- 15~29세 고용률은 2019년 1월~2020년 1월 평균 43.6%에서 2020년 2월~2021년 3월 평균 42.1%로 1.5%p 하락하여 같은 기간 전체(1.1%p)보다 하락폭이 큼
- 15~29세 실업률은 2019년 1월~2020년 1월 평균 8.8%에서 2020년 2월~2021년 3월 평균 9.3%로 0.5%p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체(0.4%p)보다 상승폭이 큼

○ 근로시간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한 청년층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5%가 넘고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 청년층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를 기록
- 15~29세 확장실업률은 2019년 1월 ~ 2020년 1월 월평균 22.8%에서 2020년 2월 ~ 2021년 3월 월평균 25.7%로 2.9%p 상승

○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이 부진하여 고용의 질도 악화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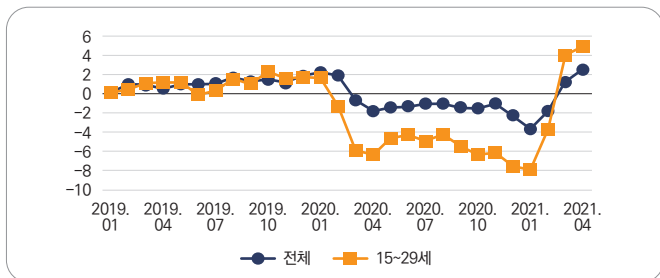
-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34.0%에서 2020년 39.9%로 5.9%p 상승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대
- 2017~2019년 동안 대졸자 초임의 평균 급여는 4.4% 상승하는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7.7% 상승하여 세대 간 임금 격차가 심화

A-1-1 청년 취업자수 증감률

○ 정의

- 취업자수 증감률은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월간 증감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전체 및 청년 취업자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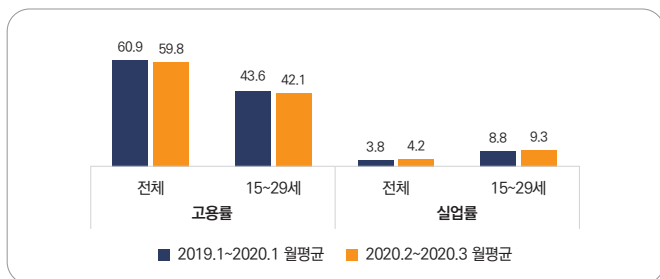
- 15~29세의 취업자수 증감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체 인구의 취업자수 증감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
-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5~29세 취업자수는 월평균 1.1% 증가(전년동월대비)하여 전체 연령의 월평균 1.2% 증가와 비슷한 수준
-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29세 취업자수는 월평균 4.0% 감소(전년동월대비)하여 전체 연령의 월평균 0.9% 감소보다 4배 이상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남

A-1-2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 정의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임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임

○ 전체 및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단위 : %)



구분	고용률		실업률	
	전체	15~29세	전체	15~29세
2019.1~2020.1 월평균	60.9	43.6	3.8	8.8
2020.2~2020.3 월평균	59.8	42.1	4.2	9.3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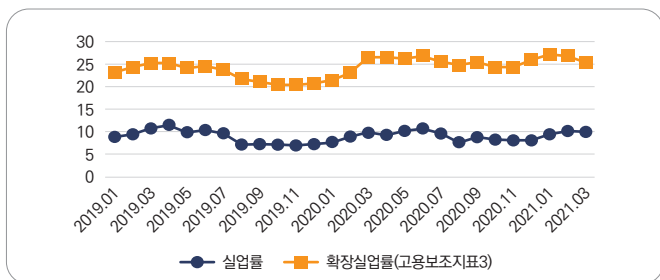
- 2021년 3월 기준으로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체 59.8%에 비해 16.5%p 낮으며, 15~29세 실업률은 10.0%로 전체 4.3%에 비해 5.7%p 높음
- 15~29세 고용률은 2019년 1월~2020년 1월 평균 43.6%에서 2020년 2월~2021년 3월 평균 42.1%로 1.5%p 하락하여 같은 기간 전체(1.1%p)보다 하락폭이 큼
- 15~29세 실업률은 2019년 1월~2020년 1월 평균 8.8%에서 2020년 2월~2021년 3월 평균 9.3%로 0.5%p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체(0.4%p)보다 상승폭이 큼

A-1-3 청년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 정의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임
-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

○ 청년 실업률 및 확장실업률(단위 : %)



구분	2020.06	2020.07	2020.08	2020.09	2020.10	2020.11	2020.12	2021.01	2021.02	2021.03
실업률	10.7	9.7	7.7	8.9	8.3	8.1	8.1	9.5	10.1	10.0
확장실업률	26.8	25.6	24.9	25.4	24.4	24.4	26.0	27.2	26.8	25.4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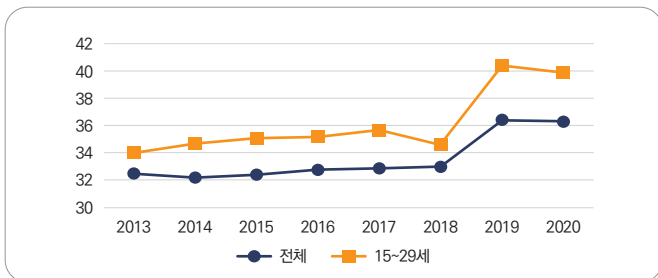
- 청년층의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를 기록하여 2015년 1월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5~29세 확장실업률은 2019년 1월~2020년 1월 월평균 22.8%에서 2020년 2월~2021년 3월 월평균 25.7%로 2.9%p 상승

A-1-4 청년 비정규직 비율

○ 정의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임. 비정규직근로자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가 포함됨

○ 전체 및 청년 비정규직 비율(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2.5	32.2	32.4	32.8	32.9	33.0	36.4	36.3
15~29세	34.0	34.7	35.1	35.2	35.7	34.6	40.4	39.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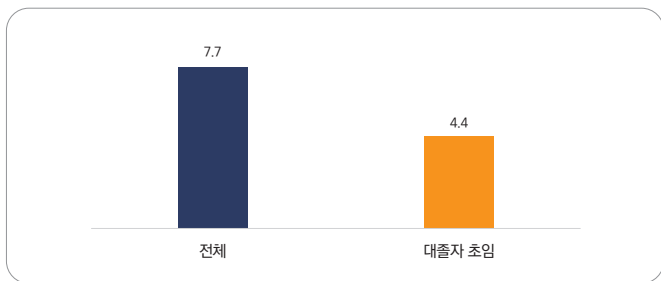
-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34.0%에서 2020년 39.9%로 5.9%p 상승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대
-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32.5%에서 36.3%로 3.8%p 상승하여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더 심각한 상황

A-1-5 대졸자 초임 상승률

○ 정의

- 평균 월급여 상승률은 평균 월급여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전체 및 대졸자 초임 평균 월급여 상승률(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전체 평균 월급여	2,870,000	2,970,000	3,090,000
대졸자 초임 평균 월급여	2,315,029	2,278,416	2,416,164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일자리행정통계"; 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취업통계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2017~2019년 동안 대졸자 초임의 평균 월급여 상승률이 전체 평균 월급여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나 세대 간 임금 격차가 심화
- 이 기간 대졸자 초임의 평균 월급여는 4.4% 상승한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7.7% 상승

○ 20~30대 청년 가구 중 2/3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38.1%보다 크게 높음

- 청년 가구의 40.6%가 월세로 거주하고, 26.4%는 전세로 거주
- 자가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28.3%로 40대 이상의 절반 수준이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가 보유 어려움이 가중

○ 20~30대 청년 가구는 주택임차료나 대출금 상환 부담과 주거지원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음

- 청년 가구의 77.9%가 주택임차료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전체 가구 78.3%와 유사함
- 청년 가구의 49.2%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가구 36.1%보다 13.1%p 높게 나타남
-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 가구들이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
- 청년 가구에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순으로 응답됨

○ 서울 주택가격 PIR은 2013년 9.0으로 가장 낮아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9년 14.5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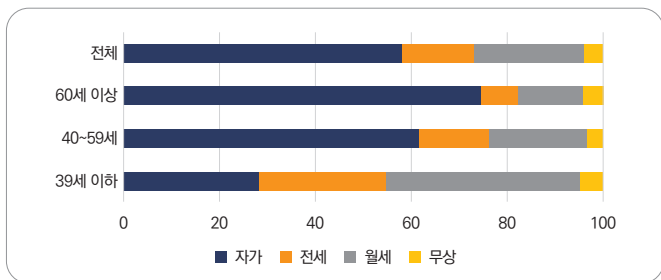
- 서울 주택가격 PIR은 연간 가구소득을 모두 저축할 경우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주택가격 PIR은 U자 형태를 나타내며 특히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A-2-1 청년 주거 점유형태

○ 정의

-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중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거주 비율임

○ 연령대별 주거 점유 형태(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39세 이하	28.3	26.4	40.6	4.7	100
40~59세	61.7	14.5	20.5	3.3	100
60세 이상	74.7	7.6	13.5	4.2	100
전체	58.0	15.1	23.0	3.9	100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주거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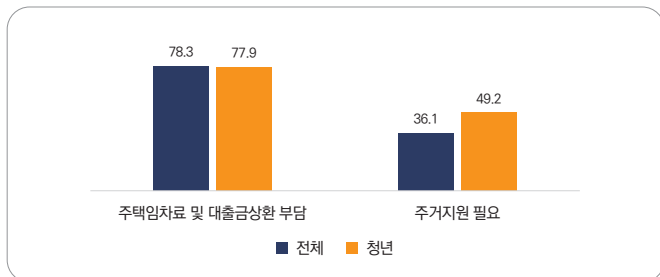
- 20~30대 청년 가구 중 2/3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 중
- 청년 가구의 40.6%가 월세로 거주하고, 26.4%는 전세로 거주
- 자가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28.3%로 40대 이상의 절반 수준이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가 보유 어려움이 가중

A-2-2 청년 주거지원

○ 정의

- 주택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 전체 및 청년 ‘주택임차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과 ‘주거지원 필요성’(단위: %)



구분	주택임차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	주거지원 필요
전체	78.3	36.1
청년	77.9	49.2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주거실태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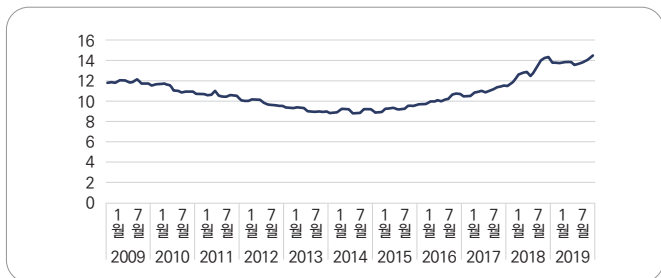
- 청년 가구의 77.9%가 주택임차료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전체 78.3%와 유사함
- 청년 가구의 49.2%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36.1%보다 13.1%p 높게 나타남
-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 가구들이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

A-2-3 서울 주택가격 PIR(Price to Income Ratio)

○ 정의

- 서울 주택가격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서울 평균주택가격을 도시지역 연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 서울 주택가격 PIR(Price to income ratio)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택가격 PIR	11.0	10.5	9.5	9.0	9.2	9.6	10.8	11.5	14.3	14.5

자료 :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서울 주택가격 PIR은 연간 가구소득을 모두 저축할 경우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주택가격 PIR은 U자 형태를 나타내며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
- 서울 주택가격 PIR은 2013년 9.0으로 가장 낮아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9년 14.5까지 상승

○ **청년층은 연령이 낮을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중년층에 비해서도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냄**

- 청년 연령대별로 19~24세가 6.22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25~29세 6.26점, 30~34세 6.47점으로 연령이 낮은 청년층의 만족 수준이 낮은 편임
- 전체 청년층의 만족도 점수는 6.32점으로 중년층 6.4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19~29세 청년층의 만족도 점수는 장년층의 6.30점보다도 낮음
- 여자가 6.34점으로 남자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지만 큰 차이는 없음

○ **청년층의 고용, 여가,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고용 영역**

- 고용 만족도가 5.84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여가 5.90점, 교통 6.03점 순으로 낮음
- 가족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 및 보건의 순임
-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청년층의 현실적 고민과 밀접한 고용 영역이며, 일/여가 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여가도 중요한 영역임

○ **한국의 청년 자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며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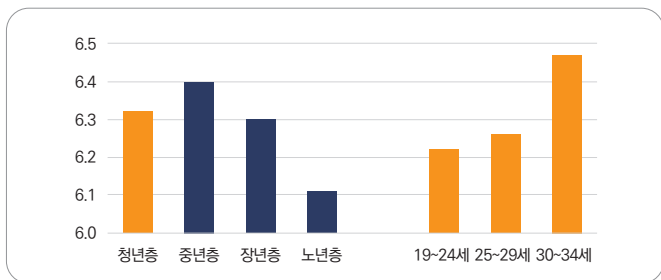
- 청년 자살률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다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
- 남성 청년의 자살률이 여성 청년의 자살률보다 높은 편이나 2017년 이후 여성 청년 자살률의 상승이 두드러짐

A-3-1 청년 삶의 만족도

○ 정의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10점 만점)

○ 연령대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구분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19~24세	25~29세	30~34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6.32	6.40	6.30	6.11	6.22	6.26	6.47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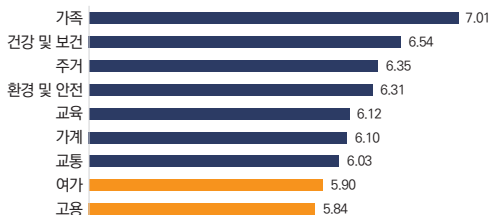
- 청년 연령대별로 19~24세가 6.22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25~29세 6.26점, 30~34세 6.47점으로 연령이 낮은 청년층의 만족 수준이 낮은 편임
- 전체 청년층의 만족도 점수는 6.32점으로 중년층 6.4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19~29세 청년층의 만족도 점수는 장년층의 6.30점보다도 낮음
- 여자가 6.34점으로 남자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지만 큰 차이는 없음

A-3-2 영역별 청년 삶의 만족도

○ 정의

- 영역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10점 만점)

○ 영역별 전반적인 청년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구분	고용	여가	교통	가게	교육	환경 및 안전	주거	건강 및 보건	가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5.84	5.90	6.03	6.10	6.12	6.31	6.35	6.54	7.01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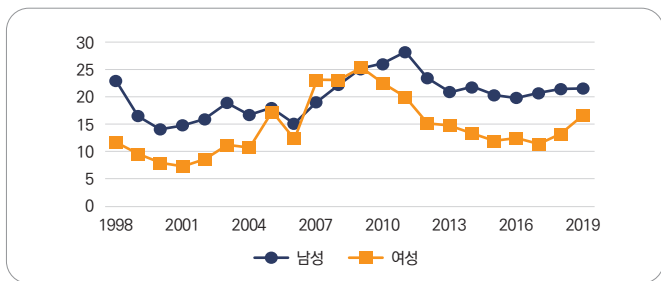
- 청년층의 고용, 여가,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은 영역은 고용 영역
- 고용 만족도가 5.84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여가 5.90점, 교통 6.03점 순으로 낮음
- 가족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 및 보건 등의 순임

A-3-3 성별 청년 자살률

○ 정의

-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함

○ 성별 청년 자살률(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성(20~29세)	28.2	23.5	20.9	21.8	20.3	19.9	20.8	21.5	21.6
여성(20~29세)	20.0	15.2	14.8	13.4	12.0	12.5	11.4	13.2	16.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요 특징 및 해설

- 청년 자살률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다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
- 남성 청년의 자살률이 여성 청년의 자살률보다 높은 편이나 2017년 이후 여성 청년 자살률의 상승이 두드러짐
- 한국의 청년 자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

○ 청년층은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크고, 미취업의 주요 요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지적

- 청년층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안정성과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청년층은 현재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29.6%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취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미취업자는 일자리 부족을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특히 19~24세 연령층의 응답 비율이 높음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은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19~24세는 72.1%, 25~29세 50.8%, 30~34세 45.9%로 나타남
-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리 조건이나 근무 환경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

○ 청년층은 경제적 도움 등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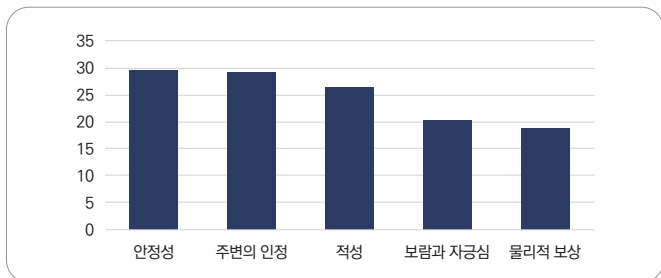
- 청년층의 21.3%가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
- 청년 연령별로 19~24세 29.4%, 25~29세 20.1%, 30~34세 15.1%로 연령이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A-4-1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 정의

-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임

○ 청년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단위: %)



구분	안정성	주변의 인정	적성	보람과 자긍심	물질적 보상
부정적 평가 비율	29.6	29.2	26.4	20.3	18.9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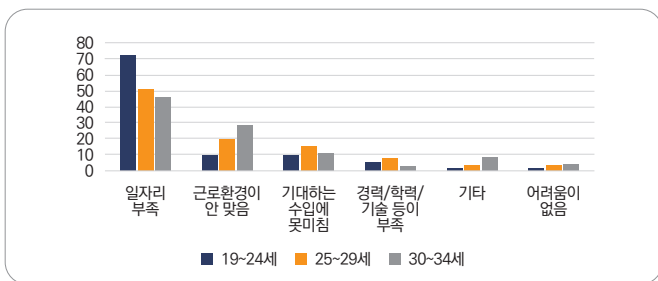
- 청년층은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크고, 미취업의 주요 요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지적
- 청년층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안정성과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청년층은 현재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29.6%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A-4-2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이 어려운 이유

○ 정의

-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답변 비율임

○ 청년 연령대별 미취업자의 구직이 어려운 이유(단위: %)



구분	일자리 부족	근로환경이 안 맞음	기대하는 수입에 못미침	경력/학력/기술 등이 부족	기타	어려움이 없음
19~24세	72.1	9.8	9.8	5.4	1.5	1.5
25~29세	50.8	19.6	15.3	7.9	3.2	3.2
30~34세	45.9	28.4	10.8	2.7	8.1	4.1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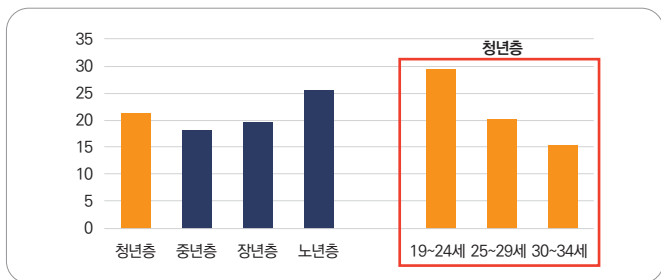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미취업자는 일자리 부족을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특히 19~24세 연령층의 응답 비율이 높음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은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19~24세는 72.1%, 25~29세 50.8%, 30~34세 45.9%로 나타남
- 나이가 많을수록 일자리 조건이나 근무 환경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

A-4-3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 비율

○ 정의

- 목돈 차입에 관한 질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 연령대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율(단위: %)



구분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19~24세	25~29세	30~34세
목돈 차입	21.3	18.1	19.6	25.6	29.4	20.1	15.1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청년층은 경제적 도움 등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청년층의 21.3%가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
- 청년 연령별로 19~24세 29.4%, 25~29세 20.1%, 30~34세 15.1%로 연령이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 연령 중 ‘하층 계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40%를 넘을 정도로 높음

- 20대 이하 연령 중 ‘하층 계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2011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
- 20대 이하 여성에 비해 20대 이하 남성의 계층의식이 더 낮으며, 남녀 격차는 2017년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

○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한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

-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6.6%에서 2019년 24.7%로 21.9%p 하락
-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리라는 기대감이 크게 상실된 상태임을 시사

○ 19~29세 및 고졸 이하 청년층은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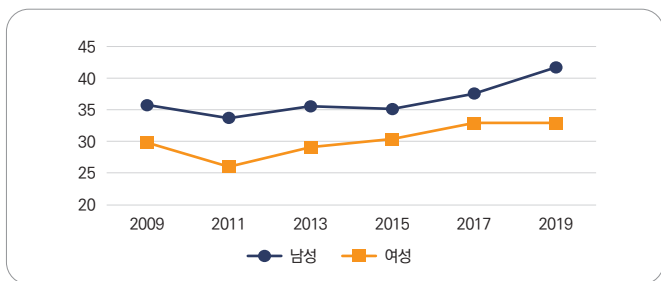
- 청년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미래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가장 낮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층이동 가능성 간 비례 관계가 나타남
-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미래세대 상향이동 가능성도 비례 관계를 보임

A-5-1 청년 계층의식

○ 정의

- 청년 계층의식 설문 중 '하층 계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 성별 하층 계층으로 인식한 청년 비율(단위: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남성(20대 이하)	35.7	33.7	35.6	35.1	37.5	41.6
여성(20대 이하)	29.9	26.0	29.2	30.4	32.9	32.9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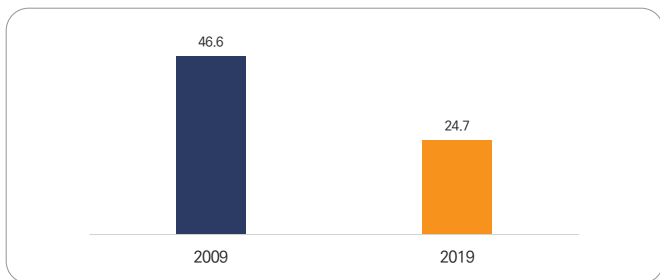
- 20대 이하 연령 중 '하층 계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40%를 넘을 정도로 높음
- 20대 이하 연령 중 '하층 계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2011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
- 20대 이하 여성에 비해 20대 이하 남성의 계층의식이 더 낮으며, 남녀 격차는 2017년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

A-5-2 청년 계층 이동성 인식 변화

○ 정의

-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 청년 계층 이동성 인식 변화(단위: %)



주 : 2009년에는 15~29세 대상 설문, 2019년에는 19~29세 대상 설문

구분	2009	2019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46.6	24.7

자료 :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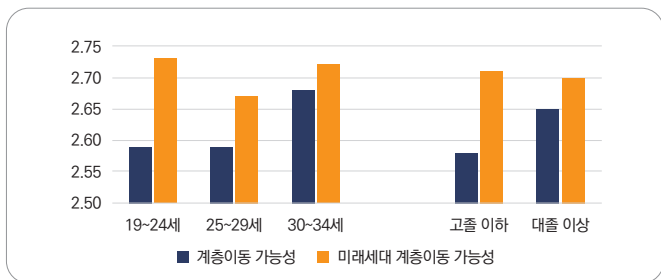
-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
- 청년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6.6%에서 2019년 24.7%로 21.9%p 하락
-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리라는 기대감이 크게 상실된 상태임을 시사

A-5-3 연령별·학력별 계층 이동성 평가

○ 정의

- 청년 자신 및 미래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평가를 나타내는 척도(4점 만점)

○ 연령대별·학력별 계층 이동성 평가(4점 만점)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계층이동 가능성	2.59	2.59	2.68	2.58	2.65
미래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2.73	2.67	2.72	2.71	2.70

자료 : 경기연구원(2020). “경기도 삶의 질 조사”.

○ 주요 특징 및 해설

- 청년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가장 낮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층이동 가능성 간 비례 관계가 나타남
- 미래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특
종
영
구
로
본
우
리
사
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집필진(경기연구원)

김정훈(선임연구위원)	총괄, 4-3, 12-2
강철구(선임연구위원)	11-7~8
고재경(선임연구위원)	11-1~2
김군수(선임연구위원)	3-1
김동영(선임연구위원)	11-3
박충훈(선임연구위원)	12-1
봉인식(선임연구위원)	10-1~4
빈미영(선임연구위원)	9-1~2
성영조(선임연구위원)	3-3, 3-5
이기영(선임연구위원)	11-6
이정임(선임연구위원)	11-4
김병관(연구위원)	9-3
김용준(연구위원)	2-1, 2-5, 2-7, 4-1~2
김윤영(연구위원)	7-1~3, 7-6
김태영(연구위원)	2-2~4, 2-6
김한수(연구위원)	11-5
박진아(연구위원)	3-6, 10-5~6
배영임(연구위원)	3-2, 3-4
봉태호(前연구위원)	9-4~5
오재호(연구위원)	8-1~2
옥진아(연구위원)	10-1~4
유정균(연구위원)	6-1, 6-3~5
이성우(연구위원)	12-3
이은환(연구위원)	7-4~5
정대영(연구위원)	1-1~2, 7-7, 8-3~5
최 훈(연구위원)	5-1~7
손슬기(연구위원)	9-1~2
윤소은(연구위원)	총괄 지원 및 편집
이다겸(연구위원)	총괄 지원 및 편집, 6-2
